연구보고서 2017-10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김문길 · 김태완 · 임완섭 · 정은희 · 김재호
안주영 · 김성아 · 이주미 · 정희선 · 최준영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청년근로빈곤층(Youth Working-Poor) 사례연구
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안주영 도쿄하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최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0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발 행 일	2017년 12월
저 자	김 문 길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가 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55-8 93330

발간사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의 인구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청년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청년들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청년 세대에게 일자리와 소득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는 노인을 대체하는 빈곤위험집단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지표상으로 빈곤위험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N포'라는 수사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노동시장 입직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연애와 결혼도 늦어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와 복지체제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율이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실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광범위한 가운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빈곤율 측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은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추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가구소득으로 측정되는 우리나라 청년빈곤율의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활 상태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을 통

해 소득빈곤의 세대별 분포와 다차원 빈곤지수의 세대별 분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의미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영역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김문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태완 연구위원, 임완섭 부연구위원, 정은희 부연구위원, 김성아 전문연구원, 이주미 전문연구원, 정희선 연구원, 최준영 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연구진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재호 박사, 일본 도쿄하대학교의 안주영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특성들을 조명함으로써 정책의 질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연구진의 의견이라는 점을 밝힌다.

2017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 론 ·····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 16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제1절 청년의 정의 ····· 23
제2절 빈곤 일반론 ····· 30
제3절 다차원 빈곤 ····· 41

제3장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 ····· 45
제1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현황 ····· 47
제2절 영역별 청년지원정책 특성 ····· 66
제3절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흐름 ····· 82
제4절 시사점 ····· 89

제4장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 소득과 경제활동 ····· 93
제1절 청년빈곤의 동태적 분석 ····· 95
제2절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 105

제5장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 149

제1절 소득, 지출, 재산 ····· 151

제2절 주거 ····· 182

제3절 시간사용 ····· 207

제6장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 239

제1절 문제 제기 ····· 241

제2절 이론적 배경 ····· 243

제3절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 ····· 247

제4절 분석 결과 ····· 267

제7장 결론 및 정책대응 방안 ····· 283

제1절 결론 및 한계 ····· 285

제2절 정책대응 방안 ····· 291

참고문헌 ····· 303

부록 ····· 317

표 목차

〈표 1-2-1〉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와 특성 ····· 19
〈표 3-1-1〉 중앙정부 청년지원 프로그램 현황 ····· 49
〈표 3-1-2〉 중앙정부의 지원대상별 청년지원 프로그램 현황 ····· 51
〈표 3-1-3〉 20대 국회 청년관련 의안 현황 ····· 54
〈표 3-1-4〉 청년수당 지원 사업 ····· 59
〈표 3-1-5〉 지방자체단체의 청년관련 조례 ····· 61
〈표 3-2-1〉 청년의 소득지원 사업 ····· 67
〈표 3-2-2〉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 ····· 69
〈표 3-2-3〉 청년의 교육지원 사업 ····· 71
〈표 3-2-4〉 청년의 고용지원 사업 ····· 76
〈표 3-2-5〉 청소년 지원 사업 ····· 81
〈표 4-1-1〉 2007~2015년 연도별 청년패널(YP) 빈곤추이: 최저생계비 기준 ····· 101
〈표 4-1-2〉 2007~2015년 빈곤경험 현황 ····· 103
〈표 4-1-3〉 2007~2015년 연속빈곤 현황 ····· 104
〈표 4-2-1〉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 ····· 116
〈표 4-2-2〉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특성 ····· 129
〈표 4-2-3〉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 ····· 133
〈표 4-2-4〉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상용직경험의 상태의존성 ····· 134
〈표 4-2-5〉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실질임금 상태의존성 ····· 134
〈표 4-2-6〉 생애경제활동의 예시 ····· 137
〈표 4-2-7〉 경기침체기의 전체 및 성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 139
〈표 4-2-8〉 경기침체기의 학력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 140
〈표 4-2-9〉 경기침체기의 학력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 141
〈표 4-2-10〉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연령대별 특성 ····· 143
〈표 4-2-11〉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 ···· 145
〈표 5-1-1〉 주요기관, 국가 및 연구자들의 상대적 빈곤선 ····· 152

〈표 5-1-2〉 연령별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 156
〈표 5-1-3〉 연령별 빈곤율 차이 비교(중위소득 50% 미만) ····· 158
〈표 5-1-4〉 가구유형별 가구 구분 ····· 161
〈표 5-1-5〉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 162
〈표 5-1-6〉 가처분소득 중위 50%기준 가구유형별 빈곤율 ····· 163
〈표 5-1-7〉 청년가구주 가구 분포 ····· 165
〈표 5-1-8〉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가구주 가구 빈곤율 ····· 166
〈표 5-1-9〉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 ····· 167
〈표 5-1-10〉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 168
〈표 5-1-11〉 취업 여부에 따른 청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 170
〈표 5-1-12〉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 ····· 171
〈표 5-1-13〉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 ····· 172
〈표 5-1-14〉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 소비지출 대비 배율 ····· 174
〈표 5-1-15〉 가구유형에 따른 지출 품목별 분포(2016) ····· 175
〈표 5-1-16〉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재산 대비 배율 ····· 176
〈표 5-1-17〉 가구유형별 평균재산액 ····· 178
〈표 5-1-18〉 가구유형별 부채가구 비율 ····· 178
〈표 5-1-19〉 가구유형별 부채가구의 부채액 ····· 179
〈표 5-2-1〉 최저주거기준의 방수와 최저주거면적 ····· 184
〈표 5-2-2〉 가구유형별 가구 구분 ····· 187
〈표 5-2-3〉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 188
〈표 5-2-4〉 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 190
〈표 5-2-5〉 가구유형별 주택유형 ····· 192
〈표 5-2-6〉 가구유형별 주택위치 ····· 194
〈표 5-2-7〉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196
〈표 5-2-8〉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및 임대료 과부담 비율 ····· 199
〈표 5-2-9〉 가구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 201
〈표 5-2-10〉 가구유형별 주거빈곤가구 비율 ····· 203

〈표 5-2-11〉 주거빈곤 유형별 청년가구 분포 ····· 204
〈표 5-3-1〉 역할 유형에 따른 청년층(19세-34세) 특성 ····· 215
〈표 5-3-2〉 학생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1
〈표 5-3-3〉 가사·육아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3
〈표 5-3-4〉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6
〈표 5-3-5〉 취업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8
〈표 5-3-6〉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차이 ····· 231
〈표 5-3-7〉 이중 역할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33
〈표 6-3-1〉 해외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들 ····· 249
〈표 6-3-2〉 해외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별 지표들 ····· 250
〈표 6-3-3〉 전문가 조사 개요 ····· 251
〈표 6-3-4〉 1차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 252
〈표 6-3-5〉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차원별 적절성 응답 ····· 253
〈표 6-3-6〉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추가 제안 차원 ····· 253
〈표 6-3-7〉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별 적절성 응답 ····· 254
〈표 6-3-8〉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별 적정 차원 ····· 255
〈표 6-3-9〉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 내용과 빈곤선 ····· 259
〈표 6-3-10〉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 261
〈표 6-3-11〉 분석대상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집단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 264
〈표 6-3-1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가중치 ····· 266
〈표 6-4-1〉 분석대상 인구집단의 연령대 분포 ····· 268
〈표 6-4-2〉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269
〈표 6-4-3〉 동일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 272
〈표 6-4-4〉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273
〈표 6-4-5〉 내재적 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 276
〈표 6-4-6〉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278
〈표 6-4-7〉 참여형 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 281

〈부표 1-1〉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취업 결정요인 ····· 317
〈부표 1-2〉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상용직 결정요인 ····· 318
〈부표 1-3〉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임금결정요인 ····· 319
〈부표 1-4〉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60%기준)에 미치는 효과 ··· 320
〈부표 1-5〉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70% 기준)에 미치는 효과 · 321
〈부표 2-1〉 학생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 322
〈부표 2-2〉 가사·육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 327
〈부표 2-4〉 취업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 337
〈부표 2-5〉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 342
〈부표 2-6〉 이중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 347

그림 목차

[그림 1-1-1] 전체 빈곤율 대비 연령대별 빈곤율 비중(총빈곤율=100)(2016년) ····· 13
[그림 1-1-2]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과 청년빈곤율 ····· 14
[그림 2-1-1] 청년층(15~29세) 성별 대학 졸업 소요 기간 ····· 27
[그림 2-1-2] 평균 초혼 연령 변화 추이 ····· 28
[그림 2-1-3]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 변화 추이 ····· 29
[그림 4-1-1] 청년빈곤과 전체 빈곤 추이 비교: 최저생계비 기준 ····· 102
[그림 4-2-1] 청년실업률 추이(1990년~2016년) ····· 109
[그림 4-2-2]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 110
[그림 4-2-3]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 추이 ····· 111
[그림 4-2-4] 연령대별 상용임금근로자 추이 ····· 113
[그림 4-2-5] 연령대별 임시/일용직 추이 ····· 113
[그림 4-2-6] 연령대별 자영/고용주 추이 ····· 114
[그림 4-2-7] 연령대별 실업/비경활추이 ····· 114
[그림 4-2-8]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변화 추이 ····· 118
[그림 4-2-9]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유형 ····· 142
[그림 5-1-1]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비교 ····· 159
[그림 5-1-2] 청년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비교 ····· 160
[그림 5-1-3]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2006 vs 2016) ····· 173
[그림 5-2-1]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 189
[그림 5-2-2]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주택유형 ····· 191
[그림 5-2-3]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 193
[그림 5-2-4] 청년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95
[그림 5-2-5] RIR 및 PIR ····· 197
[그림 5-2-6]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RIR20, RIR30) ····· 198
[그림 5-2-7] 가구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 200

[그림 5-2-8] 주거빈곤 유형별 청년가구 분포 ····· 204
[그림 5-3-1] 청년층의 역할 유형별 비율 ····· 214
[그림 5-3-2] 역할 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특성 ····· 219
[그림 5-3-3] 학생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1
[그림 5-3-4] 가사·육아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4
[그림 5-3-5]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7
[그림 5-3-6] 취업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29
[그림 5-3-7]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32
[그림 5-3-8] 이중 역할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 234
[그림 6-1-1]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과 청년빈곤율 ····· 242
[그림 6-2-1] 다차원 빈곤 개념의 발전 과정 ····· 245
[그림 6-3-1]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 ····· 257
[그림 6-4-1]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 269
[그림 6-4-2] 동일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270
[그림 6-4-3]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 271
[그림 6-4-4]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 274
[그림 6-4-5] 내재적 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275
[그림 6-4-6]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 275
[그림 6-4-7]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 278
[그림 6-4-8] 참여형 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 279
[그림 6-4-9]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 280

Abstract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Poverty and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 Kim, Moon-kil

Young people of Korea are known to have lower labor market performance compared to their higher education level. The rising youth unemployment rate and the proportion of low-wage worker make the income situation of young people more difficult. These difficulties are common to young people in major OEC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has a great impact on the jobs and income of th younger generation, and this has resulted in emerging as a poverty risk group that replaces older generations.

Young people of Korea still have a lower poverty rate than other age groups, but in light of the labor market situation, youth poverty ma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overty situation of Korean young people more deeply and to call attention to the policy interest.

This study start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is intend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we analyze the dynamics of poverty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Co-Researchers: Kim, Tae-Wan · Lim, Wan-Sub · Joung, Eun-Hee · Kim, Jae-Ho · An, Ju-Young · Kim, Seong-A · Lee, Ju-Mi · Jung, Hee-Sun · Choi, Jun-Young

youth. Next, we analyz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time use behavior of Korean youth by various types.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poverty, we analyze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characteristics of Korean youth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from those of income poverty. Finally, the direction of future youth policies are presented.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 인구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세대는 높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과거 세대만큼 좋은 성과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매월 경신되는 청년실업률과 같은 지표와 'N포 세대'로 상징되는 비관적인 청년의 상황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청년 빈곤 문제는 뒤편으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청년빈곤율 탓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노동시장과 경제적 성과를 생각해 볼 때 빈곤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감춰진 빈곤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지표가 대표해내지 못하는 청년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청년빈곤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청년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역별 청년지원 사업의 특성과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소득이나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미비하였다. 청년기는 사회생활, 결혼생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같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청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청년을 위해서는 한 가지 영역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청년을 다차원적으로 인식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년노동의 동태적 특성

본 연구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청년기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빈곤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전기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수준이 현재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는 노동시장에서 과거의 근로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용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과 임금의 상태의존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30~34세에서는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서 모두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 이 시기가 경제활동의 안착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대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취업이나 상용직에서 상태의존성이 낮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 기에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상용직 경험, 임금의 상태의존성이 모두 낮아 취업과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임금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2002년까지 5년 동안 청년기의 경제활동상태

를 연쇄시간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용임금근로자 종사한 비율이 37.82%로 가장 높았고 모두 실업/비경활인 경우가 28.5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계속해서 자영업인 경우가 7.96%를 나타냈고 실업/비경활에서 안정적인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모두 합산하면 19.11%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청년기를 벗어난 시점(2015년)에 빈곤(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기의 경제활동이 불안정할수록(최적매칭점수가 높을수록) 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 경제활동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청년 소득빈곤

본 절에서는 빈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빈곤으로 청년빈곤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년의 경우 아동과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율 수치는 낮을 수 있으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 폭(공적이전소득의 효과)에는 소극적인 차이를 보였다. 청년가구유형 중에서는 청년단독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90% 수준으로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전체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최근들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들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청년의 경우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 결과들을 통해 청년에 대한 정책 마련 시 다차원 접근과 동시에 청년유형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등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까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부재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소득보전 또는 소득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 근로유인 등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라. 청년 주거빈곤

본 절에서는 청년가구유형별 청년들의 주거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를 활용하였다. 주거안정성 및 주거의 질, 임대료 과부담, 주거빈곤가구 실태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단독가구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오피스텔 또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과 불안정한 주거점유형태(월세), 임대료 과부담 등 주거문제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에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청년들이 저렴한 양질의 주택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거나 임대료 보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마. 청년 시간사용 특성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역할 유형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의 역할 유형은 학생 유형, 가사·육아 유형, 취업준비 유형, 취업 유형, 이중 역할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 시간 사용 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의 역할 유형을 분

류하고 이들의 시간 활용 특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각 역할을 얼마나 지속하는지, 각 유형 간의 이전은 어떠한지를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취업준비에서 취업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청년층의 역할을 변화시키는지 등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바. 다차원적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6개 차원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율을 산출했다. 각 지표별 빈곤율을 구해 보면 청년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 영역에서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였으며, 경제력과 고용 영역은 모두 크게 안정성의 영역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안정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중치 부여 방법에 따라 다차원 빈곤율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의 경우 소득 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즉 청년소득빈곤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과 달리 청년다차원빈곤율은 다른 세대와 소득빈곤율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기여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제력과 고용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초기청년(19~24세)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후기청년(25~34세)은 초기청년에 비해 주거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청년가구 유형별로 다차원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반면 청년부부가구 또는 청년부부가구+자녀 가구의 다차원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함의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현재의 고용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청년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다양한 청년유형별 정책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 향후 청년정책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생애주기별 빈곤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회지출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대규모의 청년종합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수립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고용정책에 있어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양적인 성과보다 질적인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조건 정비 등이 필요하다. 소득지원에 있어서는 기초보장제도에 소위 청년인지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급가구 자녀의 부양의무 완화,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성, 청년자활의 확충 등이 이와 관련될 수 있다.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되, 생활의 독립성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여성문제, 지역 문제, 과로 문제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요 용어: 청년빈곤, 다차원적 빈곤, 청년정책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세대 인구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노인 인구비중은 증가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청년세대의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경제적 성과는 과거 세대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대학진학률 증가로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세대이면서 낮은 경제성장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청년층의 일자리와 소득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월세화 경향은 청년들의 주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꾸준한 경제성장을 구가해왔던 우리나라에서 부모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특히 높은 학력수준은 노동시장의 높은 지위를 보장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해 보장되는 소득은 주택 마련, 결혼, 출산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와 같은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이 상당한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겨우 성취할 수 있는 '과업'이 되었다. 이 결과 오늘날 청년들은 끝내 성인으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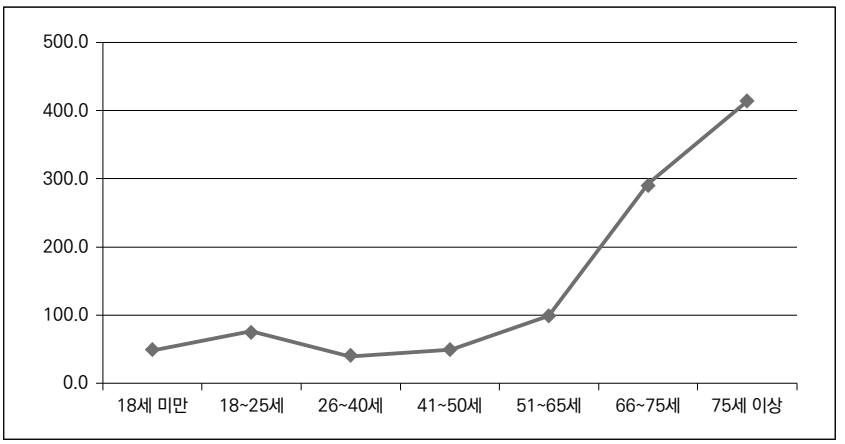
이행을 완수하지 못한 채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에 빠지게 되었다. 'N포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힘겨운 현실을 보여주는 별칭들이 매월 경신을 반복하는 청년실업률과 같은 암울한 지표들과 함께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의 '빈곤' 문제는 크게 주목받는 키워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빈곤과 관련된 키워드는 '근로빈곤' 정도가 될 것이다. 청년 근로빈곤은 몇몇 선행연구들(안수찬, 2011; 김문길 등, 2015)이 있고,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기도 하는 주제이다. 청년 근로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청년근로빈곤율과 같은 양적인 접근을 하기보다 근로빈곤 청년들을 심층인터뷰한 질적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실제 청년근로빈곤율은 지표상으로 상당히 낮아서 세상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근로'를 제외한 '빈곤'은 청년과 좀처럼 관련지어져서 유통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년빈곤율 역시 다른 연령집단별 빈곤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청년'과 '빈곤'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놓여 있다. 실제 전체 빈곤율 대비 연령대별 빈곤율의 비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좌우가 바뀐 엘(L)자 형태를 가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65~75세는 전체 빈곤율의 약 3배, 75세 이상은 전체 빈곤율의 약 4.2배임.), 아동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의 약 49% 수준이며, 청년빈곤율은 약 74% 수준에 머문다.

[그림 1-1-1] 전체 빈곤율 대비 연령대별 빈곤율 비중(총빈곤율=100)(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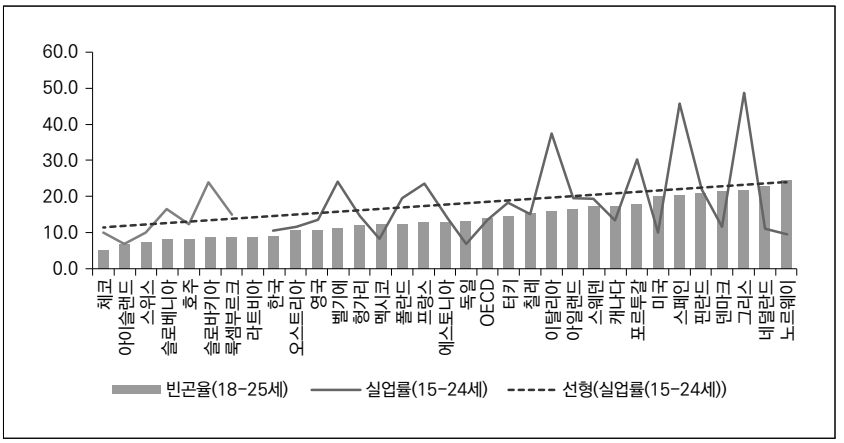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5). 가계동향조사 원자료(김문길, 이주미, 2017, p. 30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와 같이 지표상으로 보이는 청년의 빈곤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주변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실제 우리 청년은 빈곤문제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상황은 소득으로 직결되고, 노동시장 상황의 불이익은 소득의 불이익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과 청년빈곤율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성인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OECD의 상위권에 위치하는 정도이다(OECD, 2016; 김문길 등, 2017, p. 22-23 참조). 그런데, 주요 OECD 국가의 청년빈곤율과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둘 사이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빈곤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1-1-2]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과 청년빈곤율



자료: OECD. (2016). OECD Society at a Glance.

지표상의 빈곤율과 실제 빈곤과 관련된 상황 간의 괴리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은 빈곤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빈곤은 그 개념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로 드러나는 빈곤, 희망빈곤, 그리고 감춰진 빈곤이다. 먼저, 지표로 드러나는 빈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빈곤율로써, 한 사회의 빈곤 상황을 대표해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다. 두 번째 희망빈곤은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 즉 인간발달과 관련된 교육, 건강, 문화, 여가, 사회적 자본 등을 포착하지 못함에 따라 미래의 빈곤 위험을 충분히 드러내 주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현재의 가계소득은 빈곤선을 벗어나 있지만, 전술한 조건들이 좋지 못할 경우 미래세대가 독립했을 때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감안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감춰진 빈곤은 빈곤율과 같은 지표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표 이면의 빈곤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은 빈곤율 계산과 관련된 이슈인데, 일반적인 빈곤지표는 가계소득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개인의 빈곤율은 가계소득을 개인화

(균등화)한 소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빈곤율이라고 하더라도 가구 내 개인 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내 개인의 전적인 빈곤 상황을 완전하게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즉, 빈곤율을 계산하는 방법상의 (일종의) 한계에 따라 감춰진 빈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춰진 빈곤은 통상적인 빈곤율 산출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현재 낮은 수준의 청년빈곤율 이면에 감춰진 청년빈곤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분투하고 있는 지점은 결국 좋은 일자리 구하기다. 지금 현재 구직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청년 공시족들, 그리고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안정된 일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입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노동시장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입직 후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취업이 용이한 다소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입직 후 경력을 쌓은 뒤에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전략은 탈산업화 경향[2]에 따라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구조는 일자리 확보에 따른 소득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가계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이라는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해 있는 빈곤의 구조적인 특성들을 충

2)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경력=숙련이 통하는 구조였지만, 숙련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통용되기 어렵다.

분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양한 실태와 빈곤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고용위주의 청년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성인으로의 주요한 이행 과정인 학교에서 일자리로, 부모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부모의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으로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종합적인 청년정책들은 최근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주도 성장의 중장기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도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1. 연구의 구성

이상과 같은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청년'과 '빈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청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청년의 사회학적 의미, 청년정책과 관련한 청년 연령범위의 문제 등을 다룬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한다. 그리고 다차원 빈곤 연구의 일반론적 성격과 주요 선행연구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현황을 살

펴본다. 중앙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입법 사항이나 조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첫 번째(제4장)는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은 다시 소득기준 청년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와 그에 따른 빈곤에의 영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청년의 연령 특성상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직전과 직후의 단계이므로 여느 연령대에 비해 소득빈곤의 동태적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상태 또한 학교에서 이 자리로의 이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큰 변동성이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하면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완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정책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동태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두 번째(제5장)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소득, 재산, 지출과 같은 경제적 여건, 주거 실태, 그리고 시간사용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각적 측면에서의 청년 또는 청년빈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국 대표성을 가지고 공신력이 높은 국가 통계들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경제적 여건(제1절)은 일반적인 소득빈곤율을 주로 다루는데, 청년빈곤율은 청년들의 가구구성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들은 부모의 소득을 공유함으로써 빈곤율이 낮을 수 있는 반면,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는 (사적 이전이 없

다고 가정할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만 측정되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청년부부가구, 자녀가 있는 청년부부가구 등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해서 청년빈곤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 청년주거빈곤(제2절) 역시 가구유형별로 소득빈곤율과 비슷한 패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별로 청년주거빈곤 상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싼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많고, 과거에 비해 취업에 필요한 스펙(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주요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시간사용 패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이 같은 청년가구 유형별 또는 청년의 활동 유형별 분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이질적인 청년층의 유형별 정책접근이라는 점에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제6장)는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하나의 지수를 통해서 살펴보고,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차원 빈곤지수를 구성하는 차원들을 설정하고, 각 차원별 적합한 지표를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지수를 청년, 중장년, 노인 세대에 각각 적용해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율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힌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요한 영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한다. 제2장과 제3장은 선행연구와 정책자료와 같은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각각의 연구에 적합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기초분석, 빈곤율 측정,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을 활용한 실증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각각의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2-1〉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와 특성

구분	주요 분석내용	데이터	기간
제4장			
제1절	빈곤율	청년패널	2007년 ~ 2015년
제2절	경제활동참여상태	한국노동패널	1998년 ~ 2015년
제5장			
제1절	소득, 지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6년
	재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2016년
제2절	최저주거기준, 임대료 과부담	국토연구원·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제3절	시간사용	통계청, 생활시간사용조사	2014년
제6장	다차원 빈곤율	한국복지패널	2016년

구체적인 방법론은 해당 장과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년의 정의
제2절 빈곤 일반론
제3절 다차원 빈곤

2 이론적 배경

제1절 청년의 정의

1. 청년이란?

사회학자 김홍중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새로운 청년'으로 명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학교-직업의 자동적 연계가 파괴되어 최종 학력기관을 졸업한 이후 상당 기간 비정규직 또는 잉여로 지내야 하며,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거나 포기하면서, 이전 청년들과 사뭇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만들어 가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김홍중, 2016, p. 255). 이 짧은 문장은 과거 세대와 대비되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청년이 사회문화적으로 청춘을 누리지 못하고, 청춘이라는 상징은 오히려 마음은 청춘인 노인들의 전유가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홍중은 21세기의 한국 청년들을 '생존주의 세대'로 명명한다(김홍중, 2016, p. 257). 그에 따르면 한국 청년세대의 생존주의가 '서바이벌'이라는 기표를 통해 현실이 표상되어 재구성된다. '서바이벌'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 연명이나 죽음에서의 구제로부터 경쟁적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태로 전이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서바이벌은 첫째 생애 과정의 경쟁상황에서 낙오되지 않는 상태, 둘째 생존은 경쟁 상황을 한 번 더 미래로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셋째 서바이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잠재적 역

량을 자원으로 전환함(스펙 경쟁), 넷째 특별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평범한 안정을 위한 분투"에 불과함, 다섯째 스스로의 차별화와 사회적 규범에 스스로를 맞추는 정상화의 기묘한 접합으로 명명한다.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청년은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흙수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를 가지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0년대 태어나거나 청소년기를 보낸 18~34세의 청년들을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로 부른다. 과거 미국의 20대는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 공장에서 돈을 벌며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20대는 대학교육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세대로서, 과거 세대들은 현재 세대들을 '발육 부진 피터팬'(Settersten & Ray, 2012, p. 11)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나 미국의 청년세대는 특정 코호트를 칭하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을 뿐 우리나라와 같이 비관적이거나 냉소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청년들은 그 유명한 '로스제네(lost generation)'[3]로 불리고 있다. 1971년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취업 빙하기를 경험하고, 학업과 취업을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던 사회적 장치들이 파괴되어 오랜 구직과 실직을 체험하게 된 일본 청년세대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오늘날 일본 청년들을 상징하는 별칭들은 니트족, 프리터, 넷카페난민, 히키코모리, 파견 노동자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김홍중, 2016, p. 305).

오늘날 중국의 청년들을 칭하는 대표적인 말로 '바링허우(八十後)'가

3) 2006년 8월 아사히신문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호명한 이후 널리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있다. 1980년 이후에 출생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으며, 아직 한 번도 심각한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를 체험해 본 적 없는 중국 청년세대를 일컫는다. 일본의 '로스제네'와 반대되는 의미로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꿈을 꾸기 시작한 세대'를 뜻하는데, 중국 현대사에서 국가의 이념보다 자신의 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 개인화된 세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홍중, 2016, p. 302).

2. 청년의 연령

가. 해외 사례

유엔은 1985년에 열린 '세계청년의 해' 행사에서 청년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이후 유엔에서 발행하는 모든 통계는 이 연령을 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청년정책과 "청년백서(White Paper on Youth)"(European Commission, 2001)에서 유엔의 청년 연령 정의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UK's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의 프로그램(Youth, Citizenship and Social Change)에서 15~25세로 정의하고 있고, 조셉라운트리재단의 청년프로그램에서는 16~25세로 하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의무교육 졸업 연령을 청년의 시작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영국통계청은 16~24세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구고령화 속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내각부와 후생노동성이 '청년무업자'를 '15~34세 비노동력 인구 중 가사도 통학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 연령대를 청년으로 정의한다(Kudo Kei & Nishida Ryosuke, 2014, p. 26). 그러나 공식적인 정부의 문서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25세 전후, 15~29세, 15~34세, 15~39세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일본 내각부의 '청소년 백서'가 2010년부터 '어린이·청년백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청년무업자에 관한 통계 등은 39세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Kudo Kei & Nishida Ryosuke, 2014, p. 26). 그러나 청년의 연령 정의는 정부 기관마다 다르고, 하나의 기관에서도 개별 정책에 따라 다르다. 내각부의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서의 청년은 '30대까지', 후생노동성의 "헬로워크", "청년지원코너", "청년지원창구" 등의 대상 연령은 '45세 미만', 후생노동성의 "청년응원선언기업"은 35세 미만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요약하면 일본 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은 대략 15~39세로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일본학술회의, 2017,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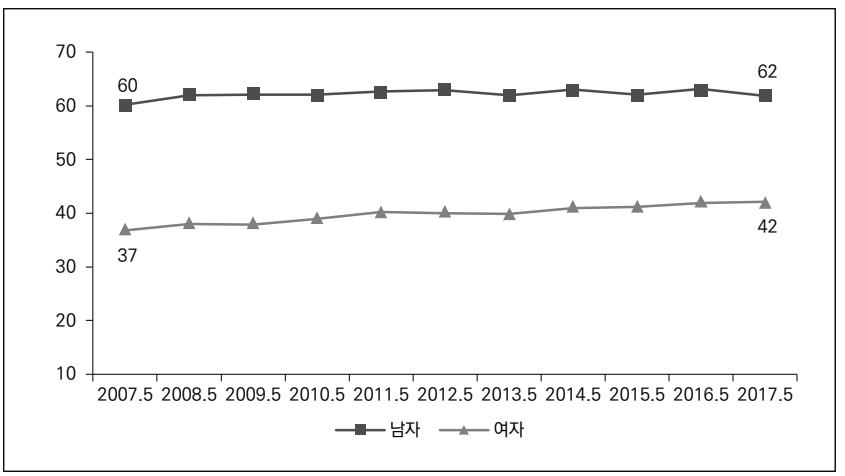
나. 사회적 연령: 이행기 관점

코호트로 청년을 정의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이행기의 관점에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으로의 이행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취업), 부모의 집에서 나의 집으로(주거 독립), 부모와의 가정에서 나의 가정으로(결혼과 출산)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런데 첫 단계인 취업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과정도 지연되고 있다.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직장을 구하는 시점도 늦춰지고,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끌면, 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미뤄지게 된다. 이 같은 이행의 지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 특히, 결혼의 지연에 따른 저출산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Settersten and Ray, 2012, p. 30).

우리나라 15~29세 남성의 대학(3년제 이하 포함) 졸업 평균 소요 기간은 2007년 5월 60개월에서 2017년 5월 62개월로 10년 동안 2개월 정도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37개월에서 42개월로 같은 기간 동안 5개월 증가했다. 남성의 증가 폭이 여성에 비해 작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군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어 여타 사유의 휴학 기간이 짧아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2-1-1] 청년층(15~29세) 성별 대학 졸업 소요 기간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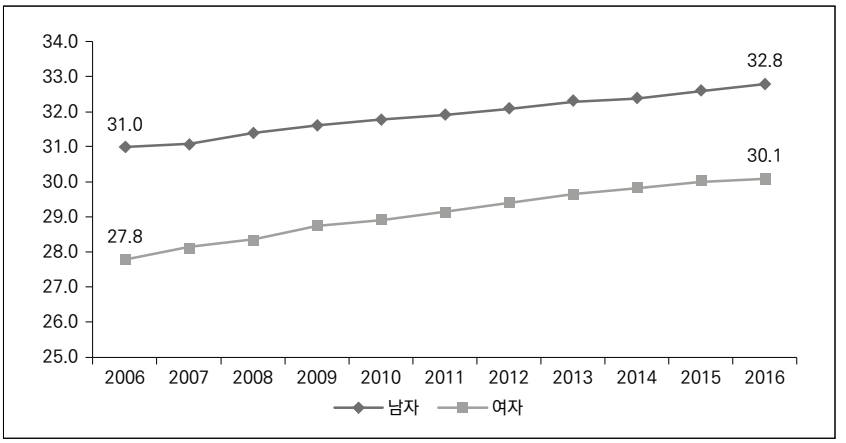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다운로드, 2017. 10. 13. 인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 입사 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12년 동안 1.1세가 증가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3.5세 정도 높은 수치다(서울경제신문, 201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06년 31세에서 2016년 32.8세로 1.8세가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는 각각 27.8세에서 30.1세로 2.3세 증가했다.

[그림 2-1-2] 평균 초혼 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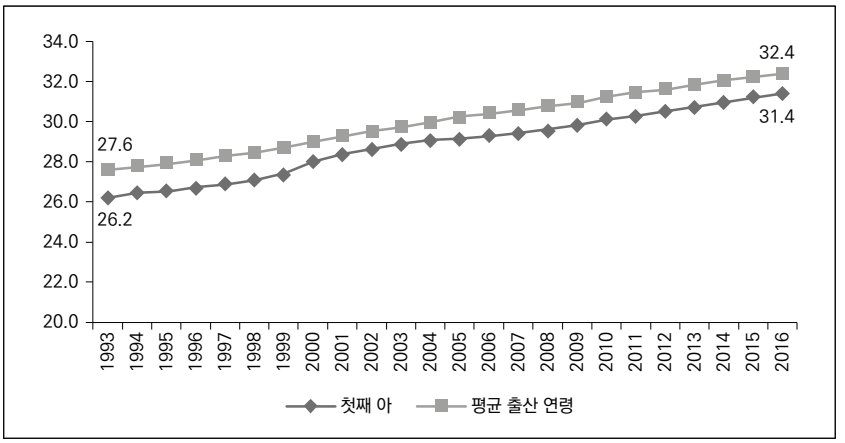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6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첫째아 출산연령은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첫째아 출산 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2016년 31.4세로 13년간 5.2세가 증가했다. 모든 자녀의 평균 출산연령은 각각 27.6세에서 32.4세로 같은 기간 동안 4.8세가 증가했다. 첫째아 출산 연령의 증가 폭에 비해 평균 출산연령 증가 폭이 작은 것은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2-1-3] 모의 평균 출산 연령과 첫째아 출산 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다운로드, 2017. 10. 13. 인출.

다. 본 연구의 연령 정의

통계청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년의 연령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에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 이후의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확장된 연령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부 조항, 그리고 최근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들이 정의하는 만 19~34세를 청년 연령으로 정의할 것이다. 다만, 일부 분석에 있어서는 분석의 목적이나 활용하는 자료의 특성상 다소 상이한 정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제2절 빈곤 일반론

빈곤의 원인과 특성은 다양하다. 특히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빈곤의 특성과 그 양상은 다르다. 일견하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층은 아직 충분한 사회복지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OECD 기준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및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미성숙된 사회복지제도 등을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 노동시장,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우며,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임금, 승진, 노동여건 등에 의해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빈곤에 노출된다. 여성 혹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이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여성을 쉽게 빈곤에 노출시키게 된다.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남녀 임금 차별로 인해 저임금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을 가짐으로써 남성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생활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장애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년은 어떻게 하여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일견하여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정적 요인으로 청소년 시절 부모의 가난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부족으로 인해 저임금자로 생활 하게 됨으로써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상태로 취업을 할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증대와 이로 인한 낮은 소득과 낮은 복지지원으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본인은 물론 결혼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빈곤의 심각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생애주기별 빈곤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빈곤

노인빈곤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가 노인빈곤 관련 연구이다. 논문 및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를 기준으로,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자료량(국회도서관, 2017년 6월 10일 인출 기준, 미기간 설정)을 보면 "노인빈곤"은 675건(국회도서관 551건, DBPIA 56건, 뉴논문 68건), "장애인빈곤"은 189건(국회도서관 41건, DBPIA 125건, 뉴논문 23건), "여성빈곤"은 449건(국회도서관 360건, DBPIA 41건, 뉴논문 48건)으로 노인빈곤 관련 연구와 자료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청년빈곤"의 경우에는 63건(국회도서관 53건, DBPIA 7건, 뉴논문 3건)에 불과해 다른 생애주기별 빈곤 연구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노인빈곤 관련 연구 동향을 분류한 연구인 여유진, 김미곤 등(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노인의 빈곤 및 불평등 수준을 설명하는 연구, 둘째 노인빈곤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 셋째, 공사적 이전소득이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인빈곤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노인이 왜 빈곤한지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최현수, 류연규(2003), 홍백의(2005), 석상훈, 김헌수(2012) 등을 들고 있다(여유진, 기미곤 등, 2012). 홍백의(2005)는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노인의 경제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 수, 교육 수준과 최종 직종을, 빈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세 변수와 더불어 연령이 빈곤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성별·결혼 형태에 비해 과거 노동 경험이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석상훈, 김헌수(2012)는 국민노후보장패널을 분석 시, 노인빈곤율의 변화에 있어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경우 빈곤율이 약 11%수준이었지만 60대를 넘어서면서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60~64세는 20.6%, 65~69세는 25.0%, 70~74세는 46.6% 등으로 변하고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토대로 가구주가 상용직이거나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잘 마감하는 경우 빈곤으로 떨어질 확률이 낮았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일을 지속할 수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석상훈, 김헌수, 2012). 이와 관련하여 김태완, 이주미(2017)는 중고령층(50~64세)의 노동시장 참여 이력과 연금 가입 이력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고령 시기 불안정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연금 가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이 될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홍백의(2005), 석상훈, 김헌수(2012)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빈곤의 일차적 요인으로는 중장년 시기 불안정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연금 등 사회보험체계에서 사각지대를 경험한 중고령층이 노인이 되

어 노인빈곤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차적 요인을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미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등)에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시기 혹은 보험기준에 해당되는 시기(산재보험)부터 가입하도록 한 강제 보험제도이다. 하지만 동 제도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경험자가 노후에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사각지대 규모가 18~59세 기준으로 약 53%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입 대상자 두 명 중 한 명은 노후에도 국민연금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최옥금, 조영은, 2013, p. 41).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으로 확대되었지만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빈곤 감소효과도 2015년을 기준으로 52.0%에서 47.6%로 4.4%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율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임완섭, 2016, p. 89). 안정적이고 노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는 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통해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노인소득의 52.9%(근로 및 사업소득)가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었으며, 공적이전소득은 22.6%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적이전소득도 15.1%로 노인소득에서 외부 지원에 의한 소득도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정경희 등, 2014, p. 255).

이와 같이 노인의 빈곤문제는 길게는 중장년기의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노후 대비 미비라는 개인적 문제와 국가적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갖추지 못해 높은 노인빈곤율이 나타나고, 노인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회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2. 장애인빈곤

장애인빈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선우(2001)는 빈곤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가구주 유무, 결혼 여부, 가구원수 등), 인적자본 요인(기술력, 인적자본 축적 부족), 의료적 요인(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장애정도 등), 사회제도적 요인(보충성의 원칙, 빈곤의 함정 등),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시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장애인 채용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 등)의 5가지를 빈곤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연구는 이미 오래전에 연구된 것임에도 그 연구 결과는 현재에도 거의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성민(2010)은 장애인 가구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구는 자영업과 미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장애인의 실질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빈곤을 경험할 확률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이동성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서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이성민, 2010). 임수정, 유완식(2011)은 장애인빈곤 결정요인 분석에서 가구원수, 교육수준, 취업 여부 등이 빈곤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동 요인들이 빈곤화 가능성을 낮춘다고 설명하고 있다(임수정, 유완식, 2011). 장애인빈곤 완화 방안 중 하나로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빈곤하지 않을 것인가.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연구한 논문(김종진, 박자경, 2007)에 의하면 상용직 근무자에 비해 임시·일용직에 근무하거나 제조업보다 건설·운수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경우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취업 기간이 짧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문직, 사무직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종진, 박자경,

2007). 특징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고용 형태나 기업 내 집단고용이 오히려 일반경쟁을 통해 입사한 장애인에 비해 빈곤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김종진, 박자경, 2007).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보장은 가능하지만 그 지원하는 임금수준이 일반 제조업 등과 차별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의 빈곤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면 이선우(2001)의 연구가 지적한 인구학적, 노동시장, 인적자본 요인 등이 장애인의 빈곤화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인적자본 축적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시 장애 정도,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도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차별 역시 중요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선우(2001)는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빈곤 가능성이 높고 좋은 곳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분석 결과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좋은 일자리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용탁, 구인순(2013)은 장애인고용패널을 통한 분석에서 인구학적 요소(성별, 학력, 만성질환)와 더불어 일자리 차별 경험이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세란(2017)은 장애인 취업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일상생활상의 차별 경험, 구직활동·취직준비 시 차별 경험 등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은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에게는 빈곤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여성빈곤

여성빈곤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빈곤의 여성화'이다.[4] 빈곤의 여성화의 근거는 현대 사회 들어 나타난 핵가족화와 이로 인한 이혼, 별거, 사별 등의 가족해체가 증가하면서 남성에 비해 충분히 노동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한 여성들이 일을 해도 저임금,[5] 비정규직 문제로 빈곤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김혜영 등, 2005).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 빈곤한 현실에서도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 부양 책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함께 가짐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남성에 비해 크게 무겁다는 점이다. 여성이 일을 해도 남성 대비 적은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점은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차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시키는 측면은 임금노동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 중심의 제도로서 전업주부의 경우 대부분 남성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전업주부는 적용 제외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충분히 여성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김영란(1997)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이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빈곤에 크게 영향을 받

4)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여성 가구주와 무배우자 여성 노인 등이 취약집단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빈곤의 여성화는 기존 빈곤에 대해 접근하는 방안과 다르게 여성이란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주요 문제로 간주되어 설명할 수 있다(김영란, 1997, p. 4).

5)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3.3%로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프랑스의 13.7%의 세 배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5.3%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헤럴드경제, 2017).

고 있다는 점은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지위를 아내, 노동자, 어머니라는 세 가지 지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빈곤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의 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성인 자녀를 둔 취업 여성,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 순으로 빈곤율이 낮았다. 특이점은 전업주부의 빈곤율이 서구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으로, 전업주부 혹은 아내라는 위치가 여성의 빈곤 위험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노혜진, 2013).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만약 남성 가구주와 사별, 이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업주부, 아내라는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결국 빈곤으로의 추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양날의 칼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의 여성화와 관련한 초기 연구인 홍백의, 김혜연(2007)의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화 현상이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연령이 고령화될수록 빈곤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횡단자료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종단분석에서는 가구원수 및 가구 내 취업자 수가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홍백의, 김혜연, 2007).

4. 청년빈곤

마지막으로 청년빈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 장애인 및 여성 등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년실업, 주거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빈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청년빈곤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청년빈곤 연구는 박권일(2009), 김수정(2010), 김태완 등(2012) 등의 초기 연구를 기초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 먼

저 박권일(2009)은 청년빈곤을 노동시장과 연계된 불안정노동, 불안정 고용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청년빈곤 현상을 1990년대 풍미했던 세계화와 전통적인 가족복지의 끝이라고 표현하였다. 김수정(2010)의 연구는 청년빈곤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한 논문으로 청년빈곤 현상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아동빈곤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비슷한 시기 반정호(2010)도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청년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함께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김태완 등(2012)은 빈곤 중 근로빈곤의 관점에서 청년빈곤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은 학생 시기를 벗어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2000년대 이후 나타난 불안정 노동시장의 확대로 좋은 일자리보다는 불안정 고용 형태로 우선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청년층은 단기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년은 아동 시기에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빈곤 대책이 청년빈곤 대책과 연계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김태완 등, 2012). 또한 청년빈곤 현상이 노동시장과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징적으로 청년 시기에 경험한 빈곤 경험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 장년이 되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상흔효과(scaring effect)를 함께 보여주었다(Scarpetta, Anne, & Thoma, 2010). 이와 같은 상흔효과와 청년고용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김태완, 김진희(2016, p. 124)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분석에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고용 상태를 경험한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의 소득격차를 보면 매년 불안정고용을 경험한 청년

은 미경험 청년의 소득 대비 약 78% 수준에 불과하며, 한 번 불안정고용을 경험하면 지속성을 지니고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소득 격차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청년빈곤의 문제는 우선 노동시장, 고용문제와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빈곤과의 관계성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률과 낮은 문맹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높은 교육 열기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많아지며, 좋은 교육 투자를 받은 자녀와 청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로 연계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유진 등(2007)의 연구에서는 초졸 이하 아버지를 둔 자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최하위소득계층의 아버지를 둔 자녀가 차상위계층으로 단순 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전문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여유진 등, 2007). 이상은(2008) 역시 복지패널을 통한 분석에서 부모가 경험한 빈곤이 자녀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세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빈곤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청년빈곤문제는 주거문제, 정신적 문제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Multinominal)으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있다. 이미 김수정(2010)도 청년문제의 다차원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주미, 김태완(2016)도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최근 청년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주거문제에 대

해 주목하고 있다. 청년층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때 우선 직면하는 것이 주거문제이다. 부모와 동거 시에는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부모와 독립하면서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게 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권지웅, 이은진(2013), 이태진 등(2016), 김태완, 최준영(2017) 등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청년 독거가구의 주거문제이다. 권지웅, 이은진(2013)은 청년 독거가구의 35%가 4평 정도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에 월 5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주거 과부담 가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청년 14.7%가 서울 단독 청년 36%가 주거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완, 최준영(2017) 역시 청년 독거가구의 주거빈곤율이 2015년 기준으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기준 14.8%로 전체 청년층 6.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김태완, 최준영, 2017, p. 11).

청년의 빈곤문제를 다룬 연구는 현세대 및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빈곤문제는 노동시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다른 계층에 비해 노동시장 변화에 청년층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영향을 받고 이는 청년 빈곤문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일을 하기 위해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감내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또한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빈곤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은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빈곤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드러나 있는 빈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소득을 개인화한 소득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구 내 개인 간의 사적이전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가구원의 순수한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포착해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 연구들은 단순한 빈곤율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곤의 다양한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연구들이 가지는 학문적, 정책적 의미는 상당하다. 다만, 빈곤율 그 자체로는 소득 이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기준의 빈곤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희망빈곤이나 감춰진 빈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인이라는 청년의 시간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빈곤 그 이상의 차원으로 빈곤율을 측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절 다차원 빈곤

2015년 유엔은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이 속에 빈곤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기존 새천년개발목표는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성과로 2015년 소득이 하루 1달러 미만인 절대빈곤 인구가 절반 정도 줄어들었으며, 기아 인구

역시 절반으로 축소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2013).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는 새로운 목표를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결시킨다"는 취지하에 절대빈곤과 더불어 다차원적 빈곤지표(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소개하고 있다(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2015, p. 24).

다차원적 빈곤은 전통적인 빈곤 정의 및 빈곤 측정이 주로 소득(Income)과 지출(Expenditure)을 중심으로 한 화폐적 방법(Monetary)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빈곤의 양상이 어느 한 지표 혹은 현상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로 나타나면서 2000년대 들어 빈곤의 범주를 비화폐적 범주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 빈곤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은 빈곤 측정에 있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크게는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빈곤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이미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은 1960년대 타운젠드(P. Townsend)의 박탈(deprivation)과 센(A. Sen)의 인간적 복지(Human wellbeing)란 관점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이현주, 정은희 등, 2012, p. 13). 최근의 다차원적 빈곤은 이들 선행연구의 범주를 벗어나 빈곤이 바라봐야 할 영역을 넓히고 각 차원별 빈곤의 측정은 물론 단일지표화를 통해 빈곤 간 비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빈곤의 범주를 확대하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기틀을 제공한 학자로 센(A. Sen)을 들 수 있다. 센은 능력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이란 개념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소득측정만으로 정의되고 해결될 수 없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능력(Capability)'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윤태, 서재욱, 2015, p.

162). 센은 능력을 통해 빈곤을 설명함에 있어 우선 개인이 자원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중요하며 이를 '권한부여(entitlement)'라고 명명하고 있다. 사회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박탈이나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가 석유 자원을 통해 국부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개인이 자연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가난해지며, 자원을 통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과 집단은 부유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센은 권한 부여와 더불어 자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윤태, 서재욱, 2015, p. 162).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내에 보유한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행위와 상태(doing and being)가 중요해지고 성취된 상황들의 조합이 능력(Capabilities)들로 전화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 개인은 진정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서병수, 2007, p. 202). 센이 설명하는 빈곤(poverty)은 '물질적 안녕의 기본적 기회를 갖지 못해 특정한 절대적 최소한의 능력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김윤태, 서재욱, 2015, p. 162에서 재인용).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내 혹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자원을 통제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자원을 자신을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부족 혹은 결핍이 된 실패한 경우를 빈곤(=능력 박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센이 제안하고 있는 능력의 개념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측정될 수 없으며, 개인의 고유한 특성(지식, 신체 조건 등), 사회적(제도, 사회적 규범, 계층 등) 및 환경적 특성(주거, 기후, 지역 등) 등 다양한 범주를 통해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다차원성을 가지게 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다차원적 빈곤이다.

센이 제안하고 있는 다차원 빈곤의 개념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분석 방법과 차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초기 연구로는 서병수(2007), 김경혜 등(2010), 최균 등(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는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서병수(2007) 연구에서는 센의 능력을 실현능력접근으로 해석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화폐적 측면은 지출을, 비화폐적 측면은 학력, 주거 만족, 건강, 인간관계, 노동시장(종사상 지위),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였다. 김경혜 등(2010)의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였다. 사전에 차원 설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결정된 차원은 화폐적 측면은 소득, 자산을, 비화폐적 측면은 노동시장 차원은 장기실업 여부, 비정규직 유무,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주거 차원은 최저주거기준, 주거환경, 비용부담을, 건강 차원은 건강수준, 기초영양, 비용 부담을, 교육 차원은 교육접근성, 사교육 결핍,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였다(김경혜 등, 2010). 최균 등(2011) 역시 소득 자산과 주거, 건강, 근로 능력, 사회환경, 제도, 기대수명 등 삶의 다양한 조건과 차원들에서 발생하는 결핍을 직접 측정하였다.

이들 다차원적 빈곤 연구들은 노인, 아동, 전체 인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차원적 빈곤 연구 방법을 청년층에 적용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분명히 차별된다 할 수 있다.

제 3 장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

제1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현황
제2절 영역별 청년지원정책 특성
제3절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흐름
제4절 시사점

3 우리나라 청년정책 현황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특성을 소득, 주거, 교육, 고용 등 영역별로 정리하고 청년지원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제1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현황

1. 중앙정부

가.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청년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소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19개의 부처에서 약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약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 병행제,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같은 고용을 촉진하고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에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등과 같이 학습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화지원),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금 자금) 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각 소관부처에서 각각의 부처와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진로 및 상담지원, 교육훈련지원, 체험 및 인턴지원, 해외취업지원, 공공일자리관련 프로그램,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창업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취업진로를 지원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개인을 지원하면서 기업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3-1-1〉 중앙정부 청년지원 프로그램 현황

소관부서 (사업개수)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23)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재학생 직무체험, K-Move(해외취업지원),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교육부 (17)	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BK21 플러스 사업,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편·적용 체제 구축,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사내대학,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재직자 후진학 지원, 대학 창업교육 체계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미래창조과학부 (7)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창조경제타운 구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문화체육관광부 (11)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박물관 진흥지원(학예·교육인력 지원),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교육 및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관광전문인력 양성,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문화콘텐츠 인재양성),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외교부 (3)	월드프렌즈코리아(해외봉사단) 사업, ODA 영프로세셔널 사업, 다자협력전문자(KMCO) 파견사업
법무부(1)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행정안전부(1)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2)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운영,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산업통산자원부 (4)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 인력역량강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3)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여성가족부(1)	취업사관학교

소관부서 (사업개수)	프로그램
국토부(4)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U-City 인력양성, 물류 전문인력양성지원
해양수산부(7)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오션폴리텍 양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해양관광 창업 지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국방부(1)	유급지원병(군 특성화고) 양성
중소기업청 (10)	맞춤형 연수사업,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본글로벌액셀러레이팅(창업사업화지원),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교육센터(창업인프라 지원), 대한민국 창업리그(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 지원사업(창업저변확대),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금 자금)
병무청(2)	취업맞춤형특기병 제도 확대 및 내실화, 상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 확대
농촌진흥청(1)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산림청(1)	해외산림인턴지원
기상청(1)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2017).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guide book.

동일한 프로그램을 지원대상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등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훈련, 재직자 후진학지원 등 일을 하면서도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서는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학교기업 지원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이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교육 및 훈련 사업이외에도 해외취업이나 공공일자리, 창업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3-1-2〉 중앙정부의 지원대상별 청년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류 (사업개수)	프로그램
고등학교 재학생 (18)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청년친화강소기업, 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변·적용 체제 구축, 특성화고 등 기업 맞춤형반 운영, 학교기업 지원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오션폴리텍 양성, 유급지원병(군 특성화고) 양성
고등학교 졸업생 (15)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청년친화강소기업, 재직자 후진학 지원, 대학창업펀드 조성,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오션폴리텍 양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대학교 재학생 (3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 대학생 등록금 부담경감, 중소기업 취업 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내대학,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오션폴리텍 양성, 유급지원병(군 특성화고) 양성,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대학교 졸업생 (30)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박물관 진흥지원(학예·교육인력 지원), 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교육 및 배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사업,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U-City 인력양성, 오션폴리텍 양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분류 (사업개수)	프로그램
청년 미취업자 (42)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재학생 직문체험, K-Move(해외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학창업펀드 조성,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관광전문인력양성,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문화콘텐츠 인재양성), 월드프렌즈코리아(해외봉사단) 사업, ODA 영프로페셔널 사업, 다자협력전문가(KMCO) 파견사업,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AFLO) 운영,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화학물질평가 전문인력 양성, 취업사관학교, 글로벌청연리더 양성,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오션폴리텍 양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맞춤형 연수사업,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확대 및 내실화,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배정 확대,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해외산림인턴지원
대학지원 (17)	대학일자리센터(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대학 특성화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BK21 플로스 사업,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 인력역량강화,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기업지원 (1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대기업·공공기관 교육훈련),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K-Move(해외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확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학교기업 지원 사업,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인턴지원사업
해외취업(1)	K-Move(해외취업지원)
창업지원 (18)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창조경제타운 구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해양관광 창업 지원, 수산산업 창업투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본그로벌액셀러레이팅(창업사업화지원),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보육센터(창업인프라 지원), 대학민국 창업리그(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교 지원사업(창업저변확대),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금 자금),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2017).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guide book.

나. 법 제정

중앙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하나밖에 없다.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별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장 제1조). 청년 연령의 정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며,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본 법률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법률은 유효기간이 정해져있는(2018년 12월 31일) 한시법이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의안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43건이 발의되었으며, 그중 29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의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청년기본법안 3건, 청년정책기본법안 1건,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농업인, 청년 첫 일자리 등 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청년발전지원,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세법안, 청년기본소득법안, 청년주거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에서 청년의 연령의 범위로는 최소 18세부터 최대 39세까지 포괄하며, 의안의 목적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청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보고, 청년관련 실태조사 실시, 청년참여증진 및 확대방안마련, 청년관련 시설운영 및 청년단체 지원, 청년주간 또는 청년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의 의안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3〉 20대 국회 청년관련 의안 현황

구분	연령	주요내용(요약)	비고
청년기본법안 (신보라 의원)	19-39세	•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 • 청년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관련 실태조사 매년 실시 •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중앙 및 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 청년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 • 청년단체 행사 지원	2016. 5. 30. 소관위 접수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세-29세)	• 청년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및 청년창업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 우대 • 중소기업제품 구입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 계획 포함 • 청년의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제 도입 • 소규모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거래의 활성화,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기술의 개발 등 지원	2016. 6. 13. 소관위 접수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 의원)	19-34세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정책 분석 및 평가 •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 •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 • 청년수당 지급 • 청년 능력개발, 사회참여,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 지원 • 청년시설 설치 운영	2016. 8. 17. 소관위 접수

구분	연령	주요내용(요약)	비고
청년기본법안 (이원욱 의원)	19-39세	•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선언 •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 지정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및 평가 •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 지정 •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청년 참여확대 방안 강구, 청년 청치 참여 기회 확대 •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저소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융자 •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지역청년인재 및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 지원 • 청년 주거환경 개선 • 청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지원 •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 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창의적인 청년문화 창고 및 육성 • 청년생활지원금 지급 •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매년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서 등 작성, 국회 제출	2016. 8. 24. 소관위 접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수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29세)	•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한 청년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대학내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적평가 제도 등 운영 권장 •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 수립 및 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청년기업제품 구매계획 포함 • 영세청년창업자 지원 • 청년창업기업 활동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	2016. 10. 24. 소관위 접수

구분	연령	주요내용(요약)	비고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박홍근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15-29세)	• 청년 첫일자리 지원의 종류는 취업알선 지원, 청년직업훈련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창업지원, 해외취업 지원 등으로 정함 • 지원대상자를 최종학교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한 날부터 3년이 결과하지 아니한 자, 이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 • 구직지원수당, 취업장려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지원 • 첫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진행 • 조세감면	2016. 10. 24. 소관위 접수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원욱 의원)	-	•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심사·처리 등을 위한 청년특별위원회 구성	2016. 10. 26. 소관위 접수
청년세법안 (정세균 의원)	-	•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	2016. 11. 14. 소관위 접수
청년발전 기본법안 (김혜연 의원)	19-34세	•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 청년정책임관 지정 •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청년주간 지정 •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 청년관련 시설 설치·운영	2016. 12. 2. 소관위 접수
청년기본소득법안 (김부겸 의원)	19-29세	• 비정규직 취업자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에게 지급 • 청년기본소득액은 청년 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생활비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보건복지부에 청년기본소득위원회 구성	2017. 1. 31. 소관위 접수
청년기본법안 (박주민 의원)	19-34세	•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 설치 • 청년지원금 지급 •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2017. 4. 13. 소관위 접수

구분	연령	주요내용(요약)	비고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강창일 의원)	18-39세	• 매년 7월 청년의 달 지정 • 청년정책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관련 문제 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연구 실시 • 청년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 •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위원회 구성 • 청년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 마련 •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청년 참여 •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청년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 수립 시행 • 청년 주거안정지원금 지급 • 청년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청년의 정치활동 지원 • 청년단체의 행정적 지원 •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작성	2017. 6. 30. 소관위 접수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 의원)	15-39세	• 청년농업인에게 청년농업인 직불금 지급	2017. 9. 13. 소관위 접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 의원)	19-39세	• 청년지원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에 대한 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시사가 청년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청년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청년지원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청년주거안정에 대한 통계 작성 • 청년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청년주거복지센터 설치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과 청년임차인 간의 보증기관의 신용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지원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지원	2017. 10. 30. 접수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17. 10. 30. 인출.

2. 지방자치단체

가. 청년수당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장학금 지원 등의 현물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현금으로 청년들의 삶을 보전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청년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구직촉진수당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3단계 집중취업알선 단계를 진행하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총 3개월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훈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청년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수당의 대상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수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령의 기준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범위가 대부분이나 18세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연령구분보다는 저소득층, 취창업 교육이수자 등 지원대상자의 특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액 총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이며, 평균적으로 월 20만~5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수당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 카드 형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수당은 단순히 수당만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청년수당은 대부분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경우, 구직활동을 한 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청년수당은 2016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하여 중앙부처에서도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시행된 이력이 짧은 만큼 앞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등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청년수당의 지급 목적이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됨에 따라 청년수당이라는 명칭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자인 청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표 3-1-4〉 청년수당 지원 사업

구분	대상	지원액	지급방법
청년구직 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진행하는 청년	월 30만 원×최대 3개월 = 총 90만 원	현금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2017. 1. 1. 이전 서울 거주,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천 명(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졸업예정자 포함)	월 50만 원×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50만 원씩 지급
경기도 청년 카드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 2백 명(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졸업 예정자 포함)	월 50만 원×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경기청년카드 발급 후 지출액만큼 통장 입금
성남시 청년 배당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 (1992. 7. 2.~ 1993. 7. 1. 출생)	월 25만 원×최대 4분기 = 총 1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분기별 지급
강원도 청년수당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대학생(졸업 예정자, 휴학자), 특성화고, 창업, 소상공인 종사, 취·창업 교육 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제대 군인 등 2,517명	월 30만 원×최대 3개월 = 총 90만 원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구분	대상	지원액	지급방법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6000명	월 30만 원×최대 6개월 = 총 180만 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차감
경북 청년 복지카드	중소기업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5~39세 청년 1800명(경북 주소지, 연봉 3000만 원 미만 등)	월 50만 원×2회(5월, 7월)= 총 100만 원	복지카드(추후 100만 원 일괄 지급 예정)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2천 명(졸업 유예자 및 구직자)	월 50만 원씩 연간 지급 = 최대 240만 원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지출액 만큼 통장 입금)
광주 청년 드림 (Dream)	1기: 광주 거주 중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40명 2기: 중위소득 70% 이하, 만 19~29세 청년 240명	1기: 5개월 간 일자리 경험 + 매달 10만 원 2기: 광주청년 교통수당 매달 6만 원×5개월	1기: 현금 지급 2기: 교통카드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수당 모음zip.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7. 9. 16. 인출.

나. 청년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 조례

청년지원 정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청년수당의 경우도 중앙정부는 아직 준비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38개의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두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에서 3개의 시도를 제외하고는 청년(또는 청년정책/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가지고 두고 있다. 청년(정책/발전) 기본 조례 이외에도 미취업자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촉진지원, 창업지원 등 일자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며,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다. 그 밖에 지역 특색에 맞는 농어업인 경영인 육성에 대한 조례와 청년 주택 공급에 대한 조례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연령 기준은 최소 15세에서 최대 39세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과 관련되어서는 15세에서 29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 능력, 역량 개발 등 인재 양성,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창업지원 등 일자리 관련 지원,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부채 경감, 청년의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에 물꼬를 트고 있다. 중앙정부도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기본법을 마련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표 3-1-5〉 지방자체단체의 청년관련 조례

구분	조례	기준연령	주요정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15-29세		서울시 주민 등록 있음. 미취업자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없음		

구분	조례	기준연령	주요정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8-34세	가.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의 청년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 생활안정 바. 청년 권익향상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9-39세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대구광역시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준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18-34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19-39세	가.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나.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 다. 청년 창업의 지원 라.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등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15-29세		광주광역시 주 민 등 록 기준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준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만 39세 이하		광주시에서 거주

구분	조례	기준연령	주요정책	비고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9-39세	가. 청년의 사회 참여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건강권 보장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 카드 조례	만 18세-34세		대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있음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경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	18-34세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20-39세		경기도 거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구분	조례	기준연령	주요정책	비고
강원	강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8-45세		관내 주소를 둔 자
충북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15-39세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충남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18-34세	가. 참여확대 나. 능력개발 다. 고용확대 라. 주거와 생활안정 마.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권리보호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충청남도 주소를 가진 자
전북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 아.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구분	조례	기준연령	주요정책	비고
전남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18-39세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전라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경북	경상북도 청년 창업지원 조례	15-39세		경상북도 거주자
	경상북도 청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8-40세 미만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15-29세		경상북도 주민등록 기준
경남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19-34세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19-34세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교류확대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5-29세 고용: 15-34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에서 2017. 10. 30. 인출.

제2절 영역별 청년지원정책 특성

이번에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특성을 영역별로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소득, 주거, 교육,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만을 뽑아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소득지원

먼저, 청년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정도로 살펴볼 수 있으며,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센터알선 등의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2년 동안 근속하면서 매월 125,000원씩 적립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이 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며, 정규직 대상자이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융자사업이 있다. 학자금과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앞에서 소개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청년구직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수

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2017년 하반기에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는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저소득 빈곤층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표 3-2-1〉 청년의 소득지원 사업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지원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센터알선) 참여 청년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부담금 300만 원(매월 12.5만 원) 적립 시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1,600만 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고용노동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민국 국민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5%로 대출 ※ 소득분위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교육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200만 원 한도(학기당 100만 원) 내에서 대출금리 연 2.5%로 대출	교육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 ※ 졸업 후 2년 이후 1학기 분을 1년 이내 월별 균등 분할 상환	교육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예정)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2019년: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 청년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 예정	2017년: 30만 원 3개월 2019년: 50만 원 6개월 2020년: 학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예정	고용노동부 (국정과제)

자료: 1) 보건복지부. (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 주거지원

청년의 주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행복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행복주택 공급의 경우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행복주택 공급 사업에서는 청년이라는 연령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도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도 연령으로 제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행복주택 공급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으로 정리하였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사업의 경우 연령의 기준을 만 35세 이하로 한정하고 무소득 취업준비생, 취업 5년 이내 사회 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월세 자금으로 매월 30만 원까지 한도 대출을 해 주고 있으며, 지원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약 30만 실 공급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3-2-2〉 청년의 주거지원 사업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행복주택 공급	• 소득: 대상에 따라 평균소득의 43~100% 이하 • 자산: 대상에 따라0.72억 원~2.28억 원 • 대상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	계층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국토 교통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8,500만 원, 광역시 최대 6,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수준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국토 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무주택자인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우대형 및 일반형에 해당하는 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 초년생(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일반형)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30만 원까지 2년간 대출(총 720만 원 한도)	국토 교통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지원예정)	신혼부부	2022년까지 20만 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국토 교통부 (국정과제)
주거비용 지원 강화 (지원예정)	저소득 신혼부부	20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국토 교통부 (국정과제)
청년 임대주택 공급 (지원예정)	청년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 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공급(20만 실), 기숙사 확대(5만 명) 등	국토 교통부 (국정과제)

자료: 1) 보건복지부. (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 교육지원

이번에는 청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주관부처는 교육부이며, 국가장학금, 국가교육 근로장학금,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 장학사업, 인문 100년 장학금이 있다. 이들 사업은 소득과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체육, 이공계, 인문계 등 각 분야별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청년의 교육지원 사업은 장학금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지원의 경우는 장학금 이외에도 생활비, 학업장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비의 경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로 한정하고 학기당 1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처럼 청년의 교육지원 사업에는 생활비나 학업 장려비와 같은 비목의 교육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표 3-2-3〉 청년의 교육지원 사업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국가 장학금	•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국가장학금 II유형: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단, '98. 1. 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 I유형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성적(B0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I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 기초, 1분위, 2분위: 520 - 3분위: 390 - 4분위: 286 - 5분위: 168 - 6분위: 120 - 7분위, 8분위: 67.5 - II유형: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단, 기초~2분위는 연간 520만 원 지원, '17년 기준임)	교육부
국가 교육 근로 장학금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 • 시급단가: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주당 근로시간: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형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교육부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 '19년 2월 또는 '20년 2월 졸업 예정자 • 소속 고등학교가 속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자 •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공실기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학점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12단위(고2) 이상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 지원 대상: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지원 내역: 학업 장려비 지원(고등2학년 : 월 50만 원, 고등3학년: 70만 원), 진학 및 학업 관리비: 시험 응시료, 원서 지원비 등 • 지원기간: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지원 〈유학생(해외장학생)〉 • 선발기준: 유학준비생 장학생 중 해외대학 진학자를 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학생 유형으로 전환여부 결정 • 지원내역: 연간 최대 5만 USD(학	교육부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비+체재비), 항공료 별도 - 학비: 대학의 수업료, 등록비, 보험료, 학교시설 이용료 등 - 체재비: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참고) ※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학비+체재비가 5만 USD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최대 1만 USD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항공료: 연간 최대 2,500USD 이내에서 매년 왕복 1회 또는 편도 2회 항공료 실비 지원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3학년 재학생	• 등록금: 장학생 선발 학기부터 2년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단, 계속지원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87점/100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충족 시 계속 지원) • 생활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학기당 180만 원을 추가로 지원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학업장려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학업장려비를 추가로 지원(연간 150만 원)	교육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 신입생: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포함)한 우수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 • 재학중 우수자: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 • 지원금액: 학기당 180만 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매학기 일정 성적** 충족 시 계속 지급) *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정규 4학기)까지 지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중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교육부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인문 100년 장학금	인문학에 대한 학생의 학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전공탐색유형'과 '전공확립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선발 • 전공탐색유형 - 선발대상: 인문사회계열 진학 예정인 국내 고교 3학년 및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 선발방법: (고교 3학년) 교육청 추천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인문사회계열 분야에서의 성장가능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발, (대학 1학년) 대학별 인재육성계획에 따라 대학 자체 선발 - 석·박사 진학 장려: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지원방안 검토(예정) • 전공확립유형 - 선발대상: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중인 3학년 - 선발방법: 대학별 인재육성계획에 따라 대학 자체 선발 - 석·박사 진학 장려: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진학시 장학금 지원방안 검토(예정)	• 전공탐색유형: 대학 1~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학기당 180만 원), 학업장려비(학기당 300만 원, 대학 50% 대응 투자 시)를 지원 • 전공확립유형: 대학 3~4학년 등록금, 생활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학기당 180만 원), 학업장려비(학기당 300만 원, 대학 50% 대응 투자 시)를 지원	교육부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4. 고용지원

청년을 지원하는 가장 많은 정책은 고용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청년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기술·기능 인력 양성 훈련, 해외취업 지원 사업들이 있으며,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먼저, 가장 많이 알려진 사업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이는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하여 유형Ⅰ은 18세에서 69세까지의 모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형Ⅱ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과 만 35세에서 69세 이하의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유형Ⅱ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정리해 보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층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단계로 자가진단을 하는 단계를 신설하였으며, 2단계 의욕 능력증진 단계에서는 일경험, 해외취업, 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하여 청년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을 훈련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취업 아카데미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업지원금 또는 훈련장려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이 사업들은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의욕·능력 증진과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취업과 연계하여 사전에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신청 경로도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각 사업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직업을 체험해보고,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의 경우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 기업을 체험하고, 연수 참여자 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2~3학년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 사업 안에는 K-Move 스쿨, 민간 해외취업지원 알선금,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 해외취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는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해외진출 정보의 확인부터 지원, 면접, 학습까지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청년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 3-2-4〉 청년의 고용지원 사업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만 18~69세 미취업자로서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Ⅱ유형〉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자,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세~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1단계(진단·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지원 경로 설정 • 취업성공패키지Ⅰ: 수료 시 최대 25만 원, • 취업성공패키지Ⅱ: 수료 시 최대 20만 원 1.5단계(취업상담·취업알선): 최초 2회의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방문 또는 유선상담을 통한 취업상담·취업알선 실시(Ⅱ유형 대상) 2단계(의욕·능력증진):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참여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 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훈련장려금 11.6만 원까지 포함하여 6개월 간 월 최대 40만 원 지원 3단계(집중취업알선):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로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 지급 • 청년구직활동수당: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18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고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 원~1억 5천만 원 미만),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맞춤	사전단계: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 1단계(진단·경로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 심리검사, 일정요건 충족 시 참여수당(최대 2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특기병	2단계(의욕·능력증진): 일경험, 훈열, 해외취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일정요건 충족 시 훈련참여수당(최대 40만 원) 지급 3단계(집중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1회 2만 원, 최대 6만 원) 지급	
내일배움 카드제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 대학 졸업 예정자 등	•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훈련비의 20~95%(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간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를 지원하고, Ⅰ유형 참여자는 1년 간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21만 6천원~41만 6천원(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	고용노동부
일학습 병행제	학습근로자 취업희망자 (학력 관계 없음)	참여 기업에게 현장훈련 교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교사 및 행정전담자 수당 등)을 지원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5세 이상의 구직신청자 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비진학예정의 고3 재학생, 대학 졸업 예정자 등	고용센터 상담 결과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월 최대 41만 6천 원, 대상별·출석일수별 차등 지급)을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교·대학 졸업 예정자 중 청년 구직자	직업훈련: 훈련수당 월 2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 원(정규직 전환 후 1개월 후 20%, 6개월 후 30%, 1년 후 50% 지급)	고용노동부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청년취업 아카데미	• 학생: 대학 재학생(4년제 2~3학년, 2년제 1학년 2학기부터), 졸업 예정자(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가능자), 졸업자(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 기관: 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 훈련기관 등	• 학생: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관: 1인당 교육비의 80%를 지원(운영기관 20% 자부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미래 유망산업 종류, 전망 등 특강, 신성장 유망 산업분애 기업 체험, CEO 특강, 취업성공 사례, 연수 참여자 간 팀 프로젝트 수행 등 4일 이내 5~40시간 연수프로그램 참가(참가비 무료)	고용노둥부
재학생 직무체험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3학년 대학재학생 중심 단, 공학계역 및 대학별 최종학기(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등) 재학생은 제외	(지원지원금)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학생 1인단 월 40만 원), 관리자 지원비(학생 1인당 월 7만 원) (대학지원금) 재해보험 가입 등 운영기관 관리비(학생 1인당 1만 원) (학생지원)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월 40만 원 이상 연수지원비 지급 • 대학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1인당 월 40만 원 외 학생에게 추가지급 가능 • 자지단체가 대학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지원비 매칭·추가지원 가능	고용노동부
기술·기능인력 양성 훈련	다기능기술자과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기능사과정: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학력 제한 없음)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 국공립수준 등록금(학기당 약 130만 원), 다양한 장학금 혜택, 졸업 후 취업연계 및 사후지도 기능사과정(1년, 3~6월): 교육비·기숙사비·식비 등 국비지원, 수료 후 취업연계 및 사후지도, 훈련수당(20만 원/월), 교통비(5만 원/월)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지원	• K-Move 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500명) • 민간해외취업지원알선금: 합법	• K-Move 스쿨 - 최대 1년간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고용노동부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하고 연봉 2,400만 원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600명) •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인 만 34세 이하로 8분위 소득(월 6,071,090원) 이하 가구원(2,500명(단, 단순노무직 배제) • 해외취업알선: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교육비, 취업지원 등을 포함 1인당 단기 580만 원, 장기 800만 원 한도 내 지원 •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 (지원금 우대국가*) 취업 1개월 후 200만 원, 취업 6개월 후 200만 원 지원 - (그 외 국가) 취업 1개월 후 100만 원, 취업 6개월 후 100만 원 지원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6개국을 제외한 국가) • 해외취업알선: - 해외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 ※ 서울 K-Move 센터, 부산 K-Move 센터 • 해외취업지원센터 • K-Move 멘토단 운영 등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지원예정)	청년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매년 정원의 3%→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고용 노동부 (국정과제)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예정)	중소기업에 청년을 채용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2017년 5000명, 2018-2020년 매년 신규 2만 명)	고용 노동부 (국정과제)

자료: 1) 보건복지부. (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 고용노동부. (2017). 2017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guide book.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5.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년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한 사유는 청년의 연령 구분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청년이라 하며, 19세에서 34세 정도까지 보고 있으며,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청년과 청소년의 연령이 겹치게 된다. 이에, 19세에서 24세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년이기도 하며 청소년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이후 청년기에도 잘 해쳐나갈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청소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이지만 한부모가 된 경우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위기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전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운영하여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관련

된 사업에서는 많은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청년의 정신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2-5〉 청소년 지원 사업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7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최대 154만 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9~24세) ※ 우선지원대상 : 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비행, 인터넷 중독, 폭력(성·학교·가정)피해, 학업중단 청소년 등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후 청소년의 문제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상담지원: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의 상담 교육지원: 재취학, 재입학 등의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진로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기타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 등	여성가족부

사업명	선정기준	지원내용('17년 기준)	부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_Net)	9~24세 위기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ly-Net)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상담부터 가족갈등, 교우관계 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및 학업 문제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및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여성가족부
취업 사관학교	만 15~24세 미만의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지원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직업 훈련 무료 지원	여성가족부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3절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흐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부분이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슨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은 친밀감과 고립의 시기로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이며, 성인 중기의 발달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감으로 자녀를 잘 기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동료나 이성과 친밀감을 쌓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실패

하게 될 경우 고립감에 빠질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잘하지 못한 경우 침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단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청년기에는 사회생활, 결혼생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층은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은 하락하는 추세이며, 저성장으로 인하여 신규 채용이 줄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 등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하는 과업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정부는 청년들의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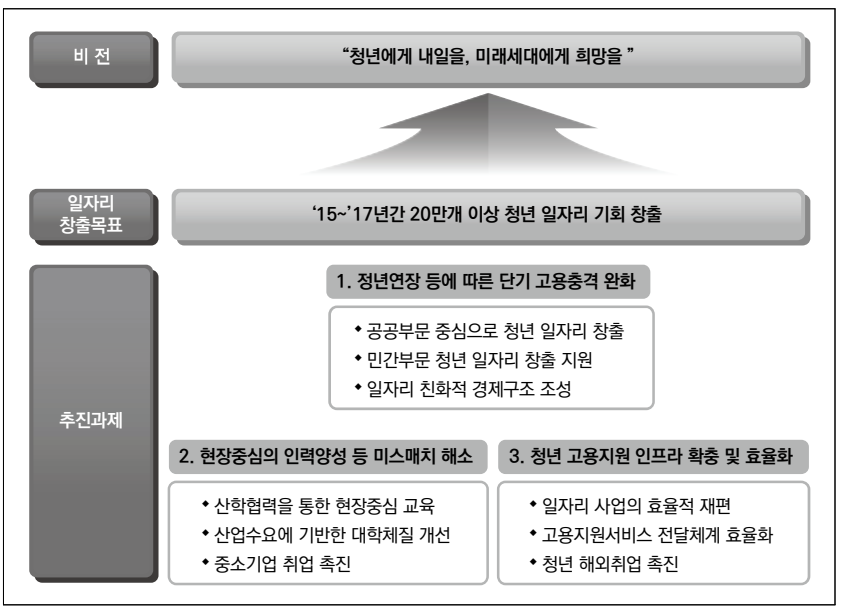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5년 7월 27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하였다. 이때 제시된 기본방향은 가시적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정책효과성 제고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가시적 일자리 창출)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체질 개선 등 가속화
- (정책효과성 제고) 정부부처·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 (가시적 일자리 창출)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체질 개선 등 가속화
- (정책효과성 제고) 정부부처·지자체별로 산재한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 7. 27.),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자료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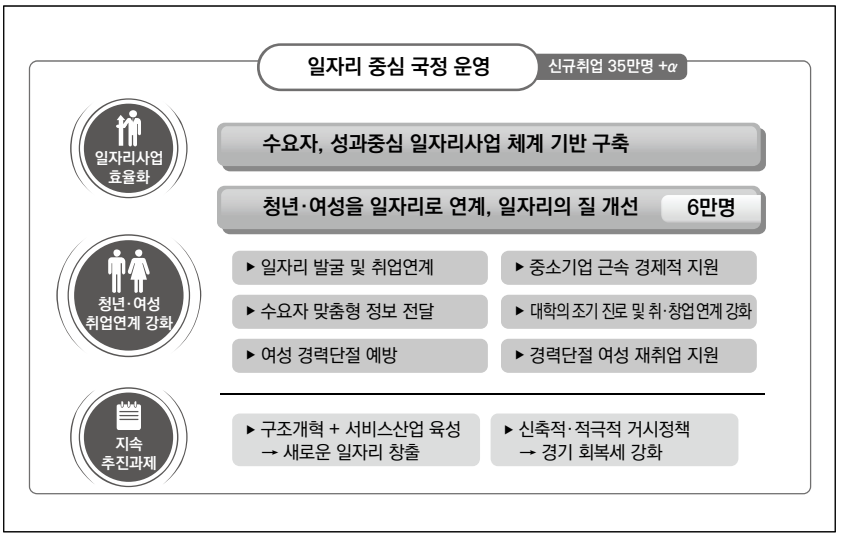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전제로,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15년~2017년간 20만 개 이상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②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③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 7. 27.),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자료에서 발췌.

그 다음으로는 2016년 4월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수요자, 성과중심 일자리사업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여성을 일자리로 연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세부 과제로는 일자리 발굴 및 채용 연계,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전달, 대학의 조기 진로 및 취·창업 연계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제시하였다.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4. 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발표 자료에서 발췌.

지난, 2017년 3월 22일, 정부는 2015년 7월과 2016년 4월에 발표된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청년고용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공공부문)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간호·간병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약 4.9만 명 신규채용
- (민관협업) 현장기반의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제, 고용디딤돌,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약 7만 원 취업지원
- (취업연계) 채용행사, 사회맞춤형학과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중개인' 역할 강화로 3.1만 명 취업연계

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2017. 3. 22.),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회의 자료에서 발췌.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 청년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수요 확대가 중요
  - 한편, 기존 대책은 취업지원 및 고용인프라 구축, 대학 재학생 등에 중점을 두어 부분적으로 접근한 측면
- 경기회복,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 채용연계를 원활히 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 더 큰 정책적 관심이 필요

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2017. 3. 22.),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회의 자료에서 발췌.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내실화하여 청년들의 기본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도피하지 않도록 고용 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하여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기회의 확대, 효율적인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 이외에도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불이행 사전방지, 학자금 대출지원, 학비부담 경감, 생계자금 지원, 성실상환 유인제공' 등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고용질서 확립, 불공정한 채용을 방지하거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여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자료: 경제관계장관회의(2017. 3. 22.),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회의 자료에서 발췌.

한편,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의 과제 수행을 위한 목표로는 청년구직활동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내용으로 20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부문에 청년 신규채용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청년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2017년에는 5천 명, 2018년~2020년은 매년 신규 2만 명씩 늘릴 계획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며, 2017년과 2018년에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되며, 2019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당 금액과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2020년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새일센터,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질

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을 기대한다.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 **과제목표**

○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17년)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재취업 원활화

○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발췌.

제4절 시사점

이상으로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20대 국회의 발의된 의안을 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 정책 중 청년수당에 대해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영역별 청년지원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중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청년정책은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고용정책에 대해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듯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고용을 안정화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거나, 정보가 한곳에 모아지기보다는 각종 해당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자 찾아가야 하는 등 수요자의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지원 정책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 최근 청년수당이라고 하여 소득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나, 이는 직접적인 소득지원이기보다는 구직활동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청년수당이라는 명칭에는 다소 어폐가 있어 보인다. 또한 청년의 소득지원 제도로는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많으나 이 또한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이 아닌,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

한 제도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꼽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로는 청년의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 주거지원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보다는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청년층이라고 한정지어서 지원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같은 청년층을 특화하여 지원을 하거나, 행복주택 공급과 같이 청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현 시대에서 청년은 학업, 취업,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노인부양지수가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청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성인이라는 관점과 젊다라는 관점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해쳐나가야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토로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청년광장과 같은 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부분은 청년의 소득, 주거, 고용에 대한 부분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에릭슨의 발달이론에서처럼 이들은 이성과의 친밀함을 쌓아서 결혼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의 문제, 고용의 문제, 주거의 문제의 한 가지 측면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결혼과 출산이라는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 시점에서 한 가지 측면만 보는 청년이 아닌, 다차

원적으로 본 청년으로 인식을 하고,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청년을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년 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을 고용할 경우 추가고용 장려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주거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약 30만 실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 소득과 경제활동

제1절 청년빈곤의 동태적 분석
제2절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4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 소득과 경제활동

제1절 청년빈곤의 동태적 분석

1. 개요

청년빈곤을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른 범주적 또는 인구학적 집단에 비해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빈곤의 문제가 어떤 구조적 특성과 경향을 가지면서 변화되고 있다면 이는 청년의 빈곤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전반적인 빈곤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빈곤이 다른 연령대의 집단에 비해 높지 않지만 그 특성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이라면 청년에 대한 빈곤 정책은 다른 집단과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빈곤을 유형화시켜 빈곤의 성향이 일시적 경향이 큰지, 아니면 반복적 경향이 큰지, 또는 반복적 경향 중 연속적 경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청년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P)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패널(YP)에는 청년들의 교육 및 취업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가장 오랜 기간 수행되어온 대표적이 청년관련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년빈곤은 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부로서 연구되어왔으며,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청년빈곤의 문제점과 특성을 포괄하는 측면도 있지만 청년빈곤은 근로빈곤층과는 구분되는 특성과 경향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득에 관련된 특성은 연령별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청년층에 집중한다.

2. 선행연구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과 저임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청년층의 빈곤 및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빈곤 진입과 탈출을 1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반복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고 이를 파악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먼저, 강금봉(2016)은 생존분석의 한 유형이지만 기존의 COX 모형을 보완하여 어떤 사건의 재발 즉, 반복적 사건을 분석하는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s Analysis)을 Andersen-Gill 모델로 분석하여 빈곤탈출 반복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Andersen-Gill 모형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재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모형으로, 위 연구는 분석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시장소득)의 60%에 못 미치면서 자산 측면에서 빈곤한 18세~65세의 임금근로자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빈곤탈출을 파악하기 위해 그 기준을 상대적 매우 높은 수준(기준 중위소득의 80%)으로 설정하고 이를 2년간 유지한 경우 빈곤탈출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감각적 차원의 훈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탈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빈곤 탈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2010)은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의 집단들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빈곤은 아동빈곤적 특성과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할 점은 청년빈곤의 결정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력 수준에 의해 청년빈곤 여부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청년빈곤층의 58%정도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빈곤한 상태인데 이는 부모에 의해 빈곤이 결정되는 '아동빈곤'적 특성을 보여준다. 연령 측면에서

는 아동기는 지났으나 아동기적 특성이 청년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빈곤층인 청년 가구주의 경우 다른 근로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낮은데,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의 동태적 특성의 파악에 있어 빈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복빈곤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빈곤층에 있는 지속빈곤층과 함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영민 등(2016)의 연구는 개인 단위를 기준으로 빈곤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빈곤을 동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6차~17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는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random effect dynamic probit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을 좀 더 살펴보면, 종속변수를 빈곤 탈출 횟수로 구분하여 빈곤 탈출 1회, 빈곤 탈출 2회 그리고 빈곤 재진입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한편, 최효미(2014)의 연구는 동태적 분석을 활용하여 저임금 근로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저임금에 대한 정의 중 OECD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의 중위임금(median wage)의 3분의 2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저임금근로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비저임금근로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동태적 패널임의효과모형(dynamic panel random effect model)'과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 모형들을 통해 여러 개의 고용형태를 준거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패널모형의 경우 관측되지 않는 시간 불변의 교란항을 제어할 수 있어 추정량의 편의를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패널 7차~15차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 7차연도에 결혼한 여성이면서 저임금근로에 속한 상당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저임금근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임금근로로의 이동하기보다는 미취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취업으로 이동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고용형태로 인한 상태의존성(전기의 어떤 특성이 현재의 형태를 결정짓는)이 발견되었으며, 전기(t-1)에 저임금근로 상태 기혼 여성이 현재(t기) 저임금근로로 아닌 경우로 이동했을 확률 역시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김태완 등(2012)의 경우 청년 빈곤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2005~2011년 자료를 통해 그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청년 빈곤을 지속빈곤, 반복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의 4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3개년 이상 빈곤이 유지된 지속빈곤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일시빈곤의 비율은 반복빈곤보다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복빈곤을 경험한 대상의 경우 아동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빈곤의 반복여부와 지속기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먼저 3개년 이상 빈곤이 지속된 경우를 지속빈곤으로 정의하였으며, 2개년 동안 빈곤상태인 경우는 반복빈곤, 동기간에 한 번만 빈곤이 존재하는 경우 '일시빈곤'으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YP)의 9개 연도 자료중 반복빈곤은 빈곤이 2회 이상 발생한 것을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2~9회) 파악하였고 연속빈곤은 빈곤이 연속해서 2년 이상 발생한 모든 경우 구분하여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청년패널(YP2007)을 활

용하였다. 청년패널(2007)은 만 1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 자료로써 2007년 1차 조사가 10,206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2015년 9차 조사까지의 조사가 공표되었다. 9차 조사의 표본 수는 7,357명이며 표본 유지율은 72%로 비교적 양호한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패널 구축 이후 시간의 경과로 대상자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패널 자료의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2015년 조사의 경우 15~22세의 청년층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동태적 변화와 특성이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2015년 새롭게 추가된 표본을 제외하고 2007년의 조사 시작 당시의 원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빈곤 경험자를 1회 빈곤, 반복빈곤, 연속빈곤으로 유형화시킨 후 그 현황을 통해 파악하였다. 여기서 1회 빈곤은 청년패널 2007~2015년 자료에서 1회 빈곤을 경험한 대상을 의미하며, 반복빈곤은 2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대상을 의미한다. 연속빈곤은 반복빈곤을 경험한 청년 중 연속해서 빈곤을 경험한 대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화를 통한 청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한 후에 청년 빈곤의 반복적 특성을 재발 자료 분석의 하나인 Andersen-Gill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모형은 어떤 사건의 재발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분석하여 재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청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에 대한 빈곤율 산출이 필요하다. 청년패널의 경우 청년이 속한 가구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과 기타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빈곤 분석에서와 같이 가처분소득 또는 시장소득을 고려한 빈곤율 산출은 불가능하지만 요소소득을 통한 빈곤율의 계산은 가능하다.[6] 청년패널에

6) 요소소득과 시장소득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빈곤통계연보의 서론을 참조함.

서 근로소득은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과 자영자의 소득이 포함되며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은 재산소득을 의미한다.

요소소득(Factor Income)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시장소득(Market income)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또한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빈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선에는 대표적으로 최저생계비 등을 활용하는 절대적 기준선과 중위소득(지출)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기준선을 적용한다. 상대적 방식의 기준선의 경우 대상집단의 경상소득 또는 가처분 소득 등의 분포를 바탕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청년패널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 기준선을 도출할 수는 없다. 물론 청년층 내부의 소득분포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다른 집단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방식의 기준선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장 최신 자료는 2015년인데, 2015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통합형 급여에서 개별급여 형태인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까지는 기존의 최저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선으로 적용되었고 동년 8월부터는 상대적 방식으로 계측된 급여별 기준선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 적용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5년 7월까지 적용된 최저생계비를 빈곤 판별의 기준선으로 적용하였다.

4. 분석 결과

아래 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요소소득 적용 빈곤율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의 경우 빈곤율이 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해인 2008년 5.1% 그리고 2009년의 경우 9.9%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등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조사의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보다는 낮지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요소소득의 경우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이 제외된 소득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영향이 더욱 크게 청년집단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청년집단의 빈곤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15년 기준 3.2%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의 조사 대상이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령 증가로 인한 취업 및 소득 증대로 인해 이들에 대한 빈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반복빈곤에 대해 A-G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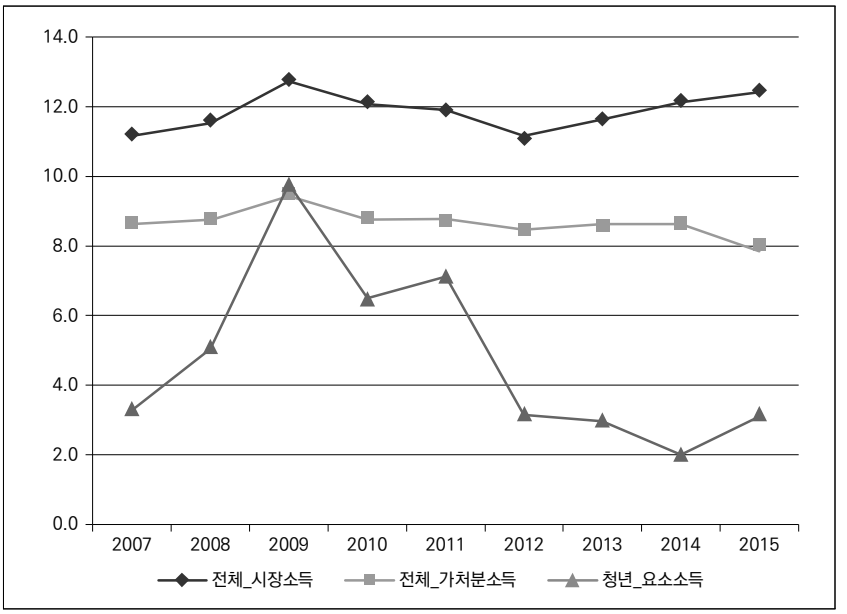
〈표 4-1-1〉 2007~2015년 연도별 청년패널(YP) 빈곤추이: 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빈곤율	3.3	5.1	9.9	6.6	7.2	3.2	3.1	2.1	3.2

자료: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1-1] 청년빈곤과 전체 빈곤 추이 비교: 최저생계비 기준



자료: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패널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상자들이 몇 번의 빈곤을 경험했는지 살펴보았다. 9년의 기간 동안 절대적 기준으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은 전체의 7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을 1회 경험한 집단은 13.7%, 2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전체 대상자의 2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간(8회 이상) 빈곤층에 속한 집단도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집단을 기준(100%)으로 하여 빈곤 경험 횟수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1회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빈곤 경험 집단의 67.4%인 것으로, 2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32.6인 것

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빈곤 경험자들의 경우 2회가 21.6%로 가장 많고 3회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4회는 2%, 5회는 0.9%로 나타났다. 9년 내내 빈곤집단에 속한 사람의 비중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체 집단은 1998명이며, 빈곤집단은 416명이다.

〈표 4-1-2〉 2007~2015년 빈곤경험 현황

(단위: %)

비빈곤		전체 집단	빈곤경험 집단
		79.6	
1회		13.7	67.4
2회 이상 (반복빈곤)		6.6	32.6
	2회	4.4	21.6
	3회	1.2	5.7
	4회	0.4	2.0
	5회	0.2	0.9
	6회	0.1	0.4
	7회	0	0.2
	8회	0.3	1.5
	9회	0.1	0.3
합계		100.0 (n = 1998)	100.0 (n = 416)

자료: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표 4-1-2〉가 빈곤 발생 빈도를 고려한 것과 달리 아래 표는 빈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빈곤이었다가 2008년에 비빈곤, 2009년의 빈곤 그리고 2010년부터 비빈곤인 경우 대상자는 반복빈곤(2회 빈곤)에 해당하나 연속빈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 처음 빈곤에 진입한 사람이 2009년에도 빈곤이었다가 2010년부터 비빈곤이라면 이 대상자는 2회 연속 빈곤에 해당한다.

전체 응답 집단을 대상으로 2회 연속 빈곤을 경험한 대상은 약 2.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회 빈곤을 경험한 4.4%에 비해 적은 비중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2회 연속 빈곤을 경험한 대상의 경우 최소 2회 반복빈곤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을 경험한 20.4%를 기준으로 빈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대상은 전체 빈곤경험 집단의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년 연속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전체 빈곤경험 집단의 1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경험한 집단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이상 연속으로 빈곤을 경험한 집단은 전체 빈곤경험 집단에서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내내 빈곤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앞서 빈곤경험 현황과 마찬가지로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를 살펴보면, 빈곤경험 집단의 대부분이(96.6%) 3년 이내에 빈곤에서 비빈곤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2007~2015년 연속빈곤 현황

(단위: %)

비빈곤	전체 집단	빈곤경험 집단
	79.6	
1년	16.1	78.9
2년 연속	2.7	13.1
3년 연속	0.9	4.6
4년 연속	0.2	1.2
5년 연속	0.1	0.4
7년 연속	0.3	1.6
9년 연속	0.1	0.3
합계	100.0 (n = 1998)	100.0 (n = 416)

자료: 청년패널(YP2007) 각 연도, 한국고용정보원

제2절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1. 서론

일명 '다포세대', '불황세대' 또는 'R세대(Generation of Recession)'라고 불리는 이들은 1997~1998년 대학 졸업을 앞뒀던 'IMF 세대'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꿈과 희망, 모든 삶의 가치마저 포기해버린 청년세대를 의미한다. 다포세대의 시작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작되었다. IMF의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제했으며 그 충격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입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상황에 처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는 준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졸자의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고시족', '공시족', '고공족'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직을 구하기 위한 고시경쟁이 가속화됐다. 또한 불안한 중소기업보다는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스펙경쟁과 함께 취업에 유리한 학점을 만들기 위한 졸업연기는 대학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청년층은 준실업상태에 해당하는 불안정고용,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새로운 빈곤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청년기 근로자들은 장년기 근로자들(prim-age workers)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받지만 이는 금세 회복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침체기를 경험한 세대는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신규 세대들과 차이가 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경기회복기

에 졸업을 한 세대는 빠르게 고용되지만 경기침체기에 졸업한 구세대들은 직업경력에 영구적인 흠결(set-back)을 경험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유발수요적인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노동의 질, 즉 인적자본의 수준은 동질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경기침체는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시간당 임금과 고용을 감축시키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다시 수요가 증가해 임금과 고용은 다시 회복된다. 이때 생애근로경력에 흠결을 가진 근로자는 수요충격이 없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재고용된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임금과 고용의 감소가 지속될 것이다.

경기침체가 청년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입직자의 학력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엄격한 근로자고용 보호법, 강력한 노조, 관대한 실업보험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경우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악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불이익이 더 오래 지속되게 된다. 따라서 청년입직자에 대한 경기침체 효과는 한 시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단계(school to work transition: STWT)는 바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례도 있지만 비정규직이나 실업(구직) 또는 비경제활동을 유지 또는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년입직자가 장년층과 달리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노동시장의 경험이 적은 미숙련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행 행태를 모든 청년들이 갖는 것은 아니다. 경제 상태나 국가마다 청년기의 이행 행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 청년들에 비해 비경활이나 실업의 기간이 짧고 보다 자주 이직을 경험한다. 즉 미국 청년들의 STWT 과정은

유럽의 청년들에 비해 역동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마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 최근 해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일정 기간 동안의 역동적인 이행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STWT 연구에서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34세[7]의 청년기 입직자는 학교에서 고용으로 이행하는 생애 중요한 단계로 전기의 경제활동상태가 다음 기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주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 존재한다면, 또는 경기침체기 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을 좋지 못한 일자리(unsatisfactory job)로 시작하게 된다면 이후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상태 등의 경제활동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들의 경제상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활동상태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생애근로경력을 연쇄시간분석을 통해 입직자의 성별, 연령대, 학력수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셋째, 청년기의 유형화된 생애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절의 구성은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고, 경제상태에 따른 청년노동시장의 상황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청년기의 경제활동상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고, 생애경제활동을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유형화할 예정이며, 이를 성별, 연령대, 학력에 따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생애경제활동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

7) 본 절에서는 청년 연령을 이직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상태가 안정된 30세~34세로 간주하여 34세까지 분석 시점을 확장했으며, 이를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의 5세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 19세부터 분석을 실시한 다른 장들과 달리 20세부터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2. 경기상태와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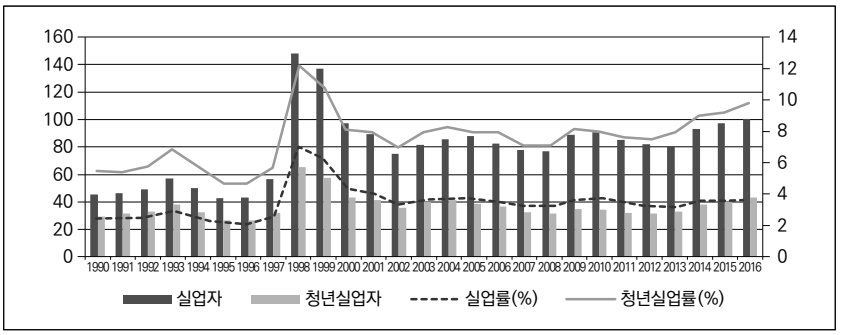
가. 연령대별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

통계청(2017년 7월)에 따르면,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100.3만 명) 중 11.96%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2014년 11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 실업은 구직 과정이나 경기 침체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6개월 넘게 구직하지 못하는 장기실업은 경제가 불황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침체기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의 충격이 노동시장 진입자인 청년층에게 집중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3%포인트 내외의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차이가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두 번째 경제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환위기 때처럼 급격한 전체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점차 감소하던 청년실업률은 다시 완만한 증가와 전체실업률과의 격차 확대를 가져오면서 청년 노동시장의 심각성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림 4-2-1] 청년실업률 추이(1990년~2016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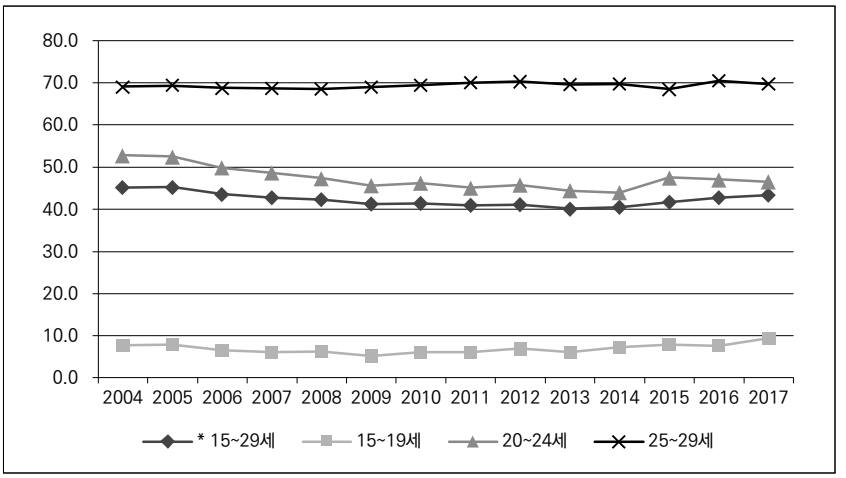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 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3에서 2017. 7. 13. 인출.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이후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다시 청년 고용률을 감소시켰다. 특히 노동시장에 주어진 거시경제 충격은 숙련도가 낮아 회피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입직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은 청년층 내의 연령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20~24세의 청년층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경험과 숙련도를 쌓은 25~29세의 고용률은 7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IMF 이후의 누적된 경기 충격의 효과가 20~24세의 입직자들에게 주로 전가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림 4-2-2]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1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sIdxSearch.do?idx_cd=1063에서 2017. 7. 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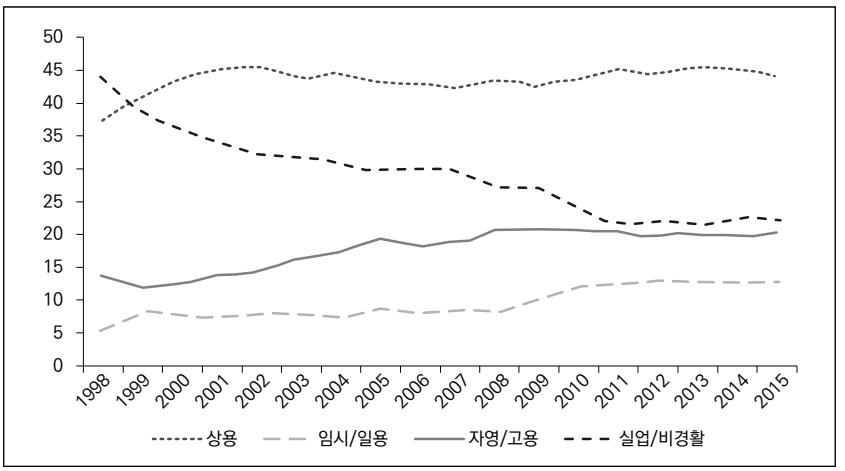
나.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 추이

본 연구에서는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패널조사」 1차에서 18차 자료를 사용하여 1997년 12월 IMF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입직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차에서 18차까지 모두 응답한 997명의 2015년까지 지난 18년간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98년 37.3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1년에는 45.19%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45% 내외의 수준을 유지했다. 실업/비경활은 1998년 43.99%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 이후에는 21%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1998년 5.4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12.93%로 나타났으며,

자영/고용주도 1998년 13.23%에서 점차 증가해 2008년 20.54%를 나타낸 이후 2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2-3]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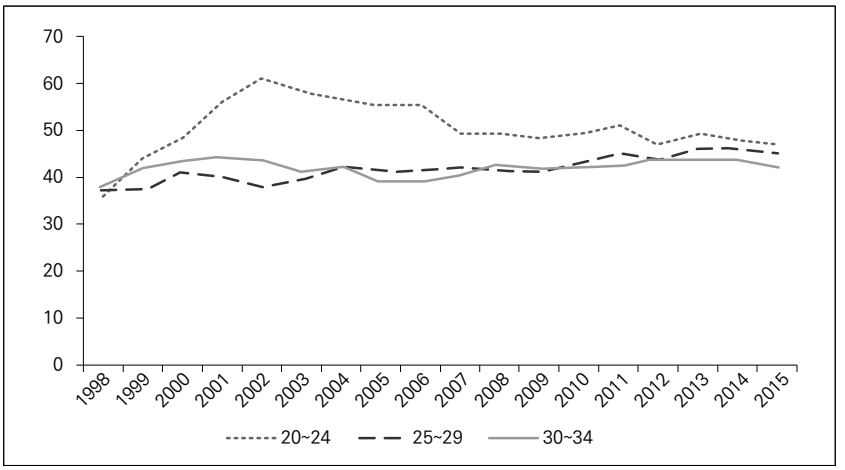
경기 충격은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입직자에게 주로 전가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의 종사상지위의 추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본다. 상용직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는 모든 연령대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이 이루어진 25~29세와 30~34세 연령대의 상용직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4세의 연령대는 이후 경기침체 효과가 줄어들면서 취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용직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가 점차 줄어들어 2015년에는 다른 연령대와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다. 임시/일용직에서도 20~24세의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변동성이 더 컸다. 20~24세의 연령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시/일

용직보다 상용직 취업이 더 쉬워졌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다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25~29세와 30~34세 연령대의 임시/일용직 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같은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자영/고용주는 1998년 시점에서 30~34세의 자영업/고용주 비율이 가장 높고, 20~24세 연령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자영/고용주의 비율이 늘어나 2015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실업/비경활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24세 연령대가 가장 높았으며 30~34세가 가장 낮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실업/비경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완만히 줄어들던 25~29세, 30~34세 연령대와 달리 당시 연령대가 대략 30~34세 수준인 20~24세 연령대의 실업/비경활이 크게 늘어나 경기침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종사상지위별 각 연령대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98년 아직 노동시장의 진입이 활발하지 않은 20~24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외환위기의 회복기에는 취업이 늘어나 상용직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용직은 줄고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늘어나며 실업/비경활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25~29세 연령대와 30~34세 연령대는 거의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며 상용직 비율은 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영/고용주 비율은 외환위기 전까지는 증가했지만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비경활의 비율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림 4-2-4] 연령대별 상용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그림 4-2-5] 연령대별 임시/일용직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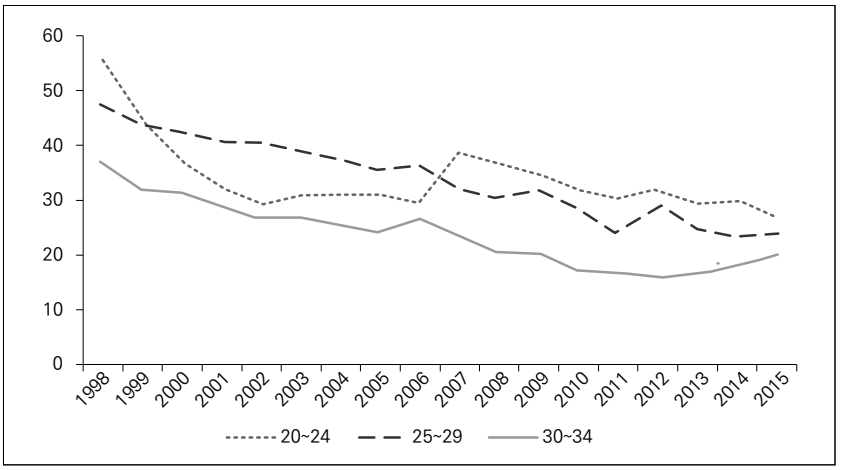
[그림 4-2-6] 연령대별 자영/고용주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그림 4-2-7] 연령대별 실업/비경활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다.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계산

개인의 특성별로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에서 전기($t-1$) 대비 다음 기(t)에도 상용직일 확률은 88.92%, 임시/일용직 71.34%, 자영/고용주 88.44%, 실업/비경활은 78.64%로 상용직의 유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용직 유지 확률은 84.21%, 임시/일용직 68.32%, 자영/고용주 85.52%, 실업/비경활은 82.59%로 역시 상용직의 유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상용직일 확률이 92.272%, 임시/일용직 76.10%, 자영/고용주 91.04%, 실업/비경활은 48.45%로 역시 상용직의 유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 유지 비율이 더 높고 실업/비경활의 유지비율은 크게 낮았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상용직 이행률이 여성보다 높다는 것은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비경활이라 해도 남성은 여성보다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고용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에서는 상용직일 확률은 86.842%, 임시/일용직 72.88%, 자영/고용주 88.43%, 실업/비경활은 79.79%로 자영/고용주의 유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는 상용직 유지 확률은 90.18%, 임시/일용직 57.89%, 자영/고용주 88.89%, 실업/비경활은 77.27%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은 상용직을 유지할 확률은 92.19%로 학력별로 가장 높은 상용직 유지율을 나타냈고, 임시/일용직은 68.204% 상용직과 반대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고용주 83.53%, 실업/비경활은 74.47%로 상용직의 유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용직을 유지할 가능성과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임시/일용직에

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의 86.59%의 상용직 유지율보다 30~34세가 90.69로 가장 높은 유지율을 나타냈고 임시/일용직은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지율이 높아져 20~24세는 60.09%, 25~29세는 70.13%에서 30~34세는 74.94%를 나타냈다. 자영/고용주의 비율도 30~34세 연령대는 90.0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지율이 증가했으며 실업/비경활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유지율이 79.03%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임시/일용직과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상용직을 잡지 못하면 임시/일용직,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직으로의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1〉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

구분	(t-1) / (t)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고용주	실업/비경활	합계
전체	상용직	88.92	12.94	4.20	11.15	43.98
	임시/일용직	2.07	71.34	1.75	6.46	9.78
	자영/고용주	2.38	3.16	88.44	3.75	17.95
	실업/비경활	6.63	12.56	5.61	78.64	28.29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여성	상용직	84.21	11.97	3.21	8.50	31.63
	임시/일용직	2.77	68.32	2.07	5.73	10.43
	자영/고용주	1.95	2.58	85.52	3.18	14.43
	실업/비경활	11.07	17.13	9.20	82.59	43.5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남성	상용직	92.27	14.47	5.09	31.38	61.19
	임시/일용직	1.57	76.10	1.46	12.07	8.87
	자영/고용주	2.68	4.07	91.04	8.10	22.85
	실업/비경활	3.47	5.37	2.42	48.45	7.08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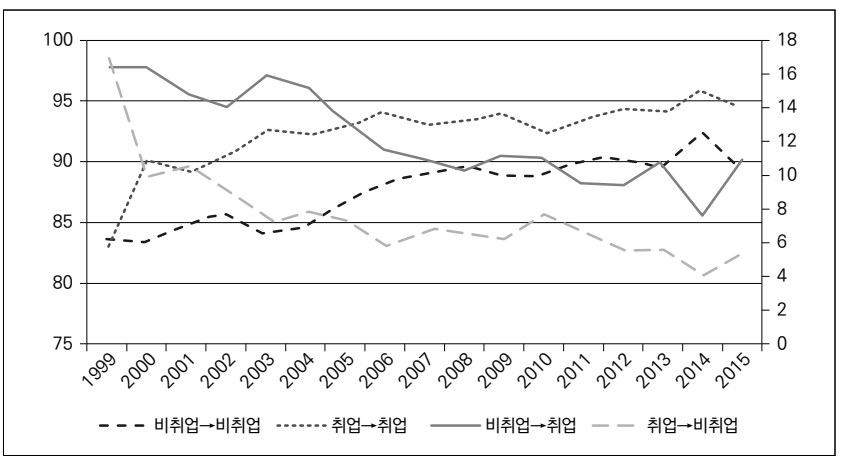
구분	(t-1) / (t)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고용주	실업/비경활	합계
고졸 이하	상용직	86.84	12.11	3.74	9.57	37.28
	임시/일용직	2.89	72.88	2.17	7.02	12.29
	자영/고용주	2.47	2.67	88.43	3.62	18.92
	실업/비경활	7.80	12.34	5.66	79.79	31.51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 대졸	상용직	90.18	24.21	3.99	14.91	54.45
	임시/일용직	0.96	57.89	1.14	4.26	4.07
	자영/고용주	2.36	2.11	88.89	3.55	14.81
	실업/비경활	6.49	15.79	5.98	77.27	26.67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졸 이상	상용직	92.19	12.90	5.90	15.11	57.01
	임시/일용직	1.19	68.20	0.67	5.88	6.14
	자영/고용주	2.22	6.45	88.20	4.55	17.20
	실업/비경활	4.40	12.44	5.23	74.47	19.6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 24세	상용직	86.59	19.25	4.71	16.88	51.53
	임시/일용직	1.78	60.09	2.35	5.17	6.88
	자영/고용주	1.85	1.88	83.53	3.09	8.79
	실업/비경활	9.78	18.78	9.41	74.86	32.79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5~ 29세	상용직	88.01	12.67	5.13	10.22	42.05
	임시/일용직	2.21	70.13	1.79	6.01	9.71
	자영/고용주	2.30	3.21	86.29	3.41	15.01
	실업/비경활	7.48	13.99	6.79	80.36	33.24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0~ 34세	상용직	90.69	11.52	3.72	8.82	42.36
	임시/일용직	2.11	74.94	1.65	7.67	10.98
	자영/고용주	2.70	3.44	90.06	4.49	23.71
	실업/비경활	4.51	10.10	4.57	79.03	22.94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그림 4-2-8]의 취업과 비취업 간의 취업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입직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취업→취업'과 '취업→비취업'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취업→취업', '비취업→비취업'의 비율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종사상지위의 변화가 줄어들고 고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4-2-8]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종사상지위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1~18차.

청년실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의 실업은 인적자본이 부족한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임금, 반복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창업보다는 안정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며 장시간 취업준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8)]

8) 불황기의 청년층은 삶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이는 청년기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1970년대 초 오일쇼크, 2000년대 초 버블 붕괴 시절에 청년기를 맞았던 미국의 R세대는 최소 40세가 될 때까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둘째, 안정된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교육·문화적 자본은 자녀에게 전수되어 자녀의 직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Blau & Duncan, 1967; 여유진 등, 2007; 방하남, 김기헌, 2001; 김수정, 2010에서 재인용).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모를 둔 청년층은 높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경험(인턴)과 자격 등을 확보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모를 둔 청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등을 전전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부의 세습으로 사회적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은 북유럽이나 북미 국가들과 달리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부모와 동거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9] 또한 취업준비의 장기화와 높은 부모 의존도는 부모의 충분한 노후 준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높은 대학 진학률과 그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한 대출로 인해 청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라는 참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묻지마 취업'을 선택하지만 이는 높은 이직률을 가져와 반복실업군으로 전락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재직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청년기에 불안정한 일자리와 이직을 반복할 경우 안정된 일자리를 경험한 청년들보다 사회보험 가입이 이루어지 못함으로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받게 된다.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불황세대의 특징으로 '첫째, 자신의 의지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기대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자신의 노력보다는 운(Luck)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본다. 셋째, 정부에 기대면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다.'라고 주장했다.

9) 이와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는 국가로는 일본과 이탈리아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기생독신(寄生獨身)'이라고 한다.

3. 청년실업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캐나다와 미국 같은 북미 노동시장은 매우 유연하여 사전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최저임금도 매우 낮다. 특히 이는 충분한 훈련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해당하는 저숙련 노동시장(the market in low-skilled jobs)에 널리 적용된다. 저숙련 기술은 비활동기에도 잠식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의 저숙련 노동시장의 저학력 청년입직자는 임금에서 일시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취업 자격(능력, 기술)의 사다리(qualification ladder)의 맨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해 더 낮은 단계의 일자리로 이직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게다가 저학력 청년들은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자유롭지 못한 금융적 제약(financially constrained)이 크기 때문에 고학력 또는 경력직 근로자들보다 지리학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 상당히 일치한다. 고졸(학령 12년)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저학력 청년들의 입직 노동시장에서의 악조건(adverse conditions)은 임금에 즉각적이고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며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Genda et al., 2010; Speer, 2016). 하지만 실업률이 4% 이상 증가한 심각한 경기침체의 경우, 연평균 임금이 16% 감소하고 근로시간은 28%까지 줄어들어 소득은 4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침체 첫해를 지나면 사라진다(Speer, 2016). 이와 유사한 효과는 흑인과 여성의 취약계층에서도 나타난다(Kondo, 2015).

반면 대졸자의 경우, 경제 충격에 저학력 청년들에 비해 자신을 더 보호할 수 있다. 가령, 실업상태에 있는 것보다 낮은 질의 일자리(low-quality jobs)로 이동을 하거나 충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 대학 졸업자의 초기 불이익은 저학력 집단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역효과(adverse effects)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대졸자는 인적자본 훈련과 장기 성과급 계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로 입직한다. 하지만 경기침체기에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불황기에 졸업한 대졸자는 호황기에 졸업한 입직자들보다 진급과 훈련의 기회가 적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낮은 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경기가 회복됐을 경우 대졸 청년들은 유용한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업무중심 역량(task-specific competencies)에 투자하여 호황기에 졸업한 행운의 세대보다도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Cockx, 2016; Oreopoulos et al., 2012). 청년 근로자는 이런 성과 정체(setback)에 자신의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더 좋은 보수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탐색함으로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이는 불황으로 인한 불이익이 일정 정도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경력의 단절은 실업의 지속성을 강화시켜 만회 과정(catch up process)을 지연시킨다. 이런 요인들은 호황기에 졸업한 행운의 세대를 보호하지만 침체기에 졸업하는 불운한 세대가 겪는 입직 시기의 불리한 점을 줄여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청년 근로자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현 직장에서 주어지는 정년보장을 포기해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 탐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높아져 더 좋은 일자리 탐색을 포기하게 만든다(Cockx, 2016; Oreopoulos, P., 2012).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연구에서는 불황기에 대졸자는 소득에 대한 불이익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불이익은 약 10년 이상이 지나야 사라졌다(Gendaet al., 2010; Oreopouloset al., 2012; Altonjiet al., 2016). 이런 임금 상실의 원인은 크게 임금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의 결합

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3년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고용률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불황기의 대졸자는 임시직/일용직을 선택함으로써 실업을 피해갈 수 있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미취업 탈출과 관련된 연구들과 미취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이 중심이 되었다. 안주엽, 홍서연(2002)에 따르면, 미취업 상태가 지속될수록 미취업 상태를 탈출할 확률이 낮아지며, 학력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전 졸업자가 취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경제위기 이후 졸업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취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김안국(2003)은 미취업 청년들의 실업을 비롯하여 비경제활동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비경활보다는 취업이나 실업(구직)의 비율이 더 높으며,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이 많은 경우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의 비율이 높다. 미취업 청년층의 첫 직장 경험은 영세기업 및 소기업이 대부분이었고, 교육수준 및 전공과 직무 불일치가 심하며,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임금함수로부터 미취업자의 시장가능 임금을 추정하고 희망임금과 시장가능 임금의 차이를 계산해본 결과 실업보다는 학업·훈련 범주나 기타 범주에 속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에게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별로는 고졸의 희망임금이 시장가능 임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

윤정혜(2004)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 해저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개인의 의중임금, 미취업 기간, 그리고 자격증의 유무, 학력수준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으로의 탈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학, 김종면, 김형준(2005)은 실업이 특정한 연령층이나 학력층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15세~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실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청년층의 실업이 경기변동이나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 실업을 경험한 근로자는 초기에 인적자본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저기능인 상태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결과 생애소득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상한, 하한 시나리오에 따라 각기 30조 원과 3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생애소득의 감소는 재정적으로는 소득세 감소를 통한 세수 감소로 나타나고 이를 추정하면 소득세가 1조 9천억 원과 1,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와 달리 외국의 실망실업자 사례에서 유추한 경험적 추정치를 적용하였을 경우는 총소득상실액이 8조 원, 소득세 상실액이 6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실업의 원인으로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가 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론적 모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김경아(2008)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계층의 소득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운, 민인식(2015)은 미취업 상태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취업에 불리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패널에 다중상태 이산시간 해저드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인 경우, 기혼일 경우,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임시직 취업

사건 발생 확률이 감소하며 이는 최근의 고학력 장기 실업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년기 실업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는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는 동안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성호, 김태완(2013)은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수급권 획득 측면에서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연금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더 높고 수급권을 받더라도 낮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청년기의 경제활동을 실업 또는 비경활의 결정요인, 실업탈출, 소득불균형, 청년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들로 청년기는 경제활동은 생애경제활동의 시작으로 입직시기의 경제활동에 따른 생애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생애 근로경력이나 빈곤에 미치는 효과에 앞서 청년 입직기 경제활동상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한다.

4. 경기침체가 청년입직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 가정 및 자료

1) 가정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생애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청년기의 정의를 20세~34세로 확장했다. 일반적으로 OECD 기준 청년실업률은 15세~24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재학 기간이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7년 2개월, 여

자의 경우 4년 8개월 그리고 졸업 후 최초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5세~29세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초직장의 짧은 근무기간과 잦은 이직률을 고려할 경우 29세로 한정된 청년기의 정의는 생애효과를 비교하기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4년부터 30세~34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추이와 만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년기의 상한 연령을 34세로 설정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진입 이후에도 안정된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30세~34세를 확장하여 20세 이상부터 34까지로 청년층을 정의했다. 이를 통해 취업을 연기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고학력화 집단과 안정된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실업, 실망실업 그리고 비경활을 비근로와 동일한 경제상태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포기자, 즉 실망실업자를 청년 실업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실망실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도 있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여 충분한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집단도 광의적으로 실망실업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업, 실망실업자, 비경활을 모두 비근로로 간주한다.

셋째, 근로경력을 중시하는 숙련노동시장에서 청년기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는 많은 경력을 축적한 숙련노동자인 장년기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전기의 근로 경험과 상용직 여부는 장년층의 고용 여부와 상용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전기의 임금 수준은 다음 기의 임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검

증하기 위해 전기의 근로 경험, 상용직 여부 그리고 임금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동태적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청년기의 경제적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단순히 청년기의 경제상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생애경력을 통해 경제활동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생애연쇄시간분석(time sequency analysis)을 통해 생애 주된 경제활동 유형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유형은 상용임금, 임시일용직, 자영/고용주, 실업, 비경활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청년기의 실업은 비경활과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따라 실업과 비경활을 묶어 상용직임금근로, 임시일용직근로, 자영/고용주, 그리고 실업/비경활의 4개의 종사상지위로 구분하고 이를 1998년 이후 18년간의 생애를 추적하여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추적한다.

2) 자료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로 1998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와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년에 1회씩 조사가 실시되어 2016년에는 19차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공식적 공표는 18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용 자료에는 가구원의

10)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업현황을 계산하는 지표로 즉,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이다. 따라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실망실업자는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률은 전체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표로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이며 실망실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고용률을 비교하면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적사항과 함께 가구의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에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부터 전직·이직 과정의 생애근로경력을 추정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를 기준으로 20세부터 34세의 청년들 중 18차까지 설문에 응답한 99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취업은 종사상지위에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그리고 '자영/고용주'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실업/비경활'은 비취업으로 간주하였다. 상용직은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임시/일용직', '자영/고용주', 그리고 '실업/비경활'은 비상용직으로 처리했다. 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을 자연대수 취하여 사용했다.

경기침체기(1997년 IMF 외환위기) 청년입직자의 특성의 변화를 1차부터 18차까지 살펴보면 〈표 4-2-2〉와 같다. 분석 대상은 1차부터 18차까지 설문에 응답한 균형패널의 관측치로 남성이 42%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는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조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균형패널을 통한 생애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1998년 1차 조사 시점에 20~24세가 19%, 25~29세가 34%, 그리고 30~34세가 47%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차수가 증가하면서 학력수준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차 시점에 고졸 이하는 73%였으나 최종 조사 시점인 18차에서는 62%로 11%포인트가 줄어들고 전문대졸은 1차에 11%에서 18차에 15%로 4%포인트 증가한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은 1차에 15%에서 18차에 23%로 8%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배우자는 1차에 63%만이 있

다고 응답했으나 18차에서는 86%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구주 여부는 1차에 26%만이 가구주였으나 18차에서는 47%로 크게 증가했다. 거주지는 1차에서 서울이 20%, 광역시가 34%, 그리고 도가 46%에서 18차에서는 서울이 17%, 광역시가 32%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도거주자는 51%로 5%포인트나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는 1차에서 상용직이 37%, 임시/일용직이 5%, 자영/고용주가 13%, 실업/비경활이 44%였으나 상용직은 점차 늘어나 18차에서 44%로 7%포인트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3%로 8%포인트 증가했으며, 자영/고용주는 20%로 7%포인트 증가하고 실업/비경활은 22%로 22%포인트 감소했다.

〈표 4-2-2〉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특성

(단위: %)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별																		
남성=1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42
연령대																		
20~24세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0.19
25~29세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34	0.25	0.34	0.34	0.34
30~34세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47	0.56	0.47	0.47	0.47
학력																		
고졸 이하	0.73	0.71	0.69	0.67	0.65	0.65	0.65	0.64	0.64	0.64	0.63	0.63	0.62	0.62	0.62	0.62	0.62	0.62
전문대졸	0.11	0.13	0.13	0.15	0.15	0.14	0.14	0.14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4년제졸 이상	0.15	0.16	0.17	0.19	0.20	0.21	0.21	0.21	0.21	0.22	0.22	0.22	0.22	0.23	0.23	0.23	0.23	0.23
배우자																		
배우자유	0.63	0.67	0.67	0.73	0.75	0.78	0.80	0.82	0.84	0.84	0.85	0.86	0.86	0.86	0.86	0.86	0.86	0.86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가구주																		
가구주	0.26	0.28	0.29	0.31	0.33	0.35	0.37	0.38	0.40	0.42	0.43	0.43	0.44	0.45	0.46	0.46	0.47	0.47
거주지																		
서울	0.20	0.20	0.20	0.20	0.19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8	0.17
광역시	0.34	0.33	0.33	0.33	0.33	0.32	0.32	0.32	0.32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2
도	0.46	0.47	0.47	0.47	0.48	0.49	0.50	0.51	0.50	0.51	0.51	0.51	0.51	0.51	0.51	0.52	0.51	0.51
가구원수																		
가구원수	3.89	3.86	3.82	3.83	3.80	3.80	3.79	3.77	3.75	3.74	3.74	3.76	3.76	3.76	3.76	3.74	3.73	3.72
종사상지위																		
상용	0.37	0.41	0.44	0.45	0.45	0.44	0.45	0.43	0.43	0.43	0.44	0.43	0.44	0.45	0.45	0.46	0.46	0.44
임시/일용	0.05	0.09	0.08	0.07	0.08	0.08	0.08	0.08	0.08	0.09	0.09	0.10	0.12	0.12	0.13	0.12	0.13	0.13
자영/고용주	0.13	0.12	0.12	0.14	0.15	0.16	0.17	0.19	0.18	0.19	0.20	0.20	0.20	0.21	0.20	0.20	0.20	0.20
실업/비경활	0.44	0.39	0.36	0.34	0.32	0.32	0.31	0.29	0.30	0.29	0.27	0.27	0.24	0.22	0.22	0.22	0.22	0.22
관측치	997																	

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의 상태의존성 검증

1) 연구 방법[11]

분석 방법은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dynamic random effect probit model)이다.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은 결과 확률이 이전기간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동태적 모형으로 잠재종속변수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gamma y_{it-1} + x'_{it}\beta + \alpha_i + u_{it}, \quad i = 1, \cdots, N; t = 2, \cdots, T \cdots\cdots\cdots (1)$$

y_{it}^{*}는 잠재변수이고 x_{it}는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설명변수, α_i는 관측되지 않은 개별 확률효과이며, u_i는 $N(0, \sigma_u^2)$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관측된 이항결과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_{it} = \begin{cases} 1 & \text{if} \quad y_{it}^{*} \geq 0 \\ 0 & else \end{cases} \cdots\cdots\cdots (2)$$

u_{it}는 시간 간 독립적이고, α_i가 개인별로는 상이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차항의 합($v_{ii} = \alpha_i + u_{it}$)은 시간에 따라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개인별 두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는 식(3)과 같이 정의되고 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전체분산 중에서 관찰할 수 없는 이질성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크기가 클수록 미관측된 이질성을 고려하지

11) 동태적 확률효과 프로빗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Stewart(2006)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김재호(2013)에서 재인용했다.

않은 모형의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

$$\lambda = Corr(v_{it}, v_{is}) = \frac{\sigma_\alpha^2}{\sigma_\alpha^2 + \sigma_u^2} \quad t, s = 2, 3, \cdots, T; t \neq s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 (3)$$

이러한 생략된 개인별 이질성의 존재는 개별 효과에서 '초기조건문제(initial condition problem)'를 발생시켜 표준적인 확률효과 프로빗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추정을 가져온다. Heckman(1981)은 초기 조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α_i가 외생적으로 주어졌을 때, 개인에 대하여 관측된 이항연속(binary sequence)의 결합확률(joint probability)은 다음과 같이 가정했다.

$$\Phi(z'_{i1}\pi)(2y_{i1}-1)\prod_{t=2}^{T}\Phi[(\gamma y_{t-1} + x'_{it}\beta + \alpha_i)(2y_{i1}-1)]$$

극대화할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L_i = \int_{\alpha^*} \Phi(z'_{i1}\pi)(2y_{i1}-1)\prod_{t=2}^{T}\Phi[(\gamma y_{t-1} + x'_{it}\beta + \alpha_i)(2y_{i1}-1)]dF(\alpha^*)$$

F는 개인별 이질성(individual-specific heterogeneity)($\alpha^* = \alpha/\sigma_\alpha$)의 분포함수로서 α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sigma_\alpha = \sqrt{\lambda/(1-\lambda)}$가 된다. α^*에 대한 적분법은 가우시안-허미트 구적법(Gaussian-Hermite quadrature)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전기의 상태의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gamma > 0$이면, 이전에 취업 또는

상용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전에 취업 또는 상용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취업 또는 상용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증분석 결과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표〉로 제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의 상태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이 현재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취업의 상태의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의 경우 취업의 상태의존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에서 가장 낮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으며 고졸 이하에서 상태의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5~29세에 가장 낮고 30~34세가 가장 높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태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

전체	성별		학력			연령대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0.980***	1.040***	0.552***	0.993***	0.802***	0.964***	0.562***	0.843***	1.260***
[0.025]	[0.027]	[0.067]	[0.030]	[0.067]	[0.060]	[0.053]	[0.042]	[0.039]

주: *** p〈0.01, ** p〈0.05, * p〈0.1

상용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상용직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에서는 전문대졸에서 가장 낮았고 4년제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다. 연령대는 20~24세에 가장 낮고 30~34세에서 가장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직의 상태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상용직경험의 상태의존성

전체	성별		학력			연령대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1.259***	1.139***	1.396***	1.233***	1.089***	1.434***	0.797***	1.194***	1.485***
[0.022]	[0.030]	[0.034]	[0.028]	[0.058]	[0.049]	[0.049]	[0.039]	[0.033]

주: *** p〈0.01, ** p〈0.05, * p〈0.1

실질임금의 상태의존성을 살펴보면 전기의 임금은 현재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여성보다 남성이 다소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으며, 학력에서 전문대졸은 가장 낮은 상태의존성을 보인 반면 4년제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태의존성을 나타냈다. 연령대에서는 20~24세가 가장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고 25~29세가 가장 낮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냈다.

〈표 4-2-5〉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실질임금 상태의존성

전체	성별		학력			연령대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24세	25~29세	30~34세
0.116***	0.117***	0.172***	0.086***	0.052*	0.107***	0.131***	0.077***	0.127***
[0.012]	[0.019]	[0.015]	[0.016]	[0.027]	[0.022]	[0.025]	[0.021]	[0.017]

주: *** p〈0.01, ** p〈0.05, * p〈0.1

상태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전기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수준이 현재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이는 노동시장에서 과거의 근로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연령대가 30~34세에서는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서 모두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 이 시기가 경제활동의 안착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대졸은 취업이나 상용직에서 상태의존성이 매우 낮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 기에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상용직 경험, 임금의 상태의존성 모두 낮아 취업과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임금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생애경제활동유형

1) 연구 배경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과정은 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고용과 실업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에서의 고용으로의 이행 과정을 일정한 간격의 특정 시점을 단위로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맥락을 통해 개인의 생애 동안 발생하는 연속적인 경력의 총체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1999년에 청년기(20~34세)에 해당하는 코호트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과정(STWP)을 나타내는 생애 경력을 유형화하기 위해 생애연쇄시간분석(life sequency analysis)을 사용한다. 생애연쇄시간분석은 각 시점에서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정태적

분석과 달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들을 종합적으로(holistic) 분석한다. 청년기의 근로경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선택의 연속으로서 상용임금, 임시일용직, 자영/고용주, 실업/비경활의 4가지 사건이 한 시점에서 선택된다.[12] 그리고 각 시점에서 선택된 사건(event)은 이전 단계에서 선택된 사건과 일련의 관계를 맺으며 흘러간다. 즉, 사건발생의 원인을 한 시점에 놓인 상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일련의 변화과정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동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혁진, 유호선(2011)은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최적일치(optimal matching) 방법을 사용했다. 청년패널조사 1~6차를 이용하여 2001년을 기준으로 1972~1981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대상(20~30세)으로 이행상태를 NEET, 직업훈련,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임금근로자, 정규직 근로로 정의했다. 졸업 후 48개월간 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청년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일정기간의 NEET 상태를 경험한다. 또한 졸업 후 NEET 상태로 출발하는 청년들에 비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이후 경험하는 이행 과정이 더욱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졸업 후 바로 정규직이라는 점 때문에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깨달아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NEET 상태로 출발하는 청년들은 오히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탐색하고 취업함으로써 이후 상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주장했다.

12) 실업과 비경활의 구분은 이론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업과 비경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상실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대상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구분의 실익이 없어 본 연구에서는 실업과 비경활을 생애주기에서 동일한 상태로 가정한다.

2) 연구 방법: 생애연쇄시간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에서 5차 사이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4개(사용, 임시/일용, 자영/고용주, 실업/비경활)의 상태 중에 하나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1차부터 5차까지 나열한다면 수학적으로 $4^5 = 1024$개의 다양한 연쇄적인 배열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4-2-4〉에서 A는 상용임금 근로자로 첫 일자리를 시작하여 5차까지 상용임금 근로자를 유지하는 사례이며, B는 결혼 후 다니던 상용직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비경활로 남아있는 여성의 사례이다. C는 대학원 진학으로 노동시장 진입은 늦었지만 3차부터 안정적인 상용직에 종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D는 임시/일용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사례이며, E는 상용직을 종사하다 자영/고용주로 전환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표 4-2-6〉 생애경제활동의 예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A	상용	상용	상용	사용	사용
B	상용	상용	실업	비경할	비경할
C	비경활	비경활	상용	상용	상용
D	일용	실업	임시	실업	일용
E	상용	상용	자영	자영	자영

이처럼 생애근로경력은 일련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이들 흐름들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한 경력을 묶어 내기 위해서는 연쇄적인 나열들의 유사성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를 통해 식별하거나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을 사용한다. 최적일치법은 연쇄적 배열들 간의 거리(distance)를 측정하는데, 연쇄적 배열을 다른 연쇄적 배열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교체, 삭제, 삽입과 같은 조작

(operations)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통해 측정한다.

3) 분석 결과: 생애경제활동순서

1차부터 5차까지 조사에 참여한 청년기 응답자 2,123명 중에서 연쇄 시간분석을 통해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1,256명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로 종사한 비율이 37.82%로 가장 높았고 모두 실업/비경활인 경우가 28.5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계속해서 자영업인 경우가 7.96%를 나타냈고 실업/비경활에서 안정적인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모두 합산하면 19.1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5년간 모두 실업/비경활이 44.7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는 21.33%에 달했다. 5년간 자영업도 6.81%를 나타냈고 5년 동안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19.26%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에는 5년간 상용직임금근로자가 54.8%로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5년간 실업/비경활은 9.27%로 역시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5년간 자영업 비율은 여성보다 높은 8.94%를 나타냈고 5년간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된 사례는 18.21%로 여성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상용직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2-7〉 경기침체기의 전체 및 성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경제활동	빈도	비율	경제활동	빈도	비율	경제활동	빈도	비율
11111	475	37.82	44444	302	44.74	11111	331	54.8
44444	358	28.5	11111	144	21.33	44444	56	9.27
33333	100	7.96	33333	46	6.81	33333	54	8.94
41111	84	6.69	41111	44	6.52	41111	40	6.62
44411	59	4.7	44411	34	5.04	44111	27	4.47
44111	52	4.14	44441	27	4	44411	25	4.14
44441	45	3.58	44111	25	3.7	44441	18	2.98
11114	25	1.99	44443	20	2.96	11113	15	2.48
44443	20	1.59	14444	17	2.52	11133	14	2.32
14444	19	1.51	44442	16	2.37	14111	12	1.99
44442	19	1.51				21111	12	1.99
합계	1,256	100	합계	675	100	합계	604	100

주: 1:상용, 2:임시/일용, 3:자영/고용, 4:실업/비경활

경기침체기 동안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이력의 상위 10위까지를 학력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고졸 이하에서는 5년간 실업/비경활이 34.05%로 가장 높았으며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가 29.54%, 5년간 자영업이 8.3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5년 동안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된 사례는 20.95%를 나타냈다. 전문대 졸업자는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가 49.09%로 고졸 이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5년간 실업/비경활은 18.18%로 역시 고졸자보다 적게 나타났다. 4년제 졸업자는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가 59.4%로 전문대 졸업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년간 실업/비경활은 12.39%로 역시 전문대 졸업자보다 적게 나타나 경기침체기에서도 입직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경기침체기의 학력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단위: 명, %)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경제활동	빈도	비율	경제활동	빈도	비율	경제활동	빈도	비율
44444	299	34.05	11111	81	49.09	11111	139	59.4
11111	255	29.04	44444	30	18.18	44444	29	12.39
33333	73	8.31	41111	13	7.88	33333	18	7.69
41111	57	6.49	11114	9	5.45	41111	14	5.98
44411	52	5.92	33333	9	5.45	44111	9	3.85
44111	38	4.33	14444	5	3.03	11113	8	3.42
44441	37	4.21	44111	5	3.03	14111	5	2.14
44442	18	2.05	44441	5	3.03	11144	4	1.71
43333	17	1.94	11144	4	2.42	41144	4	1.71
22222	16	1.82	11444	4	2.42	44411	4	1.71
44443	16	1.82						
합계	878	100	합계	165	100	합계	234	100

주: 1:상용, 2:임시/일용, 3:자영/고용, 4:실업/비경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세~24세에서는 5년간 실업/비경활이 26.67%로 가장 높았으며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가 24.0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5년 동안 실업/비경활에서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된 사례는 39.47%를 나타냈다. 25세~29세는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가 37.27%로 20세~24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5년간 실업/비경활은 33.1%로 역시 20세~24세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세~24세의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세~34세에서는 5년간 상용임금근로자가 44.8%로 25세~29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년간 실업/비경활은 26.02%로 24세~29세보다 낮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줄어들고 상용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2-9〉 경기침체기의 학력별 경제활동유형(상위 10위)

(단위: 명, %)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경제활동	빈도	비율	경제활동	빈도	비율	경제활동	빈도	비율
44444	75	24.67	11111	161	37.27	11111	241	44.8
11111	73	24.01	44444	143	33.1	44444	140	26.02
44411	38	12.5	41111	28	6.48	33333	75	13.94
41111	37	12.17	33333	23	5.32	41111	19	3.53
44111	24	7.89	44111	18	4.17	11113	12	2.23
44441	21	6.91	44441	15	3.47	43333	11	2.04
11114	8	2.63	11114	12	2.78	22222	10	1.86
11411	7	2.3	11144	11	2.55	44111	10	1.86
14111	7	2.3	44411	11	2.55	44411	10	1.86
41114	7	2.3	14444	10	2.31	44443	10	1.86
44141	7	2.3						
합계	304	100	합계	432	100	합계	5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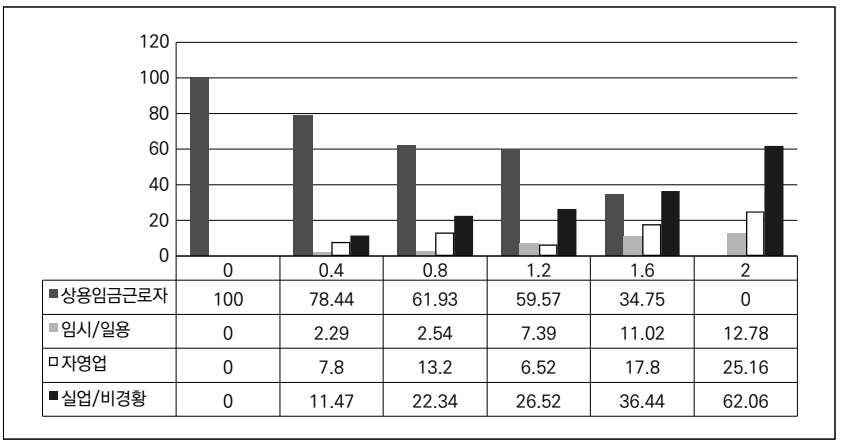
주: 1:상용, 2:임시/일용, 3:자영/고용, 4:실업/비경활

이상의 경기침체기 동안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은 일련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이들 흐름들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유사한 경력을 묶어 집단화하기 위해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을 사용하여 연쇄적 배열들 간의 거리(distance)를 측정하여 0점에서 2점 사이에 분포하는 연쇄시간최적매칭점수(sqom)를 부여한다. 0점에서 2점으로 갈수록 상용직의 비율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자영업, 그리고 실업/비경활의 비율이 증가하여 매칭점수가 증가할수록 경기침체기 동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에서 0점에는 상용임금근로자만 100.0% 존재하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상용임금근로자는 줄어들고 임시/일용직, 자영업, 그리고 실업/비경활의 비율이 증가하여 매칭점수가 2인 경우 임시

/일용직이 12.78%, 자영업이 25.16%, 그리고 실업/비경활의 비율이 62.06%를 차지했다.

[그림 4-2-9]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유형

(단위: %)



	0	0.4	0.8	1.2	1.6	2
■상용임금근로자	100	78.44	61.93	59.57	34.75	0
■임시/일용	0	2.29	2.54	7.39	11.02	12.78
□자영업	0	7.8	13.2	6.52	17.8	25.16
■실업/비경황	0	11.47	22.34	26.52	36.44	62.06

라.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청년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경제활동상태 흐름을 유사한 유형으로 묶기 위해 연쇄시간분석을 통해 최적일치점수를 도출한 뒤 경제활동상태가 청년기를 벗어난 노동패널 18차(37~51세)의 빈곤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18차 조사와 매칭하여 1,410명의 관측치를 확보했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최적매칭점수는 전체가 1.14, 20~24세가 1.07, 25~29세가 1.14, 그리고 30~34세가 1.17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했

음을 의미한다. 즉 상용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실업/비경활의 비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 오히려 30~34세의 최적일치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빈곤율이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8%가 빈곤층에 해당했으며 30~34세에서 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60%, 70% 기준에서도 25~29세가 11%, 15%로 가장 낮고 20~24세가 13%, 18% 수준을 나타냈고 30~34세는 13%, 19%로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25~29세의 남성 비율이 48%로 가장 높고, 20~24세는 33%로 가장 낮으며, 그리고 30~34세는 46%를 나타냈다. 학력은 20~24세가 학력수준이 가장 높고 25~29세가 가장 낮았다. 배우자 존재 비율은 25~29세에서 85%로 가장 높았고 30~34세에서 가장 낮았다. 가구주 여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나 30~34세는 52%가 가구주로 나타났다.

〈표 4-2-10〉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연령대별 특성

구분		전체		20~24세 (37~41세)		25~29세 (42~46세)		30~34세 (47~51세)	
최적 매칭점수		1.14	(0.81)	1.07	(0.71)	1.14	(0.86)	1.17	(0.80)
빈곤율	50%	0.08	(0.28)	0.08	(0.27)	0.08	(0.27)	0.09	(0.29)
	60%	0.12	(0.33)	0.13	(0.33)	0.11	(0.31)	0.13	(0.34)
	70%	0.17	(0.38)	0.18	(0.38)	0.15	(0.36)	0.19	(0.39)
성별		0.44	(0.50)	0.33	(0.47)	0.48	(0.50)	0.46	(0.50)
학력		0.68	(0.86)	1.00	(0.87)	0.55	(0.84)	0.65	(0.85)
배우자		0.83	(0.38)	0.82	(0.39)	0.85	(0.35)	0.80	(0.40)
가구주		0.50	(0.50)	0.42	(0.49)	0.52	(0.50)	0.52	(0.50)
지역		2.32	(0.77)	2.40	(0.71)	2.29	(0.79)	2.32	(0.78)
가구원수		3.61	(1.10)	3.53	(1.08)	3.72	(1.04)	3.53	(1.16)
관측치		1,410		314		486		610	

경기침체기(1998~2003년)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청년기를 벗어난 시점(2015년)에 빈곤(중위소득 50% 기준)[13]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기의 경제활동이 불안정할수록(최적매칭점수가 높을수록) 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청년입직기의 경제활동상태가 중장년기의 빈곤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에서는 고졸 이하나, 전문대졸보다 크기도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사무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경제활동의 불안정은 빈곤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5~29세, 30~34세에서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5~29세가 30~34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중장년기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30~34세의 경우 경제활동과 낮은 임금의 상태의 존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활동상태가 이후에 다시 안정된 상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아 계속해서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빈곤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중위소득 60% 기준과 70% 기준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나 크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 중위소득 7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졸 이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청년입직기의 경제활동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빈곤선기준선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졸 이하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13) 60%, 70%는 부표로 제시.

〈표 4-2-11〉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24세	25~29세	30~34세
생애경제활동상태									
최적매칭점수	0.201***	0.179	0.294***	0.157	-0.151	0.596***	-0.061	0.423***	0.235**
	[0.073]	[0.110]	[0.103]	[0.096]	[0.220]	[0.167]	[0.177]	[0.135]	[0.113]
성별(여성 기준)									
남성	0.279**			0.094	0.106	0.788**	0.029	0.298	0.480**
	[0.136]			[0.171]	[0.384]	[0.341]	[0.299]	[0.228]	[0.243]
연령대(20~24세 기준)									
25~29세	0.050	-0.128	0.425*	-0.168	0.047	0.575*			
	[0.142]	[0.186]	[0.251]	[0.192]	[0.371]	[0.329]			
30~34세	0.002	-0.246	0.472*	-0.294	-0.067	0.909***			
	[0.141]	[0.188]	[0.250]	[0.187]	[0.476]	[0.327]			
학력(고졸 기준)									
전문대졸	-0.116	-0.205	-0.107				-0.246	-0.042	-0.171
	[0.165]	[0.219]	[0.269]				[0.289]	[0.267]	[0.362]
4년제졸 이상	0.028	-0.198	0.226				-0.391	0.039	0.398**
	[0.125]	[0.183]	[0.186]				[0.274]	[0.219]	[0.199]
배우자(무기준)									
유=1	-0.939***	-0.944***	-0.880***	-0.702***	-1.660***	-1.405***	-1.091***	-1.077***	-0.920***
	[0.141]	[0.237]	[0.263]	[0.180]	[0.450]	[0.366]	[0.315]	[0.285]	[0.223]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337**	-0.312	-0.617**	-0.150	-0.612	-0.456	-0.543*	-0.075	-0.482*
	[0.142]	[0.251]	[0.277]	[0.185]	[0.415]	[0.354]	[0.324]	[0.235]	[0.252]
거주지(서울 기준)									
광역시=1	0.031	-0.173	0.264	-0.221	0.201	0.721*	-0.335	-0.023	0.231
	[0.149]	[0.203]	[0.225]	[0.185]	[0.479]	[0.368]	[0.357]	[0.230]	[0.261]
도=1	-0.005	0.016	-0.104	-0.136	0.043	0.474	-0.162	-0.419*	0.388
	[0.138]	[0.180]	[0.220]	[0.169]	[0.451]	[0.356]	[0.329]	[0.225]	[0.237]
가구원수									
가구원수	-0.013	-0.040	-0.003	-0.074	0.069	0.125	0.188	0.058	-0.149*
	[0.053]	[0.076]	[0.083]	[0.065]	[0.192]	[0.130]	[0.122]	[0.108]	[0.081]
상수	-0.878***	-0.490	-0.983**	-0.426	-0.380	-2.730***	-0.673	-1.236***	-0.841**
	[0.255]	[0.401]	[0.446]	[0.327]	[0.696]	[0.632]	[0.533]	[0.416]	[0.386]
prob>ch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치	1,410	789	621	820	216	374	314	486	610

*** p<0.01, ** p<0.05, * p<0.1
주: 빈곤선은 중위가구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함.

5. 소결

본 절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되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청년기의 경제활동이 현재의 빈곤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취업을 한 사람은 계속 취업을, 비취업자는 계속 비취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상용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과 실질임금의 상태의존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의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기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수준이 현재의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써, 이는 노동시장에서 과거의 근로경력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대가 30~34세에서는 취업, 상용직, 그리고 임금에서 모두 높은 상태의존성을 나타내 이 시기가 경제활동의 안착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대졸은 취업이나 상용직에서 상태의존성이 매우 낮아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 기에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상용직경험, 임금의 상태의존성 모두 낮아 취업과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임금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2012년까지 5년 동안 청년기의 경제활동상태를 연쇄시간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상용임금근로자로 종사한 비율이 37.82%로 가장 높았고 모두 실업/비경활인 경우가 28.5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계속해서 자영업인 경우가 7.96%로 나타났다. 실업/비경활에서 안정적인 상용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모두 합산하면 19.11%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기(1998~2003년)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청년기를 벗어난 시점(2015년)에서의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기의 경제활동이 불안정할수록(최적매칭점수가 높을수록) 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의 경제활동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고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제 5 장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제1절 소득, 지출, 재산
제2절 주거
제3절 시간사용

5 우리나라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제1절 소득, 지출, 재산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빈곤에는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핵심이며, 고려되어야 할 차원의 범위 및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 종합적인 다차원적 청년빈곤은 이후 장에서 다룰 예정으로 본 절에서는 빈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빈곤으로 청년빈곤율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가구유형별로 소득, 지출, 재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득은 생계를 위한 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단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흔히 빈곤율[14]은 일정 빈곤선 아래의 비율을 말하는데, 빈곤선(poverty line)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우석진, 2011). 계측 방식에 따라 객관적인 빈곤선에 해당하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으로 나눌 수 있으며(우석진, 2011), 본 절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또는 미만)의 인구(가구)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은 주요기관, 국가 및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표 5-1-1〉 참고). 여기서는 현재 맞춤형 급여체계의 가장 확장된 욕구인 교육급여 기준선(또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 가장 마지막 기준임을 감

14) 빈곤율은 라운트리(Rowntree, 1901) 이후 가장 많이, 쉽게 사용되어 온 빈곤지수로서 'Headcount Ration'이라고 부르며,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정은희 외, 2015).

안함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비교를 위하여 아동(18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빈곤율 또한 함께 제시할 것이다.

〈표 5-1-1〉 주요기관, 국가 및 연구자들의 상대적 빈곤선

기관, 국가, 연구자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EU	중위소득의 60%
V. Fuchs (1967)	중위가구소득의 50%
P. Townsend (1974)	빈곤층은 평균가구 소득의 80% 극빈층은 50% 이하
Lee Rainwater (1974)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1)
영국	중위소득의 60%
일본	일반근로자세대 소비지출의 68%

주: 1) Rainwater의 상대적 빈곤선의 범위는 제3자적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에 근거함.
자료: 김미곤. (1997).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김미곤 등, 2010, pp. 362-363에서 재정리).

분석에 앞서 고려할 사항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될 청년의 연령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본 분석에 앞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연령을 통해 정의되며,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청년고용특별법'에서는 만 19~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연령을 만 15~34세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청년과 관련된 타 정부 정책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청년층의 연령이 설정되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5~24세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20대 남성 청년층이 군대를 다녀오고 20대 많

은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 사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청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김문길 등, 2016). 따라서 청년빈곤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청년층의 연령을 만 18~34세로 보고 있기도 한다(김수정, 2010; 김태완 등, 2012; 김문길 등, 2016, 이주미, 김태완, 2016).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에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본 분석에서는 청년고용특별법과 각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만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빈곤율과 경제적 여건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빈곤율 산출에 활용되는 대표성 있는 자료의 선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하며, 소득을 조사하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이 있다. 먼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년 주기 예정이었던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시작으로, 2010년 기존 가계자산조사, 가계신용조사, 한은패널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칭하면서 약 2만여 가구가 조사되고 있다. 조사 규모가 크며 공신력 있는 조사 자료이긴 하나, 여러 조사의 통합 등으로 안정적인 시계열 분석은 2012년부터 가능한 한계점이 있다. 단,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와는 다른 강점을 가진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자료는 약 9천 가구가 조사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조사 자료로 2인 이상 전국 가구는 2003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한 도시 및 농어촌의 전 가구는 2006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빈곤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시계열적인 강점을 가진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자료에는 지출과 소득 조사만 이루어져 자산을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경우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2016년 11차 조사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가구 일반 사항, 소득, 자산, 부채, 지출, 생활 여건, 인식 등이 모두 조사되는 자료로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표본 수가 약 7천여 가구이며,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빈곤율 추이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가 포함된 2006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6년 「가계동향조사」(연간)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지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단, 재산의 경우는 재산 자료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1. 청년(19~34세) 빈곤율 추이

청년의 경우 최근까지 정책지원 대상 또는 정책의 표적 집단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근로활동 연령층은 물론이거니와 노력만 하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유보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잠재적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청년실업률 상승, 열악한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청년 주거빈곤 등이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의 빈곤율 추이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청년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단계가 될 것이다.

청년의 빈곤율은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과 18세 미만 아동빈곤율을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소득 기준 또한 두 가지 소득 범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소득을 구성하는 범주에 따라 빈곤율은 다르게 측정될 것이며, 그 차이는 구성하는 소득에 대한 효과 또는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소득은 보통 일차소득(primary income) 즉,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의 합으로써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활동이나 재산 활용 등을 통해 획득한 본원적 소득을 말하며, 본 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더한 소득이 시장소득이다. 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까지 더한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정의되고, 경상소득에서 조세(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또는 경상소득) 기준의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조세를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의 고유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시장소득 중위 50% 기준 아동빈곤율[15]은 2006년 12.1%에서 2011년 10.6%, 2016년 7.6%로 10년 동안 4.5%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06년 10.1%에서 2011년 8.9%, 2016년 6.7%로 각각 1.2%포인트, 2.2%포인트 감소하여 10년 동안 3.4%포인트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을 증명하듯이 시장소득 기준 2006년 54.5%에서 2011년 60.9%, 2016년 65.7%로 10년 사이 11.2%포인트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위 50% 미만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8%에서 5년 후인 2011년에는 5%포인트 증가한 48.8%였으나 2016년 46.7%로 2011년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던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15) 이하 빈곤율은 각 소득 기준 중위 50% 미만의 비율을 말한다.

으로 2011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는 높은 노인빈곤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또는 노인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상황은 어떨까. 시장소득 기준 2006년 청년빈곤율은 9.5%에서 5년 후인 2011년에는 9.2%로 0.3%포인트 하락하였고, 그 다음 5년 후인 2016년에는 8.8%로 2011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 8.3%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9.1%로 높이 올랐다가 등락을 반복하며, 2015년 6.7%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7.6%로 소폭 상승하였다. 하지만 10년 동안 수치상으로는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의 연령을 청년 초기(19~24세)와 청년 후기(25~34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상할 수 있듯이 근로활동을 하게 되는 또는 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기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청년의 10년간의 빈곤율 증가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2〉 연령별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시장소득	아동 (18세 미만)	청년 (19~34세)			노인 (65세 이상)	전체
			19~24세	25~34세		
2006	12.1	9.5	9.9	9.3	54.5	16.1
2007	12.3	9.2	11.0	8.6	55.3	16.7
2008	11.6	9.4	12.6	8.2	54.6	16.7
2009	11.7	10.1	13.2	8.9	58.2	17.3
2010	10.8	9.6	10.2	9.4	59.1	17.0
2011	10.6	9.2	11.1	8.4	60.9	17.0
2012	9.5	8.1	10.3	7.1	60.0	16.3
2013	8.4	8.4	11.9	6.9	60.6	16.7
2014	7.7	8.5	10.1	7.8	62.1	16.7
2015	8.1	8.3	10.7	7.2	63.3	17.3
2016	7.6	8.8	12.8	6.6	65.7	18.3

가처분소득	아동 (18세 미만)	청년 (19~34세)			노인 (65세 이상)	전체
			19~24세	25~34세		
2006	10.1	8.3	8.8	8.1	43.8	13.4
2007	10.7	8.1	10.3	7.2	44.6	14.1
2008	9.9	8.1	10.8	7.0	44.8	14.2
2009	8.9	9.1	12.4	7.8	46.4	14.1
2010	8.5	8.5	9.4	8.1	47.1	13.8
2011	8.9	7.4	9.6	6.6	48.8	13.8
2012	8.6	6.9	9.4	5.9	48.2	13.7
2013	7.5	6.8	9.4	5.7	47.5	13.4
2014	7.0	7.0	7.5	6.8	47.2	13.3
2015	6.9	6.7	7.8	6.2	44.7	12.8
2016	6.7	7.6	10.8	5.8	46.7	13.8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은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를 통해 세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인구의 두 소득 간 빈곤율 차이는 2006년 2.8%포인트에서 조금씩 증가하여 2000년대 후반 이후 3%포인트 정도의 효과를, 가장 최근인 2016년 4.5%포인트로 지속적인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3〉 연령별 빈곤율 차이 비교(중위소득 50% 미만)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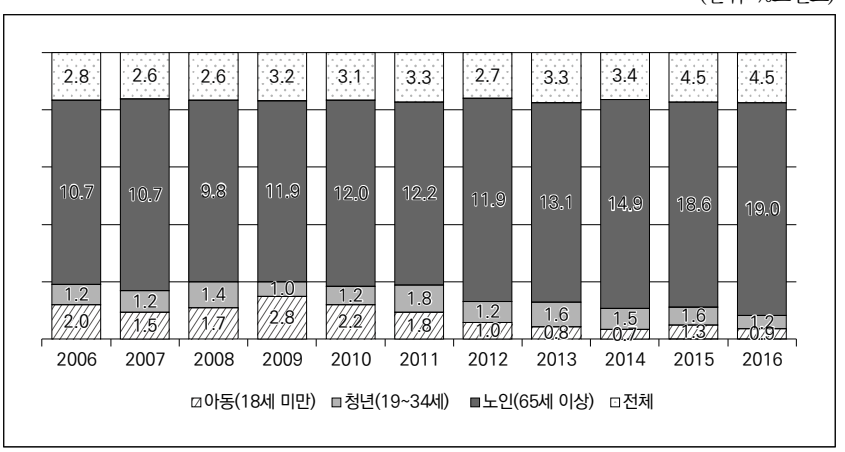
구분	청년(19~34세)			청년(19~24세)			청년(25~34세)		
	시장 소득(A)	가처분 소득(B)	A-B	시장 소득(A)	가처분 소득(B)	A-B	시장 소득(A)	가처분 소득(B)	A-B
2006	9.5	8.3	1.2	9.9	8.8	1.1	9.3	8.1	1.2
2007	9.2	8.1	1.2	11.0	10.3	0.7	8.6	7.2	1.3
2008	9.4	8.1	1.4	12.6	10.8	1.8	8.2	7.0	1.2
2009	10.1	9.1	1.0	13.2	12.4	0.7	8.9	7.8	1.1
2010	9.6	8.5	1.2	10.2	9.4	0.8	9.4	8.1	1.4
2011	9.2	7.4	1.8	11.1	9.6	1.6	8.4	6.6	1.8
2012	8.1	6.9	1.2	10.3	9.4	0.9	7.1	5.9	1.3
2013	8.4	6.8	1.6	11.9	9.4	2.5	6.9	5.7	1.2
2014	8.5	7.0	1.5	10.1	7.5	2.5	7.8	6.8	1.1
2015	8.3	6.7	1.6	10.7	7.8	2.9	7.2	6.2	1.0
2016	8.8	7.6	1.2	12.8	10.8	2.0	6.6	5.8	0.8
구분	아동(18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전체		
	시장 소득(A)	가처분 소득(B)	A-B	시장 소득(A)	가처분 소득(B)	A-B	시장 소득(A)	가처분 소득(B)	A-B
2006	12.1	10.1	2.0	54.5	43.8	10.7	16.1	13.4	2.8
2007	12.3	10.7	1.5	55.3	44.6	10.7	16.7	14.1	2.6
2008	11.6	9.9	1.7	54.6	44.8	9.8	16.7	14.2	2.6
2009	11.7	8.9	2.8	58.2	46.4	11.9	17.3	14.1	3.2
2010	10.8	8.5	2.2	59.1	47.1	12.0	17.0	13.8	3.1
2011	10.6	8.9	1.8	60.9	48.8	12.2	17.0	13.8	3.3
2012	9.5	8.6	1.0	60.0	48.2	11.9	16.3	13.7	2.7
2013	8.4	7.5	0.8	60.6	47.5	13.1	16.7	13.4	3.3
2014	7.7	7.0	0.7	62.1	47.2	14.9	16.7	13.3	3.4
2015	8.1	6.9	1.3	63.3	44.7	18.6	17.3	12.8	4.5
2016	7.6	6.7	0.9	65.7	46.7	19.0	18.3	13.8	4.5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청년빈곤율은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낮을 수 있으나 청년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 폭(공적이전소득의 효과)에는 다소 소극적인 차이를 보였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를 나타낸 다음 그림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그림 5-1-1]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비교

(단위: %포인트)



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중위 50% 미만) 빈곤율 차이를 나타내며, 이 차이는 조세 제외 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 볼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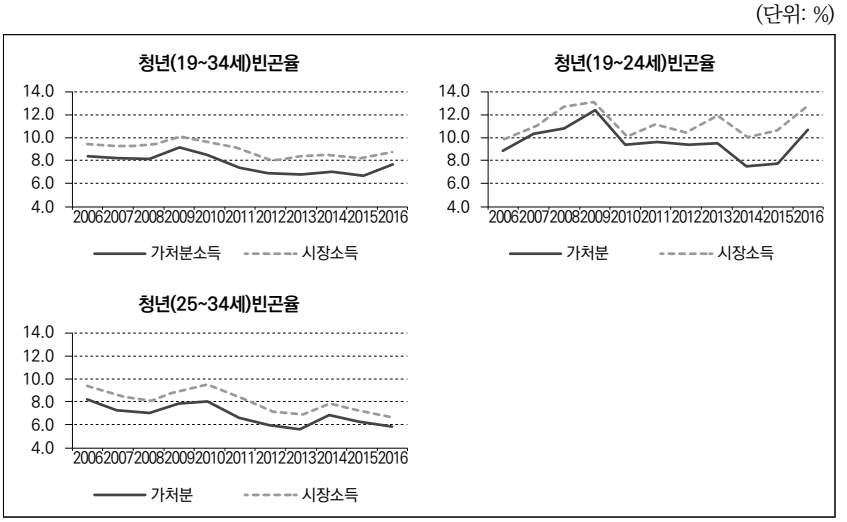
아동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모두 최근 감소하는 경향[16]을 보이며, 다만 두 소득 기준의 빈곤율 차이로 알 수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현금 이전의 증

16) 여유진 외(2016)에서는 최근 아동빈곤율의 감소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의 절대수가 줄어든 점, 아동이 있는 가구의 근로소득 상승과 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 증가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유진 등, 2016, pp. 142-143).

가가 기초연금 증액 등 주로 노인층에게 집중되었던 점과 아동에 대한 이전이 현금보다는 현물(보육서비스 등)에 집중된 점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여유진 등, 2016, p. 139). 이러한 근거는 노인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두 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는 2006년 11.0%포인트에서 2011년 18.5%포인트, 2016년 19.0%포인트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청년의 경우 2006년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10년 동안 1%포인트~2%포인트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등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까지는 청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부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를 청년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0년 동안의 청년을 위한 이전의 효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림 5-1-2] 청년 연령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 비교

(단위: %)



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중위 50% 미만) 빈곤율 차이를 나타내며, 이 차이는 조세제외 후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 볼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청년(가구)유형별 빈곤율

다음에서는 청년빈곤율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청년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가구의 유형은 이태진 등(2016, p. 143), 여유진 등(2015, p. 47) 등 기존 연구[17]를 참고하여 청년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 그 외 청년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년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또는 결혼 유무에 따라, 결혼을 한 경우에도 자녀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어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즉 청년가구의 가구유형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5-1-4〉 가구유형별 가구 구분

가구유형	조작정 정의
청년단독가구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가구
기타청년가구	그 외 청년가구
청년가구	가구의 합산

먼저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가구 중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2006년 7.8%에서 2008년 10.0%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 2016년 11.7%까지 다

17) 이태진 등(2016)에서는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 자녀가구, 청년가구원이 부모와 생활을 같이 하는 가구, 그 외 청년이 있는 가구로 본 연구와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여유진 등(2015)에서는 생애주기별 실태분석을 위해 청년단독, 청년부부, 청년부부와 1자녀, 2자녀, 장년부부와 1자녀, 2자녀, 장년부부, 노인부부, 노인단독 등 가구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3~4% 내외의 분포를 보였으며, 청년부부+자녀가구의 분포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상대적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 분포는 2006년 48.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현재 청년가구의 56.9%,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이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캥거루 세대'라는 신조어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생활하는 청년 세대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편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 청년 가구유형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 좌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1-5〉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단독가구	7.8	8.4	10.0	9.5	8.8	8.8	5.9	5.9	8.5	10.6	11.7
청년부부가구	4.4	4.5	3.7	4.2	4.1	3.7	3.4	3.5	4.1	4.2	3.3
청년부부+자녀가구	14.2	12.9	13.4	12.9	12.8	12.3	12.3	13.0	12.8	11.9	10.3
부모+청년가구	48.4	50.2	50.0	50.9	53.1	53.7	55.4	55.8	53.9	54.3	56.9
기타청년가구	25.2	24.2	23.0	22.5	21.2	21.6	23.2	21.9	20.8	19.1	17.9
청년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위와 같이 세분화된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미만 가구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가구의 유형별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녀가 있는 청년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반대로 청년단독가구와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먼저 청년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2006년 6.7%에서 2011년 6.5%, 2016년 2.6%로 감소 추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청년부부 가구의 경우 절대

적인 빈곤율 수치는 작지만 2006년 1.1%에서 2013년에는 3.8%까지 2.7%포인트 증가하였다가 조금씩 감소하여 가장 최근인 2016년 2.9%로 10년의 전체 기간동 안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기준으로는 2006년 1.1%에서 2016년 3.9%로 나타났다.

〈표 5-1-6〉 가처분소득 중위 50%기준 가구유형별 빈곤율

(단위: %)

가구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단독가구	15.2	11.5	11.3	18.6	16.6	12.9	16.6	15.1	19.5	19.1	19.9
청년부부가구	1.1	0.8	0.3	4.0	2.2	2.0	2.6	3.8	2.2	1.1	2.9
청년부부+자녀가구	6.7	5.7	5.2	4.1	6.7	6.5	4.6	4.3	4.2	3.2	2.6
부모+청년가구	7.8	8.2	8.8	8.6	6.4	5.3	5.8	6.0	4.6	4.5	5.6
기타청년가구	8.9	10.3	7.2	8.5	9.3	9.0	6.6	7.4	7.4	8.4	8.9
청년가구	8.2	8.4	7.9	8.7	7.8	6.8	6.4	6.6	6.3	6.5	7.5
인구 기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단독가구	16.4	12.6	12.8	20.9	17.1	13.3	19.8	15.1	22.8	20.7	20.8
청년부부가구	1.1	0.9	0.5	4.4	2.2	2.0	4.7	3.8	2.7	1.1	3.9
청년부부+자녀가구	8.0	6.5	6.6	5.1	8.3	7.2	6.4	6.0	6.8	4.9	4.8
부모+청년가구	8.5	8.6	8.8	8.8	7.7	6.1	6.2	7.0	5.5	4.8	5.7
기타청년가구	10.3	11.4	8.4	9.1	10.2	9.8	7.5	8.7	8.3	9.5	10.2
청년가구	8.9	8.9	8.3	8.6	8.4	7.2	6.8	7.3	6.7	6.2	7.0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청년단독가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절대적인 빈곤율 수치 또한 높으며, 10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을 확연히 보여준다. 2006년 청년단독 가구빈곤율은 15.2%로 실업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18.6%까지 증가하였다가 조금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14년 19.5%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 시점인 2016년 청년단독가구 빈곤율은 19.9%로 20% 가까이의 빈곤율을 보인다. 즉 청년단독가구의 5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청년부부(+자녀)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데 이는 여유진 외(2015)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2003년과 2011년 사이 청년부부가구의 상대적인 소득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소득상승은 '선택적 결혼'과 '결혼 후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 강화'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여유진 등, 2015, p. 90). 따라서 청년에 대한 정책지원에 있어 청년가구의 유형 또한 정책 대상의 구분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청년단독가구에게만 정책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청년 또는 청년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앞선 분석에서 청년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면, 다음에서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KOSIS의 장래가구 추계를 통해 청년가구주 가구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0~34세[18] 청년가구주 가구는 전체가구의 18.3%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6년 14.1%까지 4.2%포인트 감소하였다. 연령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24세 청년가구주 가구는 2.5% 내외로 10년간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25~29세, 30~34세 청년가구주 가구 분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앞서 정의한 청년가구주의 연령은 19~34세로 이후 분석해서도 19~24세, 25~34세로 세분화하여 빈곤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18)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을 5세 단위로 보고 있어 본 분석과 가장 근접한 20세~34세 가구주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5-1-7〉 청년가구주 가구 분포

(단위: %, 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6	18.3	2.5	5.8	9.9
2007	17.8	2.4	5.9	9.5
2008	17.3	2.3	5.9	9.0
2009	16.8	2.3	5.8	8.7
2010	16.5	2.4	5.5	8.6
2011	16.2	2.3	5.2	8.6
2012	15.9	2.3	4.9	8.6
2013	15.5	2.4	4.6	8.5
2014	15.1	2.4	4.4	8.3
2015	14.6	2.4	4.4	7.8
2016	14.1	2.5	4.3	7.2

주: KOSIS -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KOSIS 다운로드, 2017. 9. 19. 인출.

이러한 청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19~34세 청년가구주 가구의 경우 2006년 8.9%에서 2009년 10.0%, 2010년 10.9%로 증가하였다가 2011~2013년에는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가장 최근인 2016년 10.4%로 상승하였다. 이 수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10.0%)보다 높은 수치로 현재 청년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24세 청년가구주의 경우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물론, 전체가구에서 이들의 분포가 작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나 역시 가장 최근 시점인 2016년 현재 38.7%로 2009년 38.6%와 비슷한 빈곤율을 보인다. 이들의 상황은 중위 40% 미만으로 보아도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데, 2016년 40% 미만 비율은 34.3%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25~34세 청년가구주 가구의 경우 또한 중위 50% 기준으로 2006년 8.2%, 2010년 10.1%, 2016년 7.5%로 나타났다.

〈표 5-1-8〉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가구주 가구 빈곤율

(단위: %)

구분	청년(19~34세)가구주 가구			청년(19~24세)가구주 가구			청년(25~34세)가구주 가구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6	5.8	8.9	13.3	11.0	15.1	25.2	5.3	8.2	12.1
2007	4.3	8.3	13.0	12.7	26.5	39.7	3.6	6.8	10.8
2008	4.4	7.2	12.4	15.7	22.8	31.9	3.3	5.7	10.6
2009	5.5	10.0	15.5	20.7	38.6	47.6	4.3	7.8	13.0
2010	7.8	10.9	17.9	19.4	23.4	38.3	7.1	10.1	16.7
2011	5.5	8.5	12.2	23.2	33.4	49.7	4.9	7.6	10.9
2012	4.3	7.7	12.9	25.2	50.2	54.1	3.4	6.0	11.2
2013	4.7	7.3	10.7	10.3	19.9	21.8	4.5	6.9	10.3
2014	6.1	9.3	15.9	16.7	20.9	41.0	5.5	8.6	14.4
2015	7.1	9.5	14.8	25.8	29.9	37.8	5.3	7.5	12.6
2016	7.9	10.4	15.1	34.3	38.7	51.4	5.2	7.5	11.3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가구 가중치를 활용하여 분석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에서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기준 빈곤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OECD 국가 중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15~29세) 비중이 2014년 기준 가장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그 비율은 80.6% 정도이다. 비교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ECD와 동일한 정의와 산출 방법을 가정하여 우리나라의 15~29세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14년 기준 84.6%로 나타났다. 물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치부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김문길, 이주미, 2017, p. 34). 따라서 다음에서는 본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분하여 빈곤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청년 연령인 19~34세를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 46.6%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1년

51.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2016년 56.7%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특성상 대학생 연령까지는 보통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19~24세의 경우 80%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후 취업 및 결혼 등으로 조금 연령이 높아지는 25~34세 청년의 경우 좀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비율은 2006년 32.2%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36.7%, 2016년 40.5%의 비율로 10년 동안 8.3%포인트 증가한 모습이다.

〈표 5-1-9〉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

(단위: %)

구분	19~34세		
		19~24세	25~34세
2006	46.6	82.4	32.2
2007	49.1	85.4	34.8
2008	48.5	84.7	33.9
2009	49.2	86.9	34.6
2010	51.0	89.1	35.9
2011	51.9	90.3	36.7
2012	53.4	91.6	37.5
2013	54.0	92.0	37.7
2014	53.1	90.7	36.5
2015	53.6	87.0	38.0
2016	56.7	86.4	40.5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들의 빈곤율[19]을 비교해 보면, 19~34세 전체 청년의 경우 2006년 기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율을 7.9%

19) 서울시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서울 거주 청년 858명의 응답자 중 부모와 동거는 46.5%로 비동거 가구에 비해 조금 낮았지만, '독립을 원하나 주거비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움' 또는 '독립을 원하나 소득이 없음'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동거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2014; 이태진 등, 2016, p. 47에서 재인용).

인 반면 비동거 청년의 경우 8.6%로 0.7%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서 2011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의 빈곤율은 6.4%인 반면 비동거 청년의 빈곤율은 8.5%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와 비동거 청년가구인 경우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2016년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의 빈곤율이 4.4%포인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연령을 구분하여 19~24세, 25~34세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수치 차이는 있으나 25~34세의 경우 전체 청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특이할 만한 점은 19~24세인 초기청년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빈곤율 차이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데,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19~24세 청년의 30% 가까이는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10〉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19~34세		19~24세		25~34세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2006	7.9	8.6	6.8	18.2	9.2	7.6
2007	7.9	8.3	7.5	26.3	8.3	6.7
2008	8.5	7.7	8.7	22.6	8.3	6.3
2009	9.1	9.1	9.8	29.7	8.3	7.5
2010	7.4	9.6	7.8	22.8	7.0	8.7
2011	6.4	8.5	7.5	28.4	5.4	7.3
2012	6.2	7.8	7.6	29.6	4.7	6.6
2013	6.4	7.3	8.0	25.6	4.7	6.3
2014	5.2	9.1	5.1	31.0	5.2	7.7
2015	4.8	9.0	5.2	25.3	4.3	7.4
2016	5.7	10.1	6.7	36.5	4.4	6.7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에서 살펴본 내용은 청년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한 청년과 비취업 청년의 빈곤율을 비교한 것이다. 19~34세 청년 중 취업한 청년의 빈곤율은 2006년 4.7%에서 10년 동안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09년 4.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3.8%의 비율을 보였다. 다만, 2015년 3.3%에서 2016년 3.8%로 0.5%포인트 증가하여 2015년 이후 취업한 청년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로활동과 직결될 수 있는 소득빈곤 기준 빈곤율로 비취업 청년의 빈곤율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청년의 경우 2006년 기준 빈곤율을 12.1%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 1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 조금씩 감소하여, 2013년까지 조금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2016년 13.6%로 2015년(12.3%) 대비 1.3%포인트 증가하였다. 19~24세 초기 청년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취업을 한 경우라도 후기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따라서 청년의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발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특성에 맞는 정책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11〉 취업 여부에 따른 청년 빈곤율(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단위: %)

구분	19~34세		19~24세		25~34세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2006	4.7	12.1	4.5	10.2	4.8	13.3
2007	4.1	11.2	5.3	11.0	3.8	11.3
2008	3.6	12.9	5.4	13.8	3.3	12.2
2009	4.6	16.3	6.3	16.8	4.2	15.9
2010	4.1	15.4	5.3	12.5	3.8	17.5
2011	3.5	13.5	6.2	11.7	2.8	14.9
2012	3.5	11.9	6.4	11.2	2.9	12.4
2013	3.6	11.7	5.8	11.8	3.1	11.6
2014	3.6	12.5	4.4	9.9	3.4	14.7
2015	3.3	12.3	3.2	11.2	3.3	13.3
2016	3.8	13.6	5.0	15.4	3.4	11.6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청년가구유형별 경제적 여건

청년 또는 청년가구 특성에 따라 유형별 빈곤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정말 열악한 것인지, 어떠한 수준이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청년가구유형별로 소득 및 지출, 재산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가구유형별로 소득에 대한 수준을 살펴보고자 전체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각 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배율을 구한 결과이다. 즉 전체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청년가구유형별 가처분소득 비율의 평균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전체 청년가구의 배율은 110% 내외로 나타났다.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그 배율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청년가

구의 경우 부부 모두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되어 진다.

또한 청년부부가구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그 비율은 130~140%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90% 수준으로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전체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앞의 빈곤 실태 분석에서와 같이 10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율이 상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 중 이들에게 근로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 또는 청년수당과 같은 소득보전 등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5-1-12〉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1)

(단위: %)

구분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06	95.9	141.7	93.8	111.7	97.2	105.6
2007	105.3	143.1	96.3	111.5	98.5	107.3
2008	109.4	143.1	97.7	112.7	101.4	108.9
2009	99.4	143.1	98.2	114.9	104.7	110.2
2010	105.4	139.8	96.1	116.5	100.0	110.4
2011	100.8	155.4	97.4	118.7	100.9	112.0
2012	95.9	133.9	94.4	121.0	99.0	111.6
2013	99.3	138.3	94.0	117.8	104.9	111.5
2014	90.1	142.9	93.9	119.8	101.8	111.2
2015	97.2	131.5	97.9	123.7	100.4	113.7
2016	96.7	136.4	98.9	125.1	101.7	115.3

주: 1) 전체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각 가구유형별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비율.
2)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5-1-13〉는 청년가구들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를 시점별로 비교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모든 청년가구유형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에 따라 비중의 차이를 보인다. 전체 청년가구의 소득구성비는 근로소득이 70%, 사업소득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가구와 유사한 경향이다. 청년부부와 자녀가구의 경우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4시점 모두 85%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로 짐작한 바와 같이 청년부부가구의 맞벌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이다.

〈표 5-1-13〉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청년가구
2006	근로소득	74.0	84.2	73.5	63.7	69.5	68.3
	사업소득	6.2	11.8	20.5	26.3	19.5	21.6
	재산소득	0.1	0.1	0.1	0.5	0.2	0.3
	사적이전소득	17.6	3.2	3.8	5.5	8.0	6.7
	공적이전소득	2.2	0.6	2.1	4.0	2.8	3.1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9	근로소득	71.0	87.9	81.7	65.2	73.4	70.7
	사업소득	9.9	9.2	12.6	24.6	15.2	18.9
	재산소득	0.2	0.3	0.2	0.4	0.2	0.3
	사적이전소득	17.0	1.4	1.6	4.6	6.7	5.7
	공적이전소득	1.8	1.2	3.9	5.2	4.4	4.3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2	근로소득	83.9	90.2	81.1	66.3	73.7	71.6
	사업소득	3.9	7.6	11.6	23.1	14.6	18.1
	재산소득	0.1	0.1	0.1	0.5	0.2	0.3
	사적이전소득	11.2	0.9	2.3	5.6	6.5	5.5
	공적이전소득	0.9	1.2	4.9	4.6	5.1	4.4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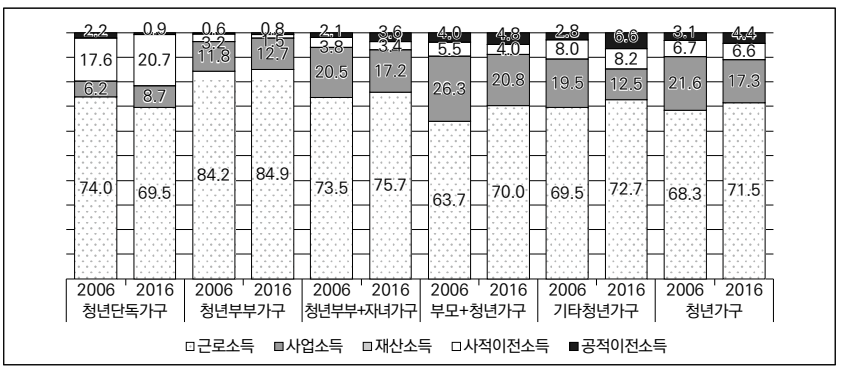
구분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16	근로소득	69.5	84.9	75.7	70.0	72.7	71.5
	사업소득	8.7	12.7	17.2	20.8	12.5	17.3
	재산소득	0.2	0.1	0.1	0.4	0.0	0.3
	사적이전소득	20.7	1.5	3.4	4.0	8.2	6.6
	공적이전소득	0.9	0.8	3.6	4.8	6.6	4.4
	경상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특징지을 만한 점은 청년단독가구에서 보이는데, 2006년 근로소득의 비중이 74%, 2009년 71%, 2012년 84%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듯하였으나 2016년 70% 정도로 소득요소 중 근로소득 비중이 약화된 모습이다. 특히 이들 가구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유형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매 시점 10%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 17.6%, 2009년 17.0%, 2016년 20.7%로 2016년에는 청년단독가구의 소득 중 20% 이상이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즉, 청년단독가구이기는 하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 또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1-3]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2006 vs 2016)

(단위: %)



주: 1)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은 청년가구유형별 소비지출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대비 각 유형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로 소득 배율과 비슷한 수준 및 경향을 보여준다.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소비에 있어서도 전체가구의 60~70% 수준, 전체 청년가구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소비의 수준이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5-1-14〉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 소비지출 대비 배율1)

(단위: %)

구분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06	62.4	80.4	68.2	74.9	65.1	70.7
2007	66.9	79.7	69.0	73.6	64.5	70.5
2008	70.1	78.3	68.2	71.8	65.0	69.8
2009	70.8	79.8	67.3	72.0	67.2	70.5
2010	71.9	79.9	69.0	73.1	67.1	71.5
2011	65.8	88.0	68.3	73.3	67.0	71.2
2012	69.8	79.2	65.5	72.8	62.7	69.6
2013	72.5	76.1	62.8	71.7	64.8	69.3
2014	65.0	79.1	62.0	71.0	64.7	68.4
2015	65.0	73.8	65.2	70.6	62.5	67.9
2016	61.6	68.7	61.0	70.5	62.5	67.0

주: 1) 전체가구의 균등화된 소비지출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각 가구유형별 균등화된 소비지출 비율.
2)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만, 청년부부가구에서 소득 배율 수준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전체가구보다 상대소득은 140% 이상으로 높을지 모르나 전체가구 대비 70~80% 정도의 소비지출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가구유형별로 지출 품목별 분포는 어떻게 다를까. 〈표 5-1-1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에 비해 지출에 대한 항목이 자세히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지출 비목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청년가구에서 소비지출 중 차지하는 지출 비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음식·숙박 부문이며, 비중은 가구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단독가구의 소비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목은 주거 및 수도광열비로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전체 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음식·숙박 비목 즉, 외식비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외식비 비목이 2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비목 순이었다. 교통 지출 비목의 경우 자동차 구입 또는 자동차 유지비, 교통서비스 등의 비용으로 청년가구 전반에 걸쳐 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15〉 가구유형에 따른 지출 품목별 분포(2016)

(단위: %)

구분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청년가구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8.7	10.4	13.3	13.9	14.3	13.2
주류 및 담배	1.8	2.2	1.5	1.4	1.6	1.5
의류 및 신발	8.1	6.9	7.0	6.4	6.9	6.8
주거 및 수도광열[1]	19.1	12.5	13.0	10.7	11.5	12.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2.8	4.9	5.3	3.5	4.4	3.8
보건	4.8	3.7	7.0	6.4	6.2	6.2
교통[2]	10.5	14.0	10.4	11.9	11.9	11.6
통신	6.4	7.3	7.1	7.7	6.5	7.3
오락·문화	8.2	8.1	5.8	5.4	6.3	6.0
교육	2.1	0.9	4.6	8.1	6.1	6.4
음식·숙박[3]	19.4	20.1	14.7	15.4	15.0	15.9
기타상품및서비스	8.1	8.9	10.4	9.0	9.5	9.1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주거 및 수도광열비에는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등이 포함됨.
2) 교통비에는 자동차 구입, 기타 운송기구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 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 교통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됨.
3) 음식·숙박 지출 비목에는 식사비, 숙박비가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청년가구유형별 재산 및 부채 실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앞에서 자료 활용에 대한 언급을 통해 본 분석에서 활용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경우 자산 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자산 실태 파악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이다. 본 분석 역시 청년가구의 유형은 앞의 분석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20]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가구의 평균재산 대비 각 가구유형별 재산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가구를 제외하고는 전체 자산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자산의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표 5-1-16〉 가구유형별 전체가구 평균재산 대비 배율[1)]

(단위: %)

총재산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12	41.1	64.0	56.2	130.6	66.1	98.9
2013	39.0	65.8	55.5	130.8	65.7	100.0
2014	41.3	64.5	56.5	128.1	67.1	101.1
2015	41.2	77.2	57.6	123.3	65.3	99.6
2016	37.2	75.2	62.4	123.4	68.7	100.7

20) 가계동향조사의 분석에 활용된 청년가구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자료의 가구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청년단독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표 5-1-5〉 참조)

〈참고표〉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청년단독가구	7.4	7.3	6.1	5.7	6.1
청년부부가구	4.9	4.3	4.0	3.4	3.5
청년부부+자녀가구	10.3	10.1	9.4	9.3	8.5
부모+청년가구	55.5	57.2	60.2	62.1	62.6
기타청년가구	21.9	21.2	20.2	19.5	19.3
청년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순재산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12	43.5	62.5	53.8	127.6	64.6	96.8
2013	42.1	64.6	52.0	128.0	64.1	97.9
2014	43.7	64.3	51.9	126.3	64.6	99.2
2015	43.6	74.9	53.8	121.9	63.2	98.1
2016	38.0	71.2	58.8	121.7	67.2	98.9

주: 1) 전체가구의 균등화된 총(순)재산의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각 가구유형별 균등화된 총 (순)재산 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청년부부 및 청년부부와 자녀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의 평균재산의 50~70% 수준이었며, 청년단독가구 재산은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의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청년가구유형별로 평균재산액 또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데, 예상할 수 있듯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에서 5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가 하면,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8천만 원 수준으로 청년부부 또는 청년부부+자녀가구 대비 40% 정도, 부모 동거 청년가구 자산 대비 16% 수준이었다. 다른 청년가구유형에 비해 부모 동거 청년가구의 자산이 높은 것은 자산은 거의 청년의 부모로부터 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17〉 가구유형별 평균재산액

(단위: 만 원)

총재산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12	7,817	17,230	19,745	48,603	21,782	35,205
2013	7,453	17,798	19,585	48,921	21,488	35,823
2014	8,107	17,930	20,610	49,251	22,451	37,342
2015	8,405	22,286	21,740	49,217	22,791	38,279
2016	7,941	22,743	24,734	51,488	24,753	40,396
순재산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12	6,928	14,062	15,788	39,699	17,767	28,754
2013	6,656	14,444	15,134	39,526	17,284	28,906
2014	7,090	14,772	15,613	40,042	17,794	30,198
2015	7,356	17,867	16,738	40,109	18,175	31,045
2016	6,694	17,726	19,174	41,721	19,839	32,60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끝으로 청년가구들의 부채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자산이 많은 만큼 부모 동거 청년가구에서 80% 정도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부가구 또는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70%를 상회하는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부채 유형에 대해 추가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추측하건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생활을 위해 부채가 발생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5-1-18〉 가구유형별 부채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청년 가구	청년가구
2012	45.6	71.8	74.5	77.8	69.8	73.0
2013	45.4	70.2	78.4	79.1	70.4	74.4
2014	47.2	65.8	77.9	77.3	68.0	73.2
2015	41.4	68.9	77.3	77.1	67.7	73.0
2016	40.6	70.1	76.0	77.6	66.4	72.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청년단독가구의 부채 보유 비율은 40% 정도로 10명 중 4명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액 수준은 평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었다. 중위값은 2016년 기준 1200만 원으로 다른 청년가구유형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들의 부채 사유-예컨대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학자금대출의 사유 등-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부부 또는 청년부부+자녀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4500만 원 정도였으나 2015년 6,418만 원, 2016년 7,159만 원으로 부채액 수준이 높아졌다. 이들의 부채액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단순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채 유형으로 인해 높아지는 것인지 -예컨대, 주거비 부담 때문인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년가구유형별로 지원 대책의 범위 또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표 5-1-19〉 가구유형별 부채가구의 부채액

(단위: 만 원)

평균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청년가구
2012	1,952	4,414	5,310	11,444	5,755	8,833
2013	1,756	4,777	5,677	11,872	5,976	9,300
2014	2,155	4,798	6,416	11,908	6,849	9,763
2015	2,536	6,418	6,474	11,815	6,820	9,914
2016	3,073	7,159	7,319	12,592	7,404	10,703
중위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부모+청년가구	기타청년가구	청년가구
2012	600	2,910	3,000	4,282	2,930	3,390
2013	530	3,000	3,630	4,850	3,000	3,800
2014	800	3,730	4,000	5,000	3,300	4,200
2015	1,200	4,000	5,000	5,040	3,300	4,635
2016	1,200	4,300	5,300	5,933	4,000	5,00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4. 소결

본 절에서는 빈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소득빈곤으로 청년빈곤율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가구유형별로 소득, 지출, 재산 실태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년가구유형별 빈곤율 및 경제적 여건을 살펴본 결과 청년가구유형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의 경우 빈곤율의 절대적 수치는 작았지만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빈곤율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낮을 수 있으나, 청년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 폭(공적이전소득의 효과)에는 다소 소극적인 차이를 보였다. 아동과 노인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차이는 공적이전소득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동의 경우 그 효과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이다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며, 이는 이 기간 동안 현금 이전의 증가가 기초연금 증액 등 주로 노인층에게 집중되었던 점과 아동에 대한 이전이 현금보다는 현물(보육서비스 등)에 집중된 점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여유진 등, 2016, p. 139). 노인의 경우 더욱 확연한 차이로 두 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는 2006년 11.0%포인트에서 2011년 18.5%포인트, 2016년 19.0%포인트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청년의 경우 2006년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10년 동안 1~2%포인트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정부 들어 청년일자리 등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까지는 청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부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추후 청년지원 대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청년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 그 외 청년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청년단독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을 가장 높게 나타날뿐더러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도 10년간 4.7%포인트의 증가 폭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청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은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증가하다 2011년~2013년에는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가장 최근인 2016년 10.4%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10.0%)보다 높은 수치로 현재 청년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부모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들의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19세~34세 전체 청년의 경우 2006년 기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율을 7.9%인 반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경우 8.6%로 0.7%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서 2011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의 빈곤율은 6.4%인 반면 비동거 청년의 빈곤율은 8.5%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비동거 청년가구인 경우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청년의 빈곤율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가구유형별로 전체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배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전체 청년가구의 배율은 110% 내외였다.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그 배율은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청년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근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청년부부가구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가구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그 비율은 130~140%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청년단

독가구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90% 수준으로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전체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가구들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유형별 소득구성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청년가구유형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에 따라 비중의 차이를 보인다. 특징지을 만한 점은 청년단독가구의 소득 중 20% 이상이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전체가구의 평균 소비지출 대비 각 유형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배율과 비슷한 수준 및 경향을 보이며,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소비에 있어서도 전체가구의 60~70%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가구의 평균재산 대비 각 가구유형별 재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가구를 제외하고는 전체 자산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자산의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청년부부 및 청년부부와 자녀가구의 경우 전체가구의 평균 재산의 50~70% 수준이었며, 청년단독가구 재산은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시 다차원 접근과 동시에 청년유형별 차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주거

청년세대의 주거빈곤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세대는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은 주거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이는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부모 부담이

연장되는 등 이행기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전체적인 주거빈곤에 대해 검토와 이를 토대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가구유형별로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1. 주거빈곤 검토

주거빈곤에 대한 정의는 빈곤에 대한 것처럼 정의하기 쉽지 않다. 이는 빈곤의 정의에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며,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객관적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낮은 상태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가 과도하여 다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서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주거빈곤 실태를 규명하기 어렵다(박신영, 2012, pp. 34-35). 이와 같이 주거빈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주거빈곤은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RIR: 월소득 대비 주거비)으로, 물리적 측면의 주거빈곤은 주로 최저주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으로 규정한다. 국내 선행연구(오지현, 여유진, 2009; 박신영, 2012; 이태진 등, 2015; 임세희, 2010, 2014;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 2015)를 통해 최저주거기준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저주거기준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부터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서울시에서 1997년 주택 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0년 9월 최저주거기준을 공표(건설교통비 고시 제2000-260호)하였다. 이후 2003년 최저주거기준 설정이 주택법에 반

영됨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6월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새롭게 고시(건설교통부 제2004-173호)한 바 있으나,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1년 5월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과밀하다는 지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발표된 이후 11년 만에 개선(국토교통부 제2011-490호)되었다. 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3인 가구의 면적 기준이 29㎡에서 36㎡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 기준에 하수도 시설이 추가되었으며,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화재안전 시설이 추가되었다. 2011년 공표된 즉, 현행 최저주거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5-2-1〉과 같다.

〈표 5-2-1〉 최저주거기준의 방수와 최저주거면적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총주거면적	
			2000년	2011년
1	1인가구	1K	12	14
2	부부	1DK	20	26
3	부부+자녀	2DK	29	36
4	부부+자녀2	3DK	37	43
5	부부+자녀3	3DK	41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49	55

자료: 국토교통부 제2011-490호 고시.

나. 주거비(임대료) 과부담

과도한 주거비의 기준에 앞서 주거비 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에 대해 살펴보면 하성규(2010) 연구에서는 가구(household)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주거비를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지불 가능한 능력(월 가구소득의 25~30%)으로 보았다. Morris & Winter(1996)에서는 소득대

비 주거비용의 비율을 25%로 설정하였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HUD)가 사용하는 총소득 대비 집을 소유 또는 임대하여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한 액수를 살펴보는 접근법이 있다. HUD(2006)는 가구소득의 30%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과도한 주거비 부담(excess cost burden)으로 정의하고, 주거를 위해 가구소득의 50%보다 많이 지출하는 경우를 심각한 주거비 부담(severe cost burden)으로 정의하였다(하성규, 2010; 박정민, 오욱찬,이건민, 2015; Jewkes & Delgadillo, 2010에서 재인용).

미국에서는 '일주일간의 급료로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보는 시각이 19세기부터 정착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1980년 초까지 가구소득의 25% 이상,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주거비 부담이 아주 심각하다는 기준은 소득의 50%를 주택과 관련된 비용지출에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가를 제외하고 있으며, 주거비 과부담 기준은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Alex, 2006, p. 23; 박신영, 2012에서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 지출 시 주거비 부담 가구로, 소득의 50% 이상 지출 시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정책 주요 대상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국회 보고서 제출로 변화를 모니터링한다(HUD, 2013; 박미선 등, 2014에서 재인용).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가구 중 가구 (세전)총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임차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파악한다. 주거비 스트레스(housing stress)는 가구 총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 이자, 임대료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큰 것으

로 보고, 50% 이상 지출 시 주거비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식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박미선 등, 2014에서 재인용).

캐나다에서도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David & Michael, 2004, p. 401; 박신영, 201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월세 형식의 임대료 지급체계가 정립되어 있어 월 임대료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가 쉽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주거비로 월세만을 반영하는 등 주거비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박신영, 2012). 따라서 임대료(월세)가 과부담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의 한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2. 청년가구유형별 주거빈곤

본 절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구유형 구분이 가능하고, 주거 특성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2006, 2008, 2010, 2014, 2016) 원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최저주거기준을 분석할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조사는 장기적이며 다양한 주거 특성 변수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면 시계열 비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본 절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2012년 자료는 가구유형 구분이 가능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기준 연도는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총 5개 년도이다.

〈표 5-2-2〉 가구유형별 가구 구분

가구유형	조작적 정의
청년단독가구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가구
기타청년가구	그 외 청년가구
청년가구	위 가구의 합산

앞선 절과 동일하게 청년의 주거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세분화한 집단 구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가구를 기준으로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청년+부모가구, 기타청년가구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으며, 가구유형별 가구 구분의 조작적 정의는 위의 〈표 5-2-2〉와 같다.

아래 표는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를 보여주는데, 청년가구(청년이 있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그중에 청년단독가구는 2006년에 비해 2016년 약 2배 증가하였다. 청년가구 세부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3〉 가구유형별 가구 분포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4	2016
청년가구	47.0	42.9	43.8	38.1	37.5
청년단독가구	9.3	10.0	10.6	18.0	18.1
청년부부가구	3.6	4.6	4.3	5.6	4.6
청년부부+자녀가구	12.8	12.0	8.0	10.5	9.8
청년+부모가구	50.6	52.7	59.6	50.4	51.3
기타청년가구	23.7	20.7	17.5	15.6	16.2
전체 (청년가구)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본 절에서는 청년가구유형에 따른 주거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청년주거정책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청년가구유형별로 주거빈곤, 주거비부담, 주거안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주거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위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및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등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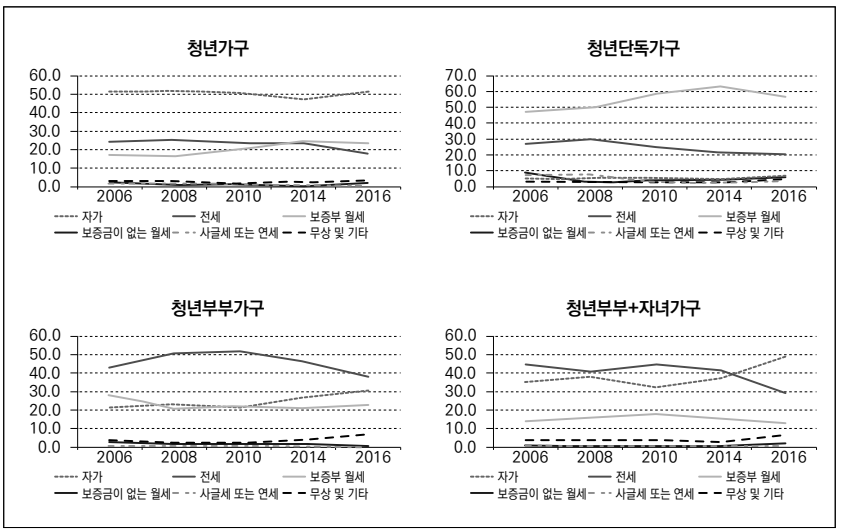
가. 주거안정성 및 주거의 질

먼저 전체적으로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2008년 이후 월세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세의 비중은 2006년 22.4%에서 2016년 15.5%로 6.9%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월세는 2006년 17.4%에서 23.0%로 5.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년가구유형별로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 월세의 비중은 60% 이상을 웃돌며 압도적으로 높았고, 청년부부가구는 전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2006년 42.9%에서 38.2%로 4.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반면

자가와 무상 및 기타의 점유 형태가 증가하였다. 청년부부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무상 및 기타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절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단독가구에 주목할 만하다.

[그림 5-2-1]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2-4〉 가구유형별 주거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무상 및 기타
청년 가구	2006	51.3	24.5	17.5	2.2	1.8	2.7
	2008	51.9	25.1	17.3	1.5	1.6	2.6
	2010	50.9	23.8	20.5	1.6	1.0	2.2
	2014	47.4	23.4	24.9	1.2	0.8	2.4
	2016	51.4	18.3	23.5	2.4	1.0	3.6
청년 단독 가구	2006	5.2	27.2	47.8	9.3	7.4	3.1
	2008	5.7	30.0	50.2	3.5	7.5	3.1
	2010	5.7	25.0	58.6	4.9	2.9	3.0
	2014	5.1	22.3	63.1	4.3	2.2	3.0
	2016	7.1	21.1	56.9	6.5	3.1	5.4
청년 부부 가구	2006	21.8	42.9	28.4	2.4	0.8	3.7
	2008	23.2	50.9	21.1	1.8	0.7	2.3
	2010	21.8	51.5	22.3	1.5	0.4	2.5
	2014	26.8	46.1	21.2	1.8	0.0	4.1
	2016	30.9	38.2	23.5	0.3	0.0	7.2
청년 부부+ 자녀 가구	2006	35.3	45.0	14.2	1.0	0.6	4.0
	2008	38.1	41.1	15.9	0.6	0.2	4.1
	2010	32.7	44.7	18.1	0.4	0.2	3.9
	2014	37.8	42.3	15.8	0.7	0.3	3.1
	2016	49.1	29.4	13.0	1.6	0.2	6.8
청년+ 부모 가구	2006	70.6	15.3	10.8	1.2	0.7	1.3
	2008	70.6	15.6	10.0	1.3	0.9	1.6
	2010	67.8	16.2	12.7	1.2	0.8	1.3
	2014	68.7	15.5	13.8	0.4	0.4	1.3
	2016	71.0	12.2	13.9	1.4	0.2	1.3
기타 청년 가구	2006	41.4	29.1	20.1	2.1	2.7	4.6
	2008	41.0	31.7	20.0	1.6	1.6	4.1
	2010	36.3	32.5	24.5	1.7	0.9	4.2
	2014	41.1	29.4	24.2	0.4	0.9	4.0
	2016	45.5	21.9	23.1	1.8	1.7	5.9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2016년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청년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며, 다른 청년가구집단보다 오피스텔의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청년단독가구의 현재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은 2006년 11.5%에서 2016년 22.7%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다른 청년가구집단보다 높은 점이 오피스텔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이다.[21]

[그림 5-2-2]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주택유형

(단위: %)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21)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준주택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거처로 포함하고 있음.

〈표 5-2-5〉 가구유형별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청년 가구	2006	41.0	43.7	3.6	8.3	1.7	1.5	0.3
	2008	38.0	46.7	3.6	8.4	2.3	1.0	0.1
	2010	35.7	50.2	4.7	6.7	1.6	1.0	0.2
	2014	31.8	53.1	3.3	7.6	3.1	0.7	0.4
	2016	30.4	50.7	2.2	9.9	5.2	1.6	0.1
청년 단독 가구	2006	64.4	12.1	1.2	8.4	11.5	0.9	1.5
	2008	57.7	15.1	1.5	9.6	15.2	0.5	0.3
	2010	63.1	15.3	1.7	7.1	10.8	1.5	0.4
	2014	52.3	19.1	1.8	12.6	11.9	0.7	1.6
	2016	52.0	14.1	1.1	8.6	22.7	0.9	0.6
청년 부부 가구	2006	32.4	48.9	4.4	8.3	5.1	0.9	0.2
	2008	32.4	53.5	2.7	8.2	2.7	0.5	0.0
	2010	24.2	60.2	2.9	7.0	4.5	1.2	0.0
	2014	20.8	60.7	2.2	9.7	5.4	0.8	0.4
	2016	20.6	58.8	1.4	13.8	4.3	0.6	0.4
청년 부부 + 자녀 가구	2006	23.1	63.2	3.3	8.4	0.6	1.4	0.0
	2008	20.7	65.4	3.5	9.3	0.7	0.4	0.0
	2010	18.4	67.2	5.7	7.8	0.2	0.6	0.1
	2014	15.6	74.7	3.4	5.5	0.5	0.2	0.2
	2016	13.0	75.9	1.9	8.2	0.8	0.3	0.0
청년 + 부모 가구	2006	43.4	42.5	3.9	8.1	0.1	1.9	0.1
	2008	40.8	45.2	4.1	8.2	0.2	1.5	0.1
	2010	35.1	52.0	5.2	6.2	0.2	1.1	0.3
	2014	30.0	58.5	3.9	6.3	0.3	0.9	0.1
	2016	28.1	55.8	2.8	10.6	0.4	2.3	0.0
기타 청년 가구	2006	37.7	47.4	3.7	8.7	1.3	0.9	0.3
	2008	32.6	53.5	3.5	7.8	2.2	0.3	0.0
	2010	32.0	54.7	4.6	7.4	0.9	0.3	0.1
	2014	28.9	57.8	3.2	6.7	2.9	0.5	0.1
	2016	26.9	57.6	2.0	9.0	3.6	0.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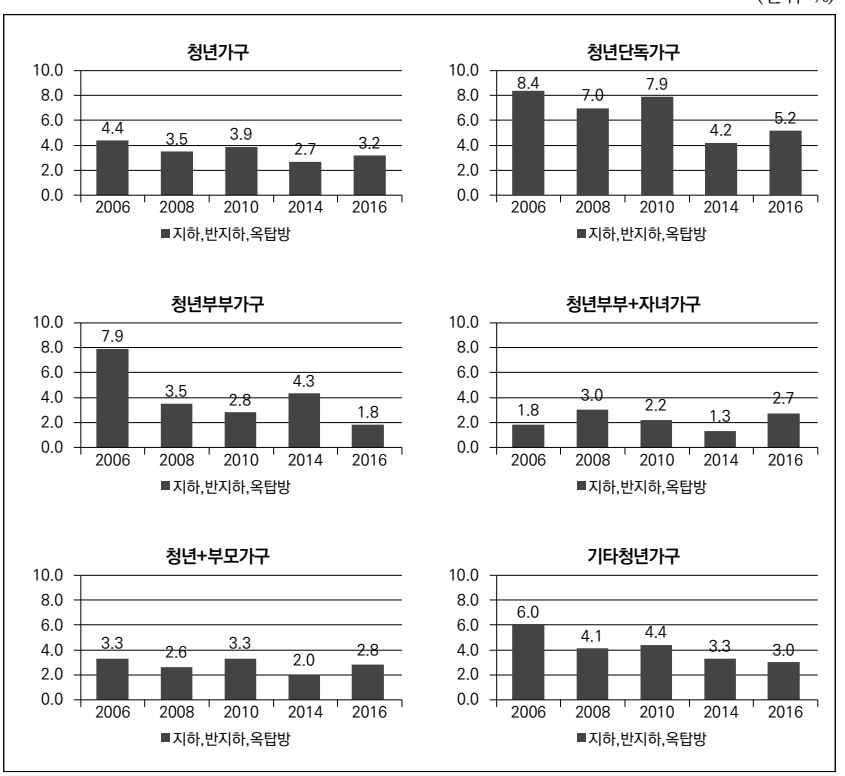
주: 1)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보고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텔은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함.
2) 단독(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여관 등 내 거주), 주택 이외의 거처(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기타).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전체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은 2016년 3.2%로 2006년 4.4%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하였다.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유형보다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청년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단독가구의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부부+자녀가구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청년단독가구보다 높지는 않지만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3] 주요 청년가구유형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2-6〉 가구유형별 주택위치

(단위: %)

구분		지하	반지하	지상	옥상(옥탑)
청년 가구	2006	1.0	3.2	95.7	0.2
	2008	0.6	2.8	96.6	0.1
	2010	0.6	3.0	96.1	0.3
	2014	0.2	2.4	97.3	0.1
	2016	0.2	2.8	96.8	0.2
청년 단독 가구	2006	1.7	5.9	91.6	0.8
	2008	1.7	5.3	93.0	0.0
	2010	1.1	6.1	92.2	0.7
	2014	0.3	3.5	95.8	0.4
	2016	0.3	4.7	94.8	0.2
청년 부부 가구	2006	1.3	6.4	92.2	0.2
	2008	0.4	3.1	96.6	0.0
	2010	0.8	1.5	97.2	0.5
	2014	0.4	3.9	95.7	0.0
	2016	0.0	1.8	98.2	0.0
청년 부부+ 자녀 가구	2006	0.3	1.4	98.3	0.1
	2008	0.3	2.6	97.1	0.1
	2010	0.0	2.0	97.8	0.2
	2014	0.1	1.2	98.7	0.0
	2016	0.0	2.4	97.3	0.3
청년+ 부모 가구	2006	0.8	2.4	96.8	0.1
	2008	0.5	2.1	97.4	0.0
	2010	0.5	2.6	96.7	0.2
	2014	0.1	1.9	98.0	0.0
	2016	0.2	2.4	97.3	0.2
기타 청년 가구	2006	1.4	4.4	94.0	0.2
	2008	0.4	3.6	95.9	0.1
	2010	0.6	3.6	95.6	0.2
	2014	0.2	3.1	96.7	0.0
	2016	0.3	2.6	97.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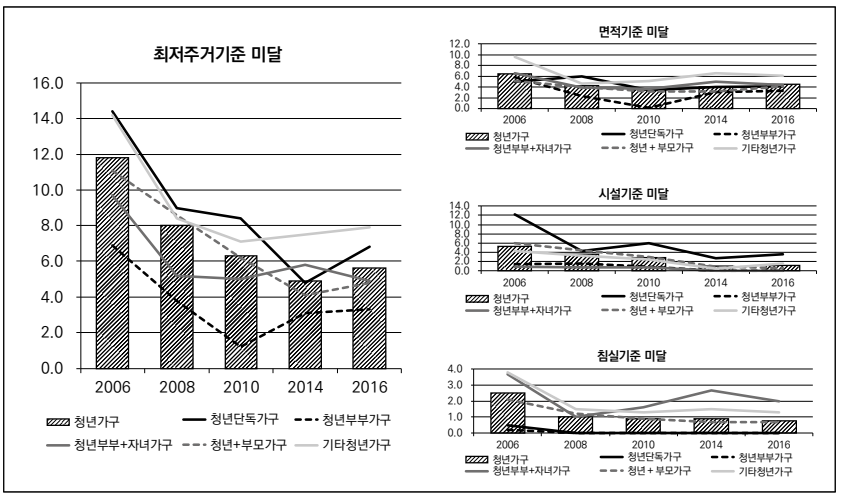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실태

전체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6년 5.6%로 2014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22] 청년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가 2006년 14.4%, 2016년 6.8%, 기타청년가구가 2006년 14.2%, 2016년 7.9%로 각각 7.6%포인트, 6.3%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침실 즉, 방수 기준 미달은 청년부부+자녀가구가 2016년 2.0%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에 적합한 침실(방)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5-2-4] 청년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22) 이태진 등(2015)가 2014년 복지욕구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비교해보면 2014년 13.4%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면적, 시설, 침실 관련 문항 구성과 그에 따른 분석 방식의 차이로 판단된다.

〈표 5-2-7〉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청년 가구	2006	11.8	6.4	5.3	2.5
	2008	8.0	4.3	3.6	1.0
	2010	6.3	3.5	2.9	0.9
	2014	4.9	4.0	1.1	0.9
	2016	5.6	4.5	1.2	0.8
청년 단독 가구	2006	14.4	5.0	12.2	0.5
	2008	9.0	6.0	4.3	0.0
	2010	8.4	3.4	5.9	0.0
	2014	4.8	4.0	2.7	0.0
	2016	6.8	4.2	3.5	0.0
청년 부부 가구	2006	6.9	5.9	1.5	0.2
	2008	3.8	2.4	1.6	0.0
	2010	1.2	0.2	0.9	0.0
	2014	3.1	3.1	0.0	0.0
	2016	3.3	3.3	0.0	0.0
청년 부부+ 자녀 가구	2006	9.7	6.5	0.9	3.7
	2008	5.2	3.9	0.7	1.0
	2010	5.0	3.6	0.7	1.6
	2014	5.8	5.0	0.0	2.7
	2016	4.9	4.4	0.0	2.0
청년+ 부모 가구	2006	11.1	5.2	5.9	2.1
	2008	8.6	4.1	4.5	1.2
	2010	6.2	3.2	3.0	0.9
	2014	4.1	3.2	0.9	0.7
	2016	4.8	4.2	0.6	0.7
기타 청년 가구	2006	14.2	9.6	4.2	3.8
	2008	8.4	4.6	3.3	1.5
	2010	7.1	5.1	2.4	1.3
	2014	7.5	6.6	0.5	1.5
	2016	7.9	6.1	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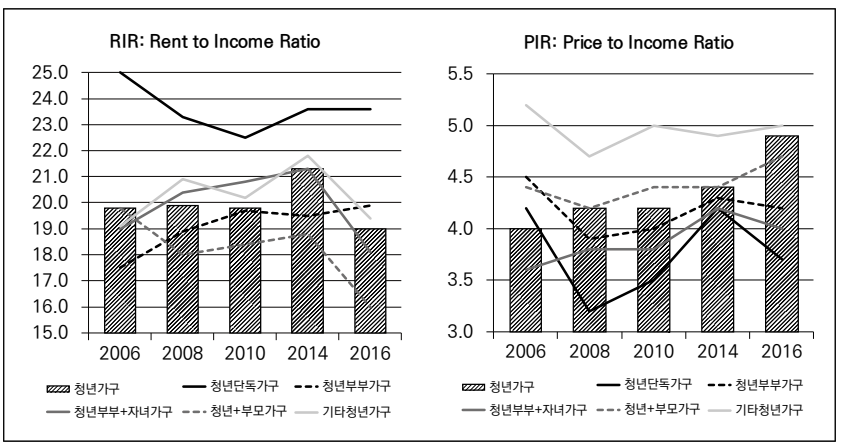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다. 임대료 및 주택가격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Price Income Ratio)은 자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주택가격 및 임대료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중위값을 활용하였다. 전체 청년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의 중위값은 2016년 19.0%이며, 청년단독가구는 2006년 25.0%, 2016년 23.6%로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 부담의 수준이 전체 청년가구와 다른 청년가구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의 전국 중위값은 4.9배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2-5] RIR 및 PIR

(단위: %,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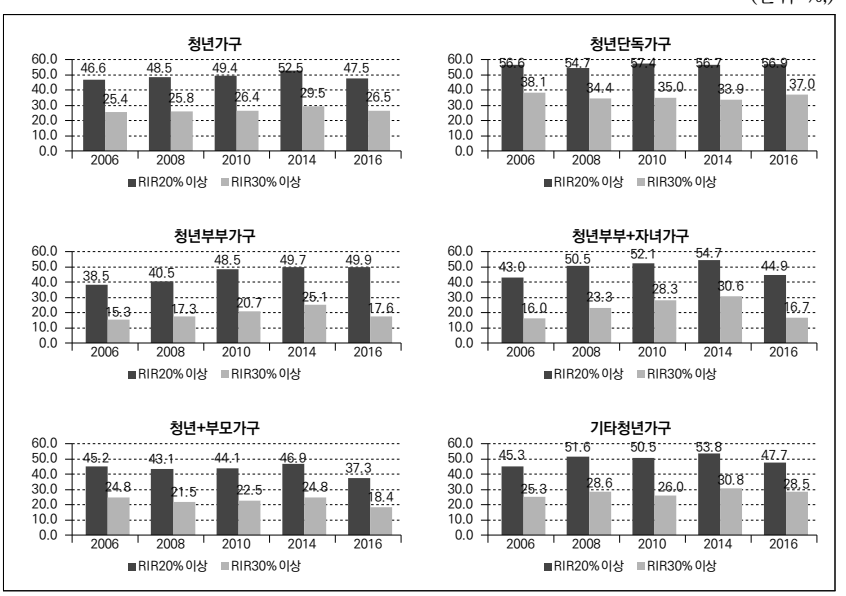
주: RIR 계산을 위해 전세금 및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2014년 9.36%, 2016년 6.7%(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을 적용하여 환산함.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판단 기준으로 임대료가 월소득의 20% 또는 30%가 넘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다. 전체 청년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성과 다르게 청년단독가구와 청년부부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그 비율은 청년단독가구가 가장 높았다(2016년 RIR 20%이상 56.9%, RIR 30%이상 37.0%). 소득 20% 이상이 임대료로 부담되는 비율이 청년단독가구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에도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림 5-2-6]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RIR20, RIR30)

(단위: %,)



주: RIR 계산을 위해 전세금 및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2014년 9.36%, 2016년 6.7%(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을 적용하여 환산함.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2-8〉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및 임대료 과부담 비율

(단위: %, 배)

구분		RIR	임대료 과부담		PIR
		중위수	20%	30%	중위수
청년 가구	2006	19.8	46.6	25.4	4.0
	2008	19.9	48.5	25.8	4.2
	2010	19.8	49.4	26.4	4.2
	2014	21.3	52.5	29.5	4.4
	2016	19.0	47.5	26.5	4.9
청년 단독 가구	2006	25.0	56.6	38.1	4.2
	2008	23.3	54.7	34.4	3.2
	2010	22.5	57.4	35.0	3.5
	2014	23.6	56.7	33.9	4.2
	2016	23.6	56.9	37.0	3.7
청년 부부 가구	2006	17.5	38.5	15.3	4.5
	2008	18.9	40.5	17.3	3.9
	2010	19.7	48.5	20.7	4.0
	2014	19.5	49.7	25.1	4.3
	2016	19.9	49.9	17.6	4.2
청년 부부+ 자녀 가구	2006	19.0	43.0	16.0	3.6
	2008	20.4	50.5	23.3	3.8
	2010	20.8	52.1	28.3	3.8
	2014	21.3	54.7	30.6	4.2
	2016	18.1	44.9	16.7	4.0
청년+ 부모 가구	2006	19.8	45.2	24.8	4.4
	2008	18.0	43.1	21.5	4.2
	2010	18.4	44.1	22.5	4.4
	2014	18.8	46.9	24.8	4.4
	2016	16.0	37.3	18.4	4.7
기타 청년 가구	2006	19.1	45.3	25.3	5.2
	2008	20.9	51.6	28.6	4.7
	2010	20.2	50.5	26.0	5.0
	2014	21.8	53.8	30.8	4.9
	2016	19.4	47.7	28.5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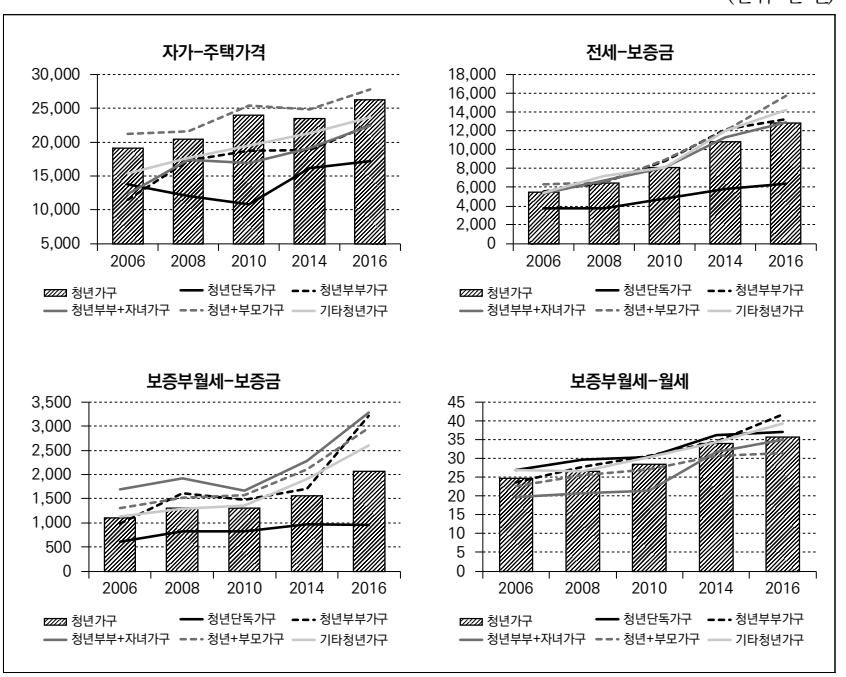
주: RIR 계산을 위해 전세금 및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 2014년 9.36%, 2016년 6.7%(한국감정원 월세동향조사)을 적용하여 환산함.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의 주택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2016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였으며, 보증부 월세 보증금은 청년부부+자녀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2014년 대비 2016년 가장 큰 상승폭(2014년 1,708.4만 원→2016년 3,218.7만 원)을 보였다. 앞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에서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2016년 3.7배로 다른 청년가구 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는데(표 5-2-8 참조) 이는 청년단독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다른 청년가구보다 낮은 주택가격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아래 그림과 다음 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2-7] 가구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단위: 만 원)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2-9〉 가구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차료

(단위: 만 원)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이 없는 월세
		주택가격	전세금	보증금	월세	월세
청년 가구	2006	19,103.4	5,498.3	1,104.6	24.7	43.6
	2008	20,400.9	6,403.4	1,311.6	26.6	24.3
	2010	23,974.0	8,117.0	1,306.7	28.5	37.7
	2014	23,543.3	10,821.6	1,556.1	34.0	30.7
	2016	26,305.5	12,814.9	2,059.8	35.8	27.4
청년 단독 가구	2006	13,773.3	3,725.9	601.1	27.0	37.9
	2008	12,024.3	3,751.1	825.3	29.7	21.6
	2010	10,825.7	4,762.5	827.6	30.3	36.4
	2014	16,134.2	5,846.2	978.9	36.2	31.8
	2016	17,152.2	6,355.0	960.2	37.1	26.2
청년 부부 가구	2006	11,451.6	5,547.2	989.9	23.6	21.6
	2008	17,287.0	6,518.8	1,616.7	27.8	23.7
	2010	18,777.1	8,781.6	1,474.9	30.8	42.9
	2014	18,818.2	12,144.8	1,708.4	34.5	46.5
	2016	22,543.7	13,281.2	3,218.7	41.7	40.0
청년 부부+ 자녀 가구	2006	12,347.7	5,305.5	1,693.7	19.7	35.7
	2008	17,331.5	6,717.3	1,920.0	20.7	25.7
	2010	16,910.3	8,056.1	1,660.4	21.4	83.7
	2014	19,078.8	11,301.5	2,282.1	31.7	25.0
	2016	22,424.6	12,868.7	3,290.1	35.0	36.1
청년+ 부모 가구	2006	21,207.0	6,279.2	1,311.5	22.7	54.4
	2008	21,607.4	6,547.5	1,514.8	25.5	23.6
	2010	25,450.1	8,889.6	1,575.6	27.1	35.6
	2014	24,863.9	11,987.6	2,108.9	30.8	25.1
	2016	27,809.8	15,766.5	2,961.5	31.4	22.9
기타 청년 가구	2006	15,435.5	5,425.1	1,138.9	26.9	45.6
	2008	17,707.3	7,159.7	1,293.0	26.7	30.0
	2010	19,519.4	8,137.5	1,364.4	30.4	39.8
	2014	21,336.2	11,986.1	1,907.7	34.4	30.6
	2016	23,734.2	14,247.4	2,607.1	39.4	34.3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라. 주거빈곤 가구 실태

주거빈곤 가구 실태에서 자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만을 주거빈곤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임차 가구는 주거빈곤의 두 측면인 최저주거기준 미달(7인 이상 가구 제외)과 임대료 과부담(RIR 30% 이상)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의 가구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거의 질적 측면과 임대료 부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겪고 있는 가구 비율은 다른 청년가구 집단보다 청년단독가구가 높았다. 주거빈곤 유형별 청년가구 집단의 분포는 〈표 5-2-1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최저주거기준만 미달하는 경우는 비교적 가구원수가 많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2016년 48.3%)을 보였으며, 기타청년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도 그 다음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임대료 과부담(RIR30% 이상)의 경우는 2006년에는 청년단독가구(23.6%),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29.1%), 기타청년가구(25.3%)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임대료 과부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집단은 청년단독가구이며, 청년가구유형 중, 임대료 과부담의 청년단독가구는 2006년에 비해 그 비중이 약 2배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 둘 다를 경험하는 집단은 2006년에는 기타청년가구(38.2%)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33.7%)였으나, 2016년에는 청년단독가구가 46.8%로 청년가구에서 주거빈곤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이 가구주인 대상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저렴한 양질의 주택으로 상향이동 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료 보조 사업 등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표 5-2-10〉 가구유형별 주거빈곤가구 비율

(단위: %)

구분		적정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대료 과부담	최저주거기준미달 +임대료 과부담
청년 가구	2006	61.2	13.5	22.3	3.1
	2008	64.5	9.7	24.1	1.7
	2010	66.0	7.6	24.7	1.7
	2014	64.2	6.3	27.9	1.7
	2016	65.4	8.1	24.6	1.9
청년 단독 가구	2006	52.6	9.4	34.2	3.9
	2008	58.6	7.0	32.3	2.1
	2010	60.3	4.7	31.4	3.6
	2014	63.7	2.4	31.3	2.6
	2016	58.8	4.3	34.1	2.9
청년 부부 가구	2006	76.3	8.4	14.9	0.3
	2008	77.9	4.7	17.3	0.0
	2010	77.7	1.5	20.7	0.0
	2014	70.5	4.4	25.1	0.0
	2016	77.0	5.4	17.6	0.0
청년 부부 +자녀 가구	2006	73.7	10.2	15.3	0.7
	2008	70.8	5.9	22.5	0.8
	2010	66.1	5.6	27.2	1.2
	2014	61.6	7.8	29.8	0.8
	2016	74.3	9.0	16.3	0.4
청년+ 부모 가구	2006	59.1	16.1	21.4	3.3
	2008	63.7	14.8	19.7	1.8
	2010	66.8	10.6	21.5	1.1
	2014	66.2	9.0	23.9	0.9
	2016	70.2	11.3	17.1	1.3
기타 청년 가구	2006	58.3	16.4	21.2	4.2
	2008	62.4	8.9	26.4	2.3
	2010	66.3	7.7	24.4	1.6
	2014	60.8	8.5	28.0	2.7
	2016	61.2	10.2	26.2	2.4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2-11〉 주거빈곤 유형별 청년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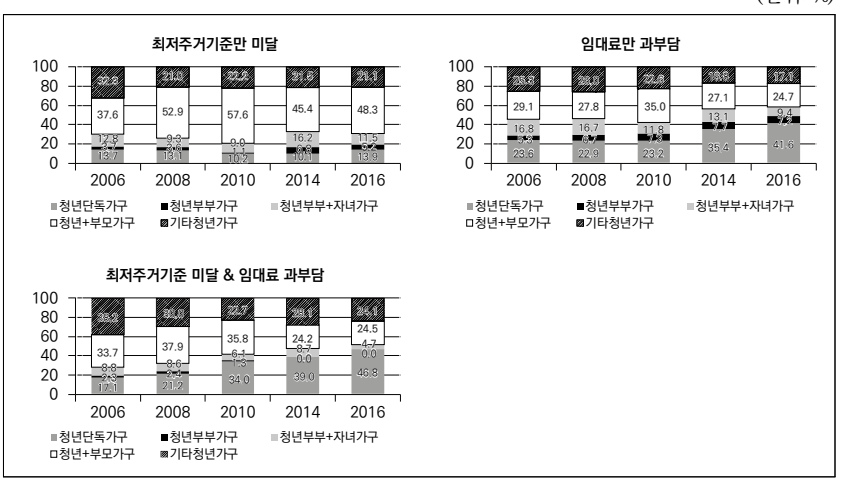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청년단독 가구	청년부부 가구	청년부부+ 자녀가구	청년+ 부모가구	기타청년 가구
최저 주거 기준 미달	2006	13.7	3.7	12.8	37.6	32.3
	2008	13.1	3.6	9.3	52.9	21.0
	2010	10.2	1.1	9.0	57.6	22.2
	2014	10.1	6.8	16.2	45.4	21.5
	2016	13.9	5.2	11.5	48.3	21.1
임대료 과부담	2006	23.6	5.3	16.8	29.1	25.3
	2008	22.9	6.7	16.7	27.8	26.0
	2010	23.2	7.3	11.8	35.0	22.6
	2014	35.4	7.7	13.1	27.1	16.8
	2016	41.6	7.2	9.4	24.7	17.1
최저주거 기준미달 +임대료 과부담	2006	17.1	2.3	8.8	33.7	38.2
	2008	21.2	2.4	8.6	37.9	30.0
	2010	34.0	1.3	6.1	35.8	22.7
	2014	39.0	0.0	8.7	24.2	28.1
	2016	46.8	0.0	4.7	24.5	24.1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5-2-8] 주거빈곤 유형별 청년가구 분포

(단위: %)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3. 소결

본 절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를 분석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청년가구유형별로 주거빈곤, 주거비 부담, 주거안정성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주거안정성 및 주거의 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거점유형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2008년 이후 월세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전세의 비중은 2006년 22.4%에서 2016년 15.5%로 6.9%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월세는 2006년 17.4%에서 23.0%로 5.6%포인트 증가하였다. 청년가구유형별로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 월세의 비중은 60% 이상을 웃돌며 압도적으로 높았고, 청년부부가구는 전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2006년 42.9%에서 38.2%로 4.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반면 자가와 무상 및 기타의 점유 형태가 증가하였다. 청년부부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무상 및 기타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절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단독가구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2016년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청년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절반이상 차지하며, 다른 청년가구집단보다 오피스텔의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청년단독가구의 현재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은 2006년 11.5%에서 2016년 22.7%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청년가구유형보다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청년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단독가구의 열악한 물

리적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단독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청년단독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현실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다음으로 청년가구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가 2006년 14.4%, 2016년 6.8%, 기타청년가구가 2006년 14.2%, 2016년 7.9%로 각각 7.6%포인트, 6.3%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침실 즉, 방수 기준 미달은 청년부부+자녀가구가 2016년 2.0%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수에 적합한 침실(방)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임대료 및 주택가격은 전체 청년가구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의 중위값은 2016년 19.0%이며, 청년단독가구는 2006년 25.0%, 2016년 23.6%로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그 부담의 수준이 전체가구와 다른 청년가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청년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감소하였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년단독가구와 청년부부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비율은 청년단독가구가 가장 높았다(2016년 RIR 20% 이상 56.9%, RIR 30% 이상 37.0%). 소득의 20% 이상이 임대료로 부담되는 비율이 청년단독가구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은 청년세대의 미래 자산 형성에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청년세대들의 가처분소득 증

가와 향후 안정적인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임대료 보조(주거바우처)를 도입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가구 실태에서 최저주거기준만 미달하는 경우는 비교적 가구원수가 많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2016년 48.3%)을 보였으며, 기타청년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도 그 다음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임대료 과부담(RIR 30% 이상)의 경우는 2006년에는 청년단독가구(23.6%),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29.1%), 기타청년가구(25.3%)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임대료 과부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집단은 청년단독가구이며, 청년가구유형 중, 임대료 과부담의 청년단독가구는 2006년에 비해 그 비중이 약 2배 증가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 둘 다를 경험하는 집단은 2006년에는 기타청년가구(38.2%)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33.7%)였으나, 2016년에는 청년단독가구가 46.8%로 청년가구에서 가장 주거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청년의 가구유형에 따라 물리적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의 경제적 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주거정책 마련에 있어서 청년 가구유형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3절 시간사용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양하다. 앞 절에서는 고용, 경제적 여건, 주거 등에서 청년의 삶의 특성을 보여줬다면, 본 절은 청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현황을 통해 청년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

는지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양으로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어떤 활동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모두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시간 사용량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정 영역에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활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특정 활동에 배분하는 시간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청년기에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개인의 미래 성취 수준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 외에, 자유 시간이나 여가 활동에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량시간은 이후 개인의 성취와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

취업과 결혼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취업에 필요한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활동에 배분한 시간 자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재량 시간이나 자유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시간은 어떤 활동에 얼마나 배분하는지에 따라 청년기의 삶의 질과 이후의 교육성취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기존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의 주된 초점은 맞벌이 여성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성별 분업의 불평등성과 직장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에 맞춰져 왔다. 가사와 육아의 성불평등성 관점은 맞벌이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분업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맞벌이 여성은 개인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예: 병원 가기, 수

면시간, 식사시간 등)과 여가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의 생활시간 사용은 시간사용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와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진욱, 고은주, 2015, p. 157). 또한 맞벌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가 시간이 부족하고, 여가 시간 또한 돌봄 영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의 삶의 질이 남성보다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김미영, 박미려, 2017, pp. 47-48).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처방에 관한 중심주제 중 하나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출산 또는 추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간사용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이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생활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태와 여가시간의 부족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김진욱, 고은주, 2015, p. 157; 박예은, 윤미, 이예솔 등, 2016, p. 50).

청년의 일상에서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생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서인주, 2011; 이려정, 2010)와 니트(NEET) 청년의 시간사용에 대한 연구(차승은, 2014)가 제한적이나마 존재한다. 청년의 일상을 시간사용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다양한 지위 또는 역할에 따라 이들의 시간활용 실태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1.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활시간 사용 현황을 분석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사

용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자료이며, 가장 최신의 생활시간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청년층의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최근 경향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은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약 12,000가구의 27,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하루 24시간 생활시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며, 현재까지 2004년과 2009년 자료를 포함하여 4차례의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제공되었다(통계청, 2015). 통계청의 시간활용조사는 가구당 소득수준, 가구원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 개인의 시간에 따른 활동일지 등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는 시간은 크게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등 9개 행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유지는 필수 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 학습, 돌봄, 이동은 의무 생활시간으로 그 외는 여가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 사용 활동 영역은 연구자에 따라 9개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거나(염주희 등, 2012; 서지원, 2015), 영역에 상관없이 특정 활동(예: 유급 노동시간, 학습시간 등)의 사용시간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차승은, 2014).

생활시간조사는 주행동과 동시행동에 대한 시간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는 주행동에 사용된 시간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주행동에 사용된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염주희 등, 2012, p. 47). 본 연구에서도 주행동에 사용된 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사용조사는 약 12,000가구 만 10세 이상 가구원, 총 26,988명을 대상으로 2일간 시간일지를 작성하였다. 관측 사례는 26,988(명)*2(일)=53,976개의 시간일지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5,282명을 대상으로 10,564개의 시간일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상자에는 1명의 중학생과 10명의 고등학생이 있었으며 이들의 생활시간사용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5271개의 사례에서 청년의 6가지 역할 유형에 속하지 않는 35사례를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은 5,236명의 10,472개의 시간일지였다.

나. 분석 방법

1) 청년들의 역할 유형 분류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역할 유형을 1) 학생, 2) 가사·육아, 3) 취업준비 중, 4) 취업상태인 경우, 5) 니트, 6) 이중 역할 유형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생 유형은 현재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 가사·육아 중인 경우에는 청년들의 혼인 상태(예: 결혼, 이혼, 미혼)보다는 가사와 육아를 하는 경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육아를 하나의 역할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취업준비 중인 경우, 응답자가 취업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를 의미한다. 학생이면서 취업준비 중인 경우에는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응답자가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니트 유형은 학생, 가사·육아, 취업준비, 취업상태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중 역할 유형은 취업 중이면서 학생인 경우, 학생이면서 가사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 등 니트와 취업준비 중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역할 유형을 두 가지 이상 점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2) 주요 변수의 측정과 분석 방법

청년들의 가구소득, 가구원수, 교육수준, 연령, 취업상태, 활동별 사용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이용하여 중위 소득 50%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소득은 11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범주에 속한 소득은 범주에 속하는 값의 중앙값으로 대체하였다. 대체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측정하였다.[23]

청년층의 경우, 교육수준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현재 교육수준은 진행 중인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현재 학생인지 여부, 졸업 여부를 구분하여,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등학생, 4) 고졸, 5) 대학생, 6) 대학교 졸, 7) 대학원생, 8)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

23)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약 372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가구소득은 연간 4,676만 원(월 39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소득은 다른 자료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1)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소득은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700만 원 이상의 범주가 없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과소 추정되었다. 2) 100만 원 미만의 경우가 가장 낮은 소득 범주로 사용되었다. 실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은 과대 추정하였다. 3) 저소득층 소득의 과대추정에 비해 고소득층 과소추정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인 만 19~34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5만 원이었다. 연령제한으로 인해 소득이 낮은 노인 가구가 제외되어, 청년층이 속한 가구소득은 전체 가구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였다. 청년층의 경우 초졸, 중졸 이하 학력 수준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 고졸 이하를 가장 낮은 학력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학력은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이하 , 3) 대졸 이하, 4) 대학원생 이상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청년들의 역할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 t검정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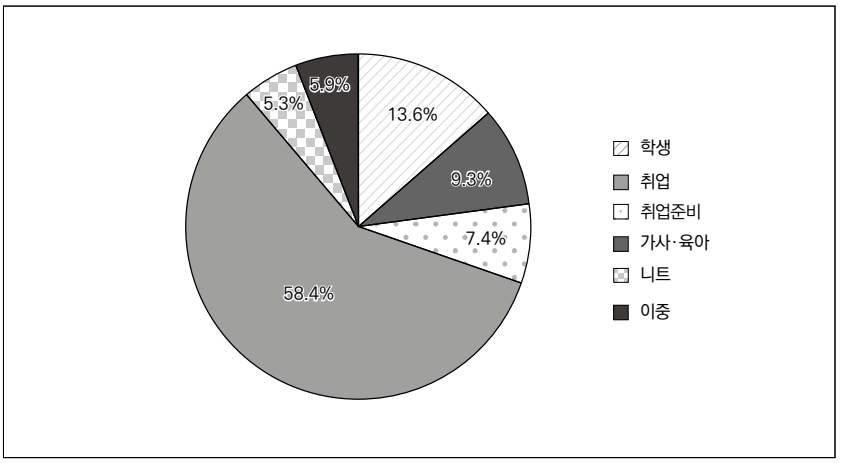
2. 분석 대상 청년층 특성

가. 청년층 역할 유형별 비율

[그림 5-3-1]은 청년층의 역할 유형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다. 취업한 청년의 비율은 약 58%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의 취업 비율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취업률보다 더 높다. 이중 역할 유형 중 취업을 병행하는 이중 역할 유형까지 취업한 청년으로 포함하면 취업 청년 비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24] 학생은 약 14%로 취업 유형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사·육아 유형은 약 9%이며, 이중 유형은 약 6%, 나머지 5%는 니트 청년으로 나타났다.

24)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층(15-29세)의 취업률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40.7%이다(통계청, 2017). 본 연구는 19-34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올라간다.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본 샘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본 연구 샘플이 통계청 발표에 비해 청년층이 취업한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3-1] 청년층의 역할 유형별 비율



주: 총 분석 대상자는 5236명이며, 청년층 역할별 비율은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나. 역할 유형에 따른 청년들의 특성

〈표 5-3-1〉은 청년층의 역할 유형에 따른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학생과 가사·육아 유형의 평균 연령은 20대 초반이다. 이중 역할 유형은 학생의 특징을 일부 공유함으로,[25] 평균 연령이 약 23세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았다.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유형은 약 29세로 취업 유형이다. 취업준비 유형은 약 26세로 취업 유형 다음으로 평균 연령이 높았다.

청년층의 가구소득은 취업준비 유형이 월평균 342만 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취업 유형이 월 평균 42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중 유형의 경우 취업한 청년층이 포함되어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생 유형과 가사·육아 유형은 모두 월평균 소득이 368만 원이었다.

25) 이중 역할 유형 중 학생이면서 취업 중인 경우가 312(624 시간 일지)사례이며, 학생이면서 가사·육아 중인 경우가 6(12시간 일지)사례로 취업 중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표 5-3-1〉 역할 유형에 따른 청년층(19세-34세) 특성

역할유형 / 구분	학생		가사·육아		취업준비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연령(5236)	693	21.8	588	21.8	376	26.3
		(2.4)		(2.8)		(3.9)
가구소득(5236)	693	368.2	588	368.2	376	343.2
		(214.7)		(144.8)		(180.9)
저소득층(5236)	693	26.6	588	11.4	376	17.8
주거소유(5236)	693	1.8	588		376	1.7
자기집	382	55.1	316	53.7	219	58.2
전세	113	16.3	170	28.9	57	15.2
월세	190	27.4	80	13.6	92	24.5
무상	8	1.2	22	3.7	8	2.1
거주형태(5236)	693		588		376	1.9
단독 가구	109	15.7	2	0.3	39	10.4
부모님과 비거주	26	3.8	557	94.7	41	10.9
부모님과 거주	505	72.9	5	0.9	272	72.3
조부모 친척과 거주	24	3.5	0	0.0	14	3.7
기타	29	4.2	24	4.1	10	2.7
학력수준(5236)	693		588		376	
고졸 이하	176	25.4	172	29.3	91	24.2
전문대 이하	491	70.9	228	38.8	128	34.0
대졸 이하	26	3.8	160	27.2	149	39.6
석사 이상	0	0.0	28	4.8	8	2.1
성별(5236)	693	0.4	588		376	0.5
여성	305	44.0		100.0		0.5
남성	388	56.0		0.0		0.5
역할유형 / 구분	취업		니트		이중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연령(5236)	3002	28.62	259	23.8	318	22.8
		(4.1)		(4.3)		(4.0)
가구소득(5236)	3002	421.1	259	379.0	318	400.2
		(174.3)		(191.7)		(202.3)

역할유형 / 구분	학생		가사·육아		취업준비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저소득(5236)	3002	3.5	259	13.5	318	16.7
주거소유(5236)	3002		259	1.7	318	
자기집	1577	52.5	147	56.8	172	54.1
전세	663	22.1	57	22.0	58	18.2
월세	698	23.3	48	18.5	81	25.5
무상	64	2.1	7	2.7	7	2.2
거주형태(5236)	3002		259	2.0	318	
단독 가구	319	10.6	13	5.0	39	12.3
부모님과 비거주	1231	41.0	36	13.9	38	11.9
부모님과 거주	1257	41.9	186	71.8	220	69.2
조부모·친척과 거주	85	2.8	12	4.6	13	4.1
기타	110	3.7	12	4.6	8	2.5
학력수준(5236)	3002		259	1.8	318	
고졸 이하	749	25.0	101	39.0	76	23.9
전문대 이하	1042	34.7	106	40.9	201	63.2
대졸 이하	1092	36.4	49	18.9	41	12.9
석사 이상	119	4.0	3	1.2	0	0.0
성별(5236)	3002		259	0.4	318	
여성	1463	48.7	113	43.6	173	54.4
남성	1539	51.3	146	56.4	145	45.6
취업형태(2986)	2694				292	
전일제	2475	91.9			93	31.9
시간제	219	8.1			199	68.2
종사상지위(3314)	3002				312	
상용직	2149	71.6			44	14.1
임시직	429	14.3			167	53.5
일용직	116	3.9			81	26.0
자영업(고용원)	96	3.2			5	1.6
자영업	157	5.2			9	2.9
무급가족봉사자	55	1.8			6	1.9

주: 분석에 사용된 총 사례 수는 5236임.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청년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비율은 학생이 가장 높은 26.6%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유형과 이중 유형은 각각 17.8%와 16.7%를 차지하였다. 니트 유형과 가사·육아 유형은 각각 13.5%와 11.4%였으며, 취업 유형이 가장 낮은 3.5%를 나타냈다.

주거소유 형태는 모든 유형에서 자기집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학생, 취업준비, 니트 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자기집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부모님과 거주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집일 가능성이 높다. 전세 비율은 가사·육아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세 비율은 가사·육아 유형과 니트 유형은 10%대, 나머지 유형은 20%를 상회하였다. 특히 학생의 월세 비율은 27.4%로 가장 높았다.

고졸 이하 학력수준 비율은 니트 유형이 39.0%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이하 비율은 학생과 이중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학생의 경우 70.9%였으며, 이중 유형은 63.2%였다. 학생 유형은 교육수준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 교육성취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수준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대졸 이하 학력 수준은 취업준비와 취업 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각각 39.6%와 36.4%였다. 석사 이상의 학력은 가사·육아와 취업 유형에서 각각 4.8%, 4.0%였으며, 니트 유형에서도 1.2%였다. 대부분의 역할 유형은 남성 비율이 10% 이내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유형은 여성 비율이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육아 유형은 여성이 100%였다.

취업 형태는 취업 유형에서 전일제 비율이 높았으며(91.9%), 이중 유형에서는 시간제 비율이 높았다(68.2%). 이중 유형의 상당 비율(31.9%) 또한 전일제 비율이었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취업 유형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높았고(71.6%), 이중 유형에서는 임시직 비율이 높았다(53.5%). 이

중 유형의 경우 일용직 비율 또한 26.0%로 대부분 직업 안정성이 낮았다.

다. 역할 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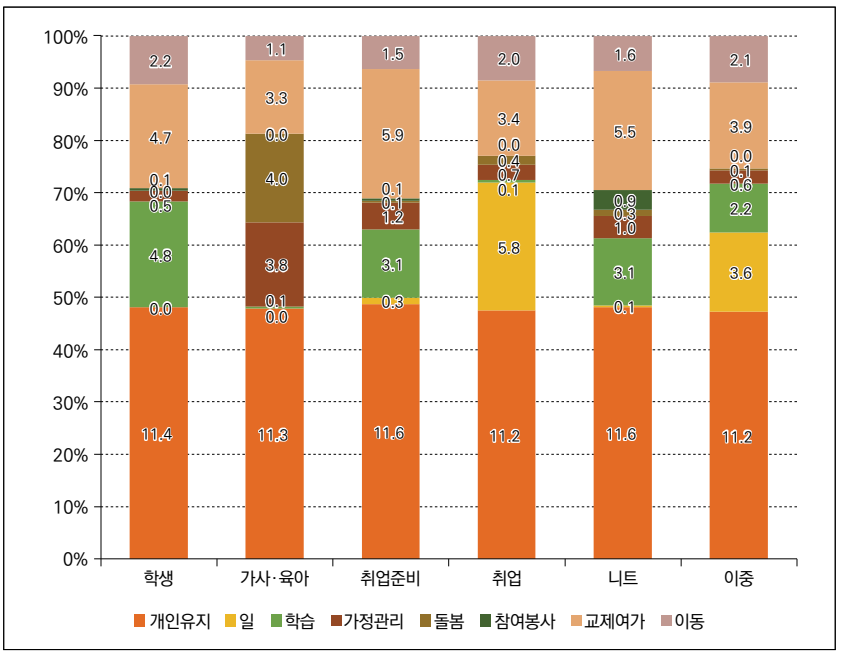
[그림 5-3-2]는 청년층의 역할 유형별로 생활시간 배분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청년층은 어떠한 역할 유형을 수행하더라도 개인유지에 투여하는 시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약 11시간에서 12시간을 개인유지 활동에 할애하였다.

취업과 이중 역할 유형은 일과 관련된 시간에 5.8시간에서 3.6시간을 투여하였다. 이중 역할 유형은 취업 유형에 비해, 일 관련 시간에 할애한 시간이 2.2시간 정도 적었다. 이중 역할 유형에 속한 청년들의 상당 비율이 학생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과 관련한 시간은 학생이 4.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니트인 경우와 취업준비 유형도 하루 3.1시간 정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였다.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가사·육아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층이 3.8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유형의 청년은 하루에 약 한 시간 정도를 가정관리에 할애하였다. 학생은 하루에 약 30분을 가정관리에 할애하였다.

[그림 5-3-2] 역할 유형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특성

(단위: 시)



주: 개인가중치 적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의 경우, 가사·육아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4.0시간이었으며, 다른 유형은 30분 이하를 할애하였다.

참여 및 봉사 활동은 니트 유형의 청년들만 54분을 할애하고, 다른 유형은 10분 미만 정도를 할애하였다.

교제 및 여가 활동은 대부분의 유형이 개인유지 활동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학생, 취업준비, 니트 유형은 교제와 여가에 각각 4.7시간, 5.9시간, 5.5시간을 사용하였다. 가사·육아와 취업 중인 청년들은 3.3시간과 3.4시간을 교제와 여가 활동에 사용하였다.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은 3.9 시간을 교제 및 여가에 할애하였다.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학생, 취업 중인 청년과 이중 역할 유형이 각각 2.2시간, 2.0시간, 2.1시간을 사용하였다. 취업준비 유형과 니트 유형은 1시간 30분 정도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가사·육아 유형은 1.1시간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였다.

3. 역할 유형별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가. 학생

학생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개인유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개인유지 활동은 수면과 식사,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일반 소득계층은 687분, 저소득 계층은 약 671분을 개인유지에 사용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5-3-2〉 참조).

일은 고용된 일, 자영업, 구직활동을 포함한 시간이다. 학생 유형은 역할 특성상 일과 관련된 활동에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더라도 주로 무급 가족 일과 구직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 소득계층은 일과 관련한 활동에 1.5분을 사용하며, 저소득 계층은 0.8분을 사용한다.

학생은 개인유지를 위한 활동 다음으로 학습 관련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였다. 학습 관련 활동은 학교에서의 활동과 학교 이외의 학원이나 스스로 학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일반 계층 학생은 279 분, 저소득 계층은 322분을 학습 관련 활동에 사용하였다. 저소득 계층 학생이 일반 계층 학생보다 약 43분을 학습 관련 활동에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그림 5-3-3] 참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3-2〉 학생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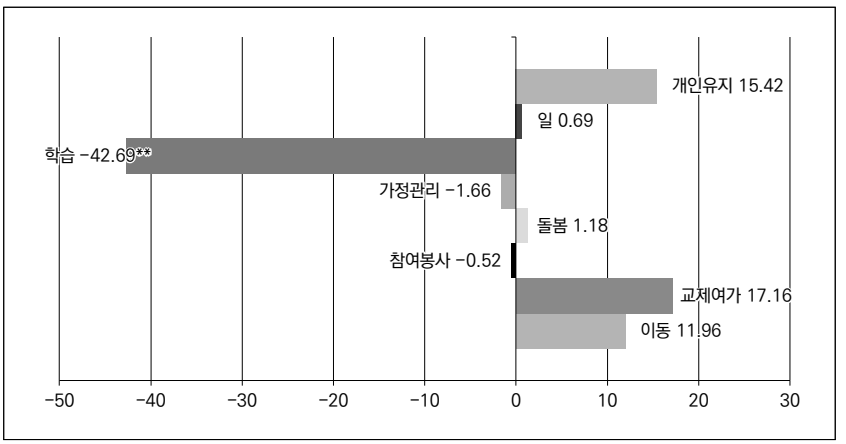
(단위: 분/일)

소득계층 / 분류	일반(n=1018)		저소득(n=368)		t-test
	Mean	SD	Mean	SD	
개인유지	686.6	118.3	671.2	113.0	-1.6
일	1.5	215.5	0.8	17.9	-0.75
학습	279.2	166.2	321.9	199.6	2.52**
가정관리	29.9	55.0	31.6	45.8	0.51
돌봄	2.3	34.5	1.1	20.7	-0.89
참여봉사	4.0	21.6	4.5	32.8	0.17
교제여가	288.2	158.6	271.0	171.5	-1.28
이동	132.9	90.3	120.9	89.3	-1.68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림 5-3-3] 학생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주: 1) ** : p〈.01
2) - 는 저소득 계층이, + 는 일반 계층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학교에서의 학습과 스스로 학습하는 것은 학원 수강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반면 일반 계층 학생은 저소득 계층 학생에 비해 학원 수강, 인터넷 수강과 관련된 학습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다.[26] 학원 수강과 인터넷 수강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계층보다 저소득 계층 학생이 학습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하지만,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 계층 학생은 저비용의 학습 활동, 일반 계층 학생은 고비용 학습 활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 청년들은 30분 정도이며, 저소득 계층 청년들은 약 32분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관리 시간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년들은 일반 계층 청년들에 비해 청소와 음식 준비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다. 반면 일반 계층 청년들은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 비해 정리, 금융기관 이용, 상품 서비스 구입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및 봉사 활동은 두 계층 모두 5분 미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투여한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교제 및 여가에 사용한 시간은 학습에 사용한 시간만큼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 계층은 288분, 저소득 계층은 17분 정도 적은 271분을 교제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동에 소요된 시간 또한 소득계층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일반 계층 청년들은 133분, 저소득 계층 청년들은 121분 정도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동에 대한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학습과 관련한 이동은

26) 본문에서 생활시간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기술하였고,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활동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는 부록에 포함하였다.

일반 계층 청년이 저소득 계층 청년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 계층 청년이 저소득 계층 청년에 비해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일 수 있다.

나. 가사·육아 유형

가사·육아 유형은 개인유지를 위한 활동에 일반 계층이 약 680분, 저소득 계층은 약 658분 정도를 할애하였다. 일반 계층이 개인유지 활동에 약 23분 정도 더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그림5-3-4] 참조). 일, 학습, 가정관리와 돌봄 활동에 투여한 시간 또한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5-3-3〉 가사·육아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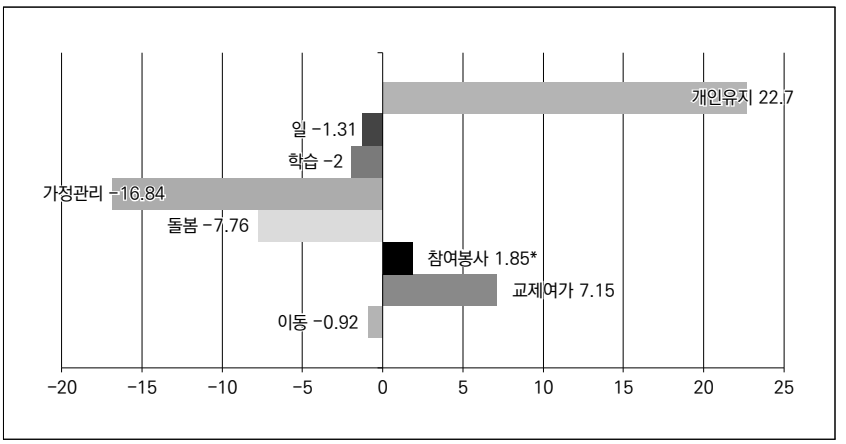
(단위: 분/일)

소득계층 / 분류	일반(n=1042)		저소득(n=134)		t-test
	Mean	SD	Mean	SD	
개인유지	680.2	105.2	657.5	100.1	-1.89
일	0.6	10.1	2.0	9.7	0.82
학습	3.8	198.2	5.8	24.6	0.38
가정관리	225.5	43.0	242.4	90.9	1.5
돌봄	241.7	13.7	249.5	152.6	0.5
참여·봉사	**2.2**	**36.6**	**0.3**	**19.3**	**-2.38***
교제·여가	200.3	157.2	193.2	120.3	-0.6
이동	67.2	80.3	68.1	63.5	0.12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p<.05, 빈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림 5-3-4] 가사·육아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주: 1) * : p<.05
2) - 는 저소득 계층이, + 는 일반 계층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러나 가정관리의 세부 활동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계층청년들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일반 계층 청년들은 가정용 섬유 및 신발과 관련 서비스 받기, 차량 관련 서비스 받기, 식물 돌보기, 쇼핑하기 관련 활동에 있어서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가사·육아 유형은 개인유지와 가정관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 학습, 참여·봉사 활동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가사·육아 유형이 참여·봉사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5분 미만으로 매우 적다. 일반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에 참여·봉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약 2분 정도 차이가 나고([그림 5-3-4]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참여·봉사의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일반 계층 청년들은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 비해 자녀의 교육 관련 참여, 자원봉사 관련 참여가 약간 더 많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나 자원봉사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절대적인 시간량 또한 1분도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가사·육아 유형이 교제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이 200분, 저소득 계층이 193분 정도였다. 두 집단 간에는 약 7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 교제와 여가 활동을 세부 활동으로 분류하면, 일반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에 시간 사용 특징은 매우 두드러진다. 일반 계층 청년들은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 비해 문화와 여가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거나, 연극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과 같은 활동, 구기운동과 기타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은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다(더 자세한 결과는 부록 참조).

이동 시간은 일반 계층이 67분, 저소득 계층이 68분 정도였으며,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동에 대한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일반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일반 계층 청년들의 경우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 비해 개인유지 관련 이동 시간과 참여 봉사활동 관련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반면에 저소득 계층의 경우, 돌봄과 관련한 이동 시간, 학습과 관련한 이동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나, 총 이동 시간에서는 두 소득계층 간에 차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취업준비 유형

취업준비 유형의 경우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일반 계층은 약 702분, 저소득 계층은 680분 정도로 두 계층 간에 약 22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간식 시간, 의료서비스 받는 시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간

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의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소득 계층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본인부담금 등 추가 지불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계층 유형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들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의료 욕구가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취업준비 유형은 일과 관련한 활동에 매우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일반 계층 청년들은 19분, 저소득 계층 청년들은 9분 정도를 일과 관련한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취업준비 유형은 이들의 특성상 일을 하고 있는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일과 관련한 활동에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무급 가족 일, 구직 활동과 관련한 활동에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이다.

〈표 5-3-4〉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소득계층 / 분류	일반(n=618)		저소득(n=134)		t-test
	Mean	SD	Mean	SD	
개인유지	701.5	113.8	679.8	124.5	-1.31
일	18.5	11.3	8.5	60.5	-1.83
학습	186.2	40.4	196.3	216.6	0.32
가정관리	71.8	87.1	65.7	82.5	-0.59
돌봄	5.8	118.0	9.0	37.3	0.72
참여·봉사	3.7	3.4	2.2	28.1	-0.78
교제·여가	347.3	94.9	380.9	174.2	1.28
이동	88.8	65.9	81.4	74.7	-0.79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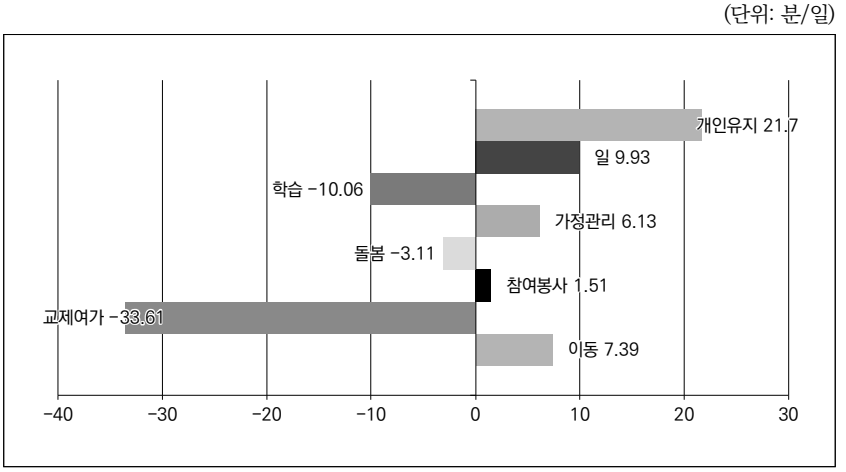
취업준비 유형의 경우, 일반 계층은 186분, 저소득 계층은 196분을 학습에 사용하였다.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은 저소득 계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조금 길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학교에서의 학습,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 학원 수강에서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계층은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이는 앞서 학생 유형 청년들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 활용 방식과는 다른 결과이다.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 또한 소득계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 활동 중에서 일반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쓰레기 버리기, 온라인 쇼핑, 가사활동 돕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돌봄, 참여 봉사 활동, 교제와 여가 활동, 이동 시간에 있어서도 소득계층 간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반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교제·여가 활동의 세부 활동 중에서 집단 게임 놀이, 이동 시간에서는 개인유지 이동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림 5-3-5]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주: 1) - 는 저소득 계층이, + 는 일반 계층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라. 취업 유형

취업 유형 청년들의 경우 다른 유형 청년들에 비해 소득계층 간에 생활시간 활용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먼저 개인유지 시간의 경우, 소득계층 간에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세부 활동에서 일반 계층은 자기 치료 시간, 저소득 계층은 수면 시간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더 길었다. 일과 관련한 활동의 경우, 일반 계층은 약 350분, 저소득 계층은 42분 정도 적은 약 308분을 사용하였다([그림 5-3-6] 참조). 이러한 차이는 일 관련 세부 활동에서 대부분 주업에 사용한 시간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는 취업 유형에 속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시간제 일자리나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표 5-3-5〉 참조).

학습 시간은 일반 계층 청년들이 약 7분, 저소득 계층 청년들은 28분인 약 35분을 사용하였다([그림5-3-6] 참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에서 기인하였다.

〈표 5-3-5〉 취업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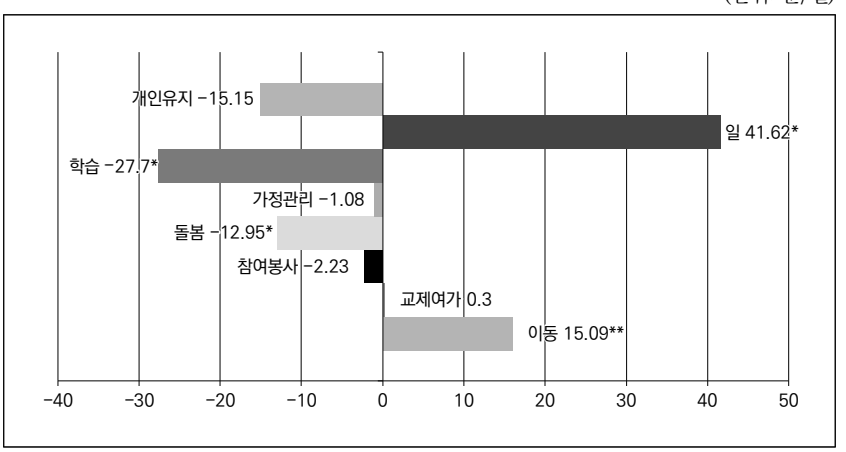
소득계층 / 분류	일반(n=5792)		저소득(n=212)		t-test
	Mean	SD	Mean	SD	
개인유지	673.7	107.6	688.8	124.4	1.17
일	**349.7**	**27.7**	**308.0**	**214.2**	**-1.98***
학습	**7.4**	**221.6**	**35.1**	**38.3**	**2.11***
가정관리	44.9	76.1	46.0	68.8	0.18
돌봄	**22.5**	**37.7**	**35.5**	**64.3**	**2.19***
참여·봉사	2.1	17.6	4.3	31.1	0.65
교제·여가	202.4	181.4	202.1	144.7	-0.02
이동	**120.9**	**82.9**	**105.8**	**78.3**	**-2.62****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p<.01$, *: $p<.05$.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정관리에 투여하는 시간의 총량은 소득계층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 활동은 저소득 계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활동(예: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차량 서비스 받기 등)에 비해 식사 준비나 빨래 등 무급 가사 노동에 더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그림 5-3-6] 취업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주: 1) ** : p<.01
2) - 는 저소득 계층이, + 는 일반 계층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이 23분, 저소득 계층은 36분으로 일반 계층보다 13분 정도 더 길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 계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10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데(주로 신체적 돌봄, 일부는 책 읽어주기와 놀아주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세 이상 아동의 공부 봐주기와 같은 활동의 경우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미미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참여·봉사 활동과 교제·여가 활동은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세부 활동을 살펴보면,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소외 계층 돕기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과,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영화와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 활동에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이 외에도 구기 운동과, 자전거, 낚시, 기타 스포츠 활동 또한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긴 시간을 투여한다.

취업 청년들이 이동에 활용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계층은 약 121분, 저소득 계층은 약 106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일반 계층의 출퇴근 관련 이동 시간, 교제 및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이동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저소득 계층은 일반 계층에 비해 출퇴근 관련 이동 시간과 교제 및 여가 활동 관련 이동 시간이 짧다. 저소득 계층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시간제 일자리(예: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마. 니트 유형

니트 유형의 경우 개인유지, 일, 학습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생활시간을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인유지와 관련한 활동 중에서 간식 시간, 의료서비스를 받는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길었다. 일과 관련한 활동과 학습 관련 활동의 경우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소득계층 간에 시간 사용량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5-3-6〉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차이

(단위: 분/일)

소득계층 / 분류	일반(n=448)		저소득(n=70)		t-test
	Mean	SD	Mean	SD	
개인유지	699.5	109.2	681.7	108.9	-0.91
일	7.0	203.3	15.1	45.2	0.74
학습	179.7	108.2	235.2	223.6	1.01
가정관리	**65.9**	**65.8**	**41.8**	**88.9**	**-2.07***
돌봄	21.4	59.9	8.4	76.1	-1.42
참여·봉사	47.1	34.4	92.0	189.2	0.74
교제·여가	329.5	136.7	312.6	200.2	-0.39
이동	97.5	62.8	84.9	71.3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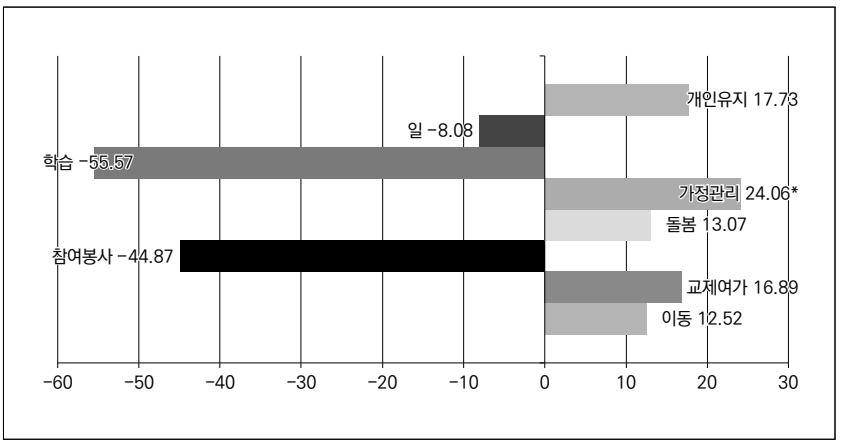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 청년들이 저소득 계층 청년들에 비해 더 길었다. 일반 계층은 약 66분, 저소득 계층은 42분 정도를 사용하였다. 두 소득계층 간에 약 24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식사와 간식 준비에 사용한 시간, 온라인 쇼핑과 금융기관 이용에 사용한 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돌봄과 참여·봉사, 교제·여가, 이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세부 영역을 살펴보면, 돌봄과 참여·봉사 활동 중에서 기타 비동거 부모 돌보기, 친분인 돕기에서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교제·여가 세부 활동 중에서 책 읽기, 비디오 보기, 관광 드라이브, 구기 운동, 집단 게임, 교양 학습 등 문화 및 여가 활동 또한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이동 관련 세부 활동에 투여한 시간은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5-3-7]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주: 1) * : p<.05
2) - 는 저소득 계층이, + 는 일반 계층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바. 이중 역할 유형

이중 역할 유형은 취업, 학업, 가사·육아 역할을 동시에 2개 이상 수행하는 유형이다. 개인유지에 투여하는 시간은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지만, 소득계층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 또한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 관련 세부 활동은 소득계층별로 투입한 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업 관련 활동과 농림어업 외의 무급 가족 일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일반 계층이 더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학습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이 약 117분, 저소득 계층이 199분으로 저소득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81분 정도 더 긴 시간을 투여하였다. 이는 학생 유형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학생 유형과는 달리, 학습 관련 활동을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득계층 간에 시

간 사용량이 다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학습 관련 활동에 투여한 시간량이 저소득 계층이 더 많은 것은 학교 관련 활동과 학교 이외 관련 활동에 투여한 총 시간량이 일반 계층에 비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5-3-7〉 이중 역할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소득계층 / 분류	일반(n=530)		저소득(n=106)		t-test
	Mean	SD	Mean	SD	
개인유지	676.5	109.8	660.3	114.4	-1.03
일	217.5	57.9	189.2	189.5	-0.98
학습	**117.4**	**280.9**	**198.6**	**183.6**	**2.81****
가정관리	35.4	57.5	39.6	58.5	0.51
돌봄	**6.1**	**48.9**	**0.0**	**0.0**	**-3.28****
참여·봉사	2.8	266.6	1.8	16.5	-0.52
교제·여가	240.6	225.8	208.9	136.3	-1.54
이동	129.1	79.2	125.1	74.7	-0.38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세부 활동 중에서 차량 관리, 매장에서 쇼핑하기는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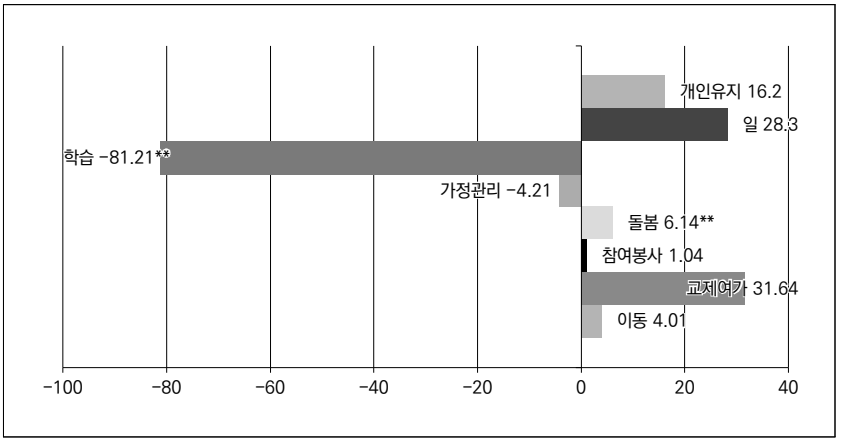
돌봄 활동은 일반 계층이 6.1분을 투여한 반면, 저소득 계층은 돌봄 관련 활동에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 계층의 경우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돌봄과 책 읽어주기와 같은 활동이 차지하였다. 이는 이중 역할 유형 중에서 일반 계층이 가사·육아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높기 때

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참여·봉사 활동과 교제·여가 활동, 이동 관련 시간량은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교제 및 여가 관련 세부 활동 중에서 신문 보기, 방송 보기와 같은 미디어 여가, 종교 집회와 모임 참가, 스포츠 및 레포츠 관련 활동의 경우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였다. 또한 이동의 세부 활동 중에서 가족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시간은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조금 더 길었다.

[그림 5-3-8] 이중 역할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 차이

(단위: 분/일)



주: 1) ** : p<.01
2) - 는 저소득 계층이, + 는 일반 계층이 관련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함.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4. 소결

본 절에서는 청년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역할 유형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 계층 학생은 학습 시간이 일반 계층 학생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학교와 자율적인 학습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일반 계층 청년들은 학원 수강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습 시간의 길이, 학습 유형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본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 시간, 학습 유형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가사·육아 유형 청년들의 경우 개인유지, 참여 및 봉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에서 일반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서비스를 더 사용하고, 문화 생활과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였다.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활용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 중의 하나이며(정해식, 김성아, 2015, p. 81), 개인의 생활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운, 이장주, 2005, p. 11; 이려정, 2010, p. 173). 따라서 저소득층 청년에게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와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가와 문화 활동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일반 소득계층에게도 필요한 활동이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 유형의 경우 개인유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학습에 투

여하는 시간(약 3시간)과 교제·여가(5-6시간)에 사용하는 시간 또한 길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청년들에 비해 생활시간 사용 방식과 관련하여 소득계층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활동 영역에서는 일반 계층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학습 활동 중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길며, 방송 및 인터넷, 학원에서 수강하는 시간은 저소득 계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준비 유형에 속한 청년들의 소득계층 간 지불 능력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취업준비 유형 중 저소득 계층 청년은 월세 비율이 높고, 단독가구 비율이 높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 또한 일반 계층에 비해 낮다(〈표 5-3-1〉참조). 취업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1인 가구로 거주한다는 점은 부모로부터의 상당한 사적 이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준비 유형의 저소득 계층이 학원 등 시장에서 구입한 학습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일반 계층보다 긴 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취업 유형의 청년은 일 관련 시간에 투입하는 양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이 일 관련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계층 간의 일자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저소득 계층이 일반 계층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 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업 청년 중에서 저소득 계층은 하루 평균 5시간 일을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계층(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음)에 속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일자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유지, 돌봄, 일과 관련된 활동은 필수 시간으로 구분하고, 참여·봉사와 교제·여가 활동은 여가 시간으로 구분한다. 취업 청년은 소득계층에 따라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계

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영화 및 연극 관람과 같은 문화 활동, 개인 운동과 기타 스포츠 활동과 레포츠 활동에 조금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다.

니트 유형과 이중 유형의 청년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문화와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일반 계층이 문화와 여가 생활 관련 활동에 더 긴 시간을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문화와 여가 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활용하는 휴가비 지원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중 역할 유형은 소득이 낮음에도 학습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았다. 저소득 계층의 이중 역할 유형에는 학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 역할 유형은 일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 또한 취업 유형 다음으로 많았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역할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시점에서 청년층의 시간 사용을 조사하였다. 역할 유형의 분류 기준도 특정 시점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각 역할을 얼마나 지속하는지, 각 유형 간의 이전은 어떠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취업준비에서 취업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청년층의 역할을 변화시키는지 등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
제4절 분석 결과

6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제1절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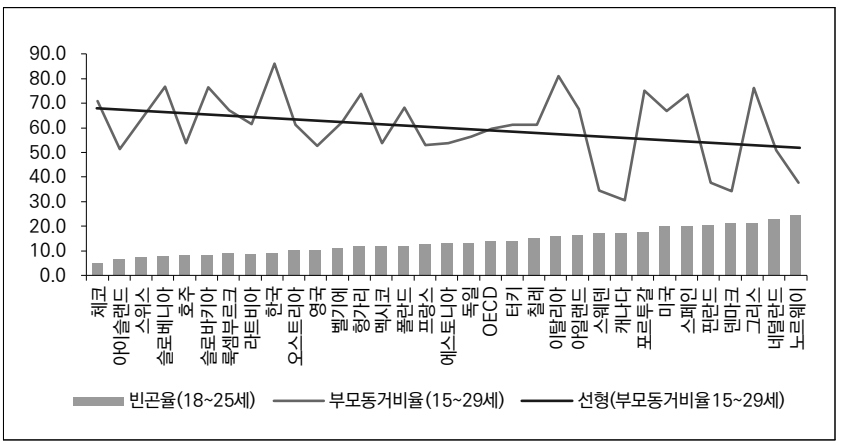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것은 가계소득 자료를 이용해 개인화(균등화)한 소득으로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동거하는 부모의 소득을 공유할 경우 청년빈곤율은 실제 청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제5장의 제1절에서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의 변화와 청년빈곤율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반비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19~34세) 빈곤율은 2006년 8.3%에서 2016년 7.6%로 0.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빈곤율이 13.4%에서 13.8%로 0.4%포인트 증가한 것과 달리 청년빈곤율은 하락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2006년 46.6%에서 2016년에는 56.7%로 약 10년 동안 10.1%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통해 청년빈곤율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론을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다.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들의 빈곤율은 2006년 8.6%에서 2016년 10.1%로 1.5%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7.9%에서 5.7%로 2.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빈곤율과 부모와의 동거 비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횡단면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OECD 자료를 검토해보았다.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청년빈곤율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역시 둘 사이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중이 클수록 청년빈곤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약 85%에 달해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그림 6-1-1] OECD 국가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과 청년빈곤율



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에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자료는 없음.
자료: 1) 빈곤율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에서 2017. 1. 5. 인출, 재가공.
2)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 - EU-SILC(EU 국가), HILDA(호주), SLID(캐나다), CASEN(칠레), CPS(미국)를 이용해 OECD가 계산.
3) OECD(2016), OECD Society at a Glace 2016, p. 34 재가공.
4) 한국의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

따라서 부모나 다른 가족과 공유되는 소득이 아닌 청년 가구원의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으로 측정되는 빈곤지표를 통해 정확한 청년빈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청년가구주 가구나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

식으로 빈곤율이 측정될 수 있지만, 전체 청년집단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소득빈곤율이 포착하지 못하는 청년빈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측면에서의 청년빈곤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다차원 빈곤의 정의

다차원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은 개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비되어야 할 다양한 영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다. 이 접근 혹은 방법론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동 기관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ross Happiness Index; GHI), 통계청 삶의 질 지표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2. 다차원 빈곤 개념의 발전

사실상 실질적 자유의 확장을 주장하는 정의론이나 실현능력접근, 다차원 접근, 지수화 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최근 개별 개념이 활용되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학자와 핵심

개념, 접근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센(Sen, A.)의 실질적 자유론(substantial freedom)을 확장하여, 실제 대상에 적용하기 위하여 철학자 누스바움(Nussbaum, M.)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좋은 삶(Eudaimonia)'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센과 누스바움이 함께 '실현능력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제안(Robeynes, 2005)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실현능력(capability)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될 것인지 스스로 가치판단할 수 있는 이성(reason to value of what to do and of what to be)으로 정의된다.

실현능력은 인간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의 마련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누스바움은 실현능력을 단수(capability)가 아닌 복수(capabilities)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지배적인 화폐적 접근이 아닌 비화폐적 요소를 포괄하는 세트(capabilities set)를 탐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Nussbaum, 2000).

센(2005)은 실현능력접근이 가지는 규범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현능력 요소 구성과 요소별 가중치 부여의 자의성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후 다차원 빈곤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Alkire & Foster, 2011; Alkire et al., 2015). 그러나 다수의 차원, 다수의 지표를 제안하는 다차원 빈곤 방법론의 입체적인 결과는 가독성이 낮아 정책 활용도 또한 낮을 수 있어 다차원 다지표의 결과를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내려는 지수화에 대한 수요는 있다(Giovannini, E., 2017).

[그림 6-2-1] 다차원 빈곤 개념의 발전 과정

구분	정의론 (the Idea of Justice)		인간발달과 실현능력접근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Approach)
주요 학자	Sen, A.		Nussbaum, M.
핵심 개념	실질적 자유의 확장		기능, 실현능력
접근 방법	규범론	⇨	철학(아리스토텔레스)
주요 저서	The Quality of Life (Nussabaum, M. & Sen, A, 1993); Development as Freedom(1999); The Idea of Justice(2011)		Women and Human Development(2000); Creating Capabilities(2011)
활용 사례	실현능력접근		서병수(2007); 김성아, 김지연(2012) UNDP 인간개발지수(HDI)

구분	다차원 빈곤 (Multidimensional Poverty)	지수화
주요 학자	Alkire, S. & Foster, J.	Anand, S. & Sen, A., Atkinson, A.
핵심 개념	빈곤	삶의 질
접근 방법	수학적 방법론	정책적 활용가능성 제고
주요 저서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2011);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and Analysis (Alkire et al., 2015)	Multidimensional Deprevation(2003); Handbook of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OECD, JRC, 2008)
활용 사례	최균 등(2011); 정의진(2012); 이현주 등(2012); 서병수, 권종희(2013); 이현주, 정은희(2014); 김태완 등(2015)	최민정, 김태완(2016); 정해식 등(2016) 국민총생산(GDP), UNDP 인간개발지수(HDI), 시회진보지수(SPI), 통계청 삶의 질 지표

3.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서병수(2007), 이현주 등(2012), 최균 등(2011)이 빈곤의 다차원적 접근을 활용한 연구다. 서병수, 권종희(2013), 이현주, 정은희(2014)가 전체 인구의 빈곤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특정 연령대의 다차원 빈곤에 대한 연구로 김태완 등(2015)은 노인빈곤의 다차원성을 분석하였다. 서병수, 권종희(2013)는 소득, 자산, 건강, 주거, 교육, 고용·노동, 사회보장의 7개 차원에 11개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김태완 등(2015)은 소득, 주거, 의료의 3개 차원에 5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해외에서는 Alkire와 Foster(2011)가 센의 능력이론 접근법을 이용해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에서부터 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한 실증 예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측정 방법을 토대로 이후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각기 자신의 나라에 다차원 빈곤 측정 방법을 적용하여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하고, 각 인구집단별 분해를 통해 화폐적 측면의 빈곤과 다차원적 빈곤이 인구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소득빈곤의 유형별 차이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본 장에서는 실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Alkire와 Foster(2011)의 방법론을 선진국에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독일은 Rippin(2012), Suppa(2015, 2016) 등이 있고,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Whelan, Nolan, Maitre(2014), Alkire & Apablaza(2016)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Ohsio & Kan(2014), Matsuyama(2016) 등이 있으며, 미국을 대상으로는 Mirta et al.(2013), Wagle(2014) 등의 연구가 있다. 청년

층을 대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연구한 Frame, Lannoy & Leibbrandt(2016)가 있다.

제3절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

다차원 빈곤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박탈에 대하여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 방식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루어야 할 개념적인 문제가 있다(Atkinson, 2003, p. 63)." 다차원 빈곤 측정을 위한 질문 리스트(Alkire & Foster, 2011)는 다음과 같다.

1. (규범적 이슈) 영역: 어떤 영역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2. (방법적 이슈) 지표: 타당한 지표는 무엇인가?
3. (방법적 이슈) 가중치: 어떤 차원과 지표가 중요한가?
4. (방법적 이슈) 판단 I : 어떻게 측정하는가?
5. (방법적 이슈) 판단II: 누가 빈곤한가?

이하에서는 다차원 빈곤지수 개발 과정을 위와 같은 단계별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빈곤의 차원과 지표

가. 선행연구의 빈곤 차원

본 절에서는 다차원 빈곤 연구 중에서 실제 빈곤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연구들을 주로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선정한 영역들과 지표들은 본 연구의 지수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선례로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차원적 빈곤 접근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특히 아동빈곤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들은 주로 일본, 독일, EU 회원국들 등 선진국의 사례들로서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사례로 활용의 의미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청년층에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참고할 만하기에 이 연구도 포함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다차원 영역으로 선정한 것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소득, 소비, 재산, 주거, 건강, 교육, 고용, 이동성, 물질적 박탈, 사회참여 등이다. 여기서 이동성은 사회 이동성이나 교육 이동성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이동성이 아니라 교통수단과 같은 물리적 이동성을 의미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거는 검토 대상 모든 연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건강, 교육, 고용, 물질적 박탈은 5개 이상의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영역들이다. 소득, 소비, 재산과 같은 경제적 차원은 소수의 연구에서 포함시키고 있는데, 다차원 빈곤을 소득빈곤에 대비시켜 검토하기 위해서 다차원 빈곤의 차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산은 일본의 연구에서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가계의 높은 저축률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6-3-1〉 해외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들

영역	일본	독일(1)	독일(2)	독일(3)	EU(1)	EU(2)	남아공
소득		o			o	o	
소비	o					o	
재산	o						
주거	o	o	o	o	o	o	o
건강		o	o	o	o	o	o
교육		o	o	o	o		o
고용		o	o	o	o		o
이동성		o					
물질적 박탈	o		o	o	o	o	
사회참여			o	o			

자료: 일본은 Matsuyama(2016), 독일(1)은 Rippin(2012), 독일(2)는 Suppa(2015), 독일(3)은 Suppa(2016), EU(1)은 Alkire & Apabalza(2016), EU(2)는 Whelan, Nolan & Maitre(2014), 남아공은 Frame, Lannoy & Leibbrandt(2016).

나. 선행연구의 빈곤 지표

이들 선행연구들이 각 영역별로 선택한 지표들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빈곤율을 활용하고 있다. 소비는 일본의 연구는 비내구재 소비를, EU의 연구는 소비박탈을 각각 활용하고 있다. 재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축이 포함되었다. 주거 영역은 주로 주거면적, 주택상태, 주거 시설, 주거환경 등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건강 영역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고, 미충족 의료 욕구를 포함시킨 연구도 있다. 교육 영역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교육 연수나 학력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 영역에는 실업, 근로시간, 불안정 고용여부, 비경활, NEET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동성 영역은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이동을 위한 자동차 보유 여부나 신체장애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물질적 박탈 영역은 주요 필수품 목록 중에서 보유하지 못하는 품목의 존재 여부나 개수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물질적 박탈은 EU 연구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소득의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영역에는 사회 활동과 친구 교제를 한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다.

〈표 6-3-2〉 해외 선행연구에서 선택된 빈곤의 차원별 지표들

영역	지표						
	일본	독일(1)	독일(2)	독일(3)	EU(1)	EU(2)	남아공
소득		절대 빈곤선			상대적 빈곤 (60%)		
소비	비내구재 소비					소비박탈	
재산	저축						
주거	주거 면적	주택상태, 주거시설, 면적	주택상태, 주거시설, 면적	주택상태, 주거시설, 면적	주거환경	거주지 환경	주거환경, 주거시설, 주거형태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병원이용	장애, 건강이슈, 비만	장애,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활동제약 미충족 의료욕구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신체활동	일반적 건강, 신체기능
교육		교육연수, 학력수준	학력수준, 책 수	학력수준	학력수준		학력수준
고용			실업, 근로시간, 불안정 고용	불안정 고용, 실업, 근로시간	근로 월 수		비경활, NEET
이동성		자동차, 신체장애					
물질적 박탈	비품		박탈, 재산	박탈	박탈	박탈	박탈
사회참여				사회활동, 친구교제			

자료: 일본은 Matsuyama(2016), 독일(1)은 Rippin(2012), 독일(2)는 Suppa(2015), 독일(3)은 Suppa(2016), EU(1)은 Alkire & Apabalza(2016), EU(2)는 Whelan, Nolan & Maitre(2014), 남아공은 Frame, Lannoy & Leibbrandt(2016).

다. 전문가 조사를 통한 영역과 지표의 선정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차원 빈곤의 주요 영역과 영역별 지표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일부 영역과 지표들을 추가해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2차 조사에서는 각 차원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검토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3-3〉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 내용	다차원 빈곤 차원과 지표 타당성	다차원 빈곤 차원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일정	8월 중순	9월 상순
조사 방법	이메일을 활용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수행 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전문가는 경상계열과 사회계열 전문가와 청년정책 담당자(공무원, 청년단체, 위탁기관 등)로 구성했다. 당초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으나 표본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담당자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준전문가로서의 특성도 가지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도 측면에서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3-4〉 1차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51	100.0
성별	남성	36	70.6
	여성	15	29.4
연령	30대 이하	8	15.7
	40대	27	52.9
	50대	14	27.5
	60대 이상	2	3.9
전공별	경상계열	17	33.3
	사회계열	34	66.7
소속기관	대학	17	33.3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29	56.9
	사회단체	3	5.9
	기타	2	3.9

이하의 서술에 앞서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다차원 빈곤을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를 구성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즉, 전문가 조사에서 청년의 다차원 빈곤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영역과 지표를 묻지 않고,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차원 빈곤지수는 청년에 국한되는 다차원 빈곤지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에 통용될 수 있는 다차원 빈곤지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한 것은 다차원 빈곤지수를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분해하여 세대별 특성을 비교하고자 함이다. 다만, 앞서 전문가 조사 대상에 청년정책 담당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다차원 빈곤지수에 이른바 청년의 관점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7]

연구진이 제시한 각 빈곤 차원별로 적절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부터 “매우 적절하다”까지 6점

27) 이와 같은 방식이 지수 개발에 있어서 분명한 이론적·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적절하다”와 “매우 적절하다”를 합한 결과는 소득, 주거, 건강, 고용, 소비, 재산, 교육, 물질적 박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5〉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차원별 적절성 응답

(단위: %, 점)

차원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소득	2.0		2.0	3.9	25.5	68.6	94.1	4.6
소비	2.0	5.9	7.8	13.7	49.0	29.4	78.4	4.0
재산	2.0	3.9	5.9	17.6	43.1	33.3	76.5	4.0
주거	2.0		2.0	5.9	47.1	45.1	92.2	4.3
건강	2.0		2.0	13.7	49.0	35.3	84.3	4.2
교육	2.0	2.0	3.9	27.5	51.0	17.6	68.6	3.8
고용	2.0	2.0	3.9	11.8	43.1	41.2	84.3	4.2
물질적 박탈	3.9	5.9	9.8	21.6	43.1	25.5	68.6	3.8
사회참여	2.0	3.9	5.9	43.1	35.3	15.7	51.0	3.6

주: 공란은 무응답임.

1차 조사에서 당초 설문에 제시하지 않은 영역들이 몇 가지 제안되었다. 사회적 자본, 참여, 여가와 문화, 안정성, 정보와 기술,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이 그것인데, 사회적 자본, 문화, 안정성은 최종적으로 빈곤 차원에 포함시켰다.

〈표 6-3-6〉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추가 제안 차원

영역	내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신뢰, 사회적 관계망 등
참여	정치참여 등
여가와 문화	여가, 문화, 시간사용, 시간여유 등
안정성	사회안전망, 사회보장, 사회보험, 개인보험, 복지전달체계, 보육, 교육지원, 고용지원, 주거지원 등
정보와 기술	정보, 기술 등
주관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

1차 전문가 조사에서 제시된 지표들의 적절성도 역시 6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3-7〉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별 적절성 응답

(단위: %, 점)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근로소득			0.0	5.9	29.4	64.7	94.1	4.6
재산소득		2.0	2.0	13.7	37.3	47.1	84.3	4.3
이전소득		2.0	2.0	19.6	37.3	41.2	78.4	4.2
의료비 부담		3.9	3.9	9.8	51.0	35.3	86.3	4.2
주거비 부담		3.9	3.9	9.8	49.0	37.3	86.3	4.2
사교육비 부담		9.8	9.8	17.6	56.9	15.7	72.5	3.8
부동산 재산		3.9	3.9	15.7	45.1	35.3	80.4	4.1
금융자산		3.9	3.9	9.8	54.9	31.4	86.3	4.1
자동차	5.9	23.5	29.4	49.0	15.7	5.9	21.6	2.9
부채	2.0	5.9	7.8	13.7	41.2	37.3	78.4	4.1
방 개수	2.0	9.8	11.8	33.3	49.0	5.9	54.9	3.5
주거면적		3.9	3.9	37.3	43.1	15.7	58.8	3.7
주거 설비	2.0	7.8	9.8	27.5	43.1	19.6	62.7	3.7
주거 시설	3.9	9.8	13.7	25.5	45.1	15.7	60.8	3.6
장애여부	2.0	9.8	11.8	25.5	43.1	19.6	62.7	3.7
주관적 건강상태	2.0	11.8	13.7	19.6	41.2	25.5	66.7	3.8
만성질환	3.9	3.9	7.8	21.6	52.9	17.6	70.6	3.8
근로능력		7.8	7.8	21.6	43.1	27.5	70.6	3.9
우울	2.0	7.8	9.8	21.6	43.1	25.5	68.6	3.8
교육수준		7.8	7.8	25.5	47.1	19.6	66.7	3.8
실업		2.0	2.0	11.8	49.0	37.3	86.3	4.2
근로시간형태		11.8	11.8	15.7	43.1	29.4	72.5	3.9
근로지속가능성		5.9	5.9	19.6	43.1	31.4	74.5	4.0
근로일수		9.8	9.8	29.4	37.3	23.5	60.8	3.7
근로시간		7.8	7.8	29.4	37.3	25.5	62.7	3.8
물질적 박탈	2.0	7.8	9.8	19.6	45.1	25.5	70.6	3.8
식료품 박탈	3.9	15.7	19.6	19.6	39.2	21.6	60.8	3.6
기부/자원봉사	3.9	25.5	29.4	31.4	35.3	3.9	39.2	3.1
인터넷 사용	3.9	25.5	29.4	29.4	33.3	7.8	41.2	3.2
공적연금	2.0	7.8	9.8	13.7	51.0	25.5	76.5	3.9
건강보험		7.8	7.8	27.5	39.2	25.5	64.7	3.8
실업보험		2.0	2.0	31.4	41.2	25.5	66.7	3.9
산재보험		5.9	5.9	35.3	35.3	23.5	58.8	3.8

주: 공란은 무응답임.

〈표 6-3-8〉 1차 전문가 조사 결과 지표별 적정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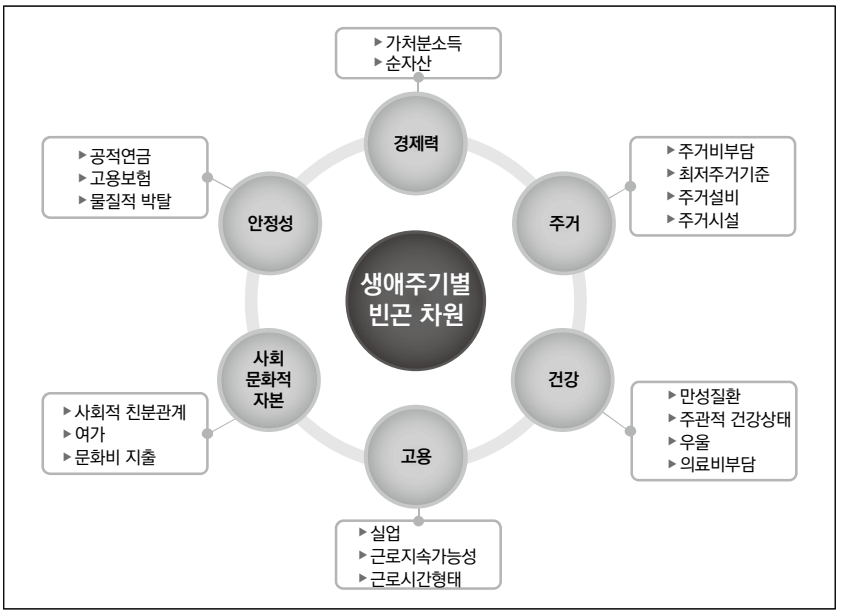
(단위: %)

지표	소득	소비	재산	주거	건강	교육	고용	물질적 박탈	사회 참여	기타 제안 영역
근로소득	88.2						7.8			3.9
재산소득	66.7	2.0	25.5					2.0		3.9
이전소득	88.2	2.0	3.9							5.9
의료비 부담	2.0	43.1			51.0			2.0		2.0
주거비 부담	2.0	41.2		51.0				3.9		2.0
사교육비 부담	3.9	47.1				47.1				2.0
부동산 재산	2.0		88.2	5.9						3.9
금융자산	7.8		88.2							3.9
자동차	2.0	7.8	76.5					7.8		5.9
부채	15.7	2.0	72.5				2.0	3.9		3.9
방 개수			3.9	96.1						
주거면적			3.9	94.1				2.0		
주거 설비			2.0	96.1	2.0					
주거 시설			2.0	94.1	3.9					3.9
장애여부					82.4				13.7	
주관적 건강상태					98.0					2.0
만성질환					96.1		3.9			
근로능력					39.2		56.9		2.0	2.0
우울					88.2		3.9	2.0	2.0	3.9
교육수준	2.0			2.0		88.2	5.9	2.0		
실업	2.0					3.9	92.2			2.0
근로시간형태	2.0					2.0	94.1			2.0
근로지속가능성						2.0	96.1			2.0
근로일수					2.0	2.0	94.1			2.0
근로시간					2.0	2.0	92.2		2.0	2.0
물질적 박탈	3.9		3.9					88.2		3.9
식료품 박탈		2.0			11.8			80.4	2.0	3.9
기부/자원봉사									94.1	5.9
인터넷 사용		5.9					3.9	11.8	49.0	29.4
공적연금	45.1	2.0	3.9				15.7	2.0	2.0	29.4
건강보험	9.8	2.0	2.0		35.3		13.7	7.8	3.9	25.5
실업보험	11.8					3.9	49.0	7.8	2.0	25.5
산재보험	11.8				5.9	3.9	41.2	7.8	2.0	27.5

주: 공란은 무응답임.

상기와 같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6개의 빈곤 차원과 총 19개의 지표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각 영역별 지표들은 다양한 유형의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소득으로 측정되는 빈곤율과 같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건강상태나 여가 만족도와 같이 주관적 지표가 혼재한다.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혼재하는 것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그리고 가구 단위 지표와 개인 단위 지표가도 혼재되어 있다. 소득, 자산, 주거비 부담 등의 대부분 지표들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는 지표인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지표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개인 차원의 지표들이다. 그런데 같은 영역에서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의 지표가 혼재하는 경우는 해석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필요하다. 건강 영역을 예로 들면,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과 같이 개인단위의 지표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가구단위의 의료비 부담 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은 가구원이 모두 균일하게 지출을 공유한다는 정도의, 직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가정을 한다면 일관성의 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3-1]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



2. 빈곤선 결정

전문가 조사를 통해 결정된 빈곤의 차원별 지표 각각에 대해 빈곤선(cut-off)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빈곤선 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사에 의하지 않고, 이론적 근거가 분명한 경우는 이를 따랐고, 그렇지 않은 일부의 경우는 규범적 판단에 따랐다. 각 지표별 빈곤선과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경제력 영역의 가처분소득은 일반적인 빈곤율 계산에서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선인 균등화 중위가처분소득의 50%를 설정하였다. 순자산의 경우도 역시 소득과 마찬가지로 균등화 중위순자산 50%를 빈곤선으로 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주거비 부담은 총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RIR) 30%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가와 기타 가구는 비빈곤으로 간주하고, 전세(imputed rent)와 월세는 이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정부 발표 기준을 사용하였다. 주거 설비는 한국복지패널조사 문항 중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서 제시한 4개 항목 중 2개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보았다. 주거 시설은 최저주거기준 시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보았다.

건강 영역에서 만성질환은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는 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빈곤으로 보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 중 4와 5에 해당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보았다. 우울은 CESD 척도를 0~3점이 되도록 리코딩한 후 합산 점수가 9점을 초과할 경우를 빈곤으로 보았다. 의료비 부담은 가구의 월 가처분 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넘는 즉, 재난적 의료비 수준인 경우를 빈곤으로 간주하였다.

고용 영역에서는 조사 시점에서 실업상태인 경우를,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빈곤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 영역에서 빈곤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회문화적 자본 영역에서 5점 척도로 질문한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와 여가 만족도가 2점 이하인 경우를 빈곤으로 간주하였고, 가구의 총생활비 중 교양오락비 지출 비중이 중위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영역에서 공적연금은 미가입/미수급을, 고용보험은 미가입을 각각 빈곤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집세, 공과금, 공교육비, 난방비,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박탈 및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여부 중에서 1개라도 해당되면 빈곤으로 간주하였다.

〈표 6-3-9〉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 내용과 빈곤선

차원	지표	내용	빈곤선	근거
경제력	가처분소득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가처분소득 50% 미만	OECD. (2015).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
	순자산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순자산 50% 미만	
주거	주거비 부담	총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	점유형태 ① 자가는 비빈곤,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는 RIR 30% 초과, ⑤ 기타는 비빈곤	강미나 등. (2016). 2016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pp. 90-92.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대비 주거면적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 개정)
	주거 설비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① 내구·내열·내화·방열·방습', '②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③ 오염으로부터 안전', '④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주거 설비 2개 이하 충족	
	주거 시설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최저주거기준(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온수)) 1개 이상 미충족	강미나 등. (2016). 2016년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p. 275.
건강	만성질환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질환 유무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는 질병 있음	
	주관적 건강상태	① 아주 건강하다 ~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7 Bad/very bad health
	우울	CESD-11 우울 척도 11개 문항	0~3점 리코딩 후 합산된 우울 점수가 9 초과	
	의료비 부담	총생활비 중 보건의료비 비중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Devadasan et al.(2005); 황도경 등, 2013, p. 41에서 재인용.

차원	지표	내용	빈곤선	근거
고용	실업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직한 상태	실업자	통계청 통계용어 지표 이해 '실업률'
	근로지속 가능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vs.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해고 가능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정규직'
	근로시간 형태	①시간제 vs. ②전일제	시간제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비정규직(시간제)'
사회 문화적 자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① 매우 불만족한다~② 불만족한다	
	여가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① 매우 불만족한다~② 불만족한다	
	문화비 지출	총생활비 중 교양오락비 비중	교양오락비 비중의 중위 50%(가중치 적용) 미만	
안정성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	공적연금 미가입/미수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법
	물질적 박탈	집세, 공과금, 공교육비, 난방비, 의료비, 사회보험료 등 박탈 및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 여부의 박탈 점수	1개라도 박탈	여유진, 김미곤 등, 2007, p. 124.

3.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다차원 빈곤지수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11차(2016년 실시, 기준 연도 2015년) 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했다. 분석 단위는 개인이

다(개인 가중치 적용). 제11차 자료의 전체 유효 표본 수는 15,989명이고, 모든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대상 유효 표본 수는 12,213명이다. 지표 중에서 실업, 시간제 근로 등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들이 있어서 모든 대상을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하였다. 이 경우 분석 대상 경제활동인구 유효 표본 수는 7,092명이다. 각 표본 대상별 지표별 빈곤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라.

〈표 6-3-10〉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차원	지표	전체 유효 표본수	빈곤율	경제활동 인구 유효 표본수	빈곤율	분석 대상 유효 표본수	빈곤율	**분석 대상 경제활동 인구 유효표 본수**	**빈곤율**
경제력	가처분 소득	15,989	0.135	7,453	0.074	12,213	0.146	**7,092**	**0.076**
	순자산	15,989	0.303	7,453	0.273	12,213	0.299	**7,092**	**0.275**
주거	주거비 부담	15,989	0.154	7,453	0.163	12,213	0.147	**7,092**	**0.164**
	최저주거 기준	15,816	0.016	7,388	0.015	12,213	0.016	**7,092**	**0.015**
	주거 설비	15,989	0.108	7,453	0.105	12,213	0.110	**7,092**	**0.106**
	주거 시설	15,989	0.017	7,453	0.017	12,213	0.020	**7,092**	**0.017**
건강	만성 질환	15,989	0.306	7,453	0.286	12,213	0.358	**7,092**	**0.289**
	주관적 건강 상태	15,989	0.104	7,453	0.059	12,213	0.115	**7,092**	**0.061**
	우울	15,989	0.062	7,453	0.054	12,213	0.082	**7,092**	**0.057**
	의료비 부담	15,989	0.124	7,453	0.097	12,213	0.136	**7,092**	**0.097**

차원	지표	전체 유효 표본수	빈곤율	경제활동 인구 유효 표본수	빈곤율	분석 대상 유효 표본수	빈곤율	**분석 대상 경제활동 인구 유효표본수**	**빈곤율**
고용	실업	15,989	0.014	7,453	0.026	12,213	0.017	**7,092**	**0.026**
	근로지속 가능성	15,989	0.151	7,453	0.294	12,213	0.189	**7,092**	**0.291**
	근로시 간형태	15,989	0.037	7,453	0.072	12,213	0.047	**7,092**	**0.073**
사회 문화적 자본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12,308	0.035	7,152	0.025	12,213	0.036	**7,092**	**0.025**
	여가 만족도	12,308	0.150	7,152	0.155	12,213	0.151	**7,092**	**0.155**
	문화비 지출	15,989	0.261	7,453	0.238	12,213	0.253	**7,092**	**0.232**
안정성	공적 연금	15,989	0.006	7,453	0.009	12,213	0.007	**7,092**	**0.009**
	고용 보험	15,989	0.094	7,453	0.183	12,213	0.118	**7,092**	**0.182**
	물질적 박탈	15,989	0.055	7,453	0.051	12,213	0.055	**7,092**	**0.050**

자료: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원자료.

이렇게 선정된 7,092명의 유효 표본을 바탕으로 각 지표별 빈곤율을 인구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청년 전체(19~34세)를 기준으로 주요 지표별 빈곤율을 중장년, 노인과 비교해보면, 청년의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8%로 중장년 5.6%, 노인 34.5%, 전체 7.6%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순자산 빈곤율은 청년 34.2%, 중장년 25.6%, 노인 27.5%로 소득과 달리 청년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 영역에서는 청년은 주거비 부담(20.8%)과 최저주거기준(2.3%)도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주거 설비(10.1%)와 주거 시설(1.9%)은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건강 영역에서는 만성질환(8.0%), 주관적 건강상태(2.2)는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우울(6.7%)은 노인(9.3%)보다는 낮지만 중장년(4.9%)보다는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고용 영역에서는 실업(4.2%)은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가장 높고, 근로지속 가능성(34.1%)은 노인(36.0%)보다는 낮지만 중장년보다는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근로시간 형태(8.1%)도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사회·문화적 자본 영역에서는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2.6%)는 중장년과 같은 빈곤율로 노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만족도(12.9%)와 문화비 지출(17.0%)은 중장년과 노인보다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안정성 영역에서는 공적연금(1.3%), 고용보험(20.9%), 물질적 박탈(6.4%) 모두 중장년과 노인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년은 경제력과 안정성 영역에서 모든 지표들이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임으로써 이 영역에서의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 영역에서도 3개 중 2개의 지표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고용 영역의 지표들과 경제력의 지표들은 각각 노동시장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위 세대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11〉 분석대상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집단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빈곤율

구분		연령대별 인구집단					
		청년			중장년	노인	전체
			19-24	25-34			
경제력	가처분소득	0.038	0.068	0.031	0.056	0.345	0.076
	순자산	0.342	0.460	0.317	0.256	0.248	0.275
주거	주거비 부담	0.208	0.142	0.221	0.160	0.070	0.164
	최저주거기준	0.023	0.063	0.014	0.014	0.008	0.015
	주거 설비	0.101	0.118	0.097	0.104	0.140	0.106
	주거 시설	0.019	0.043	0.014	0.013	0.044	0.017
건강	만성질환	0.080	0.069	0.082	0.296	0.801	0.289
	주관적 건강상태	0.022	0.020	0.023	0.055	0.217	0.061
	우울	0.067	0.092	0.062	0.049	0.093	0.057
	의료비 부담	0.073	0.077	0.072	0.083	0.278	0.097
고용	실업	0.042	0.075	0.035	0.022	0.017	0.026
	근로지속 가능성	0.341	0.582	0.289	0.268	0.360	0.291
	근로시간형태	0.081	0.234	0.049	0.062	0.139	0.073
사회 문화적 자본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0.026	0.017	0.028	0.026	0.014	0.025
	여가 만족도	0.129	0.126	0.130	0.167	0.131	0.155
	문화비 지출	0.170	0.261	0.151	0.234	0.392	0.232
안정성	공적연금	0.013	0.009	0.014	0.009	0.000	0.009
	고용보험	0.209	0.371	0.175	0.183	0.099	0.182
	물질적 박탈	0.064	0.117	0.052	0.048	0.034	0.050

4. 빈곤 차원별 지표별 가중치

고려할 수 있는 가중치 부여 방법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모든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equal weights) 방법, 둘째, 차원별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도록 지표별 가중치를

배분하는 내재적 가중치(nested weights) 방법,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결정하는 참여형 가중치(participatory) 방법이 그것이다.

동일 가중치는 앳킨슨이 유럽 국가들의 사회지표들을 다루면서 상이한 차원들에 균형 포트폴리오(balanced portfolio)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Atkinson et al., 2002; Battiston et al., 2013, p. 5)한 것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19개 지표에 모두 1/19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의 수에 따라 차원별 가중치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경제력 차원에 비해 4개의 지표로 구성되는 주거나 건강 영역이 2배 더 많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동일 가중치를 사용한 연구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Battiston et al.(2013),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Ray & Shinha(2015), Cowling et al.(2014), Bennet & Mitra(2013), Roche(2013), 그리고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Oshio & Kan(2013), Wagle(2014) 등이 있다.

내재적 가중치는 동일 가중치가 가지는 한계에 대응하여 모든 차원들이 같은 가중치를 갖도록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다차원 빈곤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선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내재적 가중치를 사용한 연구로는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Machado et al.(2014), Villalba et al.(2013),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Yu(2013), Vijaya et al.(2014), Santos(2013), Khan et al.(2014) 등이 있다.

한편, 참여형 가중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특정 집단의 인식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의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고자 할 때, 빈곤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나 관련 분야의 연구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형 가중치를 활용한 연구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Mitra et al.(2011, 2013),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Battiston et al.(2013)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참여형 가중치는 앞서 기술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이다.

〈표 6-3-12〉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차원별 지표별 가중치

차원	지표	동일 가중치 (Equal Weight)		내재적 가중치 (Nested Weight)		참여형 가중치 (Participatory Weight)	
		차원 가중치	지표 가중치	차원 가중치	지표 가중치	차원 가중치	지표 가중치
경제력	가처분소득	1	1/19	1/6	1/12	29.0	60.5
	순자산		1/19		1/12		39.5
주거	주거비 부담	1	1/19	1/6	1/24	15.2	39.0
	최저주거기준		1/19		1/24		23.5
	주거 설비		1/19		1/24		19.1
	주거 시설		1/19		1/24		18.4
건강	만성질환	1	1/19	1/6	1/24	15.1	24.6
	주관적 건강상태		1/19		1/24		23.5
	우울		1/19		1/24		19.6
	의료비 부담		1/19		1/24		32.3
고용	실업	1	1/19	1/6	1/18	18.5	43.2
	근로지속가능성		1/19		1/18		35.3
	근로시간형태		1/19		1/18		21.5
사회문화적 자본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1	1/19	1/6	1/18	9.9	43.3
	여가 만족도		1/19		1/18		27.6
	문화비 지출		1/19		1/18		29.1
안정성	공적연금	1	1/19	1/6	1/18	12.3	40.9
	고용보험		1/19		1/18		27.3
	물질적 박탈		1/19		1/18		31.8

5. 생애주기별 빈곤 산출

가. 차원 빈곤 점수

$$d_{ij} = \sum m_k w_k$$

개인 i의 다차원 빈곤 차원 점수(d_{ij})는 차원 j의 지표 k의 지표값(m_{ik})에 지표별 가중치 w_k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다차원 빈곤 점수

$$mp_i = \sum d_{ij} w_j$$

개인 i의 차원 점수를 활용한 최종 다차원 빈곤 점수(mp_i)는 개인 i의 차원 j의 차원 점수(d_{ij}) 차원별 가중치 w_j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절 분석 결과

이 절에서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을 분해하는 분석 대상 집단은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값을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인구(N=7,092)에 한한다. 청년과 비교하기 위해 중장년과 노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청년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두 집단으로 별도로 구분하였다.[28] 비

28) 청년의 연령대와 가구유형에 따른 각 가중치별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교 대상 인구집단 모두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6-4-1〉 분석대상 인구집단의 연령대 분포

연령대		빈도	비율
청년	19-34세	1,596	22.5
초기 청년	19-24세	279	3.9
중후기 청년	25-34세	1,317	18.6
중장년	35-64세	4,916	69.3
노인	65세 이상	580	8.2
전체		7,092	100.0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1. 동일가중치 적용 시 다차원 빈곤

먼저, 동일가중치 적용 시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11.6%, 청년 10.8%(초기 15.5%, 중후기 9.8%), 중장년 11.1%, 노인 18.1%로 각각 계산되었다. 다차원 빈곤율은 일반적인 소득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의 소득 빈곤율을 다른 연령대에 대비시켜 살펴보면, 전체 빈곤율 대비 50.0%, 중장년 빈곤율 대비 67.9%, 노인빈곤율 대비 11.0%로 나타나는 반면,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을 다른 연령대에 대비시켜 보면, 전체 빈곤율 대비 93.1%, 중장년 빈곤율 대비 97.3%, 노인빈곤율 대비 59.7%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의 소득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반면,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지 않다는 것으로써, 소득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청년층의 상대적인 빈곤 수준이 높아진

초기 청년(19~24세) 중 청년부부가구 및 청년부부+자녀가구의 유효 사례 수가 각각 1가구에 그쳐 이 분석의 결과는 포함하지 않음.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자료의 같은 분석 대상의 소득빈곤율과 비교해 보면, 즉 연령대별 소득빈곤율 대비 다차원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청년 2.8배, 중장년 2.0배, 노인 0.52배로 나타나 청년의 소득빈곤율 대비 다차원 빈곤율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아닌 다차원 개념을 적용할 경우 청년의 빈곤율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6-4-2〉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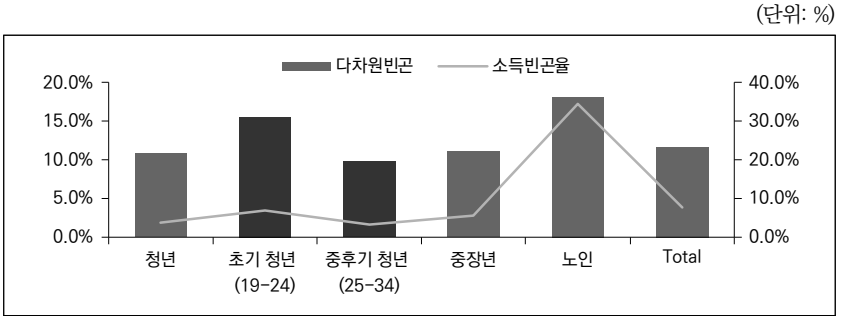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	10.8	2.0	1.8	1.3	2.4	1.7	1.5	3.8	6.0
19-24세	15.5	2.8	1.9	1.4	4.7	2.1	2.6	6.8	8.4
25-34세	9.8	1.8	1.8	1.3	2.0	1.6	1.3	3.1	5.5
중장년	11.1	1.6	1.5	2.5	1.9	2.2	1.3	5.6	9.8
노인	18.1	3.1	1.4	7.3	2.7	2.8	0.7	34.5	45.3
전체	11.6	1.8	1.6	2.6	2.1	2.2	1.3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 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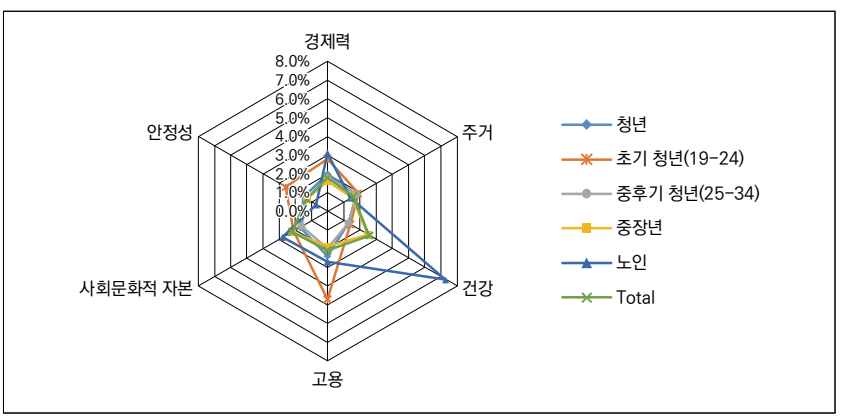
[그림 6-4-1]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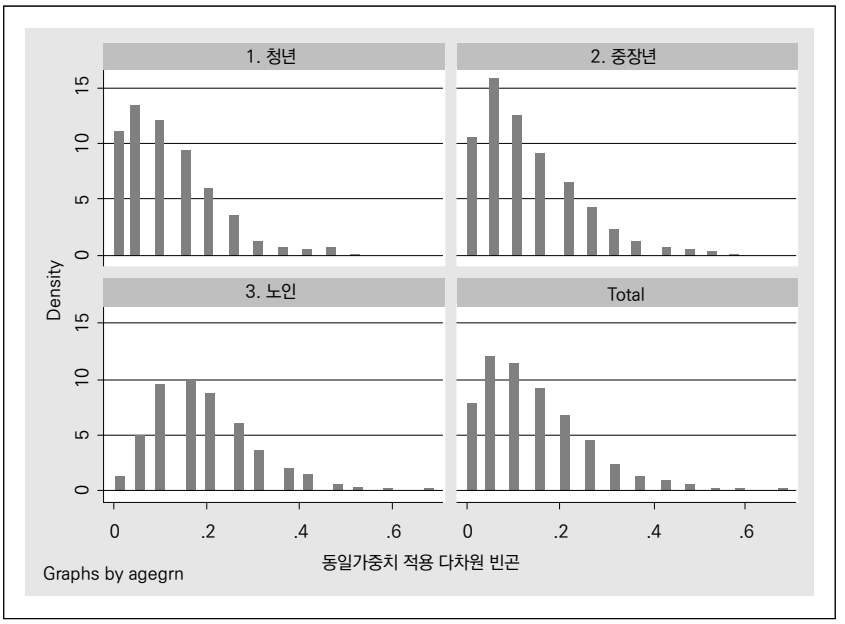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에 차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전체청년의 경우는 고용 2.4%, 경제력 2.0%, 주거 1.8%, 사회문화적 자본 1.7%, 안정성 1.5%, 건강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차원별 빈곤율을 전체 인구의 차원별 빈곤율과 대비시켜 보면, 안정성 115.4%, 고용 114.4%, 주거 112.5%, 경제력 111.1%, 사회문화적 자본 77.3%, 건강 50.0%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들은 안정성, 고용, 주거, 경제력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다차원빈곤율에 대한 각 차원별 기여도(개별 차원빈곤율/다차원빈곤율)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은 고용 22.7%, 경제력 18.6%, 주거 17.1%, 사회문화적 자본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연령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19~24세의 청년은 고용 30.3%, 경제력 17.9%, 안정성 16.9% 등의 순이고, 25~34세 청년은 고용 20.1%, 경제력 18.8%, 주거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청년은 아무래도 고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후기청년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반면, 후기청년은 고용에 대한 안정성은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력과 주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4-2] 동일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그림 6-4-3] 동일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한편, 청년을 앞서 제5장의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에서 사용한 청년가구 유형별로 구분해서 다차원 빈곤율을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먼저, 소득빈곤율은 청년단독가구가 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청년가구, 부모+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차원 빈곤율도 역시 청년단독가구가 12.5%로 가장 높고, 나머지 순서는 소득빈곤율과 동일하다. 그런데, 전체 소득빈곤율 대비 가구유형별 소득빈곤율은 가구유형별로 최소 34.2%(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최대 171.1%(청년단독가구)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전체 다차원 빈곤율 대비 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율은 가구유형별로 최소 77.8%(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최대 115.7%(청년단독가구)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소득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의 가구유형별 편차가 작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3〉 동일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단독가구	12.5	3.6	2.9	1.2	1.8	1.5	1.5	6.5	9.2
청년부부가구	8.5	1.9	3.0	1.0	1.0	1.5	0.3	1.7	1.9
청년부부+자녀가구	8.4	2.1	2.2	0.9	1.4	1.0	0.7	1.3	1.7
부모+청년가구	11.0	1.7	1.4	1.3	2.9	1.8	1.8	3.5	6.3
기타 청년가구	11.5	2.5	2.8	1.6	1.9	1.8	1.0	6.4	11.3
전체 청년가구	10.8	2.0	1.8	1.3	2.4	1.7	1.5	3.8	6.5

주 1)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청년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대상과 전체 청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2) 청년가구유형은 5장의 구분에 따르며, 전체 청년가구는 아래 유형 가구의 합산임.
-청년단독가구: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가구
-기타청년가구: 그 외 청년가구

2. 내재적 가중치 적용 시 다차원 빈곤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12.1%, 청년 11.6%(초기 17.0%, 중후기 10.5%), 중장년 11.5%, 노인 18.4%로 각각 계산되었다. 다차원 빈곤율은 일반적인 소득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을 다른 연령대에 대비시켜 보면, 전체 빈곤율 대비 95.9%, 중장년 빈곤율 대비 100.9%, 노인빈곤율 대비 63.0%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의 소득빈곤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반면,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지 않거나 오히려 높다는 것으로써, 소득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청년층의 상대적인 빈곤 수준이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보다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다차원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중장년에 비해서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자료의 같은 분석 대상의 소득빈곤율과 비교해보면, 즉 연령대별 소득빈곤율 대비 다차원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청년 3.1배, 중장년 2.1배, 노인 0.53배로 나타나 청년의 소득빈곤율 대비 다차원 빈곤율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아닌 다차원 개념을 적용할 경우 청년의 빈곤율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 비율은 전체 연령대에서 조금씩 더 높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4-4〉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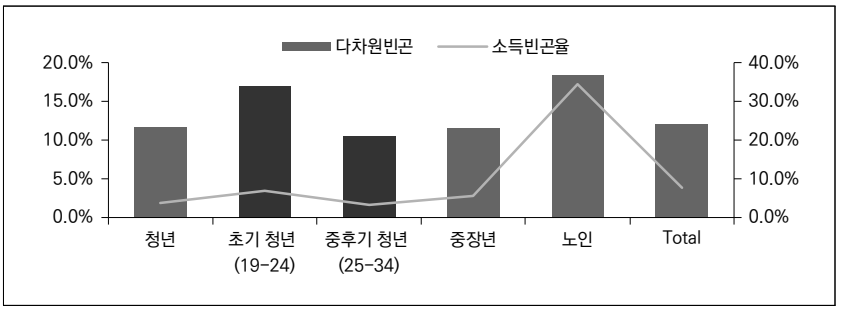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	11.6	3.2	1.5	1.0	2.6	1.8	1.6	3.8	6.0
19-24세	17.0	4.4	1.5	1.1	5.0	2.2	2.8	6.8	8.4
25-34세	10.5	2.9	1.4	1.0	2.1	1.7	1.3	3.1	5.5
중장년	11.5	2.6	1.2	2.0	2.0	2.4	1.3	5.6	9.8
노인	18.4	4.9	1.1	5.8	2.9	3.0	0.7	34.5	45.3
전체	12.1	2.9	1.3	2.1	2.2	2.3	1.3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 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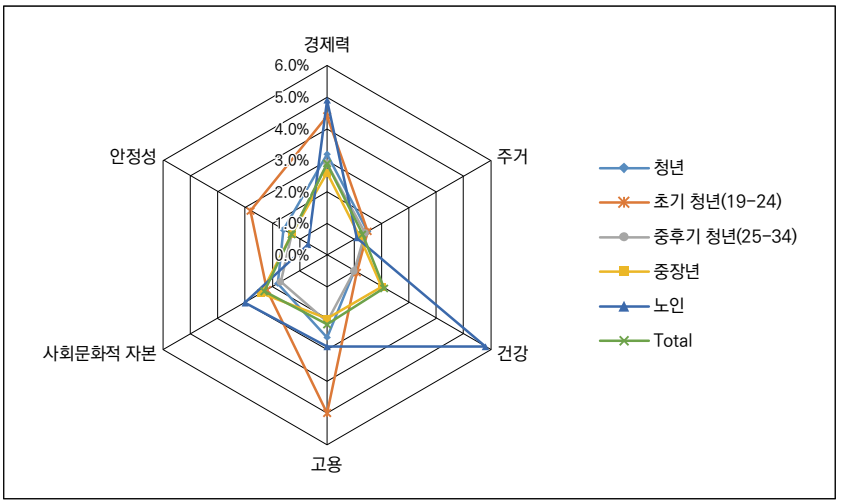
[그림 6-4-4]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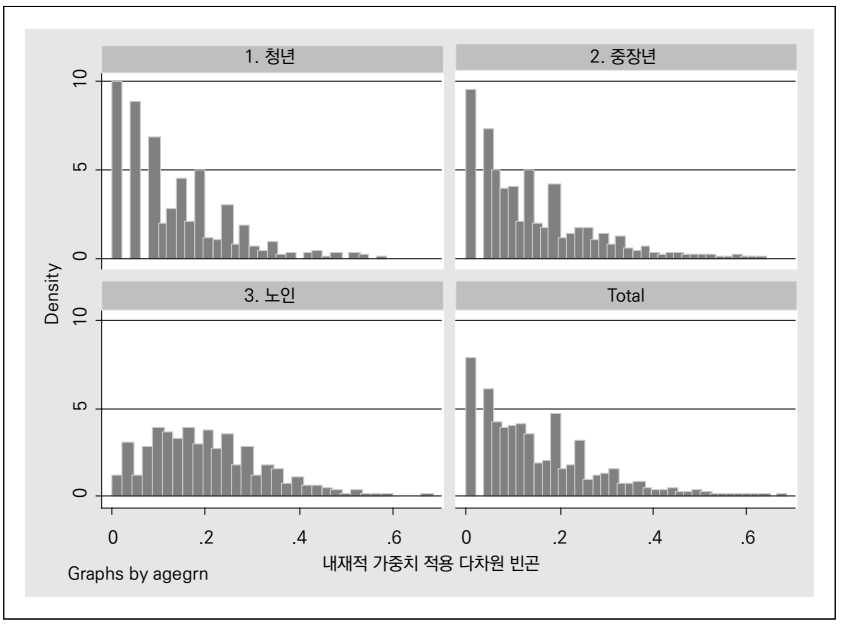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의 차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는 경제력 3.2%, 고용 2.6%, 사회문화적 자본 1.8%, 안정성 1.6%, 주거 1.5%, 건강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차원별 빈곤율을 전체 인구의 차원별 빈곤율과 대비시켜 보면, 안정성 123.1%, 고용 118.2%, 주거 115.4%, 경제력 110.3%, 사회문화적 자본 89.3%, 건강 47.6%의 순으로 나타나 청년들은 안정성, 고용, 주거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다차원빈곤율에 대한 각 차원별 기여도(개별 차원빈곤율/다차원빈곤율)를 살펴보면, 청년전체는 경제력 27.3%, 고용 22.2%, 사회문화적 자본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연령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19~24세의 청년은 고용 29.2%, 경제력 26.0%, 안정성 16.3% 등의 순이고, 25~34세 청년은 경제력 27.7%, 고용 19.8%, 사회문화적 자본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전체 연령대에서 경제력의 빈곤수준이 높은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초기청년의 경우는 고용상태가 보다 열악한 반면, 후기청년의 경우는 주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4-5] 내재적 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그림 6-4-6] 내재적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한편, 내재적 가중치를 활용해서 청년가구 유형별로 구분해서 다차원 빈곤율을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차원 빈곤율은 청년단독가구가 1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청년가구, 부모+청년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청년부부가구의 순으로 나타난다.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차원 빈곤율이 상승했으며, 미세한 차이지만 청년부부+자녀가구와 청년부부가구 간의 역전이 발생했다. 그런데, 전체 소득 빈곤율 대비 가구유형별 소득 빈곤율은 가구유형별로 최소 34.2%(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최대 171.1%(청년단독가구)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 전체 다차원 빈곤율 대비 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율은 가구유형별로 최소 77.6%(청년부부가구)에서 최대 121.6%(청년단독가구)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소득 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의 가구유형별 편차가 작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5〉 내재적 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단독가구	14.1	5.8	2.3	0.9	1.9	1.6	1.5	6.5	9.2
청년부부가구	9.0	2.9	2.3	0.8	1.1	1.6	0.3	1.7	1.9
청년부부+자녀가구	9.1	3.3	1.7	0.7	1.5	1.1	0.8	1.3	1.7
부모+청년가구	11.8	2.7	1.1	1.0	3.1	1.9	2.0	3.5	6.3
기타청년가구	12.3	3.9	2.2	1.3	2.0	1.9	1.0	6.4	11.3
전체 청년가구	11.6	3.2	1.5	1.0	2.6	1.8	1.6	3.8	6.5

주 1)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청년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대상과 전체 청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2) 청년가구유형은 5장의 구분에 따르며, 전체 청년가구는 아래 유형 가구의 합산임.
-청년단독가구: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가구
-기타청년가구: 그 외 청년가구

3. 참여형 가중치 적용 시 다차원 빈곤

마지막으로 참여형 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의 다차원 빈곤율은 전체 12.2%, 청년 12.0%(초기 17.2%, 중후기 10.9%), 중장년 11.4%, 노인 20.3%로 각각 계산되었다. 다차원 빈곤율은 일반적인 소득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을 다른 연령대에 대비시켜 보면, 전체 빈곤율 대비 98.4%, 중장년 빈곤율 대비 105.3%, 노인빈곤율 대비 59.1%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의 소득빈곤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반면,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지 않거나 오히려 높다는 것으로써, 소득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청년층의 상대적인 빈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보다 참여형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다차원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중장년에 비해서 청년의 다차원 빈곤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중장년 대비 다차원 빈곤율 수준은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보다 더 커진다.

같은 자료의 같은 분석 대상의 소득빈곤율과 비교해보면, 즉 연령대별 소득빈곤율 대비 다차원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청년 3.2배, 중장년 2.0배, 노인 0.59배로 나타나 청년의 소득빈곤율 대비 다차원 빈곤율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아닌 다차원 개념을 적용할 경우 청년의 빈곤율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 비율은 전체 연령대에서 조금씩 더 높아졌으며,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중장년은 조금 더 감소한 반면, 나머지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6〉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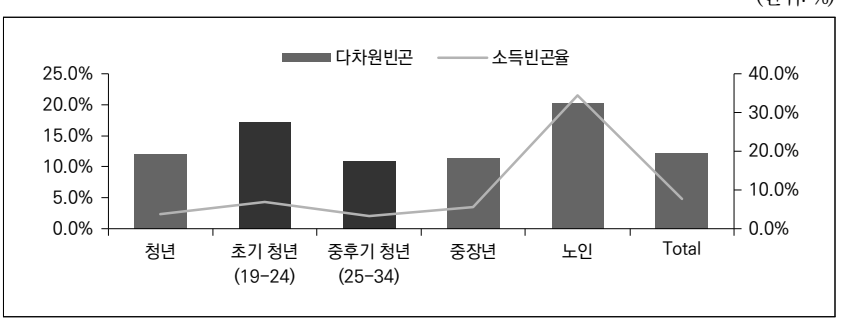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	12.0	4.6	1.7	0.9	2.9	0.9	1.0	3.8	6.0
19-24세	17.2	6.5	1.5	1.0	5.3	1.2	1.7	6.8	8.4
25-34세	10.9	4.2	1.7	0.9	2.4	0.9	0.9	3.1	5.5
중장년	11.4	3.9	1.3	1.9	2.2	1.2	0.8	5.6	9.8
노인	20.3	8.9	1.0	5.4	3.0	1.5	0.5	34.5	45.3
전체	12.2	4.5	1.4	1.9	2.4	1.2	0.8	7.6	13.5

주: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경우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 대상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그림 6-4-7]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과 소득빈곤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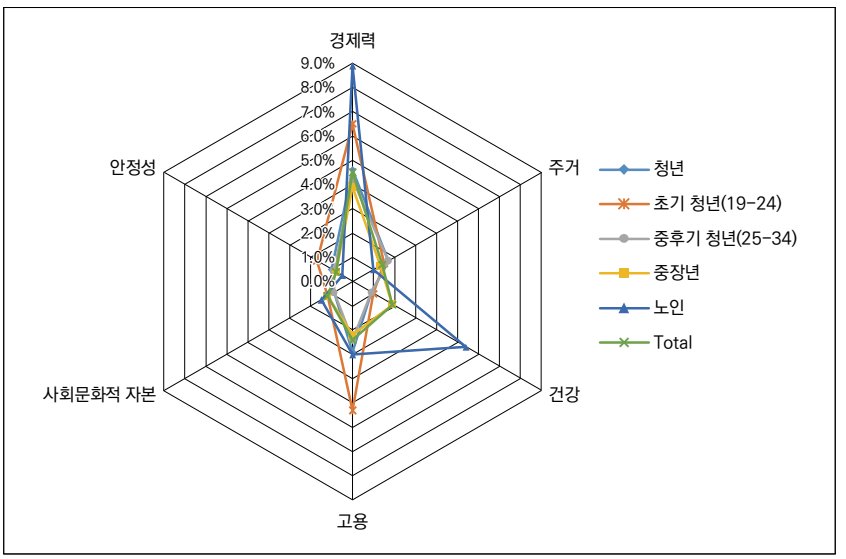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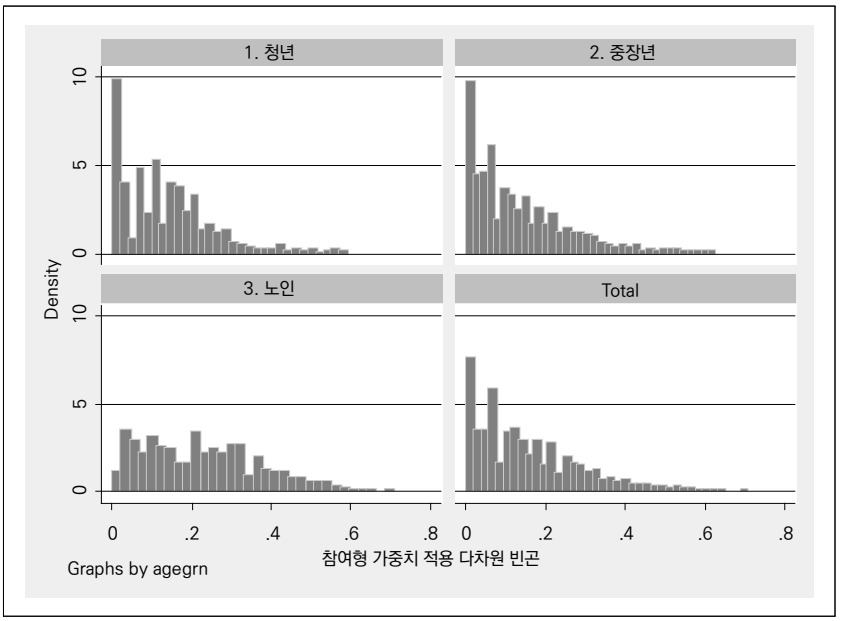
참여형 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의 차원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는 경제력 4.6%, 고용 2.9%, 주거 1.7%, 안정성 1.0%, 사회문화적 자본과 건강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차원별 빈곤율을 전체인구의 차원별 빈곤율과 대비시켜 보면, 안정성 125.0%), 주거 121.4%, 고용 120.8%, 경제력 102.2%, 사회문화적 자본 75.0%, 건강 47.4%의 순으

로 나타나 청년들은 안정성, 주거, 고용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다차원빈곤율에 대한 각 차원별 기여도(개별 차원빈곤율/다차원빈곤율)를 살펴보면, 청년전체는 경제력 38.1%, 고용 24.0%, 주거 13.8%, 안정성 8.5%, 사회문화적 자본 7.9%, 건강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연령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19~24세의 청년은 경제력 37.5%, 고용 31.0%, 안정성 10.1% 등의 순이고, 25~34세 청년은 경제력 38.2%, 고용 21.7%, 주거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년 전체 연령대에서 경제력의 빈곤수준이 높은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초기 청년의 경우는 고용상태가 보다 열악한 반면, 후기청년의 경우는 주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4-8] 참여형 가중치 적용 차원별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그림 6-4-9] 참여형 가중치 적용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 히스토그램



한편, 참여형 가중치를 활용해서 청년가구 유형별로 구분해서 다차원 빈곤율을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다차원 빈곤율은 청년단독가구가 1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청년가구, 부모+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의 순으로 나타난다. 동일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차원 빈곤율이 상승했으며, 내재적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발생했던 청년부부+자녀가구와 청년부부가구 간의 역전이 다시 한 번 발생했다. 전체 다차원 빈곤율 대비 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율은 가구유형별로 최소 85.0%(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최대 130.0%(청년단독가구)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소득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의 가구유형별 편차가 작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7〉 참여형 가중치 적용 청년가구유형별 다차원 빈곤

(단위: %)

구분	다차원 빈곤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 문화적 자본	안정성	소득 빈곤율	전체
청년단독가구	15.6	8.3	2.5	0.8	2.2	0.9	1.0	6.5	9.2
청년부부가구	10.5	4.1	3.3	0.8	1.3	0.8	0.2	1.7	1.9
청년부부+자녀가구	10.2	4.7	2.2	0.7	1.6	0.5	0.5	1.3	1.7
부모+청년가구	11.7	3.9	1.1	0.9	3.4	1.0	1.3	3.5	6.3
기타청년가구	13.5	5.7	2.6	1.2	2.2	1.0	0.6	6.4	11.3
전체 청년가구	12.0	4.6	1.7	0.9	2.9	0.9	1.0	3.8	6.5

주 1) 소득빈곤율은 가구원수 기준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인 청년의 비율이며, 비교를 위하여 6개 차원 19개 지표의 모든 지표값을 가지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분석 대상과 전체 청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율을 제시함.

2) 청년가구유형은 5장의 구분에 따르며, 전체 청년가구는 아래 유형 가구의 합산임.
-청년단독가구: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1인 가구
-청년부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가구
-청년부부+자녀가구: 가구주가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청년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19세 이상 35세 미만)가구
-기타청년가구: 그 외 청년가구

제 7 장 결론 및 정책대응 방안

제1절 결론 및 한계
제2절 정책대응 방안

7 결론 및 정책대응 방안

제1절 결론 및 한계

1. 결론

가. 청년정책

현재의 청년정책은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뚜렷하다. 그 가운데 여전히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가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거나, 정보가 한곳에 모아지기보다는 각종 해당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자 찾아가야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주로 고용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소득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를 꼽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청년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년주거지원도 부족해 보인다.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반이 정책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같이 청년층을 특화하여 지원하거나, 행복주택 공급과 같이 청년을 좀 더 세분화하여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청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나. 동태적 특성

경기침체기 청년입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취업을 한 사람은 계속 취업을, 비취업자는 계속 비취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상용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과 실질임금의 상태의존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기(1998~2003년)의 청년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청년기를 벗어난 시점(2015년)에 빈곤(중위소득 50% 기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기의 경제활동이 불안정할수록(최적매칭점수가 높을수록) 장년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 소득·지출·재산 빈곤 특성

청년의 경우 빈곤율의 절대적 수치는 작았지만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빈곤율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아동빈곤율과 노인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낮을 수 있으나, 청년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감소 폭(공적이전소득의 효과)이 작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청년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청년단독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 그 외 청년이 있는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청년단독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청년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뿐더러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율도 10년간 4.7%포인트의 증가 폭을 보였다.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청년들의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19~34세 전체 청년의 경우 2006년 기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의 빈곤율은 7.9%인 반면 비동거 청년의 경우 8.6%로 0.7%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서 2011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의 빈곤율은 6.4%인 반면 비동거 청년의 빈곤율은 8.5%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비동거 청년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청년의 빈곤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 주거빈곤 특성

청년가구유형별로 주거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의 월세 비중은 60% 이상을 웃돌아 압도적으로 높았고, 청년부부가구는 전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2006년 42.9%에서 38.2%로 4.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자가와 무상 및 기타의 점유 형태가 증가하였다. 청년부부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무상 및 기타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절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높은 청년단독가구에 주목할 만하다. 청년단독가구의 현재 주택유형에서 오피스텔은 2006년 11.5%에서 2016년 22.7%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단독가구가 2006년 14.4%, 2016년 6.8%, 기타청년가구가 2006년 14.2%, 2016년 7.9%로 각각 7.6%포인트, 6.3%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2014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감소하였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년단독가구와 청년부부가구의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은 이전에 비해 2016년에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청년단

독가구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주거빈곤가구 실태에서 최저주거기준만 미달하는 경우는 비교적 가구원수가 많은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2016년 48.3%)을 보였으며, 기타 청년가구와 청년부부+자녀가구는 그다음이었다. 다음으로 임대료 과부담(RIR 30% 이상)의 경우는 2006년에는 청년단독가구(23.6%),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가구(29.1%), 기타청년가구(25.3%)였다.

마. 시간사용 특성

저소득 계층 학생은 학습 시간이 일반 계층 학생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학교 공부와 자율적인 학습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일반 계층 청년들은 학원 수강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육아 유형 청년들의 경우 개인유지, 참여 및 봉사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에서 일반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서비스를 더 사용하고, 문화 생활과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였다. 취업준비 유형의 경우 개인유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학습에 투여하는 시간(약 3시간)과 교제·여가(5-6시간)에 사용하는 시간 또한 길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청년들에 비해 생활시간 사용 방식과 관련하여 소득계층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유형의 청년은 일 관련 시간에 투입하는 양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저소득 계층이 일 관련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일반 계층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계층 간의 일자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 청년 중에서 저소득 계층은 하루 평균 5시간 일을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계층(빈곤층일 가능성이 높음)에 속한다. 니트 유형과 이중 유형의 청년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문화

와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차이났다. 이중 역할 유형은 소득이 낮음에도 학습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았다. 저소득 계층의 이중 역할 유형에는 학생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중 역할 유형은 일 관련 활동에 투여하는 시간 또한 취업 유형 다음으로 많았다.

바.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다차원 빈곤을 구성하는 영역은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됐고, 해당 영역별 총 19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제11차(2015년 기준) 자료를 활용해서 각 지표별 빈곤율을 구해 보면 청년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 영역에서 중장년과 노인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였으며, 경제력과 고용 영역은 모두 크게 안정성의 영역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안정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중치는 동일가중치, 내재적 가중치, 참여형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였고, 각 가중치 부여 방법에 따라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세 가지 가중치에 따라 다차원 빈곤율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년의 경우 소득 빈곤율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고, 세대별 빈곤율 차이도 소득 빈곤율보다 다차원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차원적 빈곤 접근에 따르면 소득 빈곤에 비해 청년층의 상대적인 빈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청년연령대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가중치 부여 방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력과 고용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초기 청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고용과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반면, 후기 청년의 경우는

초기 청년에 비해 주거 차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청년가구 유형별로 다차원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청년단독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가중치 부여 방법에 따라 청년부부가구 또는 청년부부가구+자녀 가구의 다차원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먼저, 다양한 측면에서의 청년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당초 연구의 목적이 청년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고용정책 위주인 현재 청년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 역량을 세밀한 현황 분석에 집중한 탓이다. 각 영역별 빈곤원인을 밝히는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제6장의 다차원 빈곤에서 다루고 있는 각 영역별로 심층적인 상황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다차원 빈곤을 구성하는 경제력, 주거, 안정성,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중 경제력, 주거, 고용 부분은 제4장과 제5장에서 상세히 분석한 반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세 번째는 다차원 빈곤 분석의 경우 2015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한 나머지 동태적 변화를 살피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1차 자료부터 활용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청년들과 이후의 청년들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비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역시 향후 연구과제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정책대응 방안

청년빈곤정책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정책은 안정성과 전망 있는 고품질의 핵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이중구조 등)를 해결하는 것부터 멀게는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까지 결코 쉽지 않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될 수 있는 청년(빈곤)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고용, 소득, 주거의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문제 또는 청년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의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1. 청년정책 방향

*"청년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은 청년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존속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日本學術會議, 2017, p. 2)

*"성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이제 독립이 아니라 **상호 의존**일 것이다. 과거에는 혼자 헤쳐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각 단계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Settersten & Ray, 2012, p. 371)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목표를 세우고 책임감을 기르고 희망을 키우고,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술을 쌓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Settersten & Ray, 2012, p. 372)

"빈곤 위험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노동시장이 부여하는 기회로서 구조적 요소들이 개인적 특성 및 상황만큼이나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취업을 부추기는 정책은 반복빈곤을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빈곤율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없다. 분석 결과는, 자유주의적 레짐이든 보수적 레짐이든 간에, 구직활동을 자극하고 숙련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안정성과 전망 있는 고품질 핵심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여실히 보여준다."(Tomlinson & Walker, 201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고용정책 위주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어느 세대보다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 19~34세의 청년 연령에 포함되는 청년들은 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등으로 분화해 있고, 각각의 대상들은 또 다른 하위 계층을 형성하면서 주된 활동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계층들은 또 다시 가구 구성별로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연령의 특성상 원가구(부모와의 가구)에 속해 있는 청년, 새로운 가구(1인 가구, 부부 가구 등)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1인 가구는 다시 학업이나 취업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나 영구적으로 독립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 이들 집단은 다시 소득계층별로 크게 분화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상당히 이질적인 청년들을 고용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포괄하려 하는 것

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일본 학술회의에서 제안한 청년지원정책의 확충 방향은 “청년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청년 자신과 사회 전체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日本學術會議, 2017, p. 2).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선택과 활력으로 정책적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을 확충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구조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꼽을 수 있다.

둘째, 청년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소득, 취업역량, 노동시장 지위, 혼인상태, 가구구성 등을 기준으로 청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욕구에 맞는 정책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자신의 취업역량이 높은 유형은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저소득 가구의 취업역량이 낮은 유형은 소득지원, 교육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청년들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주거 등에 있어 상당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질적인 집단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접근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다차원적인 역량(capabilities)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학업 성취나 인적자본 개발에 있어서 조기 개입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출신 배경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결정되는 기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취약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의 불평등은 다시 기회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또한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귀착될 수 있는 소득지원방안으로 아동수당제도의 확장(대상과 급여수준), 교육비 지원 확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택부조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이들과 관련한 사회지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지만, 이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책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청년의 다양한 유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정책기구가 필요하다.[29]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정책이 개별화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청년정책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개별 청년정책의 중앙정부사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집행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앞선 논의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데, 향후 확장될 것으로 예

29) 참고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안들은 청년정책의 결정체계로 총리소속의 위원회(신보라 안, 박홍근 안, 이원욱 안, 김해영 안)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박주민 안, 강창일 안)를 제기하고 있고, 집행체계, 즉 주무부처로 기획재정부(신보라 안, 박주민 안), 국무조정실(박홍근 안, 이원욱 안, 김해영 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강창일 안)를 제기하고 있다.

상되는 청년정책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소득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수당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과 급여 결정에 있어서 소득인정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보장제도 이외의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회지출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빈곤 위험 계층은 말할 것도 없이 노인이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선진국인 OECD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청년들이 새로운 빈곤위험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높은 빈곤율을 보이던 노인들은 공적연금과 의료비 지출 확대로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반면, 청년들은 과거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정부의 이전지출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경기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최근 두 차례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와 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ECD, 2016; 김문길, 이주미, 2017, p. 21에서 재인용). 이는 사적 이전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향하지만 공적이전은 청년에서 노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Lee & Mason, 2011; 김문길, 이주미, 2017, p. 21에서 재인용)과 무관하지 않다. 전술한 것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적 현안이지만, OECD 국가의 이 같은 흐름과 그 이면에 있는 세대 간 이전(transfer)의 구조, 그리고 심각한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청년은 사회구조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들(예를 들어, 아동수당, 주거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부조 등)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근거 기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적 청년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주기적인 대규모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청년빈곤과 관련한 공식적인 통계지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는 빈곤지표는 아동, 노인, 여성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로는 10대, 20대, 30대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청년정책별 연령대별 빈곤지표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이 있지만, 이는 종단면 연구를 위해 작성되는 패널자료로서 횡단면적인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 그리고 조사대상 청년 연령을 15~29세로 한정하고 있어 30대 청년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법정 조사인 아동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가. 고용정책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1유형)과 청년 등(2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고용률 제고라는 당대 목표에 따라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2유형에 속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

지의 경우 학업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병행이 어려운 졸업반 학생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내실화를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취약성을 기준으로 욕구가 강한 청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취약 정도와 욕구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을 세분하고, 특히 취약한 청년에 대해서는 밀착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업성공수당을 악용하는 기업들[30]에 대응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수당·고용촉진지원금의 기준을 최저임금보다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주간 30시간·고용보험 자격취득의 조건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소득지원

미래 투자의 관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청년인지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빈곤청년, 빈곤위험 청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위한 청년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소득·재산이 아닌 청년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과 급여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가구의 성인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즉, 수급가구 자녀의 인적자본 수준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청년 자녀의 부양의무 부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모 등 원가족의 수급 탈락 위험에 따라 취업을 보류하는 등 기초보장 잔류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일정 연령의 청년(예컨대 25세까

30) 고용장려금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시 채용해서 고용장려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천영민 등, 2016. p. 230).

지)에게는 부양의무를 면제하거나 청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기초보장제도의 연계와 관련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중단 시 수급중단에 대한 공급자의 자의적 판단(고용센터는 중단, 주민센터는 지속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예컨대,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격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해 자활로 다시 들어오는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기존의 자활과 취성패의 중간영역)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안정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자산형성에도 큰 장애로 작용한다. 따라서 청년들의 부채문제, 특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입직기의 불안정한 고용이 이후 성인으로의 이행 이후 빈곤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앞선 분석 결과는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다. 주거지원

앞서 분석결과에서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 청년단독가구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초기청년보다 중기청년의 주거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단독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단독가구는 주로 학업과 취업에 따른 일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의 학업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고, 만혼 경향이 심해지면서 결혼으로의 이행도 지연되고 있어 청년단독가구의 유지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직장이행

과 결혼이행의 지연은 대체로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청년주거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청년주거정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나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주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공급물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년들의 주된 활동공간(학교나 직장 등)과 괴리된 입지문제, 일부 낮은 주거의 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셰어하우스)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성을 강요받게 되는 문제,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주거의 물리적, 사회적 조건들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3. 청년문제 또는 청년정책의 새로운 이슈들

이하의 내용들은 일본 학술회의에서 금년 7월에 발간한 『청년지원정책 확충을 위해』라는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내용들을 참고하였다. 일본의 청년정책은 주로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되는 히키코모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정책 대상을 포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기에 간략히 기술해 보고

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동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이슈는 안전망, 교육·인재육성, 고용·노동, 젠더, 지역·지방의 5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안전망은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와 차상위 제도인 생활빈곤자 자립지원, 그리고 주택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둘째, 교육·인재육성에 관해서는 직업훈련의 확충, 훈련내용 개선, 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고용·노동과 관련해서 장시간 노동 시정, 과로사 긴급 대책 개선, 근무시간 인터벌 규제 법제화, 노동조건의 격차 축소와 투명화, 노동조합 가입 장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젠더와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 한부모 여성의 취업과 생활보장에 관한 지원구조 강화, 기혼여성의 불이익 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지방과 관련해서 지역 NPO의 지원 구조 정비, 지방자치단체 빈곤 관련 조직과 포괄적 지원 조직간의 연계구조 정비, 지역 내외 청년들의 지역활성화 참여 장려,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등의 조직에서 남녀 동수 참여를 통한 여성 참가 보장, 장단기 국내유학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구혼활동 지원 내용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사회정책에 있어서 청년 인지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과 관련된 제도로 대학생 소득공제 등이 있지만 소위 청년 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할 과제들이 있다. 또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이를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충

이나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확대되거나 차질 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개편될 필요가 있고, 최근 특성화고등학생의 실습 기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에도 강력한 수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국가검진 대상에 근로청년 포함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청년정책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젠더 문제 또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전적 조치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등의 사후 조치가 필요하고, 청년여성 경력단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시정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성인으로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로들과 지원 자원들이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균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금봉. (2016).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 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6(1), 27-56, 한국노동연구원.

강성호, 김태완. (2013), 청년실업 경험과 연금수급권. 대한경영학회보. 26(6), 1597-1615. 한국경영학회.

고용노동부. (2017). 2017년 한 권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청년지원 프로그램 guide book.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7. 9. 16.). 전국 청년수당 모음zip.

경제관계장관회의. (2017. 3. 22.)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회의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에서 2017. 10. 30. 인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교통부. (2011).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11-490호(2011.5.27.)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국회도서관. 2017. 6. 10.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5. 7. 27.).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자료.

관계부처합동. (2016. 4. 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발표자료.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김경아. (2008).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황과 요인에 관한연구, 산업노동연구, 14(1), 25-51.

김경혜 등. (2010). 다차원적 빈곤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영.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3(3), 49-72.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한국사회보장학회.

김문길 등. (2015). 청년근로빈곤 사례조사 연구. 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김미곤 등. (2016). 청년근로빈곤 사례조사 연구. 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이주미. (2017). 청년 고용 및 빈곤의 국제적 조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4, 20-37.

김미곤. (1997).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 72-81.

김미곤 등. (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영, 박미려. (2017). 미취학 자요를 둔 맞벌이 가정의 시간빈곤 수준과 삶의 질:개인유지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간 비교. 대한가정학회. 55(1), 45-55.

김안국. (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23-52.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1-28.

김용탁, 구인순. (2013).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재활복지 17(4), pp. 151-176.

김윤태, 서재욱. (2015). 빈곤의 다차원성-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146-186.

김재호. (20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별 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9(3), 113-137.

김정운, 이장주. (2005). 여가와 삶의 질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15

김종진, 박자경. (2007). 근로장애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51-274.

김진욱, 고은주. (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김태운, 민인식. (2015).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전환에 관한 연구: 다중상태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 한국 사회복지 조사연구, 46, 195-222.

김태완, 김문길 등.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김진희. (2016). 청년근로빈곤에 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pp. 111-131.

김태완, 이주미. (2017). 중고령자 빈곤화 경로를 통해 본 노인빈곤 완화방안. 2017 경제학공동학술대회(한국사회보장학회). pp. 3-26.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6-19.

김혜영, 이은주, 윤홍식. (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1), 5-51.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권지웅, 이은진. (2013).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2013주거복지컨퍼런스. pp. 597-614.

노혜진. (201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빈곤, 페미니즘 연구, 13(2), 1-34.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냐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3-76.

박미선 등. (2014).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33-46.

박예은, 윤미, 이예솔, 이효진, 정익중. (2016). 시간빈곤이 일가정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한연구, 32(2), 35-56.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46(2), 101-123.

반정호. (2010). 청년고용과 소득불평등(빈곤). 노동리뷰, 68, 53-64.

방하남, 김기헌.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보건복지부. (2017).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서병수. (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

199-232.
서병수, 권종희. (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195-224.
서인주. (2011). 대학생의 시간아용행동에 관한 연구-학습, 아르바이트, 가정관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한연구. 상명대학교 사화과한연구소.
서지원. (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87-103.
석상훈, 김헌수. (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분석. 재정학연구, 5(3), 99-124.
안수찬. (2011). 그들과 통하는 길. 사람과 정책, 1(창간호), 민주정책연구원.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47-74.
양정승. (2017). 지난 10년간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 KRIVET Issue Brief, 12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유진, 김수정 등.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김미곤 등. (2012). 현세대 노인의 빈곤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등. (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등. (2016).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염주희, 정홍원, 최준영, 손정렬, 권규상. (2012). 빈곤층 라이프 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세란. (2017).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27(1), 255-278.
오지현, 여유진. (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 보건복지포럼, 158, 30-38.
우석진. (2011).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대응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2013).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윤정혜. (2004),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한국의 고용구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원종학, 김종면, 김형준. (2005).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청년실업을 중심으로. 조세재정연구원.

이려정. (2010). 대학생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생활만족 간 영향관계 연구. 관광연구논총, 22(2), 155-178.

이병희. (2001).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경력형성.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 동향분석, 108-130.

이병희(2013), 빈곤의 시간적 차원 분석에 기반한 빈곤정책적 함의, 사회보자연구, 제29권 제2호, pp.237-259

이상은. (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 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60(2), 53-76.

이선우. (2001). 장애인의 취업형태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21(2), 3-33.

이성민. (2010). 장애인가구의 빈곤화 메커니즘,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pp. 34-69.

이주미, 김태완. (2016). 다차원 빈곤 개념을 통한 청년빈곤의 측정.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pp. 85-108.

이주미, 김태완. (2016). 다차원 빈곤개념을 통한 청년빈곤의 측정. 201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태진 등. (2015).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김태완 등. (2016). 청년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정은희 등. (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수정, 유완식. (2011). 장애인의 빈곤결정요인. 한국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pp. 45-71.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임세희. (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 사회보장연구, 30(3), 215-244.
임완섭. (2016).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보건복지포럼, 236, 82-97.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17. 10. 30. 인출.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미옥 등. (2016). 사회조사와 인총 표본조사 연계자료 분석 및 활용. 통계개발원 201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정은희 등. (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 75-88.
차승은. (2014). 니트 청년의 시간활용에서의 특이성과 차별성: 청년기 가족 연구에 대한 시사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75-95.
천영민, 김태완, 김문길, 강금봉, 박소희(2016), 근로빈곤층 실패 파악 및 지원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각연도), 한국고용정보원(http://survey.keis.or.kr)
최균, 서병수, 권종희. (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85-111.
최옥금, 조영은. (2013).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최은영 등. (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최효미(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선, 2014 노동정책연구(제14권, 제1호)

통계청. (2014).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에서 2017. 7. 14. 인출.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5). 2014년 생활시간조사 개요. 통계청.

통계청. (2017).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17. 7. 19. 인출.

통계청. (201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3에서 2017. 7. 13. 인출.

통계청. (2017). 청년 고용 동향., http://www.index.go.kr에서 2017. 8. 9. 인출.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17. 10. 13. 인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17. 10. 13. 인출.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http://kosis.kr/index/index.do에서 2017. 9. 19. 인출.

하성규. (2010). Housing affordability : 이슈와 전망.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11. 1-18.

홍백의, 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r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헤럴드경제. (2017. 5. 27.). 2017년 6월 15일 인출.

日本學術會議 社會學委員會 社會變動 若者問題分科會. (2017), 若者支援政策の擴充に向けて.

Alex F. Schartz (2006). Housing Policy in then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Alkire, S., & Foster, J. (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 476-487. doi: 10.1016/j.jpubeco.2010.11.006

Alkire, S., & Santos, M. E. (2013). A Multidimensional Approach: Poverty Measurement & Beyo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2), 239-257. doi: 10.1007/s11205-013-0257-3

Alkire, S., Foster, J., Seth, S., Santos, M. E., Roche, J. M., & Ballon, P. (2015).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New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Altonji, J. G., L. B. Kahn, & J. D. Speer. (2016). Casher or consuktant? Entry labor market conditions, field of studu, and career success.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1), 361-401.

Atkinson, A. (2003).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Contrasting social welfare and counting approaches.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 51-65.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Measure of Australias Progress. ABS.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3). Housing Assistance in Australia.

Battiston, D., Cruces, Gl, Lopez-Calva, L., Lugo, M. A., & Santos, M. (2013). Income and Beyond: Multidimensional Poverty in Six Latin American Count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2), 291-314.

Bennet, C. & Mitra, S. (2013)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estimation and inference. E*conometric Reveiws*. 32(1) 57-83.

Cockx, B., & Ghirelli, C. (2016). Scars of recessions in a rigid labor market. *Labor Economics, 41*, 162-176.

Cockx, B. (2016). Do youths graduating in a recession incur Permanent Losses? Penalties may last ten year or more, especially for high-educated youth and in rigid labor markets. *IZA World of Labor 281.*

Cowling, K, Dandona, R., & Dandona, L. (2014).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 India: Progress and inequalities across area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3., 1-12.

Ellwood, D. (1982). *Teenage Unemployment: Permanent Scar or Temporary Blemishes*. in Freeman, R.B., and D. A. Wise, ed,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pp. 349-38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uropean Commission. (2001), White Paper on Youth.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f 21 November 2001 – A new impetus of European youth.

Frame, E., de Lannoy, A., & Leibbrandt, M. (2016), Measu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youth in South Africa at the sub-national level. *Working Paper Series 169*. Southern Africa Labour and Development Research Unit

Genda, Y., Kondo, A. & Otha, S. (2010). Long-term effects of recession at labor market entry in Japan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1), 157-196.

Giovannini, E. (2017). Experiences and Challenges on GDP plus Beyond Issues. *KOST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DP plus Beyond 자료집*.

Heckman, J. J. (1981). *The incidental parameters problem and the problem of initial conditions in estimating a discrete time-discrete data stochastic process*, in C. F. Manski and D. McFadden(eds), Structural Analysis of Discrete Data with Econometric Applications. Cambridge: MIT Press,.

HUD. (2013). Worst Case Housing Needs: Report to Congress.

Hulchinski, David and Michael Shapcott eds. (2004), Finding Room: Policy Options for a Canadian Rental Housing Strategy. Toronto: Center for Urban and Community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Jewkes, M. D. & Delgadillo, L. M. (2010). Weaknesses of housing affordability indices used by practitioner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1), 43-52.

Kahn, A., Saboor, A., Hussain, A., Sadiq, S., & Mohsin, A. (2014). Investigat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cross the regions in the Sindh province of Pakista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2), 515-532.

Kudo Kei & Nishida Ryosuke. (2014). 무업사회(곽유나, 오오쿠사 미노루 옮김). 펜타그램.(원서출판 2014).

Kondo, A. (2015). Differential effects of graduating during a recession across gender and race. *IZA Journal of Labor Economics, 4*(23), 1-24.

Lee, R. D., & Mason, A.,(eds) (2011). *Population Aging and the Generational Economy: A Glob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Machado, A., Golgher, A., & Antigo, M. (2014) Deprivation viewed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The case of Brazil. E*CLAC Review*. 112, 125-146.

Matsuyama, J. (2016). Measuring Poverty in Japan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forthcoming.

Meyer, I. H., Schwartz, S., & Frost, D. M. (2008). Social Patterning of stress and coping: Does disadvantaged social status confer more stress and fewer copinf resourc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7*(3), 363-379.

Mitra S., Jones, K., Vick, B., Brown, D., McGinn E., & Alexander J. (2013). Implementing a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 Using Mixed Methods and Participatory Framework.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 1061-1081.

Morris, E.W. & Winter, M. (1996). Housing, Family, and Society, Revised Edit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Nussbaum, M.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2016), OECD Society at a Glace 2016, p. 34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oe.cd/idd에서 2017. 1. 5. 인출

Oreopoulos, P., T. von Wacher, & Heisz, A. (2012). The short- and long-term carr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 4*(1), 1-29.

Oshio, T. & Kan, M. (2014)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health: evidence from a nationwide survey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3: 128.

Ray, R., & Sinha, K. (2015).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 China, India and Vietnam: A Comparative study on micro data.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6(1), 69-93.

Rippin, R. (2012). Operationalising the Capability Approach: A German Correlation Sensitive Poverty Index. Discussion Papers

No. 132. Courant Research Centre, George-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93-117.

Roche, J. (2013). Monitoring progress in child poverty reduction: Methodological insights and illustration to the case study of Bangladesh.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2), 363-390.

Rowntree, Seebohm, (1901).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London: Macmillan.

Santos, M. (2013). Tracking poverty reduction in Bhutan: Income deprivation alongside deprivation in other sources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2), 259-290.

Scarpetta, S., Anne, S., & Thoma, M. (2010). Rising Youth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Paper*s. no. 106.

Settersten, R, & Barbara E. Ray. (2012). 20대=독립은 끝났다(이경남, 역). 에코의 서재.(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2010)

Speer, J. D. (2016). Wages, hour, and the school-to work transition: The Consequences of leaving school in a recession for less-educated men,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6*(1), 97-124.

Stewart, M. B. (2006).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 of random-effect dynamic probit models with auto correlated errors, *The Stata Journal, 6*(2), 256-272.

Suppa, N. (2015). Toward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for Germany. *OPHI Working Paper* 98, University of Oxford.

Suppa, N. (2016). Comparing Monetar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in Germany. *OPHI Working Paper 103*, University of Oxfor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for the SDGs.

Tomlinson, M., & Walker, P. (2012), 노동시장 불이익과 반복 빈곤 경험. In Emmenegger, P., Ha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한국노동연구원). 이중화의 시대: 탈산업 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06). Housing impact analysi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Vijaya, R., Lahoti, R., & Swaminathan, H. (2014). Moving from the Household to the Individual: Multidimensional Poverty Analysis. *World Development*, 59, 70-81.

Villalba, J., Liu, Y., Alvarez, M., Calderon, L., Canache, M., Cardenas, G., et al. (2013). Low Child Survival Index in a Multidimensionally Poor Amerindian Population in Venezuela, *Plos One*, 8(12).

Wagle, U. R. (2014). The Counting-Based Measuremen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he Focus on Economic Resources, Inner Capabilities, and Relational Resourc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5, 223-240.

Whelan, C. T., Nolan, B., Maître, B. (2014). Mun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in Europe: An application of the adjusted headcount approach.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4(2). 183-197.

Yu, J. (2013). Multidimensional poverty in China: Findings based on the CH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2), 315-336.

부 록

1. 경기침체기 입직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부표 1-1〉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취업 결정요인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24세	25~29세	30~34세
전기취업여부(비취업 기준)									
취업	0.980***	1.040***	0.552***	0.993***	0.802***	0.964***	0.562***	0.843***	1.263***
	[0.025]	[0.027]	[0.067]	[0.030]	[0.067]	[0.060]	[0.053]	[0.042]	[0.039]
성별(여성 기준)									
남성	0.471***			0.480***	0.426***	0.640***	0.256***	0.742***	0.465***
	[0.037]			[0.047]	[0.102]	[0.085]	[0.069]	[0.060]	[0.074]
연령대(20~24세 기준)									
25~29세	-0.015	0.025	0.140**	0.135***	-0.077	-0.278***			
	[0.033]	[0.039]	[0.068]	[0.044]	[0.074]	[0.074]			
30~34세	0.205***	0.317***	0.059	0.377***	0.302***	-0.301***			
	[0.034]	[0.040]	[0.071]	[0.044]	[0.091]	[0.076]			
학력(고졸 기준)									
전문대졸	0.171***	0.119***	0.142**				0.452***	0.066	0.081
	[0.035]	[0.041]	[0.070]				[0.062]	[0.056]	[0.069]
4년제졸 이상	0.226***	0.238***	0.107*				0.682***	0.237***	-0.020
	[0.031]	[0.038]	[0.060]				[0.065]	[0.054]	[0.050]
배우자(무기준)									
유=1	-0.104***	-0.595***	0.731***	-0.028	-0.536***	-0.012	-0.493***	-0.014	0.274***
	[0.033]	[0.046]	[0.078]	[0.042]	[0.082]	[0.075]	[0.056]	[0.058]	[0.066]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664***	0.082	0.373***	0.682***	0.837***	0.538***	1.025***	0.650***	0.575***
	[0.039]	[0.063]	[0.081]	[0.048]	[0.113]	[0.086]	[0.083]	[0.062]	[0.075]
거주지(서울 기준)									
광역시=1	-0.056*	-0.068*	-0.123*	-0.142***	0.400***	-0.019	-0.106	-0.033	-0.051
	[0.034]	[0.040]	[0.073]	[0.042]	[0.096]	[0.080]	[0.091]	[0.056]	[0.052]
도=1	0.023	0.040	-0.035	-0.003	0.348***	-0.122*	0.063	0.063	-0.015
	[0.032]	[0.037]	[0.069]	[0.040]	[0.082]	[0.073]	[0.086]	[0.051]	[0.048]
가구원수									
가구원수	0.025**	0.013	-0.093***	0.025*	0.011	0.041	0.041*	0.019	0.000
	[0.011]	[0.014]	[0.022]	[0.014]	[0.031]	[0.027]	[0.023]	[0.020]	[0.019]
상수	-0.582***	-0.168**	0.476***	-0.751***	-0.239	-0.151	-0.361***	-0.647***	-0.719***
	[0.061]	[0.081]	[0.136]	[0.076]	[0.152]	[0.129]	[0.133]	[0.091]	[0.098]
prob>ch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치	16,949	9,860	7,089	10,963	2,459	3,527	3,196	5,747	8,006

*** p<0.01, ** p<0.05, * p<0.1

〈부표 1-2〉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상용직 결정요인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전기취업 여부(비취업 기준)									
취업	1.259***	1.139***	1.396***	1.233***	1.089***	1.434***	0.797***	1.194***	1.487***
	[0.022]	[0.030]	[0.034]	[0.028]	[0.058]	[0.049]	[0.049]	[0.039]	[0.033]
성별(여성 기준)									
남성	0.242***			0.191***	0.335***	0.449***	0.145**	0.375***	0.317***
	[0.033]			[0.042]	[0.087]	[0.077]	[0.062]	[0.054]	[0.065]
연령대(20~24세 기준)									
25~29세	-0.115***	-0.103**	-0.051	-0.042	-0.099	-0.299***			
	[0.032]	[0.041]	[0.054]	[0.044]	[0.069]	[0.068]			
30~34세	-0.096***	0.041	-0.197***	-0.020	-0.238***	-0.233***			
	[0.032]	[0.041]	[0.054]	[0.043]	[0.080]	[0.068]			
학력(고졸 기준)									
전문대졸	0.293***	0.223***	0.331***				0.477***	0.325***	0.130**
	[0.032]	[0.043]	[0.050]				[0.059]	[0.052]	[0.059]
4년제졸 이상	0.305***	0.275***	0.310***				0.507***	0.227***	0.253***
	[0.028]	[0.039]	[0.041]				[0.060]	[0.049]	[0.042]
배우자(무기준)									
유=1	-0.237***	-0.669***	0.254***	-0.177***	-0.491***	-0.261***	-0.464***	-0.238***	-0.071
	[0.030]	[0.046]	[0.061]	[0.038]	[0.073]	[0.069]	[0.051]	[0.054]	[0.058]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301***	-0.106*	0.086	0.332***	0.377***	0.118	0.567***	0.380***	0.090
	[0.035]	[0.063]	[0.066]	[0.043]	[0.092]	[0.079]	[0.072]	[0.056]	[0.066]
거주지(서울 기준)									
광역시=1	0.005	-0.057	0.044	0.020	0.232***	-0.162**	-0.079	-0.079	0.089*
	[0.032]	[0.042]	[0.051]	[0.040]	[0.089]	[0.069]	[0.084]	[0.055]	[0.046]
도=1	-0.008	0.029	-0.048	-0.007	0.260***	-0.147**	0.107	-0.025	-0.026
	[0.030]	[0.039]	[0.047]	[0.038]	[0.078]	[0.064]	[0.080]	[0.050]	[0.043]
가구원수									
가구원수	-0.002	-0.023	-0.074***	0.009	0.010	-0.046*	0.032	0.020	-0.028*
	[0.010]	[0.015]	[0.017]	[0.013]	[0.027]	[0.024]	[0.021]	[0.019]	[0.017]
상수	-0.785***	-0.311***	-0.508***	-0.923***	-0.504***	-0.170	-0.719***	-0.992***	-0.959***
	[0.054]	[0.084]	[0.096]	[0.069]	[0.131]	[0.112]	[0.119]	[0.081]	[0.084]
prob>ch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치	16,949	9,860	7,089	10,955	2,464	3,530	3,196	5,744	8,009

*** p<0.01, ** p<0.05, * p<0.1

〈부표 1-3〉 경기침체기의 청년입직자의 임금결정요인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24세	25~29세	30~34세
전기취업여부									
취업=1	0.116***	0.117***	0.172***	0.086***	0.052*	0.107***	0.131***	0.077***	0.127***
	[0.012]	[0.019]	[0.015]	[0.016]	[0.027]	[0.022]	[0.025]	[0.021]	[0.017]
성별(여성 기준)									
남성=1	0.135***		0.326***	0.172***	0.181**	-0.065	0.043	0.195***	0.173***
	[0.033]		[0.073]	[0.046]	[0.087]	[0.071]	[0.052]	[0.056]	[0.064]
연령대(20~24세 기준)									
25~29세	-0.072**	-0.132**	0.036	-0.005	-0.067	-0.139**		0.233***	
	[0.036]	[0.056]	[0.042]	[0.058]	[0.087]	[0.071]		[0.079]	
30~34세	-0.104***	-0.088	-0.043	-0.075	-0.126	-0.062			0.453***
	[0.036]	[0.055]	[0.043]	[0.056]	[0.097]	[0.069]			[0.084]
학력(고졸 기준)									
전문대졸=1	0.311***	0.267***	0.301***				0.307***	0.242***	0.360***
	[0.033]	[0.053]	[0.038]				[0.051]	[0.056]	[0.064]
4년제졸 이상=1	0.563***	0.706***	0.430***			1.079***	0.555***	0.492***	0.600***
	[0.029]	[0.051]	[0.032]			[0.096]	[0.053]	[0.054]	[0.046]
배우자(무기준)									
유=1	0.221***	0.154***	0.136***	0.142***	0.329***	0.301***	0.338***	0.136***	0.107**
	[0.025]	[0.043]	[0.043]	[0.037]	[0.054]	[0.045]	[0.036]	[0.046]	[0.053]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328***	0.139**	0.401***	0.381***	0.296***	0.294***	0.214***	0.436***	0.265***
	[0.030]	[0.062]	[0.046]	[0.042]	[0.067]	[0.059]	[0.051]	[0.049]	[0.059]
거주지(서울 기준)									
광역시=1	-0.051	-0.093*	-0.023	-0.016	0.148	-0.204***	-0.103	-0.078	-0.023
	[0.033]	[0.053]	[0.038]	[0.048]	[0.099]	[0.063]	[0.070]	[0.059]	[0.050]
도=1	-0.006	0.029	-0.023	0.053	0.202**	-0.179***	0.027	-0.025	-0.021
	[0.030]	[0.049]	[0.035]	[0.043]	[0.087]	[0.055]	[0.066]	[0.052]	[0.045]
가구원수									
가구원수	0.027***	-0.051***	0.067***	0.029**	0.009	0.059***	0.002	0.081***	0.015
	[0.009]	[0.016]	[0.013]	[0.013]	[0.021]	[0.017]	[0.015]	[0.017]	[0.017]
상수	0.427***	0.776***	0.000	0.386***	0.615***	0.000	0.519***	0.000	0.000
	[0.054]	[0.099]	[0.000]	[0.081]	[0.127]	[0.000]	[0.097]	[0.000]	[0.000]
R2	0.3003	0.3060	0.2497	0.1856	0.1981	0.1176	0.2998	0.2687	0.3348
관측치	6,796	2,650	4,146	3,894	1,116	1,786	1,321	2,180	3,295

*** p<0.01, ** p<0.05, * p<0.1

〈부표 1-4〉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60%기준)에 미치는 효과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24세	25~29세	30~34세
생애경제활동상태									
최적매칭점수	0.179***	0.146	0.287***	0.140*	-0.086	0.526***	0.065	0.358***	0.190*
	[0.064]	[0.096]	[0.090]	[0.083]	[0.178]	[0.143]	[0.150]	[0.119]	[0.098]
성별(여성 기준)									
남성	0.198			0.160	-0.215	0.328	-0.078	0.066	0.582**
	[0.123]			[0.156]	[0.336]	[0.286]	[0.254]	[0.207]	[0.227]
연령대(20~24세 기준)									
25~29세	-0.064	-0.159	0.278	-0.242	-0.008	0.352			
	[0.125]	[0.162]	[0.221]	[0.170]	[0.306]	[0.268]			
30~34세	-0.128	-0.354**	0.370*	-0.345**	-0.085	0.528**			
	[0.123]	[0.167]	[0.217]	[0.164]	[0.379]	[0.264]			
학력(고졸 기준)									
전문대졸	-0.173	-0.144	-0.377				-0.234	-0.067	-0.301
	[0.143]	[0.187]	[0.243]				[0.250]	[0.232]	[0.308]
4년제졸 이상	-0.138	-0.293*	-0.031				-0.501**	-0.071	0.107
	[0.114]	[0.165]	[0.164]				[0.237]	[0.199]	[0.180]
배우자(무기준)									
유=1	-0.953***	-0.741***	-0.870***	-0.782***	-1.334***	-1.479***	-1.101***	-0.919***	-0.965***
	[0.129]	[0.208]	[0.236]	[0.159]	[0.390]	[0.337]	[0.281]	[0.262]	[0.195]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151	0.053	-0.630**	-0.084	-0.176	0.029	-0.213	0.131	-0.408*
	[0.128]	[0.206]	[0.259]	[0.168]	[0.334]	[0.306]	[0.263]	[0.217]	[0.232]
거주지(서울 기준)									
광역시=1	-0.026	-0.205	0.246	-0.242	0.086	0.449	-0.520*	0.186	-0.047
	[0.129]	[0.171]	[0.203]	[0.160]	[0.405]	[0.291]	[0.299]	[0.212]	[0.206]
도=1	-0.141	-0.243	-0.050	-0.291*	0.081	0.118	-0.333	-0.286	-0.017
	[0.121]	[0.157]	[0.194]	[0.150]	[0.368]	[0.280]	[0.275]	[0.207]	[0.186]
가구원수									
가구원수	0.026	-0.029	0.047	-0.029	0.124	0.203*	0.249**	0.035	-0.101
	[0.048]	[0.069]	[0.075]	[0.057]	[0.160]	[0.120]	[0.110]	[0.098]	[0.070]
상수	-0.560**	-0.276	-0.675*	-0.147	-0.559	-2.182***	-0.611	-1.043***	-0.391
	[0.227]	[0.353]	[0.400]	[0.289]	[0.584]	[0.519]	[0.466]	[0.375]	[0.335]
prob>ch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치	1,410	789	621	820	216	374	314	486	610

*** p<0.01, ** p<0.05, * p<0.1
주: 빈곤선은 중위가구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함.

〈부표 1-5〉 경기침체기 경제활동상태가 빈곤상태(중위소득 70% 기준)에 미치는 효과

	전체	여성	남성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졸 이상	20~24세	25~29세	30~34세
생애경제활동상태									
최적매칭점수	0.178***	0.089	0.331***	0.166**	-0.061	0.466***	0.016	0.256**	0.267***
	[0.058]	[0.086]	[0.082]	[0.076]	[0.154]	[0.129]	[0.137]	[0.104]	[0.090]
성별(여성 기준)									
남성	0.059			0.088	-0.509*	0.232	-0.270	-0.081	0.547**
	[0.115]			[0.149]	[0.304]	[0.268]	[0.229]	[0.191]	[0.217]
연령대(20~24세 기준)									
25~29세	-0.052	-0.071	0.188	-0.219	-0.005	0.359			
	[0.113]	[0.148]	[0.196]	[0.156]	[0.268]	[0.246]			
30~34세	-0.185	-0.385**	0.253	-0.390**	-0.178	0.476**			
	[0.113]	[0.153]	[0.192]	[0.152]	[0.334]	[0.242]			
학력(고졸기 준)									
전문대졸	-0.194	-0.179	-0.405*				-0.274	-0.127	-0.369
	[0.128]	[0.168]	[0.216]				[0.226]	[0.205]	[0.278]
4년제졸 이상	-0.240**	-0.459***	-0.086				-0.607***	-0.176	0.027
	[0.105]	[0.154]	[0.150]				[0.218]	[0.180]	[0.167]
배우자(무기준)									
유=1	-0.987***	-0.834***	-0.945***	-0.870***	-1.130***	-1.644***	-1.296***	-1.033***	-0.944***
	[0.122]	[0.194]	[0.225]	[0.151]	[0.358]	[0.326]	[0.272]	[0.237]	[0.186]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017	0.101	-0.428*	-0.019	0.208	0.250	0.233	0.089	-0.249
	[0.120]	[0.188]	[0.248]	[0.158]	[0.298]	[0.292]	[0.235]	[0.199]	[0.221]
거주지(서울 기준)									
광역시=1	-0.062	-0.255	0.257	-0.241	-0.251	0.567**	-0.348	0.048	-0.047
	[0.118]	[0.156]	[0.187]	[0.148]	[0.335]	[0.277]	[0.278]	[0.192]	[0.187]
도=1	-0.190*	-0.301**	-0.068	-0.316**	-0.294	0.284	-0.216	-0.361**	-0.082
	[0.110]	[0.144]	[0.177]	[0.138]	[0.298]	[0.263]	[0.260]	[0.182]	[0.169]
가구원수									
가구원수	0.066	-0.023	0.123*	0.024	0.143	0.227**	0.354***	0.082	-0.080
	[0.045]	[0.064]	[0.072]	[0.053]	[0.146]	[0.115]	[0.105]	[0.087]	[0.066]
상수	-0.375*	0.159	-0.769**	-0.017	-0.290	-2.062***	-0.726*	-0.507	-0.379
	[0.210]	[0.327]	[0.378]	[0.269]	[0.505]	[0.488]	[0.431]	[0.337]	[0.311]
prob>ch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관측치	1,410	789	621	820	216	374	314	486	610

*** p<0.01, ** p<0.05, * p<0.1

주: 빈곤선은 중위가구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함.

2. 시간사용: 청년층의 역할과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부표 2-1〉 학생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78)		저소득(n=368)		t-test
	평균	SD	평균	SD	
수면	493.1	110.7	488.0	110.3	
잠 못 이룸	0.3	3.0	0.5	3.9	
수면(중분류)	493.1	110.7	488.4	110.4	
식사	81.4	31.5	76.8	30.4	
간식·음료	**28.9**	**33.1**	**24.6**	**30.4**	*
식사 및 간식 시간(중분류)	110.3	43.7	101.3	42.6	**
자기 치료	0.3	4.2	0.2	1.6	
아파서 쉼	0.1	2.2	0.1	3.1	
의료서비스 받기	**1.3**	**11.5**	**0.4**	**4.0**	*
개인 건강관리 시간(중분류)	1.8	12.6	0.6	6.0	
개인위생	63.6	27.9	63.1	26.5	
외모관리	16.7	17.4	17.2	19.3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0.8	9.4	0.4	4.1	
기타 개인유지	0.1	1.4	0.1	2.0	
기타 개인유지(중분류)	81.2	34.9	80.9	32.5	
1.개인유지(대분류)	686.6	118.3	671.2	113.0	
주업	0.0	207.9	0.0	0.0	
부업	0.0	36.2	0.0	0.0	
농림어업 무급가족 일	0.3	0.0	0.0	9.3	
농림어업 외 무급가족일	0.7	40.6	0.0	13.6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0.0	0.0	0.2	0.0	
일 중 휴식	0.0	8.0	0.0	0.0	
일 관련 연수	0.0	0.0	0.0	0.0	
기타 일 관련 행동	0.0	28.0	0.1	0.4	
고용된 일 및 자영업(중분류)	0.9	215.9	0.3	16.4	
구직활동 (중분류)(소분류)	0.6	17.6	0.5	7.3	
2. 일(대분류)	1.5	215.5	0.8	17.9	
학교수업	123.2	100.7	140.6	146.7	
학교수업 간 휴식	1.9	5.1	1.9	6.6	
학교 자율학습	3.4	11.1	9.0	24.4	
학교 행사	3.2	3.6	2.2	26.9	
기타 학교 활동	9.9	19.2	13.2	38.3	
학교 활동(중분류)	141.6	110.6	166.9	160.2	*
학원 수강	7.7	18.1	1.5	43.1	**
방송·인터넷 수강	10.1	18.9	5.5	44.2	
스스로 학습	117.4	110.8	138.9	139.4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78)		저소득(n=368)		t-test
	평균	SD	평균	SD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2.4	12.0	9.1	17.4	
학교 활동 외 학습 총량(중분류)	137.6	117.7	155.0	154.4	
3 학습(대분류)	279.2	166.2	321.9	199.6	**
식사준비	3.9	13.5	6.6	12.1	**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0.4	4.5	0.3	4.1	
설거지·식후 정리	3.2	9.8	4.3	8.9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0.0	1.3	0.0	0.0	
음식 준비 총시간(중분류)	7.5	20.3	11.2	19.4	*
세탁하기	0.9	4.9	1.8	5.2	*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0.0	0.9	0.1	1.1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세탁 총시간(중분류)	0.9	4.9	1.9	5.3	*
청소	2.6	14.3	5.1	9.7	**
정리	5.1	16.0	3.4	13.6	*
쓰레기 버리기	0.1	1.7	0.2	1.5	
청소 정리 총시간(중분류)	7.9	23.3	8.7	17.1	
주거 관리	0.0	0.0	0.0	0.0	
가정용품 관리·제작	0.2	1.7	0.1	3.2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0.0	17.0	0.0	0.0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0.1	1.2	0.2	1.7	
주거관리 총시간(중분류)	0.2	17.2	0.3	3.6	
차량 관리하기	0.0	4.0	0.0	1.6	
차량 서비스 받기	0.0	1.3	0.1	0.7	
차량 관리(중분류)	0.1	4.2	0.1	1.7	
애완동물 돌보기	1.1	10.9	0.8	8.1	
식물 돌보기	0.0	0.0	0.0	0.0	
애완 동·식물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애완동식물 돌본 총시간(중분류)	1.1	10.9	0.8	8.1	
상품 매장 쇼핑	8.4	27.2	6.2	24.9	
상품 온라인 쇼핑	2.8	15.7	1.9	14.1	
서비스 현장 구입	0.5	4.9	0.4	4.0	
서비스 온라인 구입	0.1	2.4	0.2	1.8	
기타 쇼핑 관련 행동	0.0	2.5	0.0	0.0	
상품·서비스 구입 총시간(중분류)	11.8	32.6	8.6	29.3	*
가계부 정리	0.0	1.3	0.0	0.0	
금융기관 이용	0.3	1.1	0.0	3.4	*
관공서 등 이용	0.0	0.0	0.0	0.7	
기타 가정관리	0.0	0.0	0.0	1.0	
기타 가정관리 총시간(중분류)	0.4	1.7	0.1	3.6	*
4. 가정관리 (대분류)	29.9	55.0	31.6	45.8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0.8	22.5	0.6	9.8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78)		저소득(n=368)		t-test
	평균	SD	평균	SD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0.0	1.3	0.0	1.1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만 10세 미만)	0.5	12.2	0.3	7.1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0.1	4.5	0.0	1.1	
동거 10이하 아동 돌봄(중분류)	1.3	32.9	0.9	18.3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0.0	0.0	0.0	1.2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0.3	2.3	0.0	4.5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0.1	2.6	0.0	2.8	
동거 10세 이상 돌봄(중분류)	1.2	0.4	1.0	1.3	*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0.0	0.8	0.0	0.4	
동거 배우자 돌봄(중분류)	0.0	0.8	0.0	0.4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1	0.0	0.0	2.5	
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1	0.0	0.0	2.5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6.5	0.0	0.0	
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0	6.5	0.0	0.0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1.1	0.0	0.0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1	1.5	0.0	2.0	
비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1	1.8	0.0	2.0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0.3	7.4	0.2	6.3	
비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3	7.6	0.2	6.6	
5 가족 가구원돌 봄(대분류)	2.3	34.5	1.1	20.7	
의무적 참여 활동	0.0	0.0	0.0	0.0	
자녀교육 관련	0.0	0.0	0.0	0.0	
기타 참여 활동	0.0	1.3	0.7	0.0	
참여 활동(중분류)	0.0	1.3	0.7	0.0	
국가·지역 행사 관련	0.2	8.5	0.0	8.8	
소외계층 관련	1.3	0.0	2.7	20.6	
재해주민 관련	0.0	0.0	0.0	0.0	
기타 자원봉사	1.0	16.8	0.4	14.6	
자원봉사(중분류)	2.6	18.8	3.1	27.6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0.1	0.7	0.0	1.5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5	0.0	0.0	11.4	
가사 활동 돕기	0.4	6.2	0.5	11.4	
기타 돕기	0.2	3.7	0.0	4.5	
친분인 돕기(중분류)	1.2	7.8	0.5	16.7	
6. 참여 및 참여봉사 (대분류)	4.0	21.6	4.5	32.8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78)		저소득(n=368)		t-test
	평균	SD	평균	SD	
대면교제	36.6	45.2	35.7	46.0	
화상·음성교제	9.9	18.5	9.2	20.4	
문자·메일교제	15.1	24.5	12.0	28.3	
기타 교제활동	0.1	0.0	0.0	3.0	
교제활동(중분류)	199.6	54.4	194.9	59.8	
책 읽기	12.0	31.5	12.0	35.6	
신문 보기	0.5	4.3	0.4	4.7	
잡지 보기	0.6	2.3	0.0	5.1	**
실시간 방송보기	64.3	80.3	55.8	83.0	
비디오 보기	4.6	18.1	8.4	26.1	
라디오 듣기	0.4	2.1	0.0	4.0	*
오디오 듣기	2.2	8.8	2.3	9.8	
인터넷 정보검색	33.3	47.2	29.1	58.1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2.3	6.1	2.9	13.2	
미디어 여가(중분류)	120.1	106.5	110.7	116.4	
개인적 종교 활동	2.0	11.2	1.6	19.8	
종교 집회 · 모임 참가	4.3	23.2	2.4	28.4	
기타 종교 관련 활동	1.8	17.5	1.0	20.4	
종교 총량(중분류)	8.1	41.1	5.0	51.6	
영화관·비디오방	5.9	24.3	6.5	27.2	
연극·콘서트	0.1	10.7	0.7	3.2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1	0.0	0.0	6.3	
스포츠 경기관람	0.1	4.8	0.0	3.3	
관광·드라이브	0.9	1.5	0.2	12.2	
기타 문화·관광 활동	0.3	5.2	0.4	6.1	
문화관광(중분류)	7.4	27.9	7.8	31.6	
걷기·산책	4.8	24.8	4.8	19.0	
달리기·죠깅	0.1	3.5	0.1	2.8	
등산	0.2	0.0	0.0	4.3	
자전거·인라인	1.7	4.8	0.7	19.1	
개인 운동	11.4	30.6	9.9	28.9	
구기 운동	6.1	16.2	6.5	24.6	
낚시·사냥	0.0	2.5	0.0	0.0	
기타 스포츠·레포츠	0.2	25.5	0.2	6.0	
스포츠·레포츠 총량(중분류)	24.5	48.7	22.2	46.9	
관혼상제 등 의례(중분류)(소분류)	0.3	11.3	0.6	3.9	
집단 게임·놀이	1.6	15.1	0.4	12.5	*
컴퓨터·모바일 게임	43.5	64.0	44.4	80.3	
개인 취미 활동	2.5	11.9	1.7	25.5	
여가·교양 학습	0.3	4.1	0.9	6.2	
유흥	9.7	29.5	13.6	33.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78)		저소득(n=368)		t-test
	평균	SD	평균	SD	
담배 피우기	0.3	3.6	0.9	3.3	
아무것도 안하고 쉼	7.4	15.3	5.8	16.2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8	2.8	0.7	7.3	
기타 여가(중분류)	66.2	74.1	68.4	94.2	
7. 교제 여가(대분류)	288.2	158.6	271.0	171.5	
개인유지 관련 이동	16.1	35.3	19.9	29.2	
개인유지 이동 총시간(중분류)	16.1	35.3	19.9	29.2	
출 · 퇴근	0.0	49.1	0.0	0.6	
기타 일 관련 이동	0.1	13.1	0.3	3.4	
출퇴근 일 관련 이동(중분류)	0.1	51.4	0.3	3.4	
학습 관련 이동	73.4	54.7	57.9	80.7	**
학습 관련 이동 총량(중분류)	73.4	54.7	57.9	80.7	**
가정관리 관련 이동	5.8	23.9	4.6	20.3	
가정관리 이동(중분류)	5.8	23.9	4.6	20.3	
동거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0.2	6.9	0.0	2.7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0.1	4.5	0.3	3.8	
가족 가구원 돌보기 이동(중분류)	0.3	8.4	0.3	4.7	
참여·참여봉사 관련 이동	0.9	7.5	1.3	9.2	
참여봉사 이동(중분류)	0.9	7.5	1.3	9.2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34.5	69.4	35.7	56.3	
교제·여가 이동(중분류)	34.5	69.4	35.7	56.3	
기타 이동 관련	1.8	3.7	1.1	7.5	
기타 이동(중분류)	1.8	3.7	1.1	7.5	
8. 이동 시간(대분류)	132.9	90.3	120.9	89.3	
기타 미분류 행동	0.0	0.0	0.0	0.0	
9 기타 여가(대분류)	0.0	0.0	0.0	0.0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 $p<.05$. t-test 결과의 빈칸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표 2-2〉 가사·육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42)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수면	511.4	94.0	503.1	80.4	
잠 못 이룸	0.4	3.0	2.4	14.4	
수면(중분류)	511.8	94.0	505.5	79.3	
식사	85.1	31.6	78.7	31.7	
간식·음료	29.7	31.6	26.5	27.0	
식사 및 간식 시간(중분류)	114.8	47.2	105.2	40.3	*
자기 치료	0.4	3.1	0.4	3.2	
아파서 쉼	0.6	14.0	0.0	0.0	
의료서비스 받기	2.6	15.8	4.5	15.5	
개인 건강관리 시간(중분류)	3.6	24.9	4.9	16.3	
개인위생	39.1	30.2	33.2	25.4	
외모관리	9.3	14.7	8.3	13.2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1.6	13.8	0.4	5.7	
기타 개인유지	0.1	2.5	0.0	0.0	
기타 개인유지(중분류)	50.1	37.6	41.9	32.4	*
1.개인유지(대분류)	680.2	105.2	657.5	100.1	
주업	0.2	0.0	0.0	6.2	
부업	0.0	0.0	0.0	0.0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0.0	0.0	0.0	1.3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0.2	0.0	0.0	3.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0.1	4.8	0.4	1.6	
일 중 휴식	0.0	0.0	0.0	0.0	
일 관련 연수	0.0	0.0	0.0	0.0	
기타 일 관련 행동	0.1	1.5	0.0	2.4	
고용된 일 및 자영업(중분류)	0.6	5.1	0.4	9.4	
구직활동 (중분류)(소분류)	0.1	8.8	1.6	2.5	
2. 일(대분류)	0.6	10.1	2.0	9.7	
학교수업	0.0	134.8	0.0	0.0	
학교수업 간 휴식	0.0	6.9	0.0	0.0	
학교 자율학습	0.0	46.3	0.0	0.0	
학교 행사	0.0	19.9	0.0	0.0	
기타 학교 활동	0.0	40.5	0.0	0.0	
학교 활동(중분류)	0.0	152.2	0.0	0.0	
학원 수강	0.4	15.6	5.7	6.8	
방송·인터넷 수강	1.4	27.5	0.1	15.7	
스스로 학습	1.7	130.4	0.0	17.0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0.3	51.0	0.0	4.9	
학교 활동 외 학습 총량(중분류)	3.8	141.1	5.8	24.6	
3 학습(대분류)	3.8	198.2	5.8	24.6	
식사준비	61.5	12.9	63.6	37.8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42)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10.2	1.9	15.8	21.0	
설거지·식후 정리	42.2	9.2	45.2	29.0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음식 준비 총시간(중분류)	113.9	18.5	124.7	59.7	
세탁하기	18.1	8.3	22.9	23.4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1.7	1.6	0.3	9.8	**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0.1	0.0	0.0	1.5	*
세탁 총시간(중분류)	19.9	8.6	23.2	25.6	
청소	31.8	14.0	33.3	30.1	
정리	22.3	9.8	26.6	26.4	
쓰레기 버리기	1.4	1.2	1.7	5.3	
청소 정리 총시간(중분류)	55.5	18.6	61.6	38.6	
주거 관리	0.2	0.0	0.0	3.3	
가정용품 관리·제작	0.4	1.0	0.0	4.3	**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2	0.7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0.3	3.1	0.0	5.4	
주거관리 총시간(중분류)	0.9	3.3	0.2	8.0	*
차량 관리하기	0.1	0.0	0.2	2.4	
차량 서비스 받기	0.2	1.4	0.2	3.4	
차량 관리(중분류)	0.3	1.4	0.4	4.2	
애완동물 돌보기	0.7	8.2	0.0	6.1	*
식물 돌보기	0.4	0.0	0.7	4.2	
애완 동·식물서비스 받기	0.0	0.0	0.0	0.9	
애완동식물 돌본 총시간(중분류)	1.1	8.2	0.7	7.7	
상품 매장 쇼핑	24.8	18.5	24.0	36.1	
상품 온라인 쇼핑	5.5	10.1	5.1	18.8	
서비스 현장 구입	0.7	2.4	0.4	5.0	
서비스 온라인 구입	0.2	1.5	0.0	2.2	*
기타 쇼핑 관련 행동	0.1	0.0	0.0	1.6	
상품·서비스 구입 총시간(중분류)	31.3	21.8	29.4	40.0	
가계부 정리	0.3	0.0	0.9	2.8	
금융기관 이용	1.7	1.3	0.9	9.6	
관공서 등 이용	0.1	0.0	0.2	1.8	
기타 가정관리	0.4	0.5	0.2	3.9	
기타 가정관리 총시간(중분류)	2.5	1.4	2.2	12.1	
4. 가정관리 (대분류)	225.5	43.0	242.4	90.9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135.0	9.0	139.4	114.4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8.6	0.0	7.7	21.2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만 10세 미만)	66.8	4.5	71.9	66.5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5.2	0.0	7.3	24.2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19.2	0.0	15.8	34.5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42)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동거 10이하 아동 돌봄(중분류)	234.7	13.5	242.2	153.7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0.4	0.0	0.9	3.8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0.4	0.0	0.8	3.8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0.0	0.0	0.1	1.4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0.5	0.0	0.4	4.0	
동거 10세 이상 돌봄(중분류)	1.0	0.0		0.0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0.0	0.0	0.0	0.2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3.6	0.0	3.2	9.6	
동거 배우자 돌봄(중분류)	3.7	0.0	3.2	9.6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4	0.0	0.0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1	0.0	0.0	2.2	
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1	0.4	0.0	2.2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2	
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0	0.0	0.0	0.2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2	0.0	0.0	4.8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9	1.2	1.8	9.2	
비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1.1	1.2	1.8	10.3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0.1	0.0	0.0	3.3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0.7	2.4	0.2	10.6	
비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1.6	2.7	2.0	14.0	
5 가족 가구원돌 봄(대분류)	241.7	13.7	249.5	152.6	
의무적 참여 활동	0.0	0.0	0.0	0.0	
자녀교육 관련	0.4	0.0	0.0	7.7	
기타 참여 활동	0.3	10.6	0.0	6.8	
참여 활동(중분류)	0.7	10.6	0.0	10.3	
국가·지역 행사 관련	0.0	0.0	0.0	1.0	
소외계층 관련	0.3	33.0	0.0	9.2	
재해주민 관련	0.0	0.0	0.0	0.0	
기타 자원봉사	0.1	6.7	0.0	6.1	
자원봉사(중분류)	0.4	33.6	0.0	11.1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0.0	0.0	0.0	1.0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0	0.0	0.0	0.0	
가사 활동 돕기	0.3	9.9	0.2	5.9	
기타 돕기	0.0	0.0	0.0	0.0	
친분인 돕기(중분류)	0.3	9.9	0.2	5.9	
6. 참여 및 참여봉사 (대분류)	2.2	36.6	0.3	19.3	*
대면교제	28.9	48.1	27.4	42.7	
화상·음성교제	9.0	17.2	10.1	17.0	
문자·메일교제	2.9	21.7	2.9	9.4	
기타 교제활동	0.0	0.0	0.0	0.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42)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교제활동(중분류)	178.7	53.3	178.3	48.3	
책 읽기	8.0	37.8	2.1	25.6	**
신문 보기	0.1	3.7	0.1	1.7	
잡지 보기	0.3	0.0	1.2	4.3	
실시간 방송보기	95.0	74.5	97.4	82.8	
비디오 보기	2.9	31.2	0.7	16.5	**
라디오 듣기	0.6	0.0	0.0	5.7	**
오디오 듣기	0.7	10.8	0.7	6.2	
인터넷 정보검색	12.1	43.2	10.9	25.9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0.5	14.9	0.8	4.7	
미디어 여가(중분류)	120.2	106.6	113.9	93.8	
개인적 종교 활동	0.9	10.3	1.2	10.3	
종교 집회 · 모임 참가	3.0	18.0	1.8	18.6	
기타 종교 관련 활동	0.5	11.1	0.0	9.2	
종교 총량(중분류)	4.4	33.0	3.0	24.4	
영화관·비디오방	1.3	27.3	0.4	12.7	
연극·콘서트	0.2	10.4	0.0	3.9	*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2	0.0	0.0	3.4	
스포츠 경기관람	0.0	0.0	0.0	0.0	
관광·드라이브	1.0	3.6	0.8	10.5	
기타 문화·관광 활동	1.1	5.8	0.5	11.0	
문화관광(중분류)	3.7	30.4	1.7	20.5	*
걷기·산책	8.7	21.9	6.8	22.9	
달리기·죠깅	0.0	2.2	0.0	0.8	
등산	0.1	0.0	0.6	3.7	
자전거·인라인	0.6	7.7	0.0	7.6	
개인 운동	4.6	27.1	6.4	16.4	
구기 운동	0.5	25.5	0.0	6.4	*
낚시·사냥	0.1	0.0	0.0	3.0	
기타 스포츠·레포츠	1.0	2.9	0.0	14.5	*
스포츠·레포츠 총량(중분류)	15.6	43.6	13.8	36.0	
관혼상제 등 의례(중분류)(소분류)	0.1	6.5	0.5	2.2	
집단 게임·놀이	0.6	6.7	0.0	7.3	**
컴퓨터·모바일 게임	3.5	82.5	4.4	22.0	
개인 취미 활동	0.7	15.0	0.0	7.3	**
여가·교양 학습	2.5	9.5	0.2	15.3	**
유흥	0.9	37.8	1.3	8.4	
담배 피우기	0.0	5.3	0.0	0.0	
아무것도 안하고 쉼	6.9	13.0	14.2	14.7	*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7	5.8	0.4	8.0	
기타 여가(중분류)	15.8	90.4	20.5	35.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1042)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7. 교제 여가(대분류)	200.3	157.2	193.2	120.3	
개인유지 관련 이동	11.7	28.1	7.3	26.2	*
개인유지 이동 총시간(중분류)	11.7	28.1	7.3	26.2	*
출 · 퇴근	0.1	0.0	0.0	3.8	
기타 일 관련 이동	0.1	4.0	0.0	1.5	
출퇴근 일 관련 이동(중분류)	0.2	4.0	0.0	4.1	
학습 관련 이동	0.3	57.7	0.5	3.7	
학습 관련 이동 총량(중분류)	0.3	57.7	0.5	3.7	
가정관리 관련 이동	16.1	13.7	19.1	26.0	
가정관리 이동(중분류)	16.1	13.7	19.1	26.0	
동거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15.8	0.0	19.8	26.4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1.4	6.5	1.0	9.6	
가족 가구원 돌보기 이동(중분류)	17.1	6.5	20.8	27.9	
참여·참여봉사 관련 이동	0.2	12.3	0.0	2.4	*
참여봉사 이동(중분류)	0.2	12.3	0.0	2.4	*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21.3	60.3	19.0	44.7	
교제·여가 이동(중분류)	21.3	60.3	19.0	44.7	
기타 이동 관련	0.3	5.1	1.5	2.1	
기타 이동(중분류)	0.3	5.1	1.5	2.1	
8. 이동 시간(대분류)	67.2	80.3	68.1	63.5	
기타 미분류 행동	0.0	0.0	0.0	0.0	
9 기타 여가(대분류)	0.0	0.0	0.0	0.0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 p<.05. t-test 결과의 빈칸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표 2-3〉 취업준비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618)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수면	504.5	107.4	501.5	112.4	
잠 못 이룸	0.8	4.5	1.2	6.9	
수면(중분류)	505.3	107.3	502.7	113.4	
식사	81.6	30.9	76.8	30.8	
간식·음료	31.2	32.2	24.4	29.2	*
식사 및 간식 시간(중분류)	112.8	45.8	101.1	40.6	*
자기 치료	0.4	3.7	0.2	1.3	
아파서 쉼	0.1	3.6	1.2	15.7	
의료서비스 받기	1.3	8.2	0.2	2.2	**
개인 건강관리 시간(중분류)	1.7	9.7	1.6	15.9	
개인위생	64.6	31.6	61.8	35.2	
외모관리	16.1	19.9	11.6	18.1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0.9	11.6	0.8	7.5	
기타 개인유지	0.0	0.0	0.0	0.0	
기타 개인유지(중분류)	81.6	41.2	74.3	45.8	
1.개인유지(대분류)	701.5	113.8	679.8	124.5	
주업	0.0	0.0	0.2	0.2	
부업	0.0	0.0	0.0	0.0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0.0	0.0	0.0	0.0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0.5	0.0	0.0	8.8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0.2	7.2	0.0	3.3	
일 중 휴식	0.0	0.0	0.0	0.0	
일 관련 연수	0.0	0.0	0.0	0.0	
기타 일 관련 행동	0.0	0.0	0.0	0.0	
고용된 일 및 자영업(중분류)	0.7	7.2	0.2	9.4	
구직활동 (중분류)(소분류)	17.8	8.7	8.4	59.9	
2. 일(대분류)	18.5	11.3	8.5	60.5	
학교수업	2.3	0.0	7.3	27.5	
학교수업 간 휴식	0.1	0.0	0.1	1.5	
학교 자율학습	0.0	0.0	0.0	0.0	
학교 행사	0.0	0.0	0.0	0.0	
기타 학교 활동	0.1	0.0	1.2	1.6	
학교 활동(중분류)	2.5	0.0	8.6	29.2	
학원 수강	23.4	40.4	29.9	82.2	
방송·인터넷 수강	20.0	1.0	33.3	59.4	
스스로 학습	136.6	0.0	122.5	191.9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3.7	0.0	2.0	27.5	
학교 활동 외 학습 총량(중분류)	183.8	40.4	187.7	215.9	
3 학습(대분류)	186.2	40.4	196.3	216.6	
식사준비	11.2	36.3	12.8	21.9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618)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1.0	50.7	0.8	6.8	
설거지·식후 정리	9.5	28.0	9.5	16.9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음식 준비 총시간(중분류)	21.7	72.8	23.1	35.6	
세탁하기	4.8	25.5	5.6	13.7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0.2	2.3	0.0	2.9	*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0.0	0.0	0.3	0.6	
세탁 총시간(중분류)	5.0	25.6	5.9	14.0	
청소	9.5	25.0	11.4	18.8	
정리	7.2	28.5	6.5	18.7	
쓰레기 버리기	0.7	6.6	0.1	3.8	**
청소 정리 총시간(중분류)	17.4	35.4	17.9	28.5	
주거 관리	0.0	0.0	0.0	0.6	
가정용품 관리·제작	0.8	0.0	0.0	11.9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0.0	1.9	0.0	0.0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0.5	0.0	0.0	6.2	
주거관리 총시간(중분류)	1.3	1.9	0.0	13.4	
차량 관리하기	0.4	1.3	0.0	5.4	
차량 서비스 받기	0.2	3.4	0.0	4.0	
차량 관리(중분류)	0.6	3.6	0.0	6.7	
애완동물 돌보기	5.1	0.0	6.9	20.9	
식물 돌보기	0.2	4.6	0.0	2.5	
애완 동·식물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애완동식물 돌본 총시간(중분류)	5.3	4.6	6.9	21.0	
상품 매장 쇼핑	13.2	29.8	10.3	29.9	
상품 온라인 쇼핑	6.2	15.8	0.8	22.4	**
서비스 현장 구입	0.6	3.9	0.5	3.4	
서비스 온라인 구입	0.2	0.0	0.0	1.7	
기타 쇼핑 관련 행동	0.0	0.0	0.0	0.3	
상품·서비스 구입 총시간(중분류)	20.1	37.1	11.6	37.2	**
가계부 정리	0.0	5.6	0.0	0.0	
금융기관 이용	0.2	4.7	0.3	1.8	
관공서 등 이용	0.0	3.5	0.0	0.7	
기타 가정관리	0.2	1.2	0.0	2.1	*
기타 가정관리 총시간(중분류)	0.4	8.1	0.3	2.8	
4. 가정관리 (대분류)	71.8	87.1	65.7	82.5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1.1	86.3	2.8	10.4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0.1	19.4	0.0	2.3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만 10세 미만)	1.1	61.4	3.3	9.5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0.2	19.2	0.0	3.0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0.2	25.0	0.0	3.4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618)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동거 10이하 아동 돌봄(중분류)	2.7	119.2	6.1	21.8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0.0	5.4	0.0	0.0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0.0	7.6	0.0	0.7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0.0	1.9	0.0	0.0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0.0	3.6	0.0	0.6	
동거 10세 이상 돌봄(중분류)	1.2			0.5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0.3	7.8	1.1	2.6	
동거 배우자 돌봄(중분류)	0.3	7.8	1.1	2.6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1	0.0	0.0	3.0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1	0.0	0.2	1.7	
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1	0.0	0.2	3.4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2	0.0	
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0	0.0	0.2	0.0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4	11.9	0.1	4.0	
비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4	11.9	0.1	4.0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1.5	0.0	0.0	28.1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0.8	2.0	1.4	9.7	
비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1.2	12.1	1.5	10.5	
5 가족 가구원돌 봄(대분류)	5.8	118.0	9.0	37.3	
의무적 참여 활동	0.3	0.0	0.0	8.0	
자녀교육 관련	0.0	0.0	0.0	0.0	
기타 참여 활동	0.1	0.0	0.0	2.4	
참여 활동(중분류)	0.3	0.0	0.0	8.3	
국가·지역 행사 관련	0.0	0.0	0.0	0.0	
소외계층 관련	0.3	0.0	0.0	7.5	
재해주민 관련	0.0	0.0	0.0	0.0	
기타 자원봉사	0.6	0.0	0.0	11.9	
자원봉사(중분류)	0.9	0.0	0.0	14.1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0.0	0.0	0.0	0.0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0	0.0	0.8	0.0	
가사 활동 돕기	1.0	2.8	0.0	13.8	*
기타 돕기	0.5	0.0	0.0	6.9	
친분인 돕기(중분류)	1.5	2.8	0.8	15.4	
6. 참여 및 참여봉사 (대분류)	3.7	3.4	2.2	28.1	
대면교제	30.6	42.3	28.2	48.5	
화상·음성교제	11.5	19.9	8.8	19.4	
문자·메일교제	11.1	10.1	10.8	21.7	
기타 교제활동	0.0	0.0	0.0	0.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618)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교제활동(중분류)	191.1	47.0	185.8	59.1	
책 읽기	16.8	9.0	32.1	37.6	
신문 보기	1.0	1.7	0.8	7.0	
잡지 보기	0.2	9.2	0.7	2.6	
실시간 방송보기	98.7	71.5	105.8	94.7	
비디오 보기	6.4	8.0	8.3	35.2	
라디오 듣기	0.4	0.0	3.3	4.3	
오디오 듣기	3.6	5.5	4.1	13.5	
인터넷 정보검색	38.4	21.1	39.4	51.9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2.2	4.5	1.5	13.9	
미디어 여가(중분류)	167.7	75.8	196.0	121.8	
개인적 종교 활동	0.8	7.3	0.3	7.1	
종교 집회 · 모임 참가	3.1	10.5	2.5	22.1	
기타 종교 관련 활동	1.3	0.0	0.0	15.7	
종교 총량(중분류)	5.3	12.6	2.9	33.3	
영화관·비디오방	9.4	7.0	7.6	34.0	
연극·콘서트	0.5	0.0	0.0	7.3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0	0.0	0.0	0.0	
스포츠 경기관람	0.1	0.0	0.0	4.1	
관광·드라이브	1.4	9.2	0.8	18.0	
기타 문화·관광 활동	0.1	6.9	0.5	2.7	
문화관광(중분류)	11.5	13.4	8.9	39.7	
걷기·산책	11.4	22.2	19.6	27.9	
달리기·죠깅	1.1	0.0	0.5	9.1	
등산	1.6	5.8	0.2	15.7	
자전거·인라인	0.6	0.0	1.1	6.2	
개인 운동	19.3	21.7	17.5	38.4	
구기 운동	4.9	0.0	9.4	26.5	
낚시·사냥	0.3	0.0	0.0	7.5	
기타 스포츠·레포츠	0.5	0.0	0.1	6.4	
스포츠·레포츠 총량(중분류)	39.7	31.1	48.3	61.0	
관혼상제 등 의례(중분류)(소분류)	0.6	5.0	0.4	6.7	
집단 게임·놀이	0.8	0.0	0.0	8.0	*
컴퓨터·모바일 게임	46.3	17.8	49.8	79.4	
개인 취미 활동	1.4	0.0	4.6	14.7	
여가·교양 학습	0.2	2.4	3.1	4.3	
유흥	8.0	13.8	4.6	29.9	
담배 피우기	0.4	0.0	1.5	3.7	
아무것도 안하고 쉼	12.0	23.6	10.2	21.5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9	3.9	3.2	7.9	
기타 여가(중분류)	70.0	34.7	77.0	86.9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618)		저소득(n=134)		t-test
	평균	SD	평균	SD	
7. 교제 여가(대분류)	347.3	94.9	380.9	174.2	
개인유지 관련 이동	15.3	17.4	7.6	29.7	**
개인유지 이동 총시간(중분류)	15.3	17.4	7.6	29.7	**
출 · 퇴근	0.0	0.0	0.0	0.0	
기타 일 관련 이동	2.8	0.0	1.0	17.6	
출퇴근 일 관련 이동(중분류)	2.8	0.0	1.0	17.6	
학습 관련 이동	24.0	3.8	22.0	44.5	
학습 관련 이동 총량(중분류)	24.0	3.8	22.0	44.5	
가정관리 관련 이동	9.1	25.4	9.3	22.3	
가정관리 이동(중분류)	9.1	25.4	9.3	22.3	
동거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1.4	38.7	1.5	12.0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0.4	8.1	1.1	4.4	
가족 가구원 돌보기 이동(중분류)	1.8	39.6	2.6	12.7	
참여·참여봉사 관련 이동	1.3	0.0	0.6	19.8	
참여봉사 이동(중분류)	1.3	0.0	0.6	19.8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33.3	42.8	37.7	52.7	
교제·여가 이동(중분류)	33.3	42.8	37.7	52.7	
기타 이동 관련	1.1	7.4	0.8	6.2	
기타 이동(중분류)	1.1	7.4	0.8	6.2	
8. 이동 시간(대분류)	88.8	65.9	81.4	74.7	
기타 미분류 행동	0.0	0.0	0.0	0.0	
9 기타 여가(대분류)	0.0	0.0	0.0	0.0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 p<.05. t-test 결과의 빈칸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표 2-4〉 취업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792)		저소득(n=212)		t-test
	평균	SD	평균	SD	
수면	478.9	100.2	504.1	118.4	*
잠 못 이룸	0.5	3.9	0.3	3.3	
수면(중분류)	479.4	100.2	504.3	118.2	*
식사	79.8	30.8	76.5	32.9	
간식·음료	33.0	29.3	32.2	32.0	
식사 및 간식 시간(중분류)	112.8	42.3	108.7	42.5	
자기 치료	0.2	2.3	0.0	0.8	**
아파서 쉼	0.2	7.5	0.0	0.0	
의료서비스 받기	1.4	12.2	0.6	6.1	
개인 건강관리 시간(중분류)	1.7	15.9	0.6	6.1	
개인위생	60.9	28.1	57.4	28.8	
외모관리	18.0	17.7	16.5	16.8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0.7	7.3	1.2	8.3	
기타 개인유지	0.1	2.4	0.0	0.0	**
기타 개인유지(중분류)	79.7	36.0	75.2	35.4	
1.개인유지(대분류)	673.7	107.6	688.8	124.4	
주업	330.0	3.3	289.5	212.4	
부업	1.2	0.0	0.3	17.9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1.3	0.0	1.9	23.7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4.1	0.0	4.2	40.6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0.1	0.0	0.3	3.1	
일 중 휴식	3.7	0.0	2.5	9.0	
일 관련 연수	2.2	0.0	1.1	22.6	
기타 일 관련 행동	6.6	0.0	5.4	23.9	
고용된 일 및 자영업(중분류)	349.3	3.3	305.1	214.5	*
구직활동 (중분류)(소분류)	0.4	27.5	3.0	8.6	
2. 일(대분류)	349.7	27.7	308.0	214.2	*
학교수업	0.0	45.3	0.0	0.0	
학교수업 간 휴식	0.0	2.5	0.0	0.0	
학교 자율학습	0.0	0.0	0.0	0.0	
학교 행사	0.0	0.0	0.0	0.0	
기타 학교 활동	0.0	9.8	0.0	0.5	
학교 활동(중분류)	0.0	53.4	0.0	0.5	
학원 수강	1.2	98.3	6.5	15.2	
방송·인터넷 수강	0.8	94.1	2.6	10.9	
스스로 학습	5.2	163.7	25.5	31.1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0.2	9.8	0.5	4.9	
학교 활동 외 학습 총량(중분류)	7.4	216.5	35.1	38.3	*
3 학습(대분류)	7.4	221.6	35.1	38.3	*
식사준비	8.3	20.9	9.6	19.8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792)		저소득(n=212)		t-test
	평균	SD	평균	SD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1.0	4.6	1.3	9.1	
설거지·식후 정리	5.9	15.3	5.4	13.7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0	0.5	
음식 준비 총시간(중분류)	15.2	34.3	16.2	32.9	
세탁하기	2.7	15.2	2.5	9.7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0.2	0.0	0.7	3.3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0.1	3.1	0.0	1.1	**
세탁 총시간(중분류)	3.0	15.4	3.2	10.4	
청소	5.5	18.7	6.6	14.9	
정리	5.6	15.2	5.2	15.4	
쓰레기 버리기	0.5	1.3	0.5	3.1	
청소 정리 총시간(중분류)	11.6	28.0	12.4	23.8	
주거 관리	0.1	0.0	0.0	3.2	*
가정용품 관리·제작	0.2	0.0	0.0	4.5	*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0	1.6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2	1.0	
주거관리 총시간(중분류)	0.3	0.0	0.2	6.0	
차량 관리하기	0.2	0.0	0.2	2.8	
차량 서비스 받기	0.1	0.0	0.0	2.7	**
차량 관리(중분류)	0.3	0.0	0.2	3.9	
애완동물 돌보기	1.4	23.0	0.4	10.2	**
식물 돌보기	0.1	0.0	0.0	0.9	**
애완 동·식물서비스 받기	0.0	0.0	0.0	1.7	
애완동식물 돌본 총시간(중분류)	1.5	23.0	0.4	10.6	**
상품 매장 쇼핑	9.2	22.1	10.5	27.1	
상품 온라인 쇼핑	2.5	7.9	1.6	13.2	
서비스 현장 구입	0.3	2.9	0.5	2.5	
서비스 온라인 구입	0.2	0.6	0.2	1.9	
기타 쇼핑 관련 행동	0.0	0.0	0.0	0.3	*
상품·서비스 구입 총시간(중분류)	12.1	23.6	12.8	30.9	
가계부 정리	0.1	0.0	0.0	1.2	**
금융기관 이용	0.5	2.2	0.4	3.8	
관공서 등 이용	0.1	0.0	0.1	2.4	
기타 가정관리	0.3	0.0	0.0	4.8	*
기타 가정관리 총시간(중분류)	0.9	2.2	0.6	7.1	
4. 가정관리 (대분류)	44.9	76.1	46.0	68.8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10.9	13.2	17.8	39.2	*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0.7	0.0	1.4	5.7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만 10세 미만)	7.4	18.5	12.2	26.7	*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0.5	0.0	1.1	8.4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1.2	0.0	1.7	7.7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792)		저소득(n=212)		t-test
	평균	SD	평균	SD	
동거 10이하 아동 돌봄(중분류)	20.7	28.6	34.2	61.9	*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0.0	0.0	0.0	1.3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0.1	0.0	0.0	1.8	*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0.0	0.0	0.0	0.5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0.1	0.0	0.0	1.6	
동거 10세 이상 돌봄(중분류)	1.0		1.0	0.4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0.0	0.0	0.0	1.0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0.5	10.2	0.3	4.9	
동거 배우자 돌봄(중분류)	0.5	10.2	0.3	5.0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1	2.1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3	1.9	0.0	10.4	
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3	1.9	0.2	10.6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2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1.2	0.0	1.2	
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0	1.2	0.0	1.2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0	0.8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3	1.0	0.4	6.1	
비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3	1.0	0.4	6.1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0.5	14.5	0.4	7.0	
비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7	14.5	0.8	9.3	
5 가족 가구원돌 봄(대분류)	22.5	37.7	35.5	64.3	*
의무적 참여 활동	0.5	0.0	1.7	13.7	
자녀교육 관련	0.0	0.0	0.0	0.0	
기타 참여 활동	0.1	0.0	0.0	2.9	
참여 활동(중분류)	0.5	0.0	1.7	14.0	
국가·지역 행사 관련	0.0	0.0	0.0	0.0	
소외계층 관련	0.2	0.0	0.0	6.7	*
재해주민 관련	0.0	0.0	0.0	0.0	
기타 자원봉사	0.0	0.0	0.0	2.3	
자원봉사(중분류)	0.2	0.0	0.0	7.3	*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0.0	0.0	0.0	1.6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2	10.1	0.0	5.6	*
가사 활동 돕기	0.3	0.0	0.3	8.3	
기타 돕기	0.0	0.0	0.2	1.5	
친분인 돕기(중분류)	0.5	10.1	0.6	10.6	
6. 참여 및 참여봉사 (대분류)	2.1	17.6	4.3	31.1	
대면교제	24.8	43.0	25.6	40.2	
화상·음성교제	8.5	15.3	7.9	16.3	
문자·메일교제	6.8	30.7	4.7	17.0	
기타 교제활동	0.0	0.0	0.0	0.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792)		저소득(n=212)		t-test
	평균	SD	평균	SD	
교제활동(중분류)	178.1	50.6	176.2	48.1	
책 읽기	5.2	71.3	8.4	21.0	
신문 보기	0.5	6.5	0.5	4.9	
잡지 보기	0.1	6.5	0.4	2.5	
실시간 방송보기	66.5	101.9	67.9	79.9	
비디오 보기	3.2	37.4	0.3	21.8	**
라디오 듣기	0.2	17.2	0.0	3.5	**
오디오 듣기	1.0	16.8	0.9	7.2	
인터넷 정보검색	18.8	52.5	13.5	34.8	*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0.8	7.0	0.3	6.8	
미디어 여가(중분류)	96.4	136.4	92.1	98.3	
개인적 종교 활동	0.7	2.5	2.5	9.5	
종교 집회 · 모임 참가	2.4	19.9	4.5	18.0	
기타 종교 관련 활동	1.3	0.0	1.5	15.6	
종교 총량(중분류)	4.4	20.0	8.5	31.4	
영화관·비디오방	4.8	31.1	1.8	24.7	**
연극·콘서트	0.3	0.0	0.0	6.5	**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1	0.0	0.5	3.9	
스포츠 경기관람	0.3	0.0	0.0	6.7	**
관광·드라이브	0.8	11.7	0.0	10.7	**
기타 문화·관광 활동	0.7	3.9	1.9	10.3	
문화관광(중분류)	7.0	36.1	4.2	31.0	
걷기·산책	4.8	41.6	7.1	18.8	
달리기·죠깅	0.2	6.6	0.6	5.0	
등산	0.7	3.1	0.4	12.0	
자전거·인라인	0.8	10.3	0.0	12.3	**
개인 운동	7.4	39.3	3.6	23.4	**
구기 운동	2.6	35.0	0.7	17.0	**
낚시·사냥	0.4	0.0	0.0	11.4	**
기타 스포츠·레포츠	0.7	3.5	0.2	11.9	**
스포츠·레포츠 총량(중분류)	17.6	64.4	12.6	41.6	
관혼상제 등 의례(중분류)(소분류)	0.7	3.7	0.4	6.7	
집단 게임·놀이		0.0	1.4	7.0	
컴퓨터·모바일 게임	18.6	100.1	24.1	51.3	
개인 취미 활동	0.9	31.5	3.0	12.9	
여가·교양 학습	0.7	25.4	2.3	10.6	
유흥	6.8	20.4	6.0	27.5	
담배 피우기	1.8	5.8	2.2	7.9	
아무것도 안하고 쉼	6.7	17.9	7.3	15.1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7	18.7	0.2	6.8	**
기타 여가(중분류)	36.8	111.5	46.5	63.7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792)		저소득(n=212)		t-test
	평균	SD	평균	SD	
7. 교제 여가(대분류)	202.4	181.4	202.1	144.7	
개인유지 관련 이동	12.6	22.2	12.7	25.9	
개인유지 이동 총시간(중분류)	12.6	22.2	12.7	25.9	
출 · 퇴근	62.5	0.0	48.7	53.0	**
기타 일 관련 이동	12.3	7.7	11.4	41.3	
출퇴근 일 관련 이동(중분류)	74.8	7.7	60.1	68.6	**
학습 관련 이동	1.0	51.8	5.2	9.2	
학습 관련 이동 총량(중분류)	1.0	51.8	5.2	9.2	
가정관리 관련 이동	5.2	25.6	5.8	17.6	
가정관리 이동(중분류)	5.2	25.6	5.8	17.6	
동거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2.0	7.2	2.7	10.1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0.4	13.5	0.5	8.6	
가족 가구원 돌보기 이동(중분류)	2.4	15.1	3.1	13.3	
참여·참여봉사 관련 이동	0.2	7.0	0.4	4.5	
참여봉사 이동(중분류)	0.2	7.0	0.4	4.5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24.1	63.6	18.1	52.0	*
교제·여가 이동(중분류)	24.1	63.6	18.1	52.0	*
기타 이동 관련	0.5	4.1	0.2	3.9	*
기타 이동(중분류)	0.5	4.1	0.2	3.9	*
8. 이동 시간(대분류)	120.9	82.9	105.8	78.3	**
기타 미분류 행동	0.0	0.0	0.0	0.0	
9 기타 여가(대분류)	0.0	0.0	0.0	0.0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 p<.05. t-test 결과의 빈칸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표 2-5〉 니트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448)		저소득(n=70)		t-test
	평균	SD	평균	SD	
수면	504.3	96.4	505.6	96.0	
잠 못 이룸	0.8	5.4	0.9	5.1	
수면(중분류)	505.1	96.6	506.6	95.6	
식사	84.8	35.4	77.0	30.2	
간식·음료	29.4	32.9	21.1	22.8	*
식사 및 간식 시간(중분류)	114.2	48.3	98.1	35.8	**
자기 치료	0.5	3.3	0.9	4.1	
아파서 쉼	0.0	1.1	0.0	0.0	
의료서비스 받기	1.9	11.8	0.0	0.0	**
개인 건강관리 시간(중분류)	2.4	12.5	0.9	4.1	
개인위생	62.0	31.5	62.8	27.3	
외모관리	14.6	18.5	12.6	15.6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1.2	10.7	0.8	6.9	
기타 개인유지	0.1	1.3	0.0	0.0	
기타 개인유지(중분류)	77.8	39.3	76.3	33.7	
1.개인유지(대분류)	699.5	109.2	681.7	108.9	
주업	2.5	205.8	0.0	31.4	
부업	0.0	12.9	0.0	0.0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0.5	20.2	8.5	10.4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0.0	36.9	0.0	0.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0.1	4.1	6.6	1.3	
일 중 휴식	0.0	7.3	0.0	0.5	
일 관련 연수	0.0	14.4	0.0	0.0	
기타 일 관련 행동	0.0	19.6	0.0	0.0	
고용된 일 및 자영업(중분류)	3.2	206.3	15.1	33.5	
구직활동 (중분류)(소분류)	3.8	24.3	0.0	30.8	
2. 일(대분류)	7.0	203.3	15.1	45.2	
학교수업	0.0	0.0	0.0	0.0	
학교수업 간 휴식	0.0	0.0	0.0	0.0	
학교 자율학습	0.0	0.0	0.0	0.0	
학교 행사	0.0	0.0	0.0	0.0	
기타 학교 활동	0.2	0.0	0.0	4.8	
학교 활동(중분류)	0.2	0.0	0.0	4.8	
학원 수강	47.8	31.5	89.6	124.6	
방송·인터넷 수강	19.5	15.3	15.4	67.0	
스스로 학습	109.3	88.6	126.3	169.3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3.0	6.5	4.0	16.4	
학교 활동 외 학습 총량(중분류)	179.5	108.2	235.2	223.3	
3 학습(대분류)	179.7	108.2	235.2	223.6	
식사준비	13.7	21.1	7.4	27.6	*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448)		저소득(n=70)		t-test
	평균	SD	평균	SD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1.6	7.1	0.2	15.8	*
설거지·식후 정리	9.8	14.5	5.3	18.2	*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음식 준비 총시간(중분류)	25.1	35.4	12.8	45.8	*
세탁하기	3.5	10.1	2.3	11.4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0.7	4.0	0.0	10.0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0.1	0.0	0.0	1.0	
세탁 총시간(중분류)	4.2	10.8	2.3	15.0	
청소	7.3	18.6	6.3	17.0	
정리	7.1	14.2	7.2	16.6	
쓰레기 버리기	0.5	3.7	0.2	2.9	
청소 정리 총시간(중분류)	14.9	26.2	13.7	27.8	
주거 관리	0.3	0.0	0.0	3.4	
가정용품 관리·제작	0.0	0.0	0.4	0.9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1.5	0.0	0.0	21.4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0.4	3.1	0.0	3.9	*
주거관리 총시간(중분류)	2.1	3.1	0.4	22.0	
차량 관리하기	0.0	1.6	0.0	0.6	
차량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차량 관리(중분류)	0.0	1.6	0.0	0.6	
애완동물 돌보기	1.1	4.1	4.2	5.9	
식물 돌보기	0.1	0.0	0.0	1.5	
애완 동·식물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애완동식물 돌본 총시간(중분류)	1.3	4.1	4.2	6.1	
상품 매장 쇼핑	13.8	24.5	7.4	31.3	
상품 온라인 쇼핑	3.3	9.4	0.0	13.9	**
서비스 현장 구입	0.5	3.1	0.5	3.2	
서비스 온라인 구입	0.1	2.5	0.5	1.5	
기타 쇼핑 관련 행동	0.0	0.0	0.0	0.0	
상품·서비스 구입 총시간(중분류)	17.7	27.8	8.4	35.4	*
가계부 정리	0.1	0.0	0.0	1.4	
금융기관 이용	0.4	3.1	0.0	3.0	**
관공서 등 이용	0.1	1.3	0.0	1.5	
기타 가정관리	0.0	0.6	0.1	0.3	
기타 가정관리 총시간(중분류)	0.7	3.6	0.1	3.6	**
4. 가정관리 (대분류)	65.9	65.8	41.8	88.9	*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6.2	35.4	5.4	31.8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0.8	6.9	1.2	5.6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만 10세 미만)	4.2	25.9	1.8	22.7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0.3	6.7	0.0	11.5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0.5	7.3	0.0	5.0	*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448)		저소득(n=70)		t-test
	평균	SD	평균	SD	
동거 10이하 아동 돌봄(중분류)	12.1	57.9	8.4	57.1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0.1	0.7	0.0	1.7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0.1	0.0	0.0	3.8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0.0	0.0	0.0	0.9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0.1	0.7	0.0	1.8	
동거 10세 이상 돌봄(중분류)	1.5	0.0	1.0	5.7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3.6	0.0	0.0	42.3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1.0	2.1	0.0	6.6	**
동거 배우자 돌봄(중분류)	4.6	2.1	0.0	42.8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2	1.6	0.0	5.2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1.7	1.1	0.0	16.2	
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1.9	1.9	0.0	17.0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0	
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0	0.0	0.0	0.0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7	0.0	0.0	8.2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5	3.9	0.0	9.1	
비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1.1	3.9	0.0	12.2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0.1	0.0	0.0	2.2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1.2	8.0	0.0	11.7	
비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1.7	8.9	0.0	16.2	
5 가족 가구원돌 봄(대분류)	21.4	59.9	8.4	76.1	
의무적 참여 활동	22.8	16.5	45.9	94.6	
자녀교육 관련	0.0	0.0	0.0	0.0	
기타 참여 활동	0.0	0.0	0.3	0.0	
참여 활동(중분류)	22.8	16.5	46.1	94.6	
국가·지역 행사 관련	0.0	0.0	0.0	0.0	
소외계층 관련	0.0	0.0	0.0	0.0	
재해주민 관련	0.0	0.0	0.0	0.0	
기타 자원봉사	0.0	0.0	0.0	0.0	
자원봉사(중분류)	0.0	0.0	0.0	0.0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0.1	0.0	0.0	2.3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0	0.0	0.0	0.0	
가사 활동 돕기	0.2	4.3	0.0	2.7	
기타 돕기	0.0	5.0	0.0	0.0	
친분인 돕기(중분류)	0.3	6.6	0.0	3.5	*
6. 참여 및 참여봉사 (대분류)	47.1	34.4	92.0	189.2	
대면교제	23.6	42.9	15.2	42.4	*
화상·음성교제	10.6	16.0	8.9	20.8	
문자·메일교제	10.0	14.0	18.0	21.7	
기타 교제활동	0.0	0.0	0.0	0.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448)		저소득(n=70)		t-test
	평균	SD	평균	SD	
교제활동(중분류)	182.1	52.0	180.1	53.3	
책 읽기	14.4	25.1	4.7	39.2	**
신문 보기	0.1	4.3	0.0	1.6	
잡지 보기	0.3	5.1	0.0	3.9	
실시간 방송보기	76.3	75.1	100.1	83.2	
비디오 보기	9.9	3.5	1.6	32.1	**
라디오 듣기	2.0	0.0	0.0	24.9	
오디오 듣기	5.7	7.9	1.6	23.7	*
인터넷 정보검색	37.4	35.5	22.6	60.1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2.9	3.0	4.2	16.4	
미디어 여가(중분류)	148.9	86.0	134.8	132.4	
개인적 종교 활동	2.6	12.1	3.0	16.1	
종교 집회 · 모임 참가	3.9	26.9	1.8	23.5	
기타 종교 관련 활동	1.2	12.7	1.8	14.8	
종교 총량(중분류)	7.8	38.0	6.5	40.4	
영화관·비디오방	6.3	14.9	5.8	27.5	
연극·콘서트	0.2	0.0	2.2	4.0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0	7.2	0.0	0.0	
스포츠 경기관람	0.0	0.0	0.0	0.9	
관광·드라이브	1.6	0.0	0.0	16.3	*
기타 문화·관광 활동	1.0	18.7	0.2	14.2	
문화관광(중분류)	9.2	24.8	8.1	35.6	
걷기·산책	9.6	24.1	9.6	28.1	
달리기·죠깅	0.0	7.6	0.0	0.0	
등산	1.1	6.7	0.0	16.8	
자전거·인라인	0.5	0.0	1.2	7.3	
개인 운동	13.0	13.6	8.4	30.6	
구기 운동	4.5	9.4	1.2	20.4	*
낚시·사냥	0.0	0.0	0.0	0.0	
기타 스포츠·레포츠	1.4	4.0	0.2	17.5	
스포츠·레포츠 총량(중분류)	30.1	33.6	20.7	48.2	
관혼상제 등 의례(중분류)(소분류)	0.4	4.2	1.1	3.7	
집단 게임·놀이	1.3	11.3	0.0	10.2	*
컴퓨터·모바일 게임	54.7	58.3	79.4	116.4	
개인 취미 활동	3.7	19.3	0.8	21.6	
여가·교양 학습	7.1	17.1	0.0	51.7	
유흥	9.6	25.3	4.0	33.1	*
담배 피우기	0.7	6.8	3.4	4.9	
아무것도 안하고 쉼	9.0	14.9	12.7	19.8	
기타 여가 관련 활동	3.5	2.5	0.0	21.2	**
기타 여가(중분류)	89.5	78.9	100.3	134.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448)		저소득(n=70)		t-test
	평균	SD	평균	SD	
7. 교제 여가(대분류)	329.5	136.7	312.6	200.2	
개인유지 관련 이동	15.0	26.8	9.5	32.9	
개인유지 이동 총시간(중분류)	15.0	26.8	9.5	32.9	
출 · 퇴근	0.5	46.5	0.0	5.7	
기타 일 관련 이동	1.6	34.2	0.8	17.2	
출퇴근 일 관련 이동(중분류)	2.1	57.9	0.8	22.1	
학습 관련 이동	26.4	22.1	28.3	46.6	
학습 관련 이동 총량(중분류)	26.4	22.1	28.3	46.6	
가정관리 관련 이동	10.1	16.5	7.4	23.2	
가정관리 이동(중분류)	10.1	16.5	7.4	23.2	
동거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1.8	9.9	1.2	9.8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1.3	6.4	0.0	12.6	
가족 가구원 돌보기 이동(중분류)	3.1	11.7	1.2	16.0	
참여·참여봉사 관련 이동	4.5	4.1	7.4	19.6	
참여봉사 이동(중분류)	4.5	4.1	7.4	19.6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34.9	31.7	29.5	53.8	
교제·여가 이동(중분류)	34.9	31.7	29.5	53.8	
기타 이동 관련	1.4	2.0	0.9	7.6	
기타 이동(중분류)	1.4	2.0	0.9	7.6	
8. 이동 시간(대분류)	97.5	62.8	84.9	71.3	
기타 미분류 행동	0.0	0.0	0.0	0.0	
9 기타 여가(대분류)	0.0	0.0	0.0	0.0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 p<.05. t-test 결과의 빈칸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부표 2-6〉 이중 유형의 소득계층에 따른 생활시간 사용량 차이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30)		저소득(n=106)		t-test
	평균	SD	평균	SD	
수면	485.6	96.8	467.4	111.3	
잠 못 이룸	0.6	6.6	0.3	4.3	
수면(중분류)	486.2	97.0	467.8	111.3	
식사	78.2	33.3	71.4	30.9	
간식·음료	28.7	30.7	29.9	29.8	
식사 및 간식 시간(중분류)	106.9	44.5	101.4	47.7	
자기 치료	0.0	0.0	0.4	3.2	
아파서 쉼	0.0	0.0	0.0	0.0	
의료서비스 받기	1.8	13.2	0.9	6.6	
개인 건강관리 시간(중분류)	1.8	13.2	1.3	7.3	
개인위생	60.8	28.8	69.3	29.6	
외모관리	20.3	19.5	18.9	19.3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0.4	4.9	1.7	14.7	
기타 개인유지	0.2	2.5	0.0	0.0	
기타 개인유지(중분류)	81.6	36.6	90.0	37.2	
1.개인유지(대분류)	676.5	109.8	660.3	114.4	
주업	200.4	0.0	184.8	186.9	
부업	3.7	0.0	0.0	0.0	*
농림어업 무급 가족 일	0.0	48.3	0.0	0.0	
농림어업 외 무급 가족 일	4.6	0.0	0.0	0.0	*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0.0	33.6	0.0	0.0	
일 중 휴식	2.3	0.0	1.6	4.9	
일 관련 연수	0.0	0.0	0.0	0.0	
기타 일 관련 행동	5.4	0.0	1.0	7.1	*
고용된 일 및 자영업(중분류)	216.4	57.9	187.4	190.6	
구직활동 (중분류)(소분류)	1.1	0.0	1.9	13.9	
2. 일(대분류)	217.5	57.9	189.2	189.5	
학교수업	46.8	0.0	75.7	102.9	
학교수업 간 휴식	1.0	0.0	1.8	7.3	
학교 자율학습	0.7	0.0	5.0	23.5	
학교 행사	0.1	0.0	3.9	40.6	
기타 학교 활동	3.0	0.0	8.5	27.3	
학교 활동(중분류)	51.7	0.0	94.9	125.8	
학원 수강	2.3	157.3	6.9	47.7	
방송·인터넷 수강	2.8	54.0	4.3	19.1	
스스로 학습	59.3	179.7	91.1	122.3	
기타 학교 활동 외 학습	1.4	19.2	1.4	12.8	
학교 활동 외 학습 총량(중분류)	65.7	280.9	103.7	127.5	*
3 학습(대분류)	117.4	280.9	198.6	183.6	**
식사준비	4.2	19.8	7.5	12.4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30)		저소득(n=106)		t-test
	평균	SD	평균	SD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0.4	1.3	0.1	0.8	*
설거지·식후 정리	3.7	12.6	4.2	8.8	
음식 관련 서비스 받기	0.1	0.0	0.0	0.0	
음식 준비 총시간(중분류)	8.4	27.7	11.7	17.2	
세탁하기	0.8	7.4	2.0	8.2	
가정용 섬유·신발 손질 및 제작	0.0	0.0	0.1	1.2	
가정용 섬유·신발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세탁 총시간(중분류)	0.8	7.4	2.0	8.3	
청소	4.1	16.2	8.0	19.8	
정리	3.4	12.9	5.0	10.5	
쓰레기 버리기	0.2	1.6	0.2	2.1	
청소 정리 총시간(중분류)	7.6	23.4	13.1	25.6	
주거 관리	0.0	0.0	0.0	0.0	
가정용품 관리·제작	0.1	5.4	0.0	0.0	
주거 관련 서비스 받기	0.8	0.0	0.0	0.0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주거관리 총시간(중분류)	0.9	5.4	0.0	0.0	
차량 관리하기	0.3	0.0	0.0	0.0	*
차량 서비스 받기	0.1	0.0	0.7	7.5	
차량 관리(중분류)	0.4	0.0	0.7	7.5	
애완동물 돌보기	1.6	18.7	2.0	11.8	
식물 돌보기	0.0	0.0	0.0	0.0	
애완 동·식물서비스 받기	0.0	0.0	0.0	0.0	
애완동식물 돌본 총시간(중분류)	1.6	18.7	2.0	11.8	
상품 매장 쇼핑	10.7	19.9	5.5	18.4	*
상품 온라인 쇼핑	3.8	0.0	3.0	15.9	
서비스 현장 구입	0.6	3.3	0.1	1.5	
서비스 온라인 구입	0.3	4.5	0.5	3.2	
기타 쇼핑 관련 행동	0.2	0.0	0.0	0.0	
상품·서비스 구입 총시간(중분류)	15.6	22.9	9.1	28.6	
가계부 정리	0.1	0.0	0.1	1.6	
금융기관 이용	0.1	0.0	0.5	3.6	
관공서 등 이용	0.0	0.0	0.3	2.7	
기타 가정관리	0.0	0.8	0.0	0.0	
기타 가정관리 총시간(중분류)	0.1	0.8	1.0	4.9	
4. 가정관리 (대분류)	35.4	57.5	39.6	58.5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미만)	2.7	29.9	0.0	0.0	*
아이 가르치기(만 10세 미만)	0.0	11.1	0.0	0.0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만 10세 미만)	1.7	12.6	0.0	0.0	*
간호하기(만 10세 미만)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만 10세 미만)	0.3	0.0	0.0	0.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30)		저소득(n=106)		t-test
	평균	SD	평균	SD	
동거 10이하 아동 돌봄(중분류)	4.7	48.9	0.0	0.0	**
신체적 돌보기(만 10세 이상)	0.0	0.0	0.0	0.0	
공부 봐주기(만 10세 이상)	0.1	0.0	0.0	0.0	
간호하기(만 10세 이상)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만 10세 이상)	0.1	0.0	0.0	0.0	
동거 10세 이상 돌봄(중분류)	0.9	0.0	1.0	0.0	
간호하기(동거 배우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동거 배우자)	0.1	0.0	0.0	0.0	
동거 배우자 돌봄(중분류)	0.1	0.0	0.0	0.0	
간호하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0	0.0	
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0	0.0	0.0	0.0	
간호하기(기타 동거 가구원)	0.0	0.0	0.0	0.0	
기타 돌보기(기타 동거 가구원)	0.5	0.0	0.0	0.0	
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5	0.0	0.0	0.0	
간호하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비동거 부모 및 조부모)	0.1	0.0	0.0	0.0	
비동거 조부모 돌봄(중분류)	0.1	0.0	0.0	0.0	
간호하기(비동거 기타 가족)	0.0	0.0	0.0	0.0	
기타 돌보기(비동거 기타 가족)	0.6	0.0	0.0	0.0	*
비동거 그 외 돌봄(중분류)	0.7	0.0	0.0	0.0	*
5 가족 가구원돌 봄(대분류)	6.1	48.9	0.0	0.0	**
의무적 참여 활동	0.0	133.3	0.0	0.0	
자녀교육 관련	0.0	0.0	0.0	0.0	
기타 참여 활동	0.0	4.3	0.3	6.9	
참여 활동(중분류)	0.0	133.3	0.3	6.9	
국가·지역 행사 관련	0.3	0.0	0.0	0.0	
소외계층 관련	0.0	0.0	0.1	2.3	
재해주민 관련	0.0	0.0	0.0	0.0	
기타 자원봉사	1.4	0.0	1.4	14.8	
자원봉사(중분류)	1.7	0.0	1.5	15.0	
친분 있는 사람 돌보기	0.0	0.0	0.0	0.0	
소득 있는 활동 돕기	0.0	0.0	0.0	0.0	
가사 활동 돕기	0.3	0.0	0.0	0.0	
기타 돕기	0.2	0.0	0.0	0.0	
친분인 돕기(중분류)	0.5	0.0	0.0	0.0	
6. 참여 및 참여봉사 (대분류)	2.8	266.6	1.8	16.5	
대면교제	30.1	29.7	32.4	46.0	
화상·음성교제	10.4	20.9	9.9	17.5	
문자·메일교제	13.2	39.9	12.8	25.3	
기타 교제활동	0.0	0.0	0.0	0.0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30)		저소득(n=106)		t-test
	평균	SD	평균	SD	
교제활동(중분류)	191.7	62.5	193.1	53.0	
책 읽기	8.8	20.2	12.8	37.8	
신문 보기	0.6	0.0	0.0	0.0	*
잡지 보기	0.1	0.0	0.0	0.0	
실시간 방송보기	63.8	151.8	42.9	61.9	*
비디오 보기	2.8	8.6	4.5	18.5	
라디오 듣기	0.2	0.0	0.0	0.0	
오디오 듣기	1.6	8.9	0.6	3.2	
인터넷 정보검색	26.4	55.0	20.0	34.3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 활동	1.0	20.0	1.4	6.1	
미디어 여가(중분류)	105.3	171.3	82.1	85.4	*
개인적 종교 활동	1.7	13.6	1.0	16.0	
종교 집회 · 모임 참가	4.2	14.0	0.3	5.5	**
기타 종교 관련 활동	2.0	14.0	0.1	1.9	
종교 총량(중분류)	7.9	35.1	1.5	22.8	**
영화관·비디오방	4.8	26.4	2.5	18.8	
연극·콘서트	0.8	18.4	0.0	0.0	
미술작품·박물관 관람	0.0	0.0	0.0	0.0	
스포츠 경기관람	0.2	0.0	0.0	0.0	
관광·드라이브	0.0	0.0	0.0	0.0	
기타 문화·관광 활동	0.3	2.4	0.4	7.3	
문화관광(중분류)	6.1	31.8	3.0	20.1	
걷기·산책	5.9	26.3	2.5	15.2	
달리기·죠깅	0.2	0.0	0.0	0.0	
등산	0.0	0.0	0.0	0.0	
자전거·인라인	0.4	13.2	1.2	11.6	
개인 운동	11.1	21.6	12.1	28.4	
구기 운동	2.7	15.3	1.6	11.6	
낚시·사냥	0.1	0.0	1.5	16.0	
기타 스포츠·레포츠	2.5	5.7	0.0	0.0	*
스포츠·레포츠 총량(중분류)	22.9	36.9	18.9	39.4	
관혼상제 등 의례(중분류)(소분류)	1.2	9.2	0.3	2.6	
집단 게임·놀이	1.6	0.0	2.9	14.5	
컴퓨터·모바일 게임	26.2	163.7	23.6	52.6	
개인 취미 활동	1.4	7.1	1.1	11.3	
여가·교양 학습	0.2	0.0	0.0	0.0	
유흥	7.5	25.3	10.2	28.4	
담배 피우기	0.6	13.8	1.2	7.4	
아무것도 안하고 쉼	6.9	22.8	8.9	15.7	
기타 여가 관련 활동	0.2	0.0	0.6	3.3	
기타 여가(중분류)	44.6	169.7	48.4	68.7	

소득계층 / 활동 분류	일반(n=530)		저소득(n=106)		t-test
	평균	SD	평균	SD	
7. 교제 여가(대분류)	240.6	225.8	208.9	136.3	
개인유지 관련 이동	14.0	19.5	17.6	28.8	
개인유지 이동 총시간(중분류)	14.0	19.5	17.6	28.8	
출 · 퇴근	43.5	0.0	29.4	40.0	
기타 일 관련 이동	2.3	7.7	3.9	16.4	
출퇴근 일 관련 이동(중분류)	45.9	7.7	33.3	41.9	
학습 관련 이동	26.9	45.8	41.0	57.1	
학습 관련 이동 총량(중분류)	26.9	45.8	41.0	57.1	
가정관리 관련 이동	5.9	28.9	4.9	16.2	
가정관리 이동(중분류)	5.9	28.9	4.9	16.2	
동거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0.8	9.2	0.0	0.0	
비동거 가족 돌보기 관련 이동	0.3	0.0	0.0	0.0	
가족 가구원 돌보기 이동(중분류)	1.0	9.2	0.0	0.0	*
참여·참여봉사 관련 이동	0.7	23.3	0.9	9.3	
참여봉사 이동(중분류)	0.7	23.3	0.9	9.3	
교제·여가활동 관련 이동	33.9	67.4	26.5	51.8	
교제·여가 이동(중분류)	33.9	67.4	26.5	51.8	
기타 이동 관련	0.8	4.3	0.8	3.7	
기타 이동(중분류)	0.8	4.3	0.8	3.7	
8. 이동 시간(대분류)	129.1	79.2	125.1	74.7	
기타 미분류 행동	0.0	0.0	0.0	0.0	
9 기타 여가(대분류)	0.0	0.0	0.0	0.0	

주: 1) 평균과 표준편차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동일 응답자의 반복 측정으로 발생하는 표준오차 문제는 cluster로 보정 후 차이 분석함.
3) n 은 시간일지 수를 의미하며, 분석 대상자 수는 n/2임.
4) ** : p<.01, *: p<.05. t-test 결과의 빈칸은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